

2024

출입국·외국인정책
연감

2025

KOREA IMMIGRATION SERVICE
ANNUAL REPORT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 국가

Korea Immigration Service
2024 Annual Report

발간사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

차은호

우리사회가 저출생·고령화라는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함에 따라 인구구조가 급변하고 있으며, 산업계·교육계 등의 현장에서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는 등 정책환경의 변화속에서 출입국·이민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역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과학적 분석과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우수인재 유치, 지자체와 민간 수요를 반영한 비자 거버넌스 운영, 사회통합 강화, 과학적·체계적인 외국인력 도입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분야의 최고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비자·체류혜택과 관계부처 협업 정착지원 프로그램까지 연계한 '탑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구인난이 심각한 국내 산업·돌봄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송전·전기원, 요양보호사 직종 등 외국인의 취업활동 허용 분야를 확대하였습니다.

“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여 국익과
인권을 고려한 능동적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한편,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한 경제활동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 계절근로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실시 등 체류 유형별 맞춤형 사회통합 교육을 확대하고, 이주배경 청소년의 안정적 국내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민자 멘토링'을 제공하는 등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 이해하고 상생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 마련 및 외국인의 디지털 불평등 해소를 위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민행정 데이터와 정책자료 등을 국민과 공공기관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민행정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합동단속 정례화 등 상시단속체계를 가동하고, 광역단속팀 추가 신설 및 전담 인력 증원,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불법체류외국인의 감소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8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 수준이며, 2026년에 3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민자가 지역사회에서 이웃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문화 이해, 생활 정착지원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이민 정책을 신뢰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정확한 데이터, 통계 등 정보 전달과 열린 소통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연감에는 작년 한 해 동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추진한 주요 업무, 각종 통계, 보도 자료, 사진자료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이 연감이 출입국·이민정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12.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 차 용 호



PHOTO

사진으로 보는
2024 출입국·외국인
정책 행정



사진으로 보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행정



정부표창 및 장관표창 수여식 사진 | 2024. 1. 10.



전국조사보호과장회의 | 이민조사과, 2024. 1. 16.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몽골이민청장 면담 | 2024. 1. 19.



설맞이 위문활동 | 서울청, 2024. 2. 5.



사진으로 보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행정



지역특화형비자 지자체 설명회 | 2024. 2. 21.



태국영사국장면담 | 2024. 2. 21.



계절근로자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 | 2024. 2. 22.



당후루 sos어린이마을 기부행사 | 서울남부사무소, 2024. 2. 27.



사진으로 보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행정



봄맞이 플로깅 활동 | 청주사무소, 2024. 2. 29.



책꾸러미 도서지원 업무협약식 | 서울청, 2024. 3. 7.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이민자네트워크 간담회 | 서울청, 2024. 3. 13.



이민자멘토단 양성교육 및 위촉식 | 2024. 3. 14.



사진으로 보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행정



딸기수확체험 | 청주사무소, 2024. 3. 21.



말레이시아 대사대리 면담 | 2024. 3. 27.



국적증서수여식 | 양주사무소, 2024. 3. 28.



안중근기념관 국적증서수여식 | 서울청, 2024. 3. 28.



사진으로 보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행정



박성재장관 정책현장 방문 | 서울청, 2024. 4. 4.



사회통합중앙협의회 간담회 | 이민통합과, 2024. 4. 7.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환경보호활동(플로깅) | 서울남부, 2024. 4. 11.



빵 만들기 체험 | 청주사무소, 2024. 4. 12.



사진으로 보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행정



쓰담걷기 행사 | 서울청, 2024. 4. 15.



사회통합협의회 자원봉사위원 위촉식 | 서울청, 2024. 4. 25.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사회통합자원봉사위원회 위촉장 전수식 | 울산사무소, 2024. 4. 25.



이민자네트워크 빵나눔 | 안산사무소, 2024. 4. 29.



사진으로 보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행정



방문객 대상 어버이날 카네이션 만들기 | 인천청, 2024. 5. 8.



외국인 권익증진협의회 | 이민통합과, 2024. 5. 9.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이민자네트워크 자원봉사 | 제주청, 2024. 5. 14.



세계인의 날 sos어린이마을 에어컨 설치 및 청소봉사 | 서울남부사무소, 2024. 5. 17.



사진으로 보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행정



부산세계시민축제 행사참여 | 부산청, 2024. 5. 18.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 대구사무소, 2024. 5. 18.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 제주청, 2024. 5. 18.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 수원청, 2024. 5. 19.



사진으로 보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행정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 인천청, 2024. 5. 19.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 부산청, 2024. 5. 20.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한-베트남 고위급 회담 | 2024. 5. 21.



세계인의 날 행사 | 청주사무소, 2024. 5. 24.



사진으로 보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행정



이민자가족 오두산 견학 | 서울청, 2024. 6. 4.



부천시와 함께하는 국적수여식 | 인천청, 2024. 6. 18.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광역지자체 외국인정책 간담회 | 체류관리과, 2024. 7. 9.



제2회 조사과장회의 | 이민조사과, 2024. 7. 25.



사진으로 보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행정



이민정책포럼 | 외국인정책과, 2024. 7. 26.



지역기반 이민정책 간담회 | 추진단, 2024. 8. 13.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한국이민사 박물관 국적수여식 | 인천청, 2024. 8. 13.



이재유본부장 이임식 | 2024. 8. 14.



사진으로 보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행정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제도 홍보 | 2024. 9. 4.



창신모자원 후원물품 전달 | 서울남부사무소, 2024. 9. 26.



대규모 행사참여형 국적증서수여식 개최 | 수원청, 2024. 9. 27.



계절근로 운영 지자체 간담회 | 대구사무소, 2024. 9. 27.



사진으로 보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행정



다시, 세계인의 날 행사개최 | 부산청, 2024. 10. 8.



이민자 네트워크 한글날 기념행사 | 대구사무소, 2024. 10. 8.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이민자네트워크 도자기 만들기 체험행사 | 창원사무소, 2024. 10. 17.



주한일본대사면담 | 2024. 10. 21.



사진으로 보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행정



이민자네트워크행사(서대문형무소 역사체험) | 양주시사무소, 2024. 10. 29.



한마음걷기축제 | 서울청, 2024. 10. 29.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합동소방훈련 | 양주사무소, 2024. 10. 31.



후원품전달(수세미, 과일청) | 인천청, 2024. 11. 5.



사진으로 보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행정



사랑나눔김장행사 | 청주사무소, 2024. 11. 13.



정책발표회 | 외국인정책과, 2024. 11. 15.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국적수여식 | 대구사무소, 2024. 11. 21.



토마스의집 수제만두 전달 | 서울남부사무소, 2024. 11. 21.



사진으로 보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행정



김장나눔 행사 | 대전사무소, 2024. 12. 9.

2024
출입국·외국인정책
연감
|
2025

KOREA IMMIGRATION SERVICE
ANNUAL REPORT



JOURNAL

2024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주요 행정일지

1월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 원격근무자들의 관광 및 국내 장기체류가 가능한 '워케이션(F-1-D)' 자격 신설 	체류관리과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체류 외국인 출국 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대기관) 청주·무안·양양공항, 인천·평택·군산항 - (이용대상) 17세 이상 단기체류외국인* * 입국 시 지문 및 얼굴정보를 제공한 17세 이상 무사증 입국자(B1, B2) 및 사증을 소지한 단기체류(90일 이하) 외국인 	출입국심사과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및 동남아 3개국 단체관광 비자 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중국인 단체 관광객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 기간 연장 및 동남아 3개국(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대해서도 한시적 면제 시행 	체류관리과
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도 출입국정보화사업 추진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시스템 구축 등 총 10개 사업 추진 ※ 소요예산 15,048백만원 	이민정보과
1.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24년 시범운영안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노동시장 수급 전망 및 외국인력 유입의 영향 등을 고려한 '24년도 분야별 도입 규모(총량) 발표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1.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플랫폼」 사이트 공식 운영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방법 : 출입국 내부 직원, 업무망(idp.immigration.go.kr)접속 · 주요기능 : 셀프 분석(데이터 가공·시각화), 분석 지원(분석의뢰), 분석 사례 공유, 커뮤니티(외부 통계, 정책자료실)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1.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외국인의 체류 여부 등 행안부 정보연계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안부가 추진 중인 등록(거소포함)외국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대상 외국인의 ①체류 여부(Y/N) 및 ②체류지(법정동 코드) 정보연계 ※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주차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사용자의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로, '24. 2. 6. 연계 개시 	이민정보과
1.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적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 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면접심사 면제대상 추가, 국적선택신고 등에 대한 결과 통지 절차 정비, 국적취소 당사자의 절차적 권익보장을 위한 구체적 소명 절차 마련 등 	국적과
1.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한국이민정책학회 동계 학술대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이민청 시대의 법제도 및 정책 혁신방안의 모색 · 일시, 장소 : 1. 11.(목) 12:30 ~ 17:4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참석 : 이민정책 관련 학계, 연구원 등 전문가 	외국인정책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1.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조사·보호과장 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1. 16.(화) 14:00,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 • 참석 : 출입국정책담당장, 이민조사과장 및 소속기관 조사·보호과장 등 • 내용 : 2024년 불법체류 단속·자진출국 등 불법체류 감소정책 추진 방향 등 	이 민 조사과
1.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불법체류 관리대책 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 ~ ’27.)」 2년차 추진에 따른 2024년 불법체류 감축 목표 및 세부 계획 	이 민 조사과
1.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 장소 : 1. 19.(금) 14:00, 출입국회의실 • 참석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주재), 기재부·행안부 외부위원 3명 등 • 내용 :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 및 지역우수인재 쿼터 배정 등 ※ (접수결과) 66개 기초자치단체, 신청인원 4,673명 신청 	체 류 관리과
1.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업무 지침서」 책자 발간·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간 부수 : 총 1,200권 • 배포 대상 : 전국 출입국관서, 광역자치단체, 다도협 회원도시 등 • 주요 내용 : ① 정부 부처별 외국인 지원 정책, ② 중앙부처-지자체 협업체계, ③ 사증 체계, ④ 외국인 민원사무 Q&A, ⑤ 각종 외국인 지원센터 소개 등 	이 민 통합과
1.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2024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지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관 : 19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지자체 • 과제체계 : 5대 정책목표, 18개 중점과제 등 • 기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각 부처별로 수립된 세부 과제의 일관성 있는 추진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업을 바탕으로 하는 과제 등 시행 가능한 신규 정책 과제 적극 발굴 -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시행계획에 반영 	외국인 정책과
1.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이민정책연구원 성과보고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2023년 이민정책연구원 주요 사업성과 공유 등 • 일시, 장소 : 1. 26.(금) 13:30, 서울글로벌센터(서울시 종로구) •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국적·통합정책담당장, 외국인정책과장 등 - (연구원) 연구원장, 부원장 등 10명 - (학계) 전북대(설동훈 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 16명 	외국인 정책과
1.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위촉식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1. 29.(월) 14:30, 법무부 대회의실 • 내용 :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협업하여 신규 위촉한 통역인은 106명(25개 언어)이며, 총 414명(34개 언어)의 난민전문통역인 확보 	난 민 정책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1.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식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1. 30.(화) 14:00, 법무부 대회의실 • 참석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국적·통합정책단장, 국적과장, 신규 귀화 민간 면접관 13명 등 • 내용 : 위촉장 수여, 대표자 선서, 축하, 면접관 직무교육 	국적과

2월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기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 제8기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민간위원(8명)의 임기 만료('24. 2. 3.) 예정에 따라, 제9기 민간위원 위촉 필요 ※ 위원구성 : 위원장(법무부 차관), 정부위원 20명, 민간위원 8명 • 주요내용 : 법무부 차관이 외국인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국인정책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8명 위촉(임기 2년) 	외국인 정책과
2.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책 연구 추진 계획」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이민정책 수립·추진·평가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활용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에 의한 정책연구 용역 실시 • 연구과제(12개 과제, 15억4천8백만원) 	외국인 정책과
2.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한 러시아대사관 업무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2. 8.(목) 10:00, 출입국회의실 • 참석 : 국적과장, 주한 러시아대사관 총영사 등 • 내용 : 한·러 가정의 국내출생 자녀 관련 국적 관련 업무협약 	국적과
2. 15. ~ 2.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기 외국인행정 데이터 분석·활용 실무」 과정 신설·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행정 데이터 분석 개론, 분석 실습 및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플랫폼」 활용 방법에 대한 소속 직원(20명) 대상으로 2일 간 법무연수원 교육 과정 운영 	외국인정보 빅데이터팀
2.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이민정책과 대 아세안 협력의 중요성 심포지엄」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2. 15.(목) 14:0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주관 :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사)한·아세안포럼 • 주제 : 한국의 이민정책과 對 아세안 협력의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이민자들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이민자들의 역할 및 올바른 관리방안 모색 • 참석 : 이민정책 관련 학계, 연구원 등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부는 외국인정책과장 패널 토론자로 참석 	외국인 정책과
2.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적증서 수여식 운영 지침」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제도의 체계화·활성화 • 내용 : 약식 수여식 신설, 개별수여 세부절차 개선, 감염병 확산 등 재난 단계별 수여 방안 마련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2.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체류사증민원센터 전자민원 확대에 따른 시스템 개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경 : 전국 외국인관서 전자민원 업무가 온라인체류사증민원센터로 일원화(’23. 2. 13.)됨에 따라 1345콜센터의 민원 안내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선 필요 내용 :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FINE)을 활용, 1345 상담사가 전자민원의 ①담당자별 접수현황, ②심사 진행현황, ③처리내용 등을 확인, 민원인에 안내할 수 있도록 조회 화면 신설 ※ 시스템 반영 : 3월 중순, 1345 상담사에 신설 화면 조회 권한만을 부여하고 접속기록을 유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 예정 	이 민 정보과
2.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장소 : 2. 21.(수) 14:00, 과천청사 대회의실(3동) 참석 : 출입국정책담당, 체류관리과장, 지역특화형비자 사업 선정 지자체 및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담당자 등 100여 명 내용 : 지역특화형 비자 정식사업 실시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 설명 및 지자체 의견 수렴 등 	체 류 관리과
2. 22. ~ 2.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회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 장소 : 2. 22. ~ 2. 23., 서울글로벌센터 참석자 : 난민전담공무원 등 31명 내용 : UNHCR 및 일본 난민인정실 특강 	난 민 정책과
2.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자체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장소 : 2. 22.(목) 14:00, 과천청사 대강당 참석 : 출입국정책담당, 체류관리과장,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기초·광역 지자체 담당자 등 100여 명 내용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관련 현안 공유, 운영 지자체의 애로 및 건의 사항 수렴 등 	
2.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장소 : 2. 22.(목) 14:40, 양재 aT센터 303호 참석 : 이민정보과장, 담당 사무관, 서울청 정보화센터 팀장 내용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시스템 구축 관련 안정적 사업 수행을 위해 신기술 적용한 유사 사업 경험이 있는 대기업의 참여 허용 심의 ※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은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 통과시만 참여 가능 	이 민 정보과
2.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태 영사국장회의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장소 : 2. 22.(목) 10:00, 외교부 내용 : 국내 태국인 불법체류 문제, 양국 간 고용노동협력 등 논의 	출입국 심사과
2.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러가정 자녀의 국적회복 등 지원방안 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확한 체류·사범심사 기준 마련, 국적회복신청 시 신속 심사 	국적과
2.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화형 비자」 정식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소멸 문제 적극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외국인에게 체류특례를 부여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정식 운영 ※ 시범사업 기간 : ’22. 10. 4. ~ ’23. 10. 3.(1년) 	출입국·이민 관리체계 개선추진단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2.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EC 기업인 이동 실무그룹(BMG) 회의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장소 : 2. 27.(화) ~ 3. 3.(일), 페루 리마 ◦ 내용 : 기업인 이동 실무그룹(BMG) 새 부의장*의 역할 및 향후 진행 방향 논의, 모바일 기업인 여행 카드(Mobile ABTC) 정보 수집 등 	출입국 심사과

3월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3.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FINE) 사용자 계정 일괄 정비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보호 등 시스템 관리 강화를 위하여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FINE) 1개월 이상 미접속(2. 29. 기준) 사용자(지방자치단체위임사무 담당자)의 계정 삭제 조치 예정 	이 민 정보과
-------	---------------------------------------------------------------------------------------------------------------------------------------------------------------------------------------------------------------------------------------------------------------------------	------------

3.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제1회 난민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3. 7.(목) 15:00, 대회의실 ◦ 참석 : 위원장(법무부 차관) 등 12명 ◦ 내용 : 난민불인정결정 등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난 민 심의과
-------	---------------------------------------------------------------------------------------------------------------------------------------------------------------------------------------------------------------------------------------------------------------	------------

3.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민행정 빅데이터 분석 시각화 서비스」 자료 일반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3. 11.(월) 09:00, 보도자료 동시 배포. ◦ 내용 : 하이코리아 누리집(www.hikorea.go.kr) 내 '정보광장' 메뉴를 통해 전세계 이주민 현황 통계 등 데이터 시각화 5종 공개 	외국인정보 빅데이터팀
--------	---------------------------------------------------------------------------------------------------------------------------------------------------------------------------------------------------------------------------------------------------------------------------------------------------	----------------

3.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실태 현장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3. 12.(화) 10:30 ~ 17:00, 해남군 소재 농가 4곳 ◦ 내용 : 해남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실태 점검 및 건의사항 청취 	체 류 관리과
--------	------------------------------------------------------------------------------------------------------------------------------------------------------------------------------------------------------------------------------------------------------------	------------

3.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 수수료 인상(안)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 모바일외국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IC칩 내장 외국인등록증 발급 예정에 따라, 발급 수수료에 적정 원가 상승 비용 반영 필요 ◦ 내용 : 국내 물가상승률, IC칩 내장으로 인한 발급 단가 인상, 주요 국가 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상 금액 산정(현재 발급 수수료 3만원 → 인상 후 4만원)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수수료 변경 시 기재부 사전협의 필요 	이 민 정보과
--------	-----------------------------------------------------------------------------------------------------------------------------------------------------------------------------------------------------------------------------------------------------------------------------------------------------------------------------------------------------------------------------------------------------------------	------------

3.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양성교육 및 위촉식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3. 14.(목) 09:30 ~ 15:30, 국제회의실 ◦ 참석 : (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국적·통합정책담당, 이민통합과장 등, (외부) 멘토단 위촉대상자 39명(21개국), 외부 강사 등 * (임기) '24. 3. 1. ~ '26. 2. 28. (구성) 2기 연임자 25명, 신규 선발자 14명 ◦ 내용 : 위촉장(장관 명의) 수여, 멘토 강의역량 강화 교육 등 	이 민 통합과
--------	---------------------------------------------------------------------------------------------------------------------------------------------------------------------------------------------------------------------------------------------------------------------------------------------------------------------------------------------------------------------------------------------------------------------------	------------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3.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정부입법계획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안)명 : 「출입국관리법」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퇴거를 받은 사람의 보호기간 상한 설정 - 보호의 개시 또는 연장 시 의견진술 기회 보장 - 보호외국인 심의위원회 설치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통해 법제처 제출 	외국인 정책과
3.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시스템 구축사업」 조달 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시스템 구축사업 조달 긴급 발주 및 공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발주) ※ 본 사업은 국정과제 48-⑥(“이주민 인권보호 강화 :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이주민 권익 증진”)에 해당 • 계획 : '24. 5. 조달 발주 결과에 따른 사업자 선정, 사업 착수보고회 진행 예정 - 사업예산 4,602백만원, 사업기간 8개월('24. 5. ~ '24. 12.) - 동사업 관련 사업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사업 순차적으로 발주 예정 	이 민 정보과
3.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관련 관계기관 회의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3. 21.(목) 15:00, 준비기획단 회의실(서울 종로구) • 내용 :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자에 대한 출입국 관련 협조 및 제반사항 등 논의 	출입국 심사과
3.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절근로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3. 22.(금) 13:00 ~ 16:00,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 대상 : 베트남 국적 계절근로자 41명 • 방식 : 전문가가 직접 교육장소(지자체)를 방문, 집합식 대면교육 • 내용 : 기초법·질서, 한국사회 적응정보, 필수 정보(농작업 업무, 안전수칙 등) 	이 민 통합과
3.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제1회 국적심의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3. 28.(목) 15:00, 법무부 대회의실 • 참석 : 위원장(법무부 차관), 정부위원, 민간위원 등 15명 • 안건 :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예외적 국적이탈, 국적판정 	국적과
3.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등록관서 담당공무원 대상 국적실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3. 28.(목) 16:00, 수원시청 • 대상 : 수원가정법원 관할 지자체 공무원 30여 명 • 내용 : 국적법령 주요내용, 국적 실무과정에서 빈번 발생하는 오류 유형별 사례 설명, 국적 제도 질의 응답 	
3.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절근로 수요예측 모델」 개발 관련 TF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3. 28.(목) 14:00 ~ 17:00, 출입국회의실. • 참석 : 빅데이터팀(주재), 체류관리과, 추진단, 이민정책연구원, 농림부, 해수부, 농촌경제연구원 등 15명 • 내용 : '21년 ~ '23년 유입된 계절근로 데이터 분석 결과 설명 및 관계기관 합동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예측 모델' 구축방안 논의 등 	외국인정보 빅데이터팀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3.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민정책연구원 제40차 정기이사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3. 29.(금) 14:00, 이민정책연구원(서울시 양천구) • 참석(총 10명) : 국적·통합정책단장, 이사(연구원장 등) 9명 ※ 이사장 포함 총 11명 중 이사 1명 불참 • 안건 : ①'23년 결산 및 사업실적 보고, ②'24년 예산(안) 및 사업계획 보고 등 • 결과 : 원안의결 	외국인 정책과
3.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관광 등 현안점검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3. 29.(금) 15:00, 국제회의실 • 대상 : 체류관리과장(주제), 각 부처 및 관계기관 담당자 등 • 내용 : 각 부처 및 관계기관 추진 정책 공유, 부처간 협력 강화방안 등 논의 	체류 관리과
3.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51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난민과 이민자의 경계선(부제 : 난민은 이민자인가?) • 진행 : 차용호(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 일시, 장소 : 3. 29.(금) 11:30, 과천청사 1동 8층 영상회의실 • 참석 : 본부장, 출입국정책단장, 국적·통합정책단장, 본부 각 과 과장 및 본부 직원 등 총 58명 	외국인 정책과

4월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4.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위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31.자 임기만료 위원 184명 중 재위촉(연임) 144명, 신규위촉 26명 등 총 170명 위촉 ※ 위촉기간 : '24. 4. 1. ~ '26. 3. 31.(2년) 	이민 통합과
4.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코리아 및 ICRM2019 외국인등록증 분실신고 관련 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실된 외국인등록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하이코리아, ICRM2019에 신설된 분실신고 및 철회 민원인 안내 방법 알림 - 분실신고의 철회는 24시간 이내에는 하이코리아(온라인) 또는 외국인 관서 방문 철회가 가능하나, 24시간 경과 시는 외국인 관서에 방문 철회만 가능 ※ 외국인관서 담당자는 외국인등록증 소지 및 본인 확인 후 철회 조치 	이민 정보과
4.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안공항 아시아 4개국 단체관광객 무사증입국 제도 연장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3개국 국민 중 무안공항을 통해 동일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5명 이상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사증 입국 제도 연장 시행(체류기간 : 15일) *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출입국 심사과
4.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TV, 'PD리포트 이슈 본(本)*'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주간의 이슈를 다각도에서 분석, 쟁점의 핵심을 짚어내고 정부 입장의 정책내용을 신속 전달하는 프로그램 • 주제 : "우리가 이주민들과 하나되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 -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등 외국인정책 전반 • 일시, 장소 : 4. 1.(월) 15:30, 브리핑실(303호) • 인터뷰 대상자 : 외국인정책과장 • 언론보도 일시 : 4. 7.(일) 10:10 	외국인 정책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4.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 외국인력 지원 TF 구성 운영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외국인력 체계적 지원 위해 법무부·농식품부·해수부 협업 강화 	체류 관리과
4.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4. 5.(금) 14:00, 출입국 회의실(513호) · 참석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5명, UNCHR 최고대표보 등 5명 · 내용 : UNHCR 아태지역국 공무원 파견 등 협력 강화 방안 논의 	난민 정책과
4.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회복 신청자의 국익 기여 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 구체화, 국제회복 신청자 사전 동의사항 신설 등 	국적과
4.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52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 - 외국인 노동자 도입을 중심으로 · 진행 : 채민석(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 · 일시, 장소 : 4. 15.(월) 11:00, 과천청사 1동 8층 영상회의실 · 참석 : 출입국정책단장, 국적·통합정책단장, 외국인정책과장, 본부 각 과 과장 및 본부 직원 등 총 47명 	외국인 정책과
4.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제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4. 15.(월) ~ 6. 30.(일) · 참여 : 총 530명(법무부 302, 경찰청 120, 고용부 50, 국토부 30, 해경청 28) · 내용 : 전국 7개 권역별 합동단속반 편성·운영 등 	이민 조사과
4.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련기능인력(E-7-4) 현안 점검 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방법 : 4. 19.(금) 14:00, 화상회의 · 참석 : 체류관리과장(주재), 고용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및 17개 광역지자체 담당자 등 · 안건 :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 추천제도 점검 및 개선방안 논의 등 	체류 관리과
4.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제2회 난민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4. 25.(목) 15:00, 영상회의실 · 참석 : 위원장(법무부 차관) 등 13명 · 내용 : 난민불인정결정 등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난민 심의과
4.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개정령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23. 10. 24.)에 따라, 현재 법무부훈령(제614호)으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민간 위탁 근거 등을 대통령령에 신설 · 내용 :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 	외국인 정책과
4. 26. ~ 5.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3회 외국인정책 실무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방식 : 4. 26.(금) ~ 5. 2.(목), 서면 · 안건 : 2023 ~ 2024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안) 	외국인 정책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4.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통합프로그램 특별 사전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의 원활한 운영 및 업체 업무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사전평가 시행 ※ 장소 : HD현대중공업(울산), 경상국립대학교(진주) 	이 민 통합과
4. 30. ~ 5.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조사업체 : 4. 30. ~ 5. 6., 한국리서치 • 대상 : 성인남녀 1,200명 • 결과 : 국가안보 관련 「난민법」 개정안에 대해 63.8% 찬성, 난민신청 횟수 제한 68.3% 찬성 등 	난 민 정책과
4.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설명회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4. 30.(화), 14:00, 서울역 한일빌딩 10층 • 참석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연계기관 담당자 등 70여명 내외 • 내용 : ①국민연금공단 대외 연계기관 담당자 대상 차세대 정보시스템 사업 내용, ②담당자 간 정보 공유, ③연계 시스템 간 테스트 방법, 일정 설명 등 ※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구축'은 총사업비 1,839억원으로 '20. 7. 예타 통과, '22. 7 사업착수, '24. 12. 개발 완료 및 테스트 예정 	이 민 정보과

5월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5.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활동(E-7) 직종 내 '항공기 부품제조원'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특정활동(E-7) 내 '항공기부품제조원' 직종을 신설하여 2년 간 시범운영 	체 류 관리과
5.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인정심사 화상면접 정식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심사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감염병 상황에서도 안전한 면접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난민인정심사 화상면접 정식 운영 시행 	난 민 정책과
5.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합동 주요시스템 특별점검 결과 행안부 회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ICRM2019), 비자포털 등에 대한 보안취약점을 자체 점검하여 보안시스템 관리, 웹서비스 등 취약점에 대한 조치 완료 내용 및 향후 계획 송부 ※ 총 23개 보안 취약점을 발견, 22개 조치 완료 및 1개 미조치 항목은(서버 접근제어 솔루션 필요) 추후 예산 확보 후 조치 예정 	이 민 정보과
5. 7. ~ 5.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8회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방식 : 5. 7.(화) ~ 5. 10.(금), 서면회의 • 위원 : 위원장(국무총리), 정부위원(19명), 민간위원(9명) 등 총 29명 • 안건 : 2023 ~ 2024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안) • 결과 : 원안의결 	외국인 정책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5. 8. ~ 5.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 합동 「계절근로 수요예측 모델」 관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5. 8.(수) 14:00, 농촌경제연구원(전남 나주) / 5. 9.(목) 14:00, 서울역출장소 회의실 • 참석 : 빅데이터팀, 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부 / 해수부, 해양수산개발원 • 내용 : 계절근로 수요예측 모델 구현을 위해 농업, 어업 분야 가용 데이터, 통계 및 연구자료 등 업무 협의 	외국인정보 빅데이터팀
5.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류외국인 가사분야 활동 허용 시범사업을 위한 간담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5. 9.(목) 15:00,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담당(주재), 외국인정책과장, 외국인정책과·체류관리과·이민통합과 담당 사무관 등 - (대상자) 외국인 유학생, 결혼이민자의 가족 등 • 목적 : '국내 체류외국인 육아·가사분야 활동 허용 시범사업' 의견수렴 	외국인 정책과
5.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정보화전략계획(ISP·ISMP) 제도 설명회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5. 14.(화) 14:00, 서울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 • 참석 : 중앙부처(기관) 소속 정보화담당관, 사업담당자 등 • 내용 : 2024년도 ISP·ISMP 제도 및 개선사항, ISP·ISMP 구성항목 등 설명, 기능점수(FP) 산정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P·ISMP 수립·검토 대상, ISP·ISMP 검토 절차(검토접수 일정, 검토신청 가능 사업, 중간산출물 제도, ISP·ISMP 수립 제외) 등 	이 민 정보과
5.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위촉식 및 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5. 9.(목) 10:00 ~ 12:00, 7층 대회의실 • 참석 : (위원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국적·통합정책담당, 인권정책과 서기관, 교육부·고용부·경찰청·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6명 • 내용 : 위촉장 수여(본부장) 및 안건(3건, 비공개) 논의 	이 민 통합과
5. 9. ~ 5.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회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5. 9. ~ 5. 10., 서울글로벌센터 • 참석자 : 난민전담공무원 등 25명 • 내용 : 난민심사 보고서 작성법, 초청 강연 등 	난 민 정책과
5.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한공관원 대상 외국인 체류·사증 정책 설명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5. 13.(월) 14:00, 법무부 • 참석 : 중국·베트남 등 16개국 노무관·교민 담당 영사 등 • 내용 : 최신 체류·사증정책 소개,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 청취 등 	체 류 관리과
5.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5. 20. 14:00, 과천시민회관 대극장 • 참석 : 장관, 주한외교사절, 국제기구 대표, 정부포상자 및 가족 등 약 600여명 • 내용 : 기념식, 귀빈 축하, 정부포상 수여, 축하공연 등 	이 민 통합과
5.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로자 귀화증서 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5. 20., 과천시민회관 • 내용 :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위해 헌신한 특별공로자(라이안 제라딘 수녀, 48년생)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 	국적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5.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류지변경신고 등 지자제용 업무편람 개정본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부 위임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지자체 담당자의 적절한 업무 처리 도모를 위해 그간의 주요 질의 사항을 반영한 「지자제용 업무편람 개정본」 배포 ※ 배포처 : 소속기관 및 전국 228 시군구 및 3,593개 읍면동 사무소 	이 민 정보과
5.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 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다양성 시대의 이민과 지속가능 발전" • 일시, 장소 : 5. 24.(금) 13:00 ~ 18:00, 한국외대(서울캠퍼스) ※ (주최) 법무부, (주관) 한국이민학회, 한국외대 글로벌 정치연구소 • 참석 : 국적·통합정책단장, 외국인정책과장 등 법무부 직원 및 이민정책 관련 각계 전문가 등 130여명 	외국인 정책과
5.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민행정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5. 29.(수) 10:30, 검찰국 회의실(606호) • 참석 : (본부) 출입국정책단장,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 각과 과장 (업체) 넥스원테크놀로지 등 4명 	외국인정보 빅데이터팀
5.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제주 기항 크루즈 선상심사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입항 크루즈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24년도 선상심사 계획 수립 	출입국 심사과
5. 30. ~ 5.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도 체류외국인 동향조사 기법연구 발표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장소 : 5. 30.(목) ~ 5. 31.(금), 강원 원주시 • 참석 : 출입국정책단장, 이민조사과장 및 소속기관 조사·단속 담당자 등 • 내용 : 기관별 조사기법 발굴·공유를 통한 조사역량 강화 및 조사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이 민 조사과
5.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국적판정 합동현장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장소 : 5. 30.(목) ~ 5. 31.(금), 인천출입국·외국인청 • 대상 : '23년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158명 	
5.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회 법무부-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외국인정책협의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5. 30.(목) 14:00,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참석 : 법무부 이민통합과장, 김포시 복지교육국장 등 • 내용 : 양자간 상호협력 및 제도개선 관련 7개 안건 논의 	이 민 통합과

6월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6.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양공항 아시아 4개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 제도' 연장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아시아 4개국* 국민 중 양양공항을 통해 동일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5명 이상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사증 입국 제도 시행(체류기간 : 15일) *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출입국 심사과
6.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법무부 감시정 설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6. 3.(월) 14:00, 법무부 • 내용 : 감시정 설계 용역 진행경과 보고 및 설계 모형(2개) 제시 등 착수보고 발표 	출입국 심사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6.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회 이민정책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6. 10.(월) 14:00, 법무부 대회의실 • 참석 : ^(외부) 정인섭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 등 민간위원 13명 ^(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 국적·통합정책단장, 추진단장, 소관 과장 등 • 개최 목적 : 출입국·이민정책 현안 관련 전문가 자문 	출입국·이민 관리체계 개선추진단
6.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54회 이민정책포럼 개최(6. 11. 통상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 이민정책 주요 현안에 대한 내용 공유 및 관련 논의 필요 • 일시, 장소 : 6. 11.(화) 11:00 ~ 12:30, 과천청사 1동 영상회의실 • 주제 : ^(외국인정책과) 국내 체류외국인의 가사사용인 활용 시범사업, ^(이민통합과) 이민사회 대비 사회통합정책 확대 개편(안) • 참석 : 국적·통합정책단장, 외국인정책과장 등 관련 부서 담당자 및 희망 직원 등 50명 	외국인 정책과
6.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만 선박심사 역량 강화 발표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장소 : 6. 13.(목) ~ 6. 14.(금), 인천 송도 • 내용 : 향만 출입국심사 업무 관련 당부사항 전달, 지정 및 자율과제 토의 및 발표, 기관별 현안 및 건의사항 논의 등 	출입국 심사과
6.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등록사실증명(거소포함) 상 영문주소 표기 시행 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증명서 상에 표기되는 체류지를 민원인 신청에 인한 영문 병기 시행('24. 6. 18.(화) 15:00) - 사실증명서 상 주소 외 다른 기재 항목은 국·영문으로 병기 중이며, "상세 주소"는 담당자 직접 입력이 수반 되는 사항으로 온라인(정부24) 서비스는 불가 ※ 시행 기관 :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228개 시·군·구 및 3,563개 읍·면·동사무소 	이 민 정보과
6.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제1회 중앙-지자체 외국인정책 워크숍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6. 13.(목) 10:00, 서울시청 • 참석 : ^{중앙부처} 법무부·행안부, ^{지자체} 서울지역(기초 포함) 외국인정책 담당자, 서울연구원 등 약 60명 ※ 주재 : 국적·통합정책단장 • 내용 : ^{법무부}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등, ^{서울시} 외국인주민정책 마스터플랜(2024 ~ 2028) 주요 추진과제 등 논의 및 토론 	외국인 정책과
6.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제3회 난민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6. 14.(금) 15:00, 대회의실 • 참석 : 위원장(법무부 차관) 등 13명 • 내용 : 난민불인정결정 등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난 민 심의과
6.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외국인등록시스템 구축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6. 17.(월) 15:00, 정부과천청사 1동 출입국회의실 • 참석 : 출입국정책단장, 기획과장, 이민정보과장, 전담 사업자 대표 등 • 내용 : ①IC카드 외국인등록증 신청·접수 발주 등을 위한 등록증관리시스템 구현, ②간편인증 기능 구현, ③각종 민원 상태 확인 및 알림 기능 구현 등 주요 사업내용 소개 	이 민 정보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6.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7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지역이민정책연구네트워크)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인구위기시대, 지역이민정책의 형성과정과 도전과제” • 일시, 장소: 6. 18.(화) 14:00,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주관: 이민정책연구원 • 참석: 법무부 및 학계, 한국행정학회 및 지역 연구원 등 ※ 우리부는 국적·통합정책담당장, 외국인정책과장 등 참석 	외국인 정책과
6.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6. 19.(수) 14:10, HD 현대 아산홀(경기 성남시) •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대통령 - 대통령실: 정책실장, 사회수석·고용노동·교육비서관 등 - 위원회: 부위원장, 상임위원, 민간위원(13명) 등 - 부처: 정부위원(8명), 관계부처(법무부, 권익위 등) - 외부인사: 정책수요자, 경제계·언론계·글로벌·민간전문가·지자체 등 ※ 우리부는 장관, 본부장 참석 • 안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양육부담 획기적 해소,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외국인 정책과
6.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재)위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 19.자 임기만료 위원 19명 중 재위촉(연임) 15명, 신규위촉 2명 등 총 17명 위촉 ※ 위촉기간: '24. 6. 20. ~ '26. 6. 19.(2년간) 	이 민 통합과
6.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하반기 사증발급 현황 자료 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재외공관 사증발급 현황 분석을 통해 공관별 사증업무 특성 파악 및 사증정책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 불법체류 외국인 동향 분석을 통해 사증심사 강화 대상(자격) 선별 등 • 내용: '23년 하반기 사증접수 건은 총 1,324,840건으로 '22년 동기 대비 98%증가, 불법체류 발생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사증발급 대비 불법체류율은 '22년 상반기부터 소폭 감소 중 ※ 송부기관: 본부 및 소속기관, 외교부 	이 민 정보과
6.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통합중앙협의회 간담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6. 21.(금) 10:00, 법무부 대회의실 • 참석: (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국적·통합정책담당장, 이민통합과장, (협의회) 사회통합지역협의회 회장단(17명) 등 • 내용: '23년도 모범 활동사례 공유 및 '24년도 활성화 방안 등 	이 민 통합과
6.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주요 정보시스템 사이버 보안강화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인도네시아 국가데이터센터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정부시스템 장애 발생(연합뉴스 기사)에 따른 대응 태세 확립 • 내용: ICRM2019, 하이코리아 등 우리 본부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①사이버 보안점검 및 취약 분석실시, ②보안 교육·훈련강화, ③보안관제 및 대응체계 강화 지시 	이 민 정보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6. 27. ~ 6.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제2회 중앙-지자체(대구·경북·강원) 외국인정책 워크숍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 장소 : 6. 27.(목) ~ 6. 28.(금), 경북 문경시 • 참석 : 중앙부처 법무부·행안부, 지자체 대구·경북·강원(기초 포함) 외국인정책 담당자, 강원·경북연구원 등 약 120명 ※ 주재 : 국적·통합정책단장 • 내용 : 법무부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등, 경북 경북형 이민정책 기본계획, 강원 강원특자도 외국인정책 방향 등에 대해 발표 및 토론 	외국인 정책과
6.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제2회 국적심의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6. 27.(목) 15:00, 법무부 대회의실 • 참석 : 위원장(법무부 차관), 정부위원, 민간위원 등 13명 • 안건 :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예외적 국적이탈, 국적판정 	국적과
6.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남아 3개국 단체관광 비자 발급대상 확대 시범운영 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남아 관광객의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자 신청이 간소화된 단체관광 비자의 발급 대상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일반 여행객까지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2년간 연장 	체류 관리과
6.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활동(E-7) 직종 내 '요양보호사'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 분야 전문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확대하고자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여 2년 간 시범운영 	체류 관리과

7월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여행허가제(K-ETA) 고도화 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7. 2.(화) 15:00, 법무부 • 내용 : 전자여행허가제(K-ETA) 고도화 사업개요 등 설명, 사업 수행계획(안) 발표, 질의응답 등 	출입국 심사과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불법체류자 기록정리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체류 가능성이 적은 주요 선진국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관서별로 기록상 불법체류 여부 확인(사증, 입국신고서 등 활용), 기록정리 및 결과 보고 지시 ※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 선진국 미성년자 1,203명, 기록정리 메뉴얼 배포 	이민 정보과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유학생(D-2-5), 연구원(E-3) 비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대학평가 상위권에 속하는 국내대학의 경우, 이공계 분야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을 연구유학생(D-2-5)으로 초청 가능 - 국외 석사학위 소지자라도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또는 우수 학술논문 저자의 경우 경력이 없더라도 바로 연구원(E-3)으로 초청 가능 	체류 관리과
7.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적 심사 진행상황 조회 시스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코리아 내 국적 심사 진행상황 실시간 조회 시스템 구축 ※ 귀화(6단계), 국적회복(4단계) 등 심사단계별 경과 확인 가능 	국적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7.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출입국심사대 구축사업 착수보고회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7. 3.(수), 15:00, 인공청 제1합동청사 감식과 회의실 • 참석 : 이민정보과장, 인공청 지원국장, 심사지원과장, 정보관리과장, 전담사업자 등 • 내용 : 인천공항 T2 동편 확장에 따른 24개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 추진 일정, 자동심사시스템 장애 대응체계 및 보안 강화 등 주요 사업 과제 보고 ※ T2 동편 입국장 7대, 출국장 17대 설치 예정 	이 민 정보과
7.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부 무자격 외국인 취업알선 방지를 위한 연계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 고용부의 무자격 외국인 취업알선 방지를 위하여 구직 신청 외국인에 대한 정보연계 필요 • 내용 : 우리 부 표준연계포털을 활용, 구직 외국인의 체류자격 및 기간을 고용 정보시스템(워크넷)에 실시간 조회 서비스 제공 ※ 관련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2 제3항 	이 민 정보과
7.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도 한국이민정책학회 하계 학술대회」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7. 4.(목) 10:00 ~ 18:00, 순천향대학교(충남 아산시) • 주제 : 인구위기 해소를 위한 지역 이민정책의 방향과 과제 • 주최 및 주관 : (주최) 한국이민정책학회 (주관) 충남도청, 아산시청, 이민정책연구원, 경북연구원 등 • 참석 : 국적·통합정책단장 및 법무부 직원, 충남도지사, 아산시장, 한국이민정책학회 회원 등 • 내용 : "지역 이민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 	외국인 정책과
7.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3기 이민정책의 이해과정 교육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 장소 : 7. 10.(수) ~ 7.12.(금), 법무연수원(진천) • 대상 : 중앙부처, 지자체, 경찰 공무원 등 • 과목 : 외국인정책, 이민통합정책, 체류관리, 국적, 외국인이 바라보는 한국사회, 상호문화의 이해 등 	이 민 통합과
7.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출·입국심사장 병행운영 현장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천장 누수로 출국심사장(2층)이 임시 폐쇄됨에 따라 입국심사장(1층)을 출·입국심사장으로 병행운영 필요 • 내용 : 출·입국심사장 병행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전환 점검, 출입국심사 시스템 정상 작동 모니터링 및 피해 복구 진척사항 확인 등 ※ 출입국심사과 선박 담당자 점검 참석, '24. 7. 12.(금) 14:00, M/V GUNSAN PEARL호 출항 	이 민 정보과
7.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적이탈허가 신속심사제 시행 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상 불이익 발생 임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속한 심사를 위한 별도 절차 마련 	국적과
7.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시정 설계 관련 장비선정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7. 19.(금) 14:00, 부산출입국·외국인청 • 내용 : 신조 법무부 감시정에 적합한 주요 장비(주기관·추진기 등) 선정 등 	출입국 심사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7.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 주도의 국민 체감 이민정책 추진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민정책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외국인정책 총괄부처로서의 위상 제고 - 「재한외국인차우기본법」에 근거한 우리부 정책 수단의 적극 활용 ※ 이민 관련 주요 현안을 외국인정책실무위, 분과위에 상정하는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및 해결방안 도출 	외국인 정책과
7.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통합자문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7. 25.(목), 14:00 ~ 16:00, 법무부 대회의실(7층) • 참석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국적·통합정책단장,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 본부장, 민간위원 7명 등 • 안건 : 이민사회 대비 사회통합정책 추진방향, 사회통합프로그램 유료화 방안 	이민 통합과
7.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55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7. 26.(금) 11:00 ~ 13:00, 과천청사 국제회의실 • 진행 및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청년인턴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기획과 1명, 체류관리과 2명, 이민통합과 1명, 난민정책과 1명 - (주제) 청년의 눈을 통해 본 인구 위기와 이주 본질 (부제 : 청년이 읽고, 청년이 답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도서) ①일할 사람이 사라진다(서울대 이철희 교수), ②이주, 국가를 선택하는 사람들(암스테르담대 헤인 데 하스 교수) - (방식) 관련 저서별로 청년인턴 각 1명이 주제 발표 후 청년인턴 전원과 참여직원 간 질의·응답 및 토론 • 참석 : 본부장, 출입국정책단장, 국적·통합정책단장 및 본부 직원 중 포럼참석 희망자 	외국인 정책과
7.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지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관 : 19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지자체 • 과제체계 : 5대 정책목표, 18개 중점과제 등 • 기본원칙 : ①일관성 있는 시행계획 추진, ②신규 과제 적극 발굴, ③부처 간 중앙-지자체 간 협업과제 반영, ④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추진결과에 대한 환류 철저 	외국인 정책과
7.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스타트업센터(GSC) 개소식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7. 31.(수) 15:00, 팀스타운 S1 • 참석 : 중기부(주관), 법무부 차관, 주요 주한대사 등 • 내용 : 센터 개소 축하 및 창업 활성화 전략 발표 	체류 관리과

8월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8.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코리아 등 대민 포털서비스 일시 중단(순단) 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8. 11.(일), 18:00 ~ 24:00 ◦ 대상 : K-ETA, 하이코리아, 소시넷, 유학생정보시스템, 숙박신고시스템 등 ◦ 내용 : '24년 K-ETA 고도화사업의 일부로 추진 중인 노후 전산장비(네트워크 메인 스위치 2식) 교체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순단) 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서비스 중단 : 20:00 ~ 22:00, 그 외 시간은 순단 예정 ※ 본부 홈페이지, 각 대민포털에 시스템 점검 안내문 게시, 작업 중 비상연락망 유지 및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 예정 	이 민 정보과
8.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제4회 난민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8. 2.(금) 15:00, 대회의실 ◦ 참석 : 위원장(법무부 차관) 등 13명 ◦ 내용 : 난민불인정결정 등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난 민 심의과
8.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 산하 BMG 회의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8. 12.(월) ~ 8. 17.(토), 페루 리마 ◦ 목적 : 25년 기업인이동 실무그룹(BMG) 부의장 수임 관련 진행 상황 파악 등 	출입국 심사과
8.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8. 5.(월) 14:00, 법무부 ◦ 내용 : 「무사증국가 불법체류자 발생억제를 위한 대응체계 및 절차 마련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용역 수행 계획 발표 등 	출입국 심사과
8. 5. ~ 8.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외국인행정 빅데이터 분석 교육훈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협업하여 소속 직원(15명) 대상으로 5일간 맞춤형 교육 진행 	외국인정보 빅데이터팀
8.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적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적심의위원회 민간위원 6명 신규 위촉, 16명 재위촉 	국적과
8.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관광업계 간담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8. 7.(수) 13:00, 출입국회의실 ◦ 대상 : 법무부 체류관리과장(주재), 복지부,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보건산업진흥원, 의료관광협회,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의료기관 등 ◦ 내용 :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기준 및 제도 운영 등에 대한 관련 업계 의견 청취 	체 류 관리과
8.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활동(E-7) 직종 내 '송전전기원'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특정활동(E-7) '송전전기원' 직종을 신설하여 2년 간 시범운영 	체 류 관리과
8.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9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8. 12.(월) 15:00,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 내용 : 독립유공자(최이봉 선생 등) 14명의 후손 27명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8.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법인 운영실태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방법 : 8. 12.(월) ~ 9. 6.(금), 현장 방문 • 대상 : 한국사회통합학회(서울 용산구) 등 비영리법인 4개 • 점검사항 : 정관에 따른 목적사업 시행 여부, 사업 실적의 설립목적 부합 여부, 법인 관련 보고의무 이행여부 등 	이민통합과
8.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정보전문분석시스템 고도화 사업 착수보고회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8. 14.(수), 14:00, 인공청 합동청사 감식과 회의실 • 참석 : (본 부) 이민정보과 사무관, 담당 계장 (인공청) 청장, 지원국장, 감식과장, 정보관리과장, 전담 사업자 등 • 내용 : 바이오정보전문분석시스템(BASE) 고도화사업 개요, 주요 과업 내용(출입국심사 시스템 안면인식 알고리즘 교체) 및 추진계획 등 보고 ※ 사업비 : 2,670백만원, 사업기간 : 180일(안정화 기간 포함) 	이민정보과
8.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기반 이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8. 13.(화) 14:00, 법무부 대회의실 • 참석 : (우리부) 법무부 차관, 본부장, 출입국정책단장 등 (지자체) 충북·충남·경북 부지사, 서울·부산·대구·인천 등 광역지자체 국장급,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 안건 :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지자체 건의사항에 대한 우리부 검토 및 이행방안, 지자체 의견수렴 등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8.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차량등록 현황 분석」 결과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전송된 차량등록 정보를 활용하여 합법·불법체류, 완전출국 외국인 차량등록 현황 분석 후 국토교통부에 완전출국자 소유 차량정보 제공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8.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우편번호 및 주소입력란을 하나로 통합(우편번호, 도로명, 지번, 건물명 중 하나라도 입력 시 검색 가능하도록 주소입력 방법 개선) 	출입국심사과
8.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세미나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미나명 : 저출산·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및 최저임금 구분적용 관련 세미나 • 일시, 장소 : 8. 21.(수) 10:00, 국회의원회관 • 참석 : 법무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 우리부는 외국인정책과장 토론자로 참석 	외국인정책과
8.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정책 실무분과위원회」 연석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명 : 이주민 거주·통합·국적 / 중앙·지방협력 실무분과위원회 • 일시, 장소 : 8. 23.(금) 14:00, 법무부 대회의실 • 주제 : 출입국정책단장(중앙·지방협력), 국적·통합정책단장(이주민 거주·통합·국적) • 참석 : (중앙부처) 기재부·교육부 등 15개 부처(청) 과장급 (지자체) 17개 광역지자체 외국인정책 관련 부서 과장급 • 안건 : ①국내 체류 외국인 활용 가사사용인 운영 방안, ②취업비자 총량 사전공표제 운영 방향, ③이민사회 대비 사회통합정책 체계 강화, ④외국인정책 관련 지자체 참여 방안, ⑤ODA를 활용한 요양보호 외국인력 도입방안 	외국인정책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8. 29. ~ 8.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회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 장소 : 8. 29. ~ 8. 30., 신라스테이 마포 • 참석자 : 난민전담공무원 등 44명 • 내용 : 난민정책 현안 및 국가정황 관련 특강 등 	난 민 정책과
8.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정보 대외기관 연계 서비스 일시 중단 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9. 2.(월) 16:00 ~ 9. 3.(화) 00:10 • 대상 : 출입국기록, 외국인등록정보 등 대외기관 정보연계 자료 • 내용 :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대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후 전산장비(방화벽, 네트워크 스위치 총 8식) 교체로 인한 연계 서비스 일시 중단(1분 이내) 알림 ※ 검찰청, 경찰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결제원, 국세청 등 주요 정보연계 기관에 작업 알림 및 작업 중 비상연락망 유지 	이 민 정보과

9월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9.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도 하반기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관 양성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9. 2.(월) ~ 9. 12.(목), 총 4회 • 장소 : 한국이민재단(서울), 건양사이버대(대전), 영진전문대(대구) • 대상 : 총 169명(출입국관리공무원 87명, 한국어강사 82명) • 내용 : 이론교육(평가체계, 구술시험 및 채점방법 등 4시간), 실습(3시간) 	이 민 통합과
9.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RM2019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시스템 개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ICRM2019 비밀번호 초기화에 주민번호 활용이 보안취약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개인이 별도 등록한 휴대폰으로 신규 비밀번호가 전송되도록 시스템 개선 ※ 9. 10.(화)부터 ICRM2019(화면 상단)에 개인 휴대폰번호 등록 가능 	이 민 정보과
9.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등록관서 담당공무원 대상 국적실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9. 5.(목) 15:00, 인천광역시청 • 대상 : 인천가정법원 관할 지자체 공무원 30여 명 • 내용 : 국적법령 주요내용, 국적 실무과정에서 빈번 발생하는 오류 유형별 사례 설명, 국적 제도 질의 응답 	국적과
9.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인재 유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9. 5.(목) 13:30, 교정본부회의실(409호) • 참석 : 법무부, 교육부, 산업부, 중기부 담당 사무관 등 • 안건 : ① 교육·산업·과학계 첨단분야 우수인재 유치 및 정주 지원방안, ② 과학기술분야 유학생 국내 정주 지원방안 	체 류 관리과
9.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법무부 감시정 설계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9. 6(금) 10:30, 법무부 • 내용 : 신조 법무부 감시정 설계 진행 경과 보고, 중간보고 발표, 질의응답 등 	출입국 심사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9.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국가이민관리국 주최 '2024년 이민관리 협력 포럼'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 장소 : 9. 10.(화), 중국 쑤저우 • 내용 : 국경 간 이동 편의 촉진 주제를 발표하여 이민국 관계자 간 이민정책·국경 관리 관련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 부의 우수한 출입국심사 정책(K-ETA, IPC 등) 홍보 	출입국 심사과									
9.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화사업 착수보고회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9. 10.(화) 15:30, 인공청 제2정부청사 대회의실 • 참석 : (본부) 이민정보과 담당 사무관 및 계장, (인공청) 지원국장, 감식과장, 정보분석과장, 정보관리과장 등 • 내용 : 사업 주요 내용, 사업 관련 주요 이슈 사항 및 향후 계획 보고 - 세부 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사업명</th> <th>예산</th> <th>주사업자</th> </tr> </thead> <tbody> <tr> <td>위변조합성사진 탐지시스템</td> <td>349백만원</td> <td>한국인식산업</td> </tr> <tr> <td>위험승객정밀분석시스템(PPS)</td> <td>1,053백만원</td> <td>이셈테크</td> </tr> </tbody> </table> <p>※ 양 사업 모두 연말까지 정상 추진 가능</p>	사업명	예산	주사업자	위변조합성사진 탐지시스템	349백만원	한국인식산업	위험승객정밀분석시스템(PPS)	1,053백만원	이셈테크	이 민 정보과
사업명	예산	주사업자									
위변조합성사진 탐지시스템	349백만원	한국인식산업									
위험승객정밀분석시스템(PPS)	1,053백만원	이셈테크									
9.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민정책 관련 국회토론회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이민청 설립 및 외국인 비자 문제 개선" • 일시, 장소 : 9. 11.(수) 14:00 ~ 15: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참석 : 법무부, 전라남도, 이민정책연구원, 학계 및 현장전문가 ※ 우리부는 장관 서면 축사, 외국인정책과장 토론자로 참석 • 주최 / 주관 :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 목포MBC 	외국인 정책과									
9.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증거수집 및 분석장비 고도화사업」 완료보고회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9. 12.(목) 16:00, 서울청 이민특수조사대 회의실 • 참석 : (본부) 이민정보과, 이민조사과 담당자 (서울청) 특조대장, 특조사무관, 업무 담당자 등 • 내용 : 서울청 디지털포렌식 센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디지털 증거수집 및 분석장비 고도화사업」 완료 보고 ※ 사업기간 : '24. 7. 5. ~ '24. 9. 4.(2개월), 소요예산 : 349백만원 	이 민 정보과									
9.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플랫폼」 이용 설명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9. 13.(금) 14:00,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장 • 참석 :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소속 지자체 관련 담당자 • 내용 : 플랫폼 이용 방법, 기초 데이터셋 및 시각화자료 소개 	외국인정보 빅데이터팀									
9.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석 연휴 정보시스템 등 장애 대비 철저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석 연휴 기간 출입국정보시스템 및 각종 연계 서비스 등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상황을 사전에 대비하여 운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점검 및 상황근무 철저 지시 ※ 장애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비상연락망 유지 예정 	이 민 정보과									
9.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차 외국인 장기보호 심의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 장소 : 9. 23., 화성외국인보호소 • 참석 : 위원장(본부장) 등 8명 • 내용 : 1년 이상 보호중인 외국인 5명에 대한 보호해제 여부 심의 	이민 조사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9.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9. 24.(화) 14:00, 법무실회의실(501호) • 참석 : 출입국정책담당장(위원장), 체류관리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이민조사과장, 보건복지부, 한국관광공사 • 내용 :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기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논의 	체류관리과
9.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 외국인력 인권 관련 시민단체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9. 24.(화) 15:00,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 참석 : 농어업외국인력지원TF, 인권단체(5), 농어업인단체(3) • 내용 : 인권 관련 계절근로 제도 개선 추진 경과 및 방향 설명, 향후 제도 개선 사항 및 협력방안 논의 등 	체류관리과
9.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회 법무부-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외국인정책협의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9. 25.(수) 13:30, 김포현대프리미엄아울렛 2층(회의실) • 참석 : 법무부 이민통합과장, 김포시 복지교육국장 등 • 내용 : 양자간 상호협력 및 제도개선 관련 7개 안건 논의 	이민통합과
9.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제3회 중앙-지자체(광주·전북·전남·제주)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 장소 : 9. 26.(목)~9. 27.(금), 전남 여수시 • 주최 : 법무부, 행안부 • 주관 : 이민정책연구원, 광주광역시청, 전북특별자치도청, 전라남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 참석 : 법무부(출입국정책담당장, 외국인정책과장 등), 행안부, 광주·전북·전남·제주지역(기초 포함) 외국인정책 담당자, 전북·전남연구원 등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사증-계절근로-지역특화비자, 지자체 광주·전북·전남 외국인정책 주요 추진과제 등 발표 및 토론 	외국인정책과
9.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 브리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9. 26.(목) 10:00, 법무부 브리핑실 • 내용 : 우수인재 유치, 지자체·민간 참여 확대, 사회통합 강화, 과학적 도입 관리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9.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관련 학술포럼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9. 27.(금) 14:00, 서울대학교 • 주관 : 이민정책연구원 및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 법무부 후원 • 참석 : 출입국본부장, 추진단 부단장 등 • 주제 : ① 노동수급 전망과 외국인 유입의 노동시장 영향 ② 외국인 취업현황 및 취업비자 관련 정책과제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9.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화 민간면접관 역량 강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9. 27.(금) 13:30,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참석 : 수도권·강원권·제주권 귀화 민간면접관 33명 • 내용 : 청렴·감질예방 교육, 면접심사시 주의사항, 면접 실무 사례 발표 등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9.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개정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 설정 - 외국인 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계속 보호 승인 및 신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보호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외국인 정책과

10월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1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정책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과위원 : 거주·통합·국적 실무분과위원회 • 일시, 장소 : 10. 2.(수) 14:00, 법무부 영상회의실(8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방식) 하이브리드(대면 + 화상) •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주재), 외국인정책과장, 안건 관련 담당 과장 등 - (중앙부처)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외교부, 행안부, 문체부, 농림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해수부, 국정원, 통계청, 경찰청, 병무청 등 16개 부처(청) 과장급 • 안건 : 계절근로자 효율적 관리 방안, 선원취업 도입 및 정착지원 방안, 동포 체류자격 통합 방안, 이주배경청소년 체류·자립 지원 	외국인 정책과
10.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4차 외국인정책 실무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방식 : 10. 4.(금) ~ 10. 11.(금), 서면 • 안건 : 2023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안) • 결과 : 원안의결 	외국인 정책과
10.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장관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위한 실물 등록증 형태 변경(IC칩 내장)에 따라 발급 원가 상승분 수수료(기존 3만 → 인상 3만 5천) 반영 및 외국인등록증(거소증 포함) 서식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칩 내장 외국인등록증은 '25. 1월부터 발급 	이 민 정보과
10.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증) 시안 본부장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 플라스틱 신분증 대비 편의성·안정성이 우수한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화된 신분증을 도입, 온·오프라인에서 신원확인 용도로 활용 • 내용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에 적용된 첨단 위변조 방지 보안기술(바탕면 변동 무늬, 실시간 표기, 화면 캡처 방지), 성명 및 외국인등록번호 표기 등 디자인 시안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행안부 모바일 주민증과 공동 추진사업으로 시스템 구축은 '24. 12월 완료되며 시범운영을 통해 '25년 상반기 발급 예정 	이 민 정보과
10.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통합프로그램 대전CBT 센터」 주말 확대 운영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종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사전평가 • 운영 시기 : '24. 10. 6.(일)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주 6일(월, 화, 수, 목, 금, 토) ⇒ (변경) 주 4일(월, 금, 토, 일) 	이 민 통합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10.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플랫폼」 지자체(다도협) 대상 개방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대상 : 10. 7. ~ 12. 31.,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소속 이용 신청 지자체 (26개 지자체 중 20개 지자체 신청) • 내용 : 행정동 단위 연령별(1세대위), 국적별, 체류자격별 데이터 개방 및 시각화 자료 제공, 지자체 분석의뢰 접수 및 지원 	외국인정보 빅데이터팀
1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제3회 국적심의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10. 10.(목) 15:00, 법무부 대회의실 • 참석 : 위원장(법무부 차관), 정부위원, 민간위원 등 15명 • 안건 :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예외적 국적이탈, 국적판정 	국적과
10.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화 민간면접관 역량 강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10. 14.(월) 13:30,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참석 : 호남권·영남권·중부권 귀화 민간면접관 15명 • 내용 : 청렴·감질예방 교육, 면접심사시 주의사항, 면접 실무 사례 발표 등 	
10.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조선산업분야 외국 우수인재 도입 확대·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업계 협업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해당 분야의 임금기준 개선, 도입한도 및 도입직종 확대 	체류 관리과
10.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민생토론회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10. 15.(화) 14:00, 제주도 • 내용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① 세계인의 관광 휴양도시, 제주 ② 탄소없는 에너지 선도도시, 제주 ③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는 살기 좋은 제주) ※ 우리 부 관련 내용 : 제주크루즈 관광객 출입국심사 간소화 	출입국 심사과
10.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연장 요건 이행 관련 관계부처 회의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10. 15.(화), 15:00, 외교부 종합상황실 • 참석 : (주제) 외교부 영사안전국장, 행안부, 경찰청, 개인정보위, 국정원 등 ※ 우리 부는 이민정보과장, 사무관 참석 • 내용 : 미국 '비자면제(VWP) 연장 요건(EBSP) 협정 문안'에 대한 기관별 검토의견 발표 및 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지문·범죄경력 조회 목적·대상·범위(수사경력자료 제외 등)·절차, ②정보공유 대상 범죄목록 구체화, ③공유 이행기관 및 국가담당자, ④지문·범죄경력 등 시스템 관련 구상 등 ※ 기 개최(24. 2. 6.) 관계기관 회의 시 우리 부는 국제형사과만 참석 	이민정보과
10.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9차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방식 : 10. 16.(수) ~ 10. 22.(화), 서면 • 위원장 : 국무총리 • 안건 : 2023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안) ※ 10. 4.(금) ~ 10. 11.(금) 제34차 외국인정책 실무위원회 개최(서면) 결과 "원안 의결" 	외국인정책과
10.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회의(MICE) 주요 참가자 입국 우대심사대 시범운영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운영기간) '24. 10. 17. ~ 11. 30. (대상규모) 외국인 500명 초과 참가 국제회의 (이용대상) 주최기관, 임원진, 초청연사, 의사결정자 등 중요도가 높은 자로서 문체부(한국관광공사)에서 추천하는 참가자 	출입국 심사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10.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구축사업 중간 보고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10. 29.(화), 15:00, 출입국회의실(513호) · 참석 : 출입국외국인정책담당장, 이민정보과장, 본부 각과 과장 등 · 내용 : 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위변조 방지 보안기술 적용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 디자인 시연 등 ※ 사업 진척률 : 73.2% 정상 추진 중 	이민정보과
10.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56회 이민정책 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10. 17.(목) 10:00, 법무부 영상회의실(823호) · 강사 : 이철희 교수(서울대 경제학부) · 주제 : 인구변화로 인한 지역 및 산업별 노동수급 불균형(외국인정책에 대한 시사점) · 참석 : 출입국정책담당장, 외국인정책과장 등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원 중 참석 희망자 	외국인정책과
10.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여행허가(K-ETA) 시스템 고도화 사업 중간보고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10. 17.(목) 15:00, 법무부 · 내용 : 전자여행허가(K-ETA) 내·외부 시스템 고도화 진행 사항, 전자입국신고서 시스템 구축 경과, 인프라 도입 현황 등 	출입국심사과
10.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신고서를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정보통신망을 설치·운영함('25. 1. 1. 시행 예정) -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활동범위를 임업분야, 택배서비스·항공기 하역업 업체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 등으로 확대 	외국인정책과
10.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제4회 중앙-지자체(경남·부산·울산)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 장소 : 10. 31.(목)~ 11. 1.(금), 경남 밀양시 · 주최 : 법무부, 행안부 · 주관 : 이민정책연구원, 경남도청, 부산·울산광역시청 · 참석 : 경남·부산·울산지역(기초 포함) 외국인정책 담당자, 부산·경남연구원 등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등 - 지자체 2025년 경상남도 이민정책 추진계획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 	외국인정책과

11월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1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도 출입국심사 이용 만족도 조사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 출입국심사 서비스에 대한 이용객 의견을 수렴하여 출입국심사 관련 정책 및 친절도 제고에 반영 · 내용 : 출입국심사관의 근무자세, 업무처리 만족도, 출입국심사장 환경 등에 대해 승객, 승무원(선원) 대상 설문 시행 ※ 조사기간 : 11. 4.(월) ~ 11. 18.(월) / 조사기관 : 14개 공항만 출입국기관 	출입국심사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11.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외국인의 국내 창업 활성화 및 유망 스타트업 유치를 위해 정량적 요건을 최소화하고 민간평가위원회의 사업성·혁신성 평가를 거쳐 비자 발급 	체류관리과
11.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안부 지방세 과세 정확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11. 7.(목) 14:00, 서울청 정보화센터 회의실 · 참석 : 이민정보과, 서울청 정보화센터 연계 담당자, 행안부 지방세정책과 사무관 등 · 내용 : 내·외국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판단 및 과세 정확성 제고를 위한 출입국정보 등 연계 확대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정보(납세의무자의 입출국 일자)를 행안부에 제공 중 	이민정보과
11.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역량 강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11. 9.(토) 10:00 ~ 15:10, 한국이민재단(5층 강의실) · 참석 : 이민통합과 담당사무관·주무관, 제3기 멘토단 27명 등 · 내용 : 초·중·고 수업 기법 공유 등 멘토단 역량 강화 교육 	이민통합과
11.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의심자 정보 활용기관 간담회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11. 13.(수), 15:3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5층 중회의실 · 참석 : (주관) 보건복지부, 법무부, 행안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해양수산부, 통계청,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 내용 : 보건복지부 사망의심자 HUB 시스템 운영 설명, 사망의심자(내·외국인) 정보를 활용하는 기관의 업무 공유, 협력체계 강화 및 의견 수렴 등 	이민정보과
11.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재해 복구 및 장애 예방을 위한 비상 심사시스템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11. 15.(금), 10:00 ~ 14:30 · 내용 : 출입국심사 정보시스템의 재난·재해 복구 및 장애 예방을 위한 김해공항 DR스토리지(원격 복제 데이터) 확인, 비상심사 재가동 및 단계별 서비스 테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청 정보관리과(통합유지보수)에서 작업 수행 및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본부 보고 예정 	이민정보과
11.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7회 정책발표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11. 15.(금) 09:00, 과천청사 국제회의실 · 참석 : 본부장, 외국인정책과장, 본부 각과 사무관, 본선과제 제안자 10명 등 · 개최 결과 : 최우수(인천청 8급 김흥수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챗봇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이민행정 혁신 방안') 등 우수 2명, 장려 3명, 정책제안 4명 수상 	외국인정책과
11.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제5회 난민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11. 15.(금) 15:00, 대회의실 · 참석 : 위원장(법무부 차관) 등 11명 · 내용 : 난민불인정결정 등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난민심의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11.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학급 대상 멘토링 특강 시범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 : 11. 15.(금) ~ 12. 26.(목) • 대상 지역 : 화성시, 김포시 등 6개 지자체 10개 학급(257명) • 강사 : 이민자 멘토단 • 내용 : 학교 내 한국어 학급에서 정착 초기의 이주배경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사회 적응기 및 진로 관련 조언 등 특강 	이 민 통합과
11.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법」 개정안 입법공청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11. 19.(화) 13:30, 고려대학교 • 주제 :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난민법」 개정 방향 • 참석 : 법무부, 학계, 법조계, 유관 단체 등 약 100명 	난 민 정책과
11.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적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장소 : 11. 21.(목) ~ 11. 22.(금), 테이크 호텔(광명시 소재) • 참석 : 본부 국적과 및 지방관서 국적업무 담당자 30여 명 • 내용 : 국적업무처리지침 개정 및 귀화 면접심사 매뉴얼 개정 논의, 국적관련 최신 판례 등 국적업무 관련 발표 등 	국적과
11. 21. ~ 11.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제5회 중앙-지자체(충북·충남·대전·세종)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 장소 : 11. 21.(목) ~ 11. 22.(금), 충북 괴산군 • 주최 : 법무부, 행안부 • 주관 : 이민정책연구원, 충북·충남도청, 대전광역시청, 세종특별자치시청 • 참석 : 외국인정책과장 등 법무부 직원, 충북·충남·대전·세종지역(기초 포함) 외국인정책 담당자, 충북·충남연구원 등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 및 지자체 이민정책 주요 추진 과제·현안에 대한 발표 및 중앙-지자체 간 협업 강화방안 토의 등 	외국인 정책과
11.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57회 이민정책 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11. 21.(목) 10:30, 출입국회의실(513호) • 강사 : 이재호 담당관(IOM 한국대표부) • 주제 : 이주 글로벌 콤파트의 이해('21년 「제1차 아·태 지역 이주 글로벌 콤파트 이행점검 회의」 Review를 병행하여) • 참석 : 본부 각 과 기획(총괄) 담당자 	외국인 정책과
11.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4기 이민정책의 이해과정 교육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 장소 : 11. 27.(수) ~ 11. 29.(금), 법무연수원(진천) • 대상 : 중앙부처, 지자체, 경찰 공무원 등 • 과목 : 외국인정책, 이민통합정책, 사증·체류관리, 동포정책, 국적, 외국인이 바라보는 한국사회 등 	이 민 통합과
11.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계절근로 제도 활성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형 계절근로 허용범위 확대, 최소임금보장기준 합리적 조정, 결혼이민자 초청방식 개선 및 계절근로 체류자격 통합 등 운영 효율화 •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및 관계기관 협업 강화 	체 류 관리과
11.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식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11. 27.(수) 14:00, 법무부 대회의실 • 참석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국적과장, 신규 귀화 민간면접관 12명 등 • 내용 : 위촉장 수여, 대표자 선서, 축사, 면접관 직무교육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11.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의 비자정책 관련 수요를 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도입 ※ 新출입국·이민정책 발표 과제 	체 류 관리과
11.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4분기 정기 예방작업 실시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12. 10.(화) 10:00 ~ 13:20 • 내용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버 장비 재부팅, 메모리 변경 작업 등 ※ 하이코리아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메뉴 순단 발생 외 영향 없음 	이 민 정보과
11.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심사 기법 발표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장소 : 11. 28.(목) ~ 29.(금), 서울 강서구 • 내용 : 본부-소속기관 간 출입국심사 기법 공유 등 업무 전문성 제고 방안 및 제도개선 발굴 등 논의 	출입국 심사과
11.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이민정책연구원 이민데이터 세미나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11. 28.(목) 13:00, 서울글로벌센터 • 주제 : (1부) 국내 외국인 취업(고용) 현황과 개선방안 (2부) 이민행정 및 조사데이터 현황과 개선과제 • 참석 : 법무부 등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학계·연구계 등 ※ 우리부 외국인정책과장,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주무관 지정토론자로 참석 	외국인 정책과

12월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1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수요 및 특성에 부합하면서 국가 전체 이민정책 추진방향과 조화를 이루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실시 관련 참여 광역지자체 공모 • 공모 기간 : '24. 12. 2.(월) ~ '25. 2. 7.(금) 	출입국·이민 관리체계 개선추진단
1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 '25년도 기준 중위소득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사항을 반영하여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소득요건 등 현행화 • 내용 : 2인 가구 기준, 기존 연소득 약 2,209만원에서 중위소득 상승분을 반영하여 약 2,359만원으로 소득요건 개정 	이 민 통합과
12.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법 시행령」,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개정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 난민심사 화상면접 법적 근거 보완, 난민전담공무원, 난민조사관 등의 요건 규정, 면접 출석요구 절차 구체화 - (시행규칙) 난민인정신청서·접수증에 난민신청자의 대한민국 법질서 준수 의무 안내, 면접 출석요구 절차 구체화, 서식 용어 개선 등 	난 민 정책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12.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청 차세대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관련 업무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12. 3.(화) 15:00, 서울청 출입국정보화센터 회의실 · 참석 : 이민정보과, 서울청 정보화센터, 인공청 정보관리과, 관세청 · 내용 : 관세청 신규 연계서버 재구성에 따른 연계 테이블 재설정, 작업 완료 후 상호 모니터링 방법 및 일정 협의 	이민정보과
1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민행정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12. 4.(수) 15:00, 법무실험의실(501호) · 참석 : (본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 각과 과장 (업체) 넥스원테크놀로지 등 4명 · 내용 : 빅데이터 활용 사례 및 조직 인력 운영현황 조사, 법령 등 개선안 제시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1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절기 재난대비를 위한 소속기관 방문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12. 4.(수) 10:00,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점검자 : 이민정보과 사무관, 주무관 · 내용 : 외국인 보호시설을 포함한 청사 소방시설(장비) 및 소방계획, 전기안전관리, 폭설·혹한 대비 시설물 구비 등의 적정성 여부 ※ '동절기 재난(화재·폭설·한파 등) 대비 시설점검' 관련 장관 지시 	이민정보과
1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북도 주최, 이민국가 대전환 토론회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광역형 비자 도입에 따른 지역의 대응 방안" · 일자, 장소 : 12. 4.(수) 10:00, 스탠포드호텔 안동 · 주최, 주관 : 경상북도, 경북연구원 · 참석 : 김학홍 경북 행정부지사, 법무부, 경북도내 시·군, 경북교육청, 경북이민정책위원회, 경북연구원, 외국인 지원기관, 대학 등 ※ 우리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부단장 참석 및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발표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1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제6회 중앙-지자체(경기·인천)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 장소 : 12. 4.(수), 경기도 수원시 · 주최 : 법무부, 행안부 · 주관 : 이민정책연구원, 경기도청, 인천광역시청 · 참석 : 외국인정책과장 등 법무부 직원, 경기·인천지역(기초 포함) 외국인정책 담당자 등 74명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 및 지자체 이민정책 주요 추진 과제·현안에 대한 발표 및 중앙-지자체 간 협업 강화방안 토의 등 	외국인정책과
12. 5. ~ 12.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회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 장소 : 12. 5. ~ 12. 6., 서울글로벌센터 · 참석자 : 난민전담공무원 등 43명 · 내용 : 난민소송 사례 분석, 국가정황 특강 등 	난민정책과
12.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제4차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12. 9.(월) 15:00, 외교부 · 내용 : 24년 재외국민보호 집행계획 추진 실적 및 25년 계획(안) 심의, 중동지역 등 무력충돌 및 정정불안 상황에서의 우리 국민 보호 방안 토의 등 	출입국심사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12.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일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 보호(일시)해제된 난민신청자의 지원센터 이용기간 연장허가 조건 규정 명확화 ※ 근거 규정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65조, 센터 운영규정 제5조, 제6조 • 시행일자 : '24. 12. 9.(월) 	난민정책과
12.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관련 권역별 순회교육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12. 16.(월) ~ 20.(금) 14:00 ~ 16:00 • 대상 : 소속기관 체류업무 담당자 • 내용 : ①IC 외국인등록증 발급 방법, 외국인 본인확인 등 업무처리 요령, ②기존 외국인등록증 소지자에 대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방법, ③터치모니터·NFC R/W 패드·키입력(PIN) 패드 사용방법 등 ※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권역별 총 5회 실시 	이민정보과
12.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58회 이민정책 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12. 10.(화) 10:00, 과천청사 국제회의실 • 강사 : 권채리 교수(동아대) • 주제 : 지역 이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기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 공적자원 체계 고도화를 중심으로 • 참석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원 	외국인정책과
12.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재외공관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5. 1. 1.)에 따른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시행 알림 ※ ①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이 부 또는 모인 경우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등 	이민정보과
12.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사중국가 불법체류 억제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12. 12.(목) 13:30, 법무부 • 내용 : 「무사중국가 불법체류자 발생 억제를 위한 대응 체계 및 절차 마련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용역 결과물 보고 	출입국심사과
12.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제4회 국적심의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12. 12.(목) 15:00, 법무부 대회의실 • 참석 : 위원장(법무부 차관), 정부위원, 민간위원 등 14명 • 안건 :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예외적 국적이탈, 국적판정 	국적과
12.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구인난 개선 방안 관련 정책 토론회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구인난 개선 방안 • 일시, 장소 : 12. 12.(목) 10:00 ~ 12:30, 이룸센터 이룸홀(서울시 영등포구) • 공동 주최 : 장종태 의원실(민주당), 한국노인복지중앙회(주최 및 주관) • 참석대상 : 법무부·복지부, 건강보험공단, 학계, 장기요양기관 관계자 등 ※ 우리부는 외국인정책과장 토론자로 참석 	외국인정책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12.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관련 지자체 설명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12. 13.(금) 13:30, 법무부 국제회의실 • 참석 : (본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부단장 및 담당 사무관 (지자체) 17개 광역지자체 담당자 등 • 내용 :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소개 및 질의응답, 지자체의 요건 설계방안 논의 및 의견 수렴 등 	출입국·이민 관리체계 개선추진단
12.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도 자동출입국심사대 사업 완료보고회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12. 13.(금), 15:00, 인공청 제2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 • 참석 : 이민정보과, 인공청 총무과, 심사지원과, 정보관리과 등 • 내용 : 인천공항 T2 확장 공사에 따른 자동출입국심사대 24대 증설(동편), 다중감지 고도화 등 사업 수행 결과 보고 ※ '24년말 기준 전체 공항만에 277대 자동출입국심사대 운영 예정이며, '25년도에는 T2 서편에 20대 증설사업 예정 	이 민 정보과
12.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2만 5천명('24. 5. 15. 기준 15세 이상의 장기체류 외국인 2만 명, 최근 5년 이내 귀화자 5천명) ※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자격 소지자 및 불법체류자 제외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주인구) 만 15세 이상으로 국내 91일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은 약 156만명* (남성 57.8%, 여성 42.2%)으로 전년 대비 13만명 증가(+9.1%p) * '24. 5. 15. 기준, 등록외국인 중 실제로 3개월 이상 국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제외 - (고용지표) 경제활동 참가율은 68.6%(+0.4%p), 고용률은 64.7%(+0.2%p), 실업률은 5.7%(+0.3%p)이며, 월 임금은 200 ~ 300만원이 평균 구간임 - (체류 희망 및 방법) 90.4%(+0.9%p)가 계속 체류를 희망하며, 방법은 체류기간 연장(61.6%) > 영주자격 취득(16.9%) > 체류자격 변경(11.0%) 순 	외국인 정책과
12.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 장소 : 12. 18.(수) 15:30, 대회의실 • 참석 : (본부) 출입국정책단장,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부단장, 체류관리과장 등 (관계부처) 국토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부, 고용부 과장급 • 안건 : ①기능인력(E73) 신규 도입 관계부처 건의 타당성 검토 ②2025년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연간 쿼터 산정 	출입국·이민 관리체계 개선추진단
12.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차 투자이민협의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12. 19.(목) ~ 12. 26.(목), 서면 회의 • 참석 : 위원장(법무부 차관) 등 9명 • 안건 : 전남 여수 화양지구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 대상지역 기간연장 적합성 여부 	체 류 관리과
12.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배치시스템 구축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12. 19.(목) 14:00, 교정본부 회의실(409호) • 참석 : 출입국기획과장, 이민정보과장, 서울청 정보화센터장, 수행업체 등 15명 • 내용 : ①다양한 인사 조건을 반영한 인사 예상 후보군 추출 기능, ②자동 모의 배치 및 수기 배치 기능, ③관서별 인사배치 현황 모니터링 및 통계 등 각종 현황정보 추출 기능 등 ※ 사업비 90백만원(관련 S/W 구매 및 커스터마이징 포함) 	이 민 정보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12.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지자체 워크숍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12. 23.(월) 13:30, 세종컨벤션센터(세종시) • 참석 : 출입국정책담당, 농어업TF,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 계절근로 담당자 등 •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절근로자 비자 정책 개선 등 제도 발전 방향 논의 - '25년 계절근로 프로그램 개정내용 설명 및 의견 수렴 - 계절근로 제도 운영 현황 및 실무상 애로사항 파악 	체류관리과
12.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유지보수·위탁운영 사업 종료보고회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12. 23.(월), 16:30, 서울청 7층 대회의실 • 참석 : 이민정보과 계장, 서울청 정보화센터장, 인공청 정보관리과장 등 • 내용 : 2023 ~ 2024년 출입국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위탁운영 사업 관련 주요 사업추진 내용, 운영 실적 및 향후 계획 등 	이민정보과
12.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 신설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 종류 및 발급권자 추가, 회수·반납된 외국인등록증 보관·관리 등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보관기관 관련 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폐지, 「전자정부법」 제8조 삭제에 따라 관련 조항 개정 	이민정보과
12.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재외동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칩 내장형 신분증(등록증·영주증) 발급을 위한 수수료 인상 - 구직(D-10), 계절근로(E-8) 자격의 체류기간 상한 연장 - 벤처투자 및 기술창업(D-8)에 대한 체류자격 외 활동 허용 • 재외동포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칩 내장형 신분증(거소증) 발급을 위한 수수료 인상 - 국내거소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재발급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근거 마련 	외국인정책과
12.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 장소 : 12. 24., 법무부 차관회의실 • 참석 : 위원장(법무부 차관) 등 7명 • 내용 :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를 고려할 만한 5명에 대한 심의 	이민조사과
12.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12. 26.(목) 10:30, 국립중앙박물관 • 참석 :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주재), 정부부처·유관기관·관광업계 등 6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부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차관 참석 • 내용 :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방한 관광시장 조기 안정화 및 지역관광 활성화 등 방한 관광 재도약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부 관련 안건) 전자여행허가(K-ETA) 개선, 의료관광 비자 개선, 크루즈 관광상륙허가제도 확대 등 	출입국심사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12.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구축사업 완료보고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12. 27.(금) 10:30, 출입국회의실(513호) • 참석 : 출입국정책단장, 이민정보과장, 전담 사업자 전무 등 • 내용 : 사업 주요 내용 보고, 모바일 등록증 시연 및 홍보 방안 등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시범운영을 거쳐 '25. 1. 10.(금) 발급 예정 	이 민 정보과
12. 27. ~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민정책연구원 제42차 정기이사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방식 : 12. 27.(금)~12. 31.(화), 서면회의 • 참석 대상 : 이사장(본부장) 및 이사(연구원장 등 10명), 총 11명 • 안건 : '25년 ①사업계획(안), ②예산(안), ③「복무규정」개정(안) • 결과 : 원안의결 	외국인 정책과
12.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통합프로그램 서울 CBT 센터 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이민자의 평가 기회 확대를 수도권(서울)에 상설 평가장인 CBT센터 추가 개소 	이 민 통합과

Contents

2024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연감

3	INTRO
4	발간사
6	사진으로 보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행정
40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주요 행정일지

제1장 일반사항

82	제1절 기본방향
82	제1항 추진방향
84	제2항 2024년 전략목표
85	제2절 비전과 미션
87	제3절 기구·인원 및 시설·예산
87	제1항 기구·인원
96	제2항 인사
108	제3항 시설·예산

제2장 주요 업무 추진실적

116	제1절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국경관리 체계 구축
116	제1항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출입국 편의 지원
117	제2항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
119	제3항 평택항 소무역상 대상 자동출입국심사 전면 시행
121	제4항 출국금지 대상 확대
122	제5항 출입국자 현황
124	제2절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방적이고 인권친화적인 체류환경 조성
124	제1항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 도입
125	제2항 계절근로자 제도개선으로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

127	제3항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전문·기능인력(E-7) 비자제도 개선
128	제4항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 및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130	제5항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도입
132	제6항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합리적 개선
134	제3절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절차 강화 및 보호시설 환경 개선
136	제1항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 노력
138	제2항 기획조사 및 마약·테러 등 국민안전 위협 사범 등 합동(집중) 단속
139	제3항 개방형 보호시설 확대 등 인권보호 강화
140	제4절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효율화 제고를 통한 이민자 권익 증진
140	제1항 사회통합자문위원회 개최
141	제2항 (법무부-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외국인정책협의회 개최
142	제3항 이민자 사회통합지수 측정 및 정책 컨설팅 실시
143	제4항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의 평가 기회 및 접근성 확대
144	제5항 지자체 연계 계절근로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시행
145	제6항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148	제7항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운영
149	제8항 결혼이민자에 대한 체류지원 확대 추진
150	제5절 국민이 공감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국적정책 추진
150	제1항 국적증서수여식 개최를 통한 국적취득자의 국민정체성 함양
152	제2항 복수국적 등 국적제도에 대한 국민여론 확인
153	제3항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공·사익 조화
155	제4항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국적제도 안내·홍보 강화
157	제5항 귀화 제도 개선을 통한 민원인 편의 제고
159	제6절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균형있는 난민정책 추진
159	제1항 추진배경
160	제2항 2024년 난민 신청 및 심사 현황
160	제3항 「난민법」 개정 추진 및 하위법령 개정
161	제4항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난민심사

Contents

2024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연감

162	제5항 난민통역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
163	제6항 난민신청자 등의 처우 지원 지속
164	제7항 재정착난민 개선
165	제8항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
165	제9항 글로벌 난민문제를 위한 국제교류·협력 강화
166	제10항 난민에 대한 이해 증진
167	제11항 향후 추진계획
168	제7절 공정하고 전문적인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
168	제1항 추진배경
169	제2항 난민 이의신청 심의 전문성 강화
170	제3항 난민 이의신청인의 절차적 권리보장 강화
170	제4항 국가정황정보 수집·관리 체계 고도화
171	제5항 유엔난민기구(UNHCR)와 조사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 운영
172	제6항 향후 추진계획
173	제8절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출입국·이민정책 설계 및 추진
173	제1항 2024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177	제2항 중앙-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 개최
178	제3항 2024년 정책발표회 개최
180	제4항 2024년 이민정책포럼 개최
182	제9절 국제협력 강화
182	제1항 국내외 주요 인사 면담 및 교류 협력 강화
184	제2항 국제이민협력을 위한 다자간 국제회의 참여
188	제10절 디지털플랫폼 구축을 통한 원스톱 이민행정 서비스 제공
188	제1항 전자칩(IC) 내장 외국인등록증 발급 추진
189	제2항 출입국 사실증명 등 사실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190	제3항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 지침」(법무부훈령) 개정
191	제4항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시스템 구축
192	제5항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 사업

195	제11절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추진 및 데이터분석을 통한 과학적 외국인정책 수립 지원
195	제1항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198	제2항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플랫폼」 운영 개시
200	제3항 이민행정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자료 일반 공개
201	제4항 지자체 맞춤형 외국인정책 수립 지원
202	제5항 외국인행정 빅데이터 분석 교육훈련 과정 운영
204	제12절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204	제1항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고도화
208	제2항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 확대
209	제3항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제3장 법령·예규 정비

214	제1절 법령
214	제1항 법률
215	제2항 대통령령
217	제3항 총리령 및 법무부령
221	제2절 훈령·예규 정비
221	제1항 훈령
222	제2항 예규
223	제3항 주요지시

제4장 주요 통계

228	제1절 출입국자 현황
233	제2절 체류외국인 현황

Contents

2024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연감

249	제3절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처리현황
250	제4절 국적 및 난민 업무 처리현황
	제5장 주요 보도(설명) 자료
256	2024년 보도(설명) 자료 배포 일지
	부록
288	① 체류자격 일람표
290	② 사증면제협정 현황
296	③ 주요 행사 연설문
306	④ 발간 책자 및 연구 보고서
307	⑤ 역대 출입국관리국장 및 본부장 명단
308	⑥ 본부 및 소속기관 간부 명단
312	⑦ 주요 언론보도

2024
출입국·외국인정책
연감
|
2025

KOREA IMMIGRATION SERVICE
ANNUAL REPORT



1

CHAPTER

일반 사항

- 제1절 기본방향
- 제2절 비전과 미션
- 제3절 기구·인원 및 시설·예산

제1절

기본방향

제1항 추진방향

1 미래지향적 이민행정을 구현한다

■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국경관리 체계 구축

탑승자 사전확인 시스템(I-PC), 전자여행허가제(K-ETA)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국경관리 체계로 선량한 관광객들에게는 신속하고 편리한 출입국서비스를 제공 국익위해자의 유입은 철저히 차단

■ 외국인력 도입체계 혁신 및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확대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외국인력 도입 규모 결정, 국가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우수인재 및 숙련 근로자 등 업종별·유형별 필수인력 유치 전략 수립,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소멸 등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비자·체류정책 추진

■ 외국인 체류질서 엄정 확립 및 외국인 보호제도 개선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 강화 및 자진출국제도 운영 등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 노력 지속, 보호외국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보호기간 상한 마련 등 외국인 보호제도 관련 「출입국관리법」 개정 및 관련 시설 개선

■ 체류외국인 디지털 환경 격차 해소 및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기반 구축 등 외국인등록증의 신뢰성·보안성 등 지속 보완,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시스템 발급 기반 구축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출입국행정 민원 편의 제고

- 이민행정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

현장 참여형 투어 프로그램 운영,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 콘텐츠 제작·배포 등으로 이민 행정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 및 이민 정책 추진을 위한 공감대 형성

2 국력에 걸맞은 외국인 정책을 통해 사회통합 기반을 구축한다

-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

이민관리시스템 체계화,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조화로운 사회질서와 체류환경 조성, 이민행정 전문성 및 연구기반 확충 등 국익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 국익과 정책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국적제도 운영

우수인재 국적회복 평가기준 개선, 국적심의위원회 위원 재구성 등 국적심의위원회의 내실화·체계화, 국적 심사 인프라 고도화 및 민원편의 제고, 재외동포 권익과 국민 정서를 고려한 국적제도 운영

- 국민과 이민자가 상생하는 사회통합 정책 추진

이민자에 대한 정책대상별 맞춤형 사회통합교육 강화로 우리 사회 적응·자립 지원,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하는 문화행사 개최 등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회환경 조성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균형있는 난민정책 추진

남용적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하고, 보호가 필요한 난민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난민법」 개정 등 제도개선 노력 지속 및 난민 인식개선 활동 추진

-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전문성 강화

이의신청 절차 다국어 안내 확대 시행 등 이의신청인의 절차적 권리보장 강화, 난민조사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이의신청 심사 전문성 제고 노력 지속

난민신청 사유 다변화 및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전문적 대응을 위한 국가정황정보 수집·관리 체계 고도화

제2항 2024년 전략목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변화하는 국내외적 환경과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면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외국인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미래지향적 이민행정 구현, 국격에 걸맞은 외국인 정책을 통해 사회통합 기반 구축을 추진한다는 성과목표를 수립하였다. 미래지향적 이민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국경관리 체계 구축',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방적이고 인권친화적인 체류환경 조성, 불법체류외국인 관리절차 강화 및 보호시설 환경 개선,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통한 원스톱 이민행정 서비스 제공, 이민행정 홍보 강화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관리과제로 설정하였다.

국격에 걸맞은 외국인 정책을 통해 사회통합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포용의 외국인정책 설계 및 추진, 국민이 공감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국적정책 추진, 이민자 권익증진을 위한 실효적 사회통합 정책 추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난민정책 추진, 공정하고 전문적인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을 관리과제로 설정하였다.

제2절

비전과 미션



제1장 일반 사항

제2장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제3장 법령·예규·경비

제4장 주요 통계

제5장 주요 제도(법령) 검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기능

- 출입국심사 및 비자 발급
- 체류허가 및 출입국사범 단속 등 체류관리
- 국적부여 및 난민인정
- 체류외국인 지원 및 사회통합 정책, 외국인정책

2024년 전략 목표 및 성과 목표

전략 목표

성장, 안전, 통합을 위한 체계적 외국인 정책을 추진한다

성과 목표

미래지향적 이민행정을
구현한다

국격에 걸맞은
외국인 정책을 통해
사회통합 기반을 구축한다

제3절

기구·인원 및 시설·예산

제1항 기구·인원

1 2024. 3. 26. 직제 시행규칙 개정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출장소에 체류관리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6급 2명, 7급 5명, 8급 2명, 9급 1명)과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김해국제공항 터미널 확장에 따른 출입국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을 각각 증원하였다.

2 2024. 6. 25. 직제 시행규칙 개정

법무부 이민정보과장의 '출입국자·체류외국인·국적 등 외국인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 작성 및 분석' 분장사무를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으로 이관하고,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및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국대기실운영팀장의 분장사무에 '송환 대상외국인 송환과 관련된 출입국사범의 조사·고발 및 통고처분·과태료 부과 등 심사 결정' 사무를 신설하였으며,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으로 전환하여 조직과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였다.

3 2024. 9. 26.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평가대상 기구인 본부 난민심의과가 정규화되어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 2024. 12. 30.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법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본부 1명(6급 1명), 소속기관 18명(6급 4명, 7급 5명, 8급 5명, 9급 4명)을 감축하였다.

그림 1 본부 및 정부합동지원단 조직도

(1 본부장, 2 정책단장, 10 과장, 1 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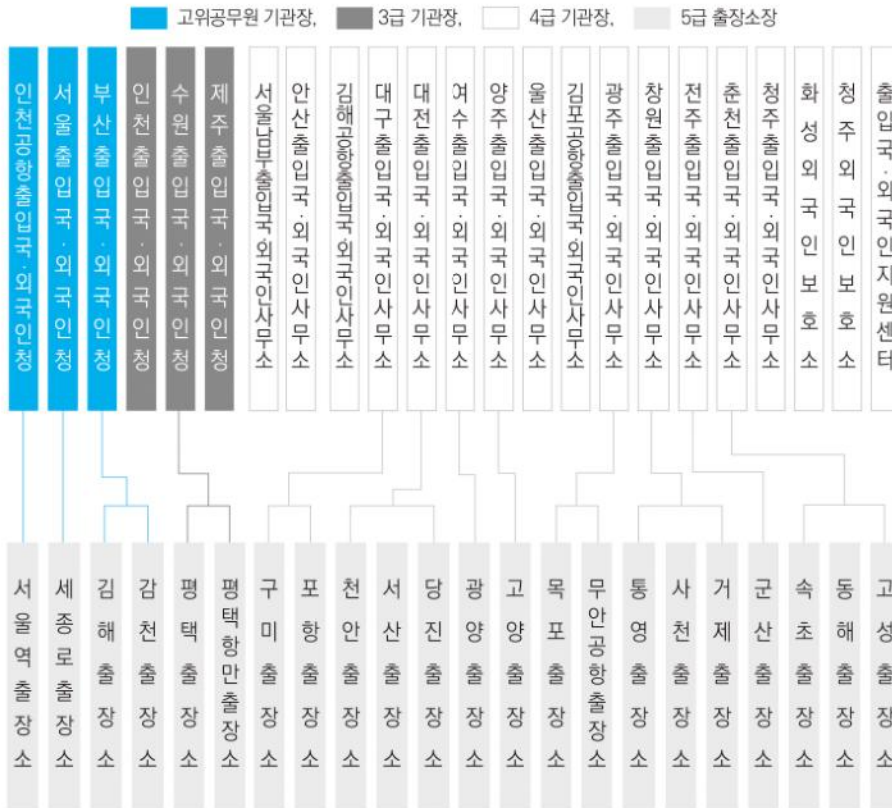


표 1 본부 각과 업무 분장표

<p>출입국기획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입국관리행정 종합계획 수립 인사·조직·예산·홍보·국제협력 등 	<p>출입국심사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외국인 출입국심사 출입국규제에관한 사항 등 	<p>체류관리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체류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비자발급 심사 등
<p>이민조사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자 단속 및 조사 외국인 보호 및 강제퇴거 	<p>이민정보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외국인정책 관련 통계 작성·분석 	<p>외국인정보 빅데이터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및 플랫폼 구축 외국인행정 빅데이터 분석
<p>외국인정책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평가 소관 법령의 입안 관련 사항 등 	<p>국적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화, 국적회복, 국적상실 등 국적관리 국적 관련 법령 정비 및 정책수립 	<p>이민통합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한외국인의 사회통합 정책 총괄 사회통합프로그램 기획, 운영 등
<p>난민정책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난민법령 및 제도, 난민인정심사 등 총괄 난민인정자 등 처우 지원 및 관리 	<p>난민심의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개선 난민위원회 운영 및 국가정황정보 등 자료 수집 	

그림 2 소속기관 조직도

(6 출입국·외국인청, 14 출입국·외국인사무소, 2 외국인보호소, 1 센터, 22 출장소 등 총 45개 기관)



본부 및 산하기관 4급 이상 간부 현황

(’24. 12. 31. 현재)

■ **본부**

직위	성명	전보(승진)일
본부장	배상업	’24. 8. 16.
출입국정책단장	김정도	’22. 9. 19.
국적·통합정책단장	공 석	
출입국기획과장	하용국	’24. 1. 22.
출입국심사과장	이기흠	’23. 8. 17.
체류관리과장	이재형	’24. 1. 22.
이민조사과장	유성오	’24. 1. 8.
이민정보과장	윤철민	’24. 1. 22.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	박주현	’24. 2. 29.
외국인정책과장	이종철	’24. 1. 22.
국적과장	장희정	’23. 8. 17.
이민통합과장	김기락	’24. 7. 15.
난민정책과장	김태형	’24. 1. 22.
난민심의과장	김재원	’24. 10. 21.
체류관리과 서기관	전동균	’24. 10. 21.
외국인정책과 서기관	이한식	’24. 7. 1.
법무부 부이사관	박상욱	’23. 2. 1.
법무부 부이사관	박재완	’24. 1. 24.
법무부 서기관	서석주	’24. 3. 27.

■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직위	성명	전보(승진)일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장	최문정	’24. 7. 15.

■ 소속기관

직위	성명	전보(승진)일
인천공항청장	공 석	
서울청장	반재열	'24. 9. 14.
부산청장	이동휘	'22. 3. 8.
인천청장	송소영	'24. 1. 8.
수원청장	김현재	'23. 2. 8.
제주청장	차용호	'24. 1. 24.
서울남부사무소장	이승현	'24. 7. 15.
안산사무소장	구분준	'23. 2. 8.
김해공항사무소장	류인성	'24. 8. 23.
대구사무소장	김홍규	'24. 1. 8.
대전사무소장	이종국	'23. 9. 1.
여수사무소장	김태완	'24. 1. 8.
양주사무소장	강수근	'22. 1. 1.
울산사무소장	박진수	'24. 1. 8.
김포공항사무소장	구병모	'24. 7. 15.
광주사무소장	김용규	'23. 8. 17.
창원사무소장	김재남	'24. 1. 8.
춘천사무소장	박찬순	'24. 1. 8.
청주사무소장	김종복	'24. 1. 8.
전주사무소장	임은진	'24. 1. 8.
화성보호소장	강성록	'24. 1. 8.
청주보호소장	서영군	'24. 7. 15.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장	류재석	'23. 8. 17.
인천공항 지원국장	유현송	'24. 7. 15.
인천공항 심사1국장	길강목	'23. 8. 17.
인천공항 심사2국장	지원근무	
인천공항 총무과장	이은경	'24. 7. 15.
서울 총무과장	은기범	'22. 1. 28.
서울 관리과장	배덕환	'24. 10. 21.
서울 이민조사대장	임용성	'24. 1. 8.
서울 정보화센터장	김희성	'22. 7. 1.
부산 관리과장	이상한	'24. 7. 15.
부산 이민조사대장	정영부	'24. 1. 8.

그림 3 소속기관 현황(45개 기관)



제1장 일반 사항

제2장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제3장 법령·예규·경비

제4장 주요 통계

제5장 주요 보도(설명) 자료

그림 4 재외공관 주재관 현황(14개 국가, 21개 공관, 27명)



해외 주재관 현황

('24. 12. 31. 현재)

국가	공관명	직급	성명	부임일
일본	대사관	4급	강성환	'23. 8. 30.
미국	L.A.(총)	4급	박제성	'23. 8. 17.
중국	대사관	4급	손흥기	'24. 10. 21.
	상하이(총)	5급	여양구	'23. 1. 3.
	상하이(총)	5급	주태길	'24. 2. 12.
	선양(총)	5급	박수완	'22. 2. 25.
	칭다오(총)	4급	이대우	'23. 8. 25.
	광저우(총)	5급	구성림	'22. 2. 24.
	광저우(총)	5급	임동영	'23. 2. 24.
	우한(총)	5급	최명호	'22. 8. 18.
	청두(총)	5급	김원희	'23. 2. 24.
러시아	대사관	4급	이한태	'24. 2. 20.
태국	대사관	4급	나현웅	'24. 8. 23.
인도	대사관	4급	강영우	'22. 8. 18.
필리핀	대사관	4급	이상목	'22. 2. 22.
		5급	김경수	'24. 3. 16.
인도네시아	대사관	5급	이성용	'22. 2. 22.
몽골	대사관	4급	고동중	'24. 3. 11.
		5급	정은화	'22. 8. 24.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5급	이성호	'24. 3. 2.
방글라데시	대사관	5급	이현곤	'24. 8. 29.
베트남	호치민(총)	5급	유상변	'23. 2. 24.
캄보디아	대사관	5급	주지정	'23. 8. 30.
독일	대사관	4급	이취경	'24. 8. 23.

제2항 인사

1 2024년 상반기 인사

2024년 상반기 출입국관리직 정기인사는 2023년 하반기 명예퇴직 및 정년퇴직, 파견 등에 따른 결원보충, 주재관 귀·부임 및 장기근무자 순환 전보 및 승진인사 등을 위해 2024. 1. 8. 3급 2명, 4급 12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실시하였다. 2024. 1. 15. 3급 1명, 4급 10명, 5급 82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실시하였으며, 2024. 1. 22. 고위공무원 1명, 3급 1명, 4급 7명, 5급 5명, 6급 111명, 7급 132명, 8급 145명, 9급 68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정기인사를 실시하였다.

2 2024년 하반기 인사

2024년 하반기 출입국관리직 정기인사는 2024. 7. 15. 주재관 귀·부임, 결원 보충 등을 위해 4급 16명, 5급 56명에 대한 하반기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실시하였다. 2024. 7. 25. 6급 119명, 7급 142명, 8급 172명, 9급 73명에 대한 하반기 정기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실시하였다. 2024. 8. 16. 제11대 출입국·외국인본부장이 취임하였고, 2024. 9. 14. 일반직고위공무원 국적·통합정책단장 1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실시하였다. 2024. 10. 21. 주재관 귀부임 및 공모직위 결원보충 등을 위해 4급 5명, 5급 8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실시하였으며, 2024. 11. 18.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위한 입법 대응을 위해 5급 2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실시하였다.

3 5급 이상 승진, 전보, 퇴직 현황

2024년 5급 이상 승진자와 전보자는 각각 39명, 167명이며 퇴직자는 17명으로 세부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2024 5급 이상 인사 내역

(단위 : 명)

구분	계	임용	신규	승진	전보	파견	휴직	퇴직
계	246	2		39	167	16	5	17
고 위	4			1	1		1	1
3 급	4			2	2			
4 급	60			16	32	5	1	6
5 급	178	2		20	132	11	3	10

제1장 일반 사항

제2장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제3장 법령·예산·경비

제4장 주요 통계

제5장 중앙·지방·공공기관
별내 (별첨)도·광역시·군

2024년 5급 이상 상세 인사 현황

1 승진

■ 부이사관(3급) 이상 : 3명

- '24. 1. 8.부(1명)

신임직	성명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박재완

- '24. 1. 22. 부(2명)

신임직	성명
국적·통합 정책단장	반재열

신임직	성명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하용국

■ 서기관(4급) : 16명

- '24. 1. 8.부(1명)

신임직	성명
청주외국인 보호소장	이상한

- '24. 1. 15.부(8명)

신임직	성명
법무부 외국인정보 빅데이터팀장	고동중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김재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온라인체류·사증민원센터장	손흥기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서석주

신임직	성명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유현송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 (이민조사과 지원근무)	임용성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	정영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정금심

- '24. 1. 22.부(1명)

신임직	성명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윤철민

- '24. 7. 15.부(4명)

신임직	성명	신임직	성명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이은경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온라인체류·사증민원센터장(체류관리과 지원근무)	이향숙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조승래	청주외국인 보호소장	서영군

- '24. 10. 21.부(2명)

신임직	성명	신임직	성명
법무부(체류관리과(농·어업 외국인력 지원TF) 파견) ('24. 10. 21. ~ '25. 12. 31.)	전동균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배덕환

■ 출입국관리사무관(5급) : 20명

- '24. 1. 15.부(6명)

신임직	성명	신임직	성명
법무부(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김태진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24. 1. 15. ~ '25. 1. 31.)	윤영봉
법무부 체류관리과	유수열	법무부 국적과	강성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5과장 (대변인실 지원근무)	이현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아산다문화 센터장)	이재인

- '24. 1. 22.부(1명)

신임직	성명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0과장 (외국인정책과)	최웅석

- '24. 5. 1.부(1명)

신임직	성명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4과장 (체류관리과 지원)	엄기동

- '24. 7. 15.부(8명)

신임직	성명	신임직	성명
법무부 이민정보과	엄기복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8과장 (이민조사과 지원근무)	곽은상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	문영희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천안다문화센터장)	김대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아산다문화센터장)	이수영	법무부(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24. 7. 15. ~ '25. 7. 31.)	최은영
법무부(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과) ('24. 7. 15. ~ '25. 7. 31.)	윤정희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 ('24. 7. 15. ~ '25. 5. 7.)	유상남

- '24. 8. 28.부(1명)

신임직	성명
법무부(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창업팀)	김성철

- '24. 9. 2.부(1명)

신임직	성명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	손병찬

- '24. 10. 21.부(2명)

신임직	성명	신임직	성명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김종기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익산다문화센터장)	홍정임

2 전보

■ 3급 이상 : 3명

직급	신임직	성명	시행일자
부이사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송소영	'24. 1. 8.
일반직고위공무원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반재열	'24. 9. 14.
부이사관	법무부	박재완	'24. 12. 2.

■ 서기관(4급) : 32명

- '24. 1. 8.부(11명)

신임직	성명	신임직	성명
법무부 이민조사과장	유성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2국장	나현웅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김홍규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김태완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박진수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김기락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김재남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박찬순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김종복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임은진
화성외국인보호소장	강성록		

- '24. 1. 15.부(1명)

신임직	성명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주러시아대사관 : '24. 2. 20.부)	이한태

- '24. 1. 22.부(3명)

신임직	성명	신임직	성명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이재형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	이종철
법무부 난민정책과장	김태형		

- '24. 2. 29.부(1명)

신임직	성명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고동중

- '24. 3. 11.부(1명)

신임직	성명
법무부(외교부 주몽골대사관)	고동중

- '24. 7. 15.부(12명)

신임직	성명	신임직	성명
법무부 이민통합과장	김기락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지원국장	유현송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2국장 (외국인정책과 지원근무)	최문정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이상한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이승현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주태국대사관) ('24. 8. 23.부)	나현웅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24. 8. 23.부)	류인성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이호원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구병모	법무부(국민통합위원회) ('24. 8. 29.부)	김병철
법무부(주독일대사관) ('24. 8. 23.부)	이취경	법무부(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 ('24. 8. 26.부)	김민경

- '24. 10. 21.부(3명)

신임직	성명	신임직	성명
법무부 난민심의과장	김재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주중국대사관 주재관 부임 시까지)	손흥기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주재관 귀임 시)	은기범		

■ 출입국관리사무관(5급) : 128명

- '24. 1. 15.부(71명)

신임직	성명	신임직	성명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이주호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이상배
법무부 이민조사과	김택균	법무부 이민조사과	김준철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출입국기획과 지원근무)	김명훈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전강섭
법무부 이민통합과 (출입국기획과 지원근무)	이향숙	법무부 이민통합과	신하균
법무부 이민통합과	이은경	법무부 난민정책과	박정원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지원과장	최해원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보안관리과장	심미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입국재심1과장	박창두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입국재심2과장	소근희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과장	권옥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2과장	김호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3과장	최종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4과장	김홍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5과장	전은석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6과장 (출입국심사과 지원근무)	이동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9과장 (감찰담당관실 지원근무)	김관영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0과장	김상희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1과장	신안선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심사12과장	최인섭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국적·통합과장	이청훈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장	이미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법과장	서영군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장	조기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온라인체류· 사증민원센터	김경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	주정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이정민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장	김효수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김해출장소장	정승화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감천출장소장	성덕재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사법과장	최연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장	김두섭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장	천영우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장	최진혁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박상원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심사과장	이정철

제1장 일반 사항

제2장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제3장 법령·예규·경비

제4장 주요 통계

제5장 주요 보도(설명) 자료

신임직	성명	신임직	성명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장	김기성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사과장	주재봉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시흥다문화센터장)	배용호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심사지원과장	여육규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심사과장	박민구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국대기실운영팀장	김재석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심사과장	최재원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구미출장소장	박영신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포항출장소장	조은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장	김용진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사과장	박인순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장	신한진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서산출장소장	유용재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장	박형술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양출장소장 (주상하이총영사관 : '24. 2. 12.부)	주태길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양출장소장	이명표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장 (주필리핀대사관 : '24. 3. 16.부)	김경수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과장	권오인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사과장	강형욱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무안공항출장소장	조영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성엽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김성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거제출장소장	조재용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성출장소장 (법무연수원)	홍동우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심사과장	하재춘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음성다문화센터장)	강대평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최성희	화성외국인보호소 보호과장	배덕환
화성외국인보호소 관리과장	김일곤	청주외국인보호소 관리과장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 '24. 3. 2.부)	이성호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박성규		

- '24. 1. 22.부(4명)

신임직	성명	신임직	성명
법무부 이민정보과	김상희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양출장소장 ('24. 2. 25.부)	용창식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장 ('24. 3. 19.부)	김용국	청주외국인보호소 관리과장 ('24. 3. 7.부)	이우진

- '24. 7. 15.부(45명)

신임직	성명	신임직	성명
법무부 국적과	김용국	법무부 이민통합과 (체류관리과 지원근무)	김종승
법무부 이민통합과	주도현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	홍동우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감식과장	조근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과장	신안선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2과장	고귀영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1과장	황선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3과장	박영숙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4과장 (대변인실 지원근무)	이운선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5과장 (외국인정책과 지원근무)	이재인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법과장	김종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	황미숙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장	이원호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장	곽범현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	우윤희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주방글라데시대사관) ('24. 8. 29.부)	이현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24. 9. 4.부)	박홍상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감천출장소장	권선희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심사과장	박성규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김포다문화센터장)	안숙향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사법과장	유심희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법과장	이호수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안산다문화센터장)	이대수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장	김종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장	김병희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사과장	용창식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당진출장소장	백종규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양출장소장	박창현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장	권옥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장	이성문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과장	배천기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심사과장	최은숙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장	최종원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장	김형진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천출장소장	김효수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통영출장소장	권오인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성출장소장 (법무연수원 지원근무)	박송배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장	김윤기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이연주

신임직	성명	신임직	성명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장	김호진	화성외국인보호소 사법과장	임휴빈
청주외국인보호소 보호과장	김상희	청주외국인보호소 사법과장	김현호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임동규		

- '24. 10. 21.부(6명)

신임직	성명	신임직	성명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신하균	법무부 이민조사과	홍창기
법무부 이민통합과	박창현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서산출장소장	박홍상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양출장소장	정왕교	화성외국인보호소 보호과장	유용재

- '24. 11. 18.부(2명)

신임직	성명	신임직	성명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이민조사과 지원근무)	최연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사법과장	이정민

3 퇴직

■ 3급 이상 : 1명

직급	퇴직 당시 직위	성명	비고
일반직 고위공무원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김종민	'24. 12. 31.(명예퇴직)

■ 서기관(4급) : 6명

직급	퇴직 당시 직위	성명	비고
서기관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이문한	'24. 3. 31.(의원면직)
서기관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임선봉	'24. 6. 30.(정년퇴직)
서기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강대열	'24. 6. 30.(정년퇴직)
서기관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권택성	'24. 6. 30.(정년퇴직)
서기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김진성	'24. 6. 30.(정년퇴직)
서기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문수용	'24. 11. 20.(의원면직)

■ 출입국관리사무관(5급) : 10명

직급	퇴직 당시 직위	성명	비고
사무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어원희	'24. 5. 1.(의원면직)
사무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백천기	'24. 6. 30.(정년퇴직)
사무관	청주외국인보호소	하경석	'24. 6. 30.(정년퇴직)
사무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우윤희	'24. 8. 31.(명예퇴직)
사무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전은석	'24. 12. 31.(정년퇴직)
사무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이종수	'24. 12. 31.(정년퇴직)
사무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성덕재	'24. 12. 31.(정년퇴직)
사무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박성규	'24. 12. 31.(정년퇴직)
사무관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여옥규	'24. 12. 31.(정년퇴직)
사무관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최성희	'24. 12. 31.(정년퇴직)

제3항 시설·예산

1 소속기관 청사 신축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서울지역 행정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민원·사무 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청사를 관할 내로 이전하여 민원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년부터 청사 이전 신축사업을 추진 중으로, '23년 12월에 착공하여, '26년 하반기 준공예정이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2년 2월 기관 승격에 따른 관할구역, 업무 확대 및 정원 증가로 인한 민원 및 사무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외국인 조사 및 보호시설 확충을 통해 경기 서부의 체류 질서 회복을 위해 '23년부터 청사 신축사업을 추진 중이며, '24년 설계용역을 마치고, '25년 12월 착공 예정이다.

이외에도 '24년 하반기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증축과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보호동 증축준공이 완료되었다. 또한 체류외국인 증가에 따른 민원 혼잡도를 개선하고,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 신축사업을 추진 중이며, '24년 설계용역을 마치고, '25년 6월 착공 예정이다.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493번지
- 총사업비 : 1,081억원
- 사업기간 : 2020년 ~ 2026년
- 사업규모 : 부지 9,034㎡, 건물 17,633㎡

그림 5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조감도



■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축

- 사업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71번지 일원
- 총사업비 : 359억
- 사업기간 : 2023년 ~ 2027년
- 사업규모 : 부지 7,730㎡, 건물 8,528㎡

그림 6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감도



■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 신축

- 사업위치 :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고덕국제화지구 업무 3-1-1지구
- 총사업비 : 107억원
- 사업기간 : 2021년 ~ 2026년
- 사업규모 : 부지 3,906㎡, 건물 2,210㎡

그림 7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 조감도



■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보호동 증축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로 3
- 총사업비 : 89억원
-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
- 사업규모 : 부지 7,076㎡, 건물(증축 부분) 2,843㎡

그림 8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보호동 조감도



■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증축

- 사업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12번길 52
- 총사업비 : 23억원
-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
- 사업규모 : 부지 1,602㎡, 건물(증축 부분) 720㎡

그림 9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감도



2 예산

2024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세출예산은 총 3,271억 9,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1% 증액 편성되었다. 주요 예산 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2024년 예산 내역

■ 주요경비별 내역(세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3년 대비	
			증감	%
계	308,482	327,196	18,714	6.1
인 건 비	157,706	166,631	8,925	5.4
기본경비	15,718	16,233	515	3.3
사 업 비	135,058	144,332	9,274	6.9

■ 사업비 세부사업별 내역(세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2023년	2024년	2023년 대비	
			증감	%
이민정책개발지원	390	386	△4	△1.0
IOM이민정책연구원운영	2,268	2,562	294	13.0
출입국사무소시설운영	48,462	51,419	2,957	6.1
외국인등록증발급 수입대체경비	4,657	5,757	1,100	23.6
출입국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25,175	24,608	△567	△2.3
외국인보호관리	19,736	22,287	2,551	12.9
외국인사회통합지원	14,026	15,427	1,401	10.0
외국인체류질서확립	9,812	11,132	1,320	13.5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운영	10,532	10,754	222	2.1
합 계	135,058	144,332	9,274	6.9

2024
출입국·외국인정책
연감
|
2025

KOREA IMMIGRATION SERVICE
ANNUAL REPORT



2
CHAPTER

주요 업무
추진실적

- 제1절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국경관리 체계 구축
- 제2절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방적이고 인권친화적인 체류환경 조성
- 제3절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절차 강화 및 보호시설 환경 개선
- 제4절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효율화 제고를 통한 이민자 권익 증진
- 제5절 국민이 공감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국적정책 추진
- 제6절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균형있는 난민정책 추진
- 제7절 공정하고 전문적인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
- 제8절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출입국·이민정책 설계 및 추진
- 제9절 국제협력 강화
- 제10절 디지털플랫폼 구축을 통한 원스톱 이민행정 서비스 제공
- 제11절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추진 및 데이터분석을 통한 과학적 외국인정책 수립 지원
- 제12절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제1절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국경관리 체계 구축

제1항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출입국 편의 지원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김영오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가.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 지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2024 세계탁구선수권대회」,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참가자에 대한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였다.

주요 편의 제공 사항으로는 ▲ 외국 정상 및 주요인사 등 지문·얼굴정보 제공의무 면제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증미소지자 공항만 입국허가 ▲ 전자여행허가제(K-ETA) 신청 면제 ▲ 출입국 우대심사대 운영 ▲ 사증발급 서류 간소화 및 수수료 면제 등이 있다.

동시에 행사 참가를 빙자한 입국목적 부적합 외국인, 위변조 여권 소지 외국인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를 강화하여 국익 위해자 입국을 철저히 차단하였으며, 출입국안전대책반을 설치하여 비상상황 발생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나. 국제회의 등 주요 행사 참가자 입국 우대심사대 시범운영

정부는 2024. 6. 17. 경제장관회의 시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국제회의 등(MICE)* 참가자 입국 시 우대심사대 이용 방안을 발표하였다.

* 회의(Meeting), 인센티브 여행(Incentive Tour),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약자로 부가가치가 큰 관광산업 분야를 의미

법무부는 「2024 아시아약학연맹(FAPA) 서울총회 및 학술대회」, 「제15회 국제감귤학회」 등 주요 국제회의 참가자들이 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여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국제행사 유치와 국제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국가 이미지 제고, 경제적 이익, 기술 및 지식 교류, 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며, 이를 통해 한국은 글로벌 무대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다. 2025년에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행사가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출입국 편의 제공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제2항 전자여행허가제(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시스템 고도화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김영오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우리 부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 증가 등에 따라 전자여행허가제(K-ETA) 이용자 편의성 향상 및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 (ISP)」 수립('23. 5. ~ 8.)

전자여행허가제(K-ETA) 고도화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 단체 일괄 신청 등 단체 관광객 전용 서비스 개발 ▲ 여권 인적 사항 OCR* 판독 전면 도입 ▲ 신청화면 개선 ▲ 다국어 확대 ▲ 결제 시스템 개선 ▲ 만족도 평가 기능 도입 ▲ 심사 시간 단축을

위한 바이오 검색 기능 개선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프라 도입 등으로 신청자 이용성 향상과 심사 편의성 제고 모두를 고려하였다.

*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 광학식 문자 판독 기능

2 평가 및 발전방향

■ K-ETA 신청 현황 ■

구분	신청건수
2021년	86,211 건
2022년	2,082,385 건
2023년	2,134,136 건
2024년	961,458 건

※ 「2023 ~ 2024 한국방문의 해」 기간 동안 관계기관 등의 요청으로 일부 국가 대상 한시 면제 시행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2021. 9월 정식 시행 이후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심사 기법 고도화를 통해 위험도가 높은 외국인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한국 도착 후 입국 거부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불법체류 발생률이 높은 국가 국민의 불법체류 발생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등 국경관리의 외연을 국내 도착 후 입국심사 단계에서 해외여행 시작 단계로 확장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 전자여행허가 대상 국가 입국불허율 : (2022년) 0.9% → (2023년) 0.3% → (2024년) 0.2%

※ 전자여행허가 대상 국가 불법체류율 : (2022년) 26.7% → (2023년) 25.6% → (2024년) 22.6%

향후 전자여행허가제(K-ETA) 고도화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그간 축적된 자료를 빅데이터화하여 관광 산업분야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 고위험 외국인 통계·분석을 통해 더욱 정교한 선제적 국경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간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행으로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의 입국불허율과 불법체류율이 감소하는 등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무사증 국가 국민의 입국 및 체류질서 확립에 주요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향후 K-ETA 허가자에 대한 다양한 사후 분석을 통해 국익위해 외국인의 선별 및 정밀 심사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안전한 국경 관리체계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제3항 평택항 소무역상 대상 자동출입국심사 전면 시행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이동진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코로나19로 중단된 평택항 한-중 여객선 운송이 2023년 8월부터 재개됨에 따라 2023년 12월부터 1년간 평택항에서 소무역상 대상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시범운영 결과 소무역상의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및 이용률이 점차 상승하여 평택항 이용 승객들의 입출국 대기시간이 감소하고 심사장 혼잡도가 완화된 것을 확인, 2025년 1월부터 전면 시행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사전등록을 한 평택항 이용 소무역상(빈번 출입국자)은 심사관과 대면하지 않고 간편하고 신속하게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자동출입국심사대 운영현황 ■

(기준 : 2024. 12. 31., 단위 : 대)

구분	합계	인천 공항	김해 공항	김포 공항	제주 공항	청주 공항	대구 공항	양양 공항	무안 공항	인천 항	부산 항	평택 항	군산 항
설치 대수	271	183	26	10	10	4	8	3	4	9	5	5	4

2 평가 및 발전방향

자동출입국심사 제도는 '08년 6월 인천공항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한 이래 사전등록 절차 생략, 이용 대상 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이용자가 증가하였다. 2024년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자 수는 전년 대비 1.32% 증가한 49,142,951명으로 외국인의 이용자 수는 전년 대비 1.52% 증가하였다. 특히 평택항 소무역상 대상 자동출입국심사 전면 시행은 출입국심사 신속화 및 간소화를 향한까지 확대하여 향후 더 많은 외국인들이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노후화된 자동출입국심사대의 교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신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증설하는 등 더 많은 승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현황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출입국자	계	14,701,839	4,391,173	19,223,428	68,121,658	91,222,927
	국민	9,171,423	2,326,774	12,778,752	45,423,313	57,567,576
	외국인	5,530,416	2,064,399	6,444,676	22,698,345	33,655,351
자동심사대 이용자	계	5,490,622	908,914	9,992,181	37,224,958	49,142,951
	국민	4,729,477	800,626	8,403,293	29,850,937	37,901,544
	외국인	761,145	108,288	1,588,888	7,374,021	11,241,407
전체 대비 자동 이용률(%)	37.3%	20.7%	52.0%	54.6%	53.9%	
국민 자동 이용률	51.6%	34.4%	65.8%	65.7%	65.9%	
외국인 자동 이용률	13.8%	5.2%	24.7%	32.5%	33.4%	

제4항 출국금지 대상 확대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이상배

1 추진 배경 및 경과

2024. 2. 29.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출국금지 요청 대상으로 규정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종전에는 양육비 미납으로 '법원의 이행명령을 불이행하여 감치명령을 받은 자'가 출국금지 대상이 되었으나, 법개정으로 출국금지 대상 범위가 양육비 미납으로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은 자'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2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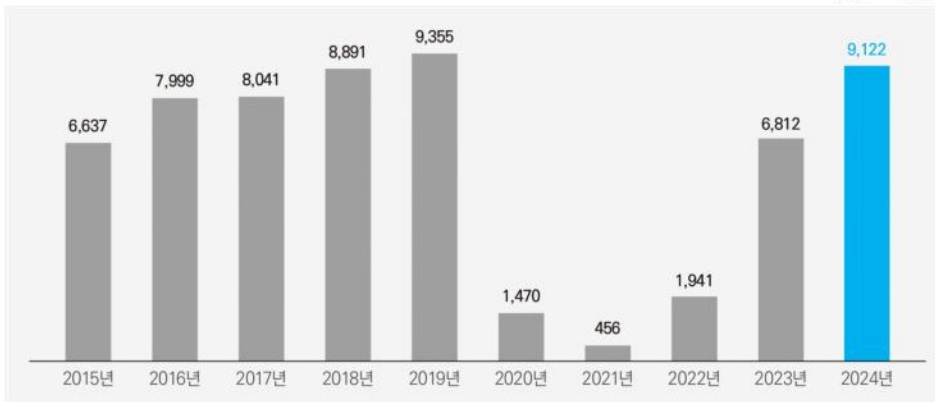
개정안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법원의 이행명령만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제5항 출입국자 현황

2024년도 전체 출입국자는 전년도의 68,121,657명 보다 33.9% 증가한 91,222,927명을 기록하였다. 국민은 57,567,576명으로 전년도 45,423,313명에 비해 26.7% 증가하였고 외국인은 33,655,351명으로 전년도 22,698,344명에 비해 48.3% 증가하였다.

■ 출입국자 증감 추이 ■

(단위 : 만 명)



1 외국인 입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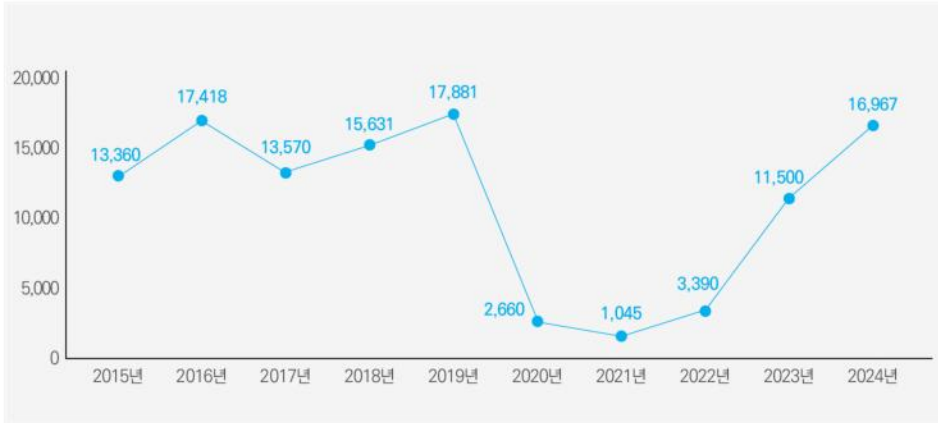
2024년도 외국인 총 입국자는 16,968,203명으로 전년도 11,500,883명에 비해 47.5% 증가하였다.

국적별 입국자 수는 중국 약 488만 명(28.8%), 일본 약 326만 명(19.2%), 대만 약 150만 명 (8.8%), 미국 약 142만 명(8.4%) 순이다.

입국목적별로 살펴보면, 관광 및 방문이 약 1,282만 명(75.6%)으로 가장 많았고, 재외동포 약 49.5만 명(2.9%), 유학 약 34.8만 명(2.1%), 영주 18.9만 명(1.1%)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입국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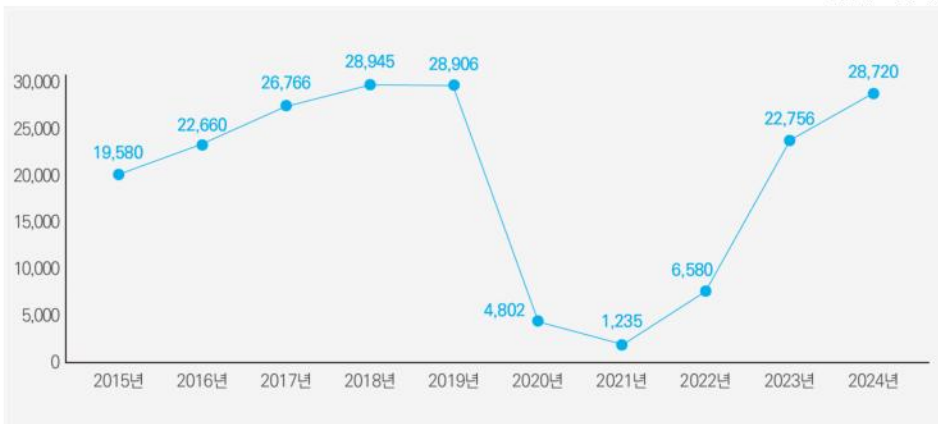


2 국민 출국자

국민 출국자는 28,720,773명으로 전년도 22,756,008명 대비 26.2%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상황 완화에 따라 2022년부터 출국자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28,905,763명)의 99.4% 수준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 출국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제2절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방적이고 인권친화적인 체류환경 조성

제1항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 도입

체류관리과 사무관 김종승

1 추진배경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디지털 원격근무가 활성화됨에 따라 관광지 등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근무하는 '워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으나, 변화된 근로 형태에 대한 제도적 반영은 미비한 상황이었다.

2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시범운영 추진

법무부는 2024. 1. 1.부터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제도를 시범운영하였다. 국내에서 워케이션을 하고자 하는 원격근로자는 재직 경력과 일정 이상의 소득(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2배 이상)을 증명하는 경우 국내에 장기 체류할 수 있다. 다만, 내국인 고용시장 보호 등을 위하여 국내 취업은 엄격히 제한되며, 국내 취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3 성과 및 발전방향

2024년 시범운영 결과, 229명의 고소득 외국인이 비자를 발급받았으며, 그중 218명이 현재 국내에서 워케이션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무부는 시범운영 추진 결과를 토대로 추후 정식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도입을 통해 고소득 외국인이 국내 여러 지역에 머물면서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나라의 풍경과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2항 계절근로자 제도개선으로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

체류관리과 사무관 박정석

1 정책환경

농어촌 계절적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부터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으로써 인력 공급 측면에서는 산업현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체계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전문기관 지정·운영,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은 향후 추진과제로 남아있다.

표 4 연도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인원

(단위 : 명)

구분	2015 ~ 2016년 (시범운영)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운영 인원	219	1,085	2,824	3,497	223 (국내 체류자)	1,850 (해외입국자 559 +국내체류자 1,291)	12,027 (해외입국자 10,630 +국내체류자 1,397)	32,837 (해외입국자 32,489 +국내체류자 348)	57,269 (해외입국자 57,247 +국내체류자 22)

2 추진경과

가.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으로 해소방안' 발표

2024. 4월 관계부처(농식품부, 해수부) 협업으로 '농·어업 외국인력 지원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2024. 4월 ~ 2025. 12월), 농어업 외국인력 관련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2024. 11월 新출입국·이민정책

후속조치로 계절근로 제도개선안을 발표하는 등 계절근로자 제도의 체계적 관리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추진성과

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확대

농·어촌 지역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증가한 고용주와 지자체의 계절근로자 수요를 반영하여, 2024년 계절근로제도 배정인원을 전년 대비 66% 증가한 67,778명으로 결정함으로써 농·어촌에 필요 인력을 배치하였다.

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효율화

계절근로 제도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허용범위 확대, 최소임금보장 기준 합리적 조정, 결혼이민자 초청방식 개선, 계절근로 체류자격 통합 및 체류기간 상한 연장 등의 제도개선을 시행하였다.

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대책 강화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 활용을 의무화하였고,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절근로 프로그램 재참여를 보장하는 등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였다.

제3항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전문·기능인력(E-7) 비자제도 개선

체류관리과 사무관 황민하

1 추진배경

법무부는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항공기, 송전, 요양분야에 외국인력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전문·기능인력(E-7) 내 직종을 신설하는 등 비자제도를 개선하였다

2 추진내용

가. 산업 분야 전문인력 도입

법무부는 산업 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기능인력(E-7) 자격 내 직종을 신설하는 등 전문 외국인력 도입 지원에 나섰다.

먼저, 법무부는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항공기(부품) 제조원'과 '송전 전기원' 직종을 신설하여 연 3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 간 전문·기능인력(E-7) 도입을 시범적으로 허용하였다.

이번 전문인력 직종으로 신설된 '항공기(부품)제조원'과 '송전 전기원'은 산업 분야의 인력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법무부는 국민 일자리 보호 및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국민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함으로써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면서도 균형잡힌 비자제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나. 요양보호 분야의 전문인력 도입 확대

돌봄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요양보호 분야에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전문적인 외국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법무부는 전문·기능인력(E-7) 자격 내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여 연 4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간 전문·기능인력(E-7) 자격 취득을 시범적으로

허용하였다.

* 요양보호사 평균연령 61.7세(2023. 12월), 2027년 부족인원 약 7.9만 명 예상

2024. 1월 보건복지부의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으로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24. 7월부터 법무부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할 경우 전문·기능인력(E-7) 자격 취득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직종 신설 이후 국내 대학에 '외국인 요양보호사 과정'이 신설되는 등 요양보호 분야 전문 외국인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요양보호 분야 우수 외국인력 진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추진성과

법무부는 앞으로도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산업분야에 우수 외국인력이 신속히 유입될 수 있도록 전문·기능인력(E-7) 직종을 신설하는 등 비자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제도 개선 과정에서는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운영을 통해 경제·산업계 및 관계부처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제4항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 및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체류관리과 사무관 김은호

1 추진배경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국내 대학의 유학생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유학생의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도 문제되고 있다. 이에 우리부는 우수 유학생 유치에 힘쓰면서도, 유학생이 학업에 충실하고 한국어 구사능력을 향상하여 우리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업하여 비자 제도를 개선하였다.

2 추진내용

가. 연구유학생(D-2-5), 연구원(E-3) 비자 확대

연구유학생(D-2-5) 비자는 석·박사학위 소지자, 특정연구기관*이 초청한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에 한해 허용해 왔으나, 그 밖의 국내 대학은 국외 학사 과정 유학생을 초청할 수 없어 해외 연구인력 영입이 어렵다는 건의에 따라 세계 대학평가 상위권에 속하는 국내 대학의 이공계 분야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을 연구유학생(D-2-5)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또한, 석·박사학위 소지자에게 허용해 온 연구원(E-3) 비자는 국외 석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여 연구원 유치가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외 석사학위 소지자가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또는 우수 학술논문 저자인 경우에는 경력이 없더라도 바로 연구원(E-3)으로 초청할 수 있게 하였다.

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4학년도에 입국하는 유학생에게 적용되는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34개교, 어학연수과정 90개교로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인증대학 중 국제화 역량이 특히 뛰어난 대학 18개교를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하여 인증대학에 우선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여 우수 인증대학이 점차 늘어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다. 제4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

유사지표를 통·폐합하여 지표 개수를 감축(학위 10개, 어학연수 9개)하였고, 관리가 극히 부실한 대학은 '비자심사제한대학'에서 '비자정밀심사대학'으로 용어를 변경, 대학의 유학생 관리 노력 등이 소명되는 경우 유학생 유치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어역량 강화를 위하여 한국어 능력 충족 유학생 비율을 상향(30% → 40%)하고, 어학연수과정의 수수료로 평가하던 것을 TOPIK 등 공인시험 취득율(30%이상)로 강화하였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유학비자가 불법취업의 우회 방편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유학생에 대한 입국 및 체류관리를 강화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한국어능력을 갖추고 성실하게 학업을 마친 졸업생에 대해서는 국민 일자리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5항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도입

체류관리과 사무관 황민하

1 추진배경

혁신성과 적극성을 가진 인재가 대한민국에서 창업하고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생태계 글로벌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외 창업인재 유입 및 발굴 제도 개선이 요구되었으나, 기존의 창업비자 제도는 정량적 요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기술창업(D-8-4)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해외 우수 창업인재유치를 지원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었다.

2 추진내용

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도입 발표

법무부는 2024. 7. 31. 글로벌스타트업센터 개소식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도입 계획’을 발표(중소벤처기업부 공동)하고 본격적으로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 나섰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제도는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함으로써 창출해 낸 성과로서, 이를 위해 기존 비자 발급 조건과 별개로 기술창업비자 발급 트랙(D-8-4S)을 신설하였다. 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의 신청을 받아 산업계·학계·이민정책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평가위원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상자를 추천하면 심사 후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기술창업(D-8-4) 비자와 차별화하여 비자 발급 요건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였다.

나. 특별비자 도입을 위한 지침개정

기존에 기술창업(D-8-4)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에 참여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거나,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에 선정 또는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했으나, 신설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정량적 요건을 최소화하고 민간평가위원회의 사업성·혁신성 평가를 거쳐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였다.

그림 10 기술창업 관련 행사 참석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1호 기업
(’24. 12. 11. 컴업 2024 참여)



글로벌스타트업센터 개소식 참석(’24. 7. 31.)

3 주요성과

이러한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2024. 11. 25. 제1회 민간평가회를 개최하여 10명의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다국어 지원 AI 기반 디지털 휴먼 솔루션 기술을 바탕으로 한 1호 기업이 탄생하였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내 창업에 희망하는 해외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민간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술창업(D-8-4)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며, 국내 창업 생태계의 글로벌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외 창업인재 유치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제6항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합리적 개선

체류관리과 사무관 김은호

1 추진배경

법무부는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24. 9월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조치로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2 주요 추진내용

가. 숙련기능인력 자격 취득 후 한국어 능력 요건 보완 허용(사회통합 요건 특례)

2023. 9월 숙련기능인력(E-7-4) 혁신적 확대 방안 시행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등)을 갖추기 어려워 숙련기능인력 전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우선 전환 후 2년 내 한국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특례를 2026.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나. 건설업계 현실을 반영한 허용인원 산정기준 도입

건설업의 경우 허용인원 한도가 낮으며 유동적인 연평균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허용인원을 산정하여, 소규모 건설업체가 필요한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건설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시공능력평가액을 추가 기준으로 도입하는 등 허용인원 산정 요건을 재설정하였다.

다. 비수도권 근무 외국인력에 대한 특례 도입

지역기업들은 외국인력의 수도권 취업 선호로 인해 숙련기능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법무부는 비(非)수도권에서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 숙련기능인력 전환 시 체류요건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였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앞으로도 법무부는 경제·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비자·체류정책 수요를 상시 파악할 예정이며, 균형잡힌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제3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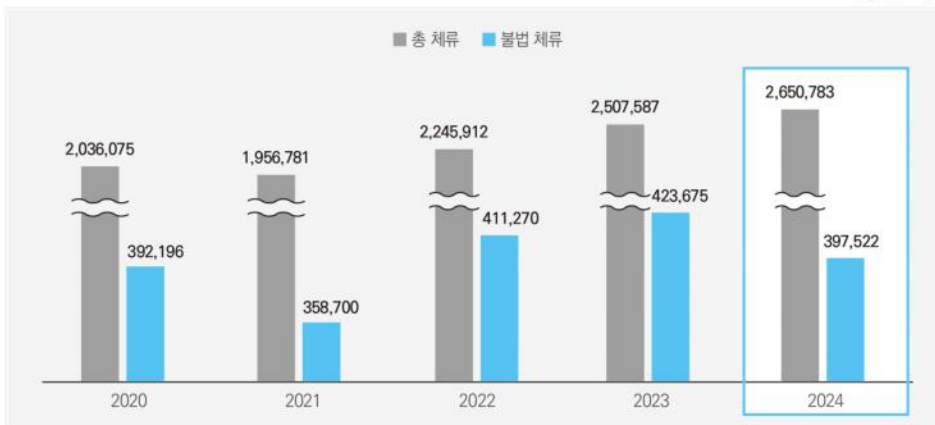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절차 강화 및 보호시설 환경 개선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불법체류 외국인은 2023. 10월 43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로 전환되었고, 2024. 12월 39만 명대까지 감소하였다.

2024년도에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년 ~ '27년)」 2년차를 맞아 정부합동 단속·테마별 기획 단속·특별단속지역 지정 운영 등을 통해 연중 단속활동을 강화하였고, 이민특수조사대를 비롯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별 기획조사 전담반을 상시 운영하여 불법체류 유발환경 사전 차단을 위해 불법브로커 등을 지속적으로 적발하였다.

그림 11 총 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단위 : 명)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법무부, 국가정보원,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외교부 등 7개 부처 담당자로 구성된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를 2차례 개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대책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5개 관계부처 650여 명이 참여하는 정부합동단속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또한,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환경적 요소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불법고용 방지 계도를 실시하였으며,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하는 등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 및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불법체류 외국인 발생 및 불법고용 억제 환경 조성,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인터넷, SNS 등 온라인 홍보, 공익광고 전광판, 현수막 등을 이용한 홍보와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정책을 적극 홍보하였다.

한편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불법체류율이 증가하고, 중국·베트남·러시아·우즈베크를 비롯한 일부 국가 출신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상당한 규모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으며, 최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마약류 밀수입 및 국내 불법유통·투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외국인들이 SNS 등을 이용하여 국내 불법취업 알선, 불법입국 요령 안내, 허위 난민신청 방법 안내 및 알선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외국인범죄 및 테러에 대한 치안불안 우려가 커짐에 따라 우범 외국인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에 출입국 관련 사건에 대한 기획조사 능력이 특화된 서울 및 부산 출입국·외국인청 소속 이민특수조사대의 활동을 강화하고, 각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별로 기획조사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하였다.

또한, 동향조사요원의 조사기법 공유 및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 방안 등 주요 현안·쟁점 사항들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동향조사 기법연구 발표회를 개최하여 소속기관 간 유대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업무협조 방안 및 최신 조사기법을 공유하여 전반적인 기획조사 능력향상을 도모하였다.

2024년 한 해동안 불법체류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139,727명 가운데, 강제퇴거 35,124명(25.1%), 출국명령 44,151명(31.6%), 출국권고 1,931명(1.4%)

등 출국조치 된 외국인은 총 81,206명이며, 고발된 사람은 1,737명(1.2%), 그 밖에 통고처분(과태료) 후 체류허가 등의 조치를 받은 사람은 총 56,784명(40.6%)이었다.

표 5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처리 현황

(단위 : 명)

연도	총계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고발	기타*
2022	98,350	10,196	28,585	2,067	1,478	56,024
2023	134,083	31,932	40,538	1,922	1,880	57,811
2024	139,727	35,124	44,151	1,931	1,737	56,784

*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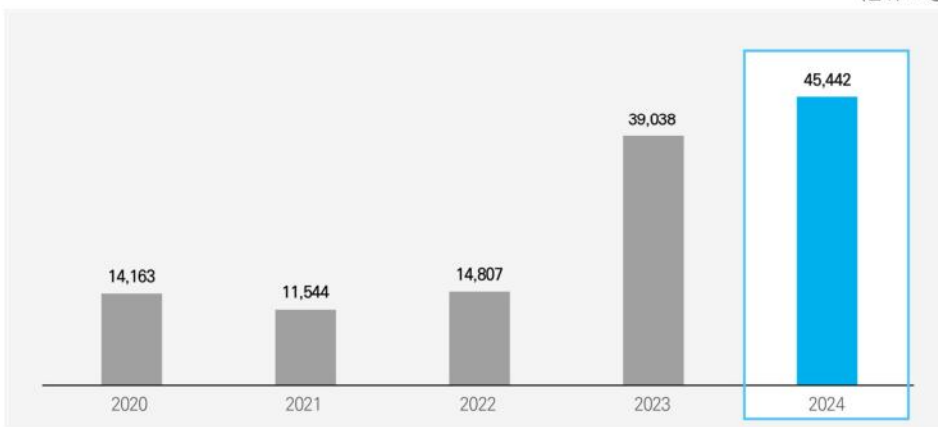
제1항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 노력

이민조사과 사무관 김택균

정부합동단속 정례화 등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2024년 불법체류 외국인 등 45,442명을 적발하여 본국으로 강제 송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림 12 불법체류 외국인 적발 현황

(단위 : 명)



2024년 정부합동단속은 2차례(상·하반기) 실시하여 국민 일자리 잠식이 심한 업종,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상승적으로 불법고용 사업장 및 국민 안전 위협 외국인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19,232명, 불법고용주 3,761명 및 불법입국 및 고용 알선 브로커 38명 등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6 정부합동 불법체류 단속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8	2019	2022	2023	2024
기간	• 2.26. ~ 5.11. • 9.3. ~ 11.16.	• 매 짝수달 각 4주	• 10.10. ~ 12.10.	• 3.2. ~ 4.30. • 6.12. ~ 7.31. • 10.10. ~ 12.9.	• 4.15. ~ 6.30. • 9.30. ~ 11.30.
참여인원	830	899	830	530	650
불법체류 외국인	16,218	2,806	3,865	20,947	19,232
불법고용주	2,835	495	483	4,687	3,761

※ 2019년 실적산정 방식 변경(전 기관 실적 인정에서 광역단속팀 주관 실적만 인정)으로 실적 감소
 ※ 2020년 ~ 2021년은 감염병 확산으로 정부합동단속 잠정 중단 후 2022. 10월 재개

한편,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특별 자진출국제도를 2회('24. 1. 1. ~ 2.29, 9. 30. ~ '25. 1. 31.) 운영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태국, 베트남, 몽골 등 주요 불법체류 발생 국가의 주한공관원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불법체류 중인 자국민이 자진출국제도를 통해 출국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시행하였다.

표 7 자진출국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3 대비 2024 실적
자진출국자	55,260	32,867	32,026	43,133	46,299	3,166 ↑ (7.3% ↑)

※ 특별자진출국 운영기간(1. 1. ~ 2. 28., 9. 11. ~ 12. 31.) 동안 24,329명 자진출국

이와 같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 자진출국 유도 및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를 위한 제도 등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의 감소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제2항 기획조사 및 마약·테러 등 국민안전 위협 사범 등 합동(집중) 단속

이민조사과 사무관 홍창기

2024년도에는 허위초청 123명, 허위서류 제출 356명, 불법취업 알선 2,545명, 국익위해사범 114명, 위변조 여권 33명 등 총 5,267명(794건)의 기획조사를 추진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이슬람 극단주의를 추종하는 외국인들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경찰·국정원과 공조 수사를 통해 이슬람 극단주의 추종 혐의자 6명(우즈베키스탄 3, 러시아 1, 카자흐스탄 3)을 강제퇴거 조치하였으며, 태국·베트남 등 동남아 국적 외국인들이 주말에 외국인 전용 클럽·노래방에 모여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투약한다는 첩보를 다수 입수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총 49명(베트남 35, 태국 11, 러시아 1, 기타 2)을 단속하여 2명을 강제퇴거하고 47명을 경찰 수사의뢰하였다.

또한 본국에서 마약류를 정력제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2023년 3월 인터폴에 적색수배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피의자를 검거하여 강제퇴거하였으며, 2008년부터 장기간 한국에 체류하며 평소 자국 외국인들의 고용을 알선하는 대가로 경북 경산시 소재 특정 업체에 '22. 8월 중순경부터 꾸준히 외국인들을 공급·통역 등의 전반적인 관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업체 대표로부터 대가금으로 매월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받아온 네팔인을 구속·송치하였다.

한편으로 허위 난민신청 관련하여 '22. 8월부터 '23. 11월까지 체류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비전문취업(E-9) 및 단기방문(C-3) 체류자격 네팔인 24명에게 거짓 난민신청 사유를 만들어 체류지입증서류인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 허위 서류를 작성해주고 수백만원의 대가를 수령한 한국인 브로커 2명을 적발하여 '24. 4. 15.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하였다.

기획조사 활성화 및 효율적인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조사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체류외국인 동향조사 기법연구 발표회, 유관기관·단체 초청 간담회 등을 통해 동향조사 기법 및 관련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더불어

불법체류 유발 환경 차단 및 외국인 밀집지역과 취약시설에 대한 순찰·단속을 통해 국민 불안 요소를 해소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표 8 기획조사 추진 실적

(단위 : 명)

연도	총계	허위서류 제출	허위초청	불법취업	유형업소	기타
2023년	3,337	242	100	1,531	778	686
2024년	5,267	356	123	2,545	853	1,390
증가율(%)	57.8	47.1	23.0	66.2	9.6	102.6

제3항 개방형 보호시설 확대 등 인권보호 강화

이민조사과 사무관 김준철

보호외국인에 대한 처우를 강화하기 위해 2024. 11.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보호시설을 개방형 보호시설로 전환하였다. 개방형 보호시설은 보호시설 내 철창을 제거하여 생활 공간을 확대하고 운동장을 상시 개방하는 한편 인터넷PC, 휴대폰 사용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외부소통 및 정보접근권을 확대한 것으로서 피보호자에 대한 보호 환경을 보다 인권친화적으로 조성한 것이다.

한편,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및 외국인보호소에 보호외국인 고충상담관,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 2024년 한해 강제퇴거를 앞둔 보호외국인의 권익 보장을 위한 체불임금 처리 380건 등 총 24,021건의 다양한 고충을 적극 처리하였다.

보호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환자 발생 등 응급사고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을 국군의무사령부의 2급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과정에 파견하여 약 9주 간의 교육 수료 후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였으며, 소속기관 자체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는 보호업무 담당 직원의 응급처치 교육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다.

제4절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효율화 제고를 통한 이민자 권익 증진

제1항 사회통합자문위원회 개최

이민통합과 사무관 주도현

1 추진배경 및 추진 경과

사회통합 자문위원회(위원장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4를 근거로 이민자 사회통합관련 사안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15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체류외국인 증가로 이민자 사회통합교육에 대한 수요증가와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민사회대비 사회통합 정책 방향'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유료화 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사회통합 자문위원회 논의사항을 관련 정책 설계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 등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실효적인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그림 13 사회통합자문위원회 개최



2024년 제1회 사회통합자문위원회(2024. 7. 25.)

제2항 (법무부-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외국인정책협의회 개최

이민통합과 사무관 주도현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19. 7월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공유 및 체류외국인 증가에 따른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 맞춤형 정책추진을 위하여 법무부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외국인 주민이 1만명 이상 거주 하거나 전체 주민 중 외국인 주민의 비율이 3%를 초과하는 26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

반기별 1회 양측이 교대로 회의를 개최하며, 2024. 5월 법무부 이민통합과 주관으로 제10회 외국인정책협의회를, 9월에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회장도시: 김포시) 주관으로 제11회 외국인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외국인정책 관련 상호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더욱이 국내 체류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업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앞으로 법무부는 상호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더욱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그림 14 (법무부-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외국인정책협의회 개최



제10회 외국인정책협의회(2024. 5. 30.)



제11회 외국인정책협의회(2024. 9. 25.)

제3항 이민자 사회통합지수 측정 및 정책 컨설팅 실시

이민통합과 사무관 주도현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정책이 중복되어 예산이 낭비되거나 반대로 지원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체류외국인 증가에 따른 지역의 사회통합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고, 그에 따른 사회통합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이주민 지원정책을 진단하고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우선적으로 외국인 밀집지역 등 외국인정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통합 정책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2023년에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중 희망하는 지자체 9개 지역(광역 4곳, 기초 5곳)을 대상으로 정책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2024년에는 확대하여 광역지자체 13곳, 기초지자체 22곳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외국인정책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컨설팅을 통해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착오를 최소화하고 정책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균형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제4항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의 평가 기회 및 접근성 확대

이민통합과 사무관 최민수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맞춰 '22년부터 컴퓨터 기반평가(CBT)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CBT 센터는 외국인이 체류자격, 영주권, 국적 등을 취득할 때 이수 혜택이 부여되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관련한 사전평가와 종합평가에 컴퓨터를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험장이다.

교육참여 수요가 많고 교통 접근성이 높은 서울시에 평가장 설치가 필요하다는 참여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존 광명 CBT센터와 대전 CBT센터에 이어 2024. 12. 30. 서울 CBT센터를 추가 개소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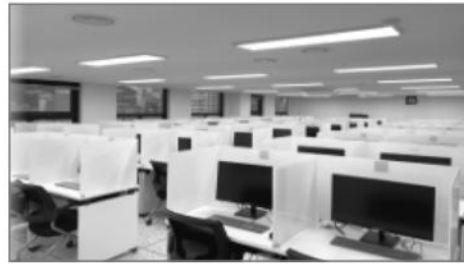
서울 CBT센터를 통해 1일 최대 220명의 외국인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 응시할 수 있으며, 1일 최대 112명의 외국인이 사회통합프로그램 귀화용 종합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서울 CBT센터가 추가 개소됨에 따라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참여자뿐만 아니라 지방에 거주하는 참여자도 자신이 희망하는 일정에 맞춰 평가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상설 운영하는 CBT센터의 추가 개소로,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5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능력 컴퓨터 기반평가(CBT) 서울센터 개소



컴퓨터 기반평가(CBT) 서울센터 개소식(2024. 12. 30.)



컴퓨터기반평가(CBT)센터 내 평가실

제5항 지자체 연계 계절근로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시행

이민통합과 사무관 최민수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농어촌 지역은 도시지역 인구 유출 및 고령화로 일손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2015년부터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가 커질수록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 및 고용주에 의한 계절근로자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 시행하고 있던 계절근로자 대상 입국초기

교육을 법무부가 운영 중인 조기적응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보다 표준화되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그간 조기적응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외국인 연예인,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운영해 왔으나 지난해 계절근로자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였던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올해부터 확대하여 시행한 것이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계절근로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기초 법·질서와 한국사회 필수 생활정보뿐만 아니라 농작업 안전 수칙 및 안전사고 예방, 지역사회 정보 등 계절근로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였다.

특히, 계절근로자의 낙후된 교육 접근성과 농·어촌 현장의 일손 공백을 고려하여 전문강사가 직접 해당 지역의 교육장소를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방식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도입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계절근로자의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율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제6항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이민통합과 사무관 신하균

1 추진 배경 및 추진경과

2007. 7. 18.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정 시,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였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정하였다.

2008. 5. 20. 제1회 기념식을 시작으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4. 5. 20.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제17회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은 주한 아일랜드 대사, IOM(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 등 외교사절,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 이민자 정착지원 및 국민과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기여한 유공자,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기념식은 주제영상 상영, 법무부장관 기념사, 국회의원 및 주한 외교사절 축사, 국제이주기구(IOM) 대표 등의 축하영상, 유공자 포상, 축하공연 등 순서로 진행되었다.

박성재 장관은 기념사에서 “법무부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외국인재의 유입을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고,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통합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목포에서 지난 50여년 간 장애인을 위해 봉사·헌신하신 '라이언 제라딘 수녀님'(사회복지법인 성골롬반복지재단 이사장, 복수국적)이 올해의 이민자 (대통령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밖에도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이나니 상담팀장과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가 대통령표창을, 임정자 신길셋별작은도서관 강사, 단양여성취업지원센터 조연화 센터장, 홍임숙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위원, 화찬권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위원 등 개인 4명과 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연구소,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광주국제 교류센터 등 3개 단체가 국무총리표창을, 양주사무소 이민자네트워크 와타나베 아쓰코 회장 등 5명과 KCA선교회(단체), 여수가족플러스센터(단체)가 이민자 사회통합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여성 5인조 창작국악 그룹 '비단'의 공연으로 기념식 시작을 알렸으며, 빛과 전통예술을 조화시킨 미디어 퍼포먼스그룹 '생동감', 다국적 K-pop 그룹 '엑신', 7~16세의 다문화 가정자녀로 구성된 '우리다문화어린이합창단' 등 공연이 기념식을 한층 더 흥겹고 풍성하게 만들었다.

또한 기념식장 입구 야외에서는 총 11개 국가의 다채로운 전통의상을 입을 수 있는 세계 의상 체험 행사와 짧은 시간 안에 나만의 특징을 담아 표현한 개성 넘치는 캐리커처 이벤트가 열렸다. 세계인의 날 연혁, 포상자 소개, 출입국 홍보영상, 인식개선 동영상 등을 상영하는 세계인의 날 주제관을 운영하여 세계인의 날 제정 의미를 되새기는 장을 마련하였으며, 식후에는 이민자 멘토단 등이 기념품과 함께 달콤한 빵과 찰진 떡을 무료로 전달하였다.

한편, 기념식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과 재한외국인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과 세계인의 날(Together Day) 홈페이지를 통해 기념식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참여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2 평가 및 발전 방향

2008년부터 17회 걸쳐 개최된 세계인의 날 기념식과 세계인 주간 행사는 국민과 재한외국인 통합에 기여한 공로자를 치하하고, 상생·공존·통합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의 장이었다.

앞으로 법무부는 그간의 노력을 밑거름 삼아,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과 이민자 간 상호이해 및 소통증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기획·추진할 예정이다.

그림 16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2024. 5. 20.)



법무부장관 기념사

유공자 포상

제7항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운영

이민통합과 사무관 최민수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배우자 국가의 제도·문화 소개,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안내, 결혼이민자 상담·피해사례 및 경험담 소개, 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와 가정폭력 방지 등을 교육하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2010.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2024년에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대한 현장점검 및 참관을 통해 교육 과정의 효율성과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였고, 교육 참여자의 애로사항 청취 및 건의사항 수렴을 통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결혼이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였다. 또한, 결혼이민(F-6) 관련 규정 및 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외국인 배우자 입국·체류 가이드북과 각 국가별 책자 16,000권을 발행하여 전국 17개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배부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결혼이민 가정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정착과 바람직한 국제결혼 가정의 형성·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제8항 결혼이민자에 대한 체류지원 확대 추진

이민통합과 사무관 최민수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외국인 배우자가 보다 신속하게 결혼이민(F-6)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 IBT 성적증명서를 외국인 배우자의 의사소통 입증자료로 추가하고, 국내 발급 건강진단서와 재외공관 지정 신체검사 기관의 건강진단서 효력을 동일하게 인정하였으며, “2025년 가구수별 소득요건 기준금액”을 변경하는 등 결혼이민(F-6) 사증 발급 심사 기준과 관련한 요건 중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였다.

또한, 국내에 모든 생활기반이 형성된 20년 이상 장기 거주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체류지위 보장을 위해 결혼이민 영주(F-5)자격 취득요건 중 기본소양 요건 기준을 완화하였고 통일적 업무처리를 위해 영주자격 취득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를 정비하는 등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기준을 개정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생계유지 등의 사유로 사회통합 프로그램 평가에 합격하지 못하는 20년 이상 장기거주 결혼이민자의 영주(F-5)자격 취득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결혼 이민자에 대해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결혼이민(F-6) 사증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명확하고 통일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결혼이민자의 체류권 보장과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제5절

국민이 공감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국적정책 추진

제1항 국적증서수여식 개최를 통한 국적취득자의 국민정체성 함양

국적과 사무관 배창준

1 추진배경 및 경과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 또는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을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이 2018. 12. 20. 시행된 이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약 8만 명에 이르고 있다. 당초 행사참여형으로 개최되던 국적증서수여식은 코로나19 확산을 겪으며 2020년부터 개별수여·비대면 수여 형태를 도입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2024년은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코로나 확산으로 위축되었던 행사참여형 수여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한 해였다. 법무부는 국적 수여 방식 및 표준 절차, 감염병 단계별 조치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제도를 체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일된 업무 기준을 마련하였고, 14,616명이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를 수여받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특히 2024년은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그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온전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을 축하하고자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누구보다 특별한 여러분이 이 나라의 기둥이 되어 선조들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가치를 한 층 더 높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며 국적취득자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로 최이봉 선생 등 독립유공자 14인의 후손 27명이 특별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이날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된 김예정(독립유공자 차도선 선생의 후손) 양은 “진짜 대한민국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고 설레며, 자랑스러운 국민으로서 나라에 도움이 되게 노력하겠다”라고 하였고, 앵림 펜잔 안토니오(독립유공자 임천택 선생 후손)씨는 “증조할아버지의 희생과 한국 정부의 지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나라에 많은 기여를 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식은 시행 후 6년을 맞이하였고 ‘제79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수여식’은 다수 언론에 보도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귀화자 등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적증서 수여식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국익에 부합하면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국적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그림 17 8·15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2024. 8. 12.)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취득 기념촬영



법무부장관 축사

제2항 복수국적 등 국적제도에 대한 국민여론 확인

국적과 사무관 강성진

1 추진배경 및 경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결혼이민자·해외입양자·고령동포 등 소수자를 포용하기 위해 「국적법」(2010. 5. 4. 개정)은 엄격한 단일국적주의를 완화하여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65세 이상 고령동포(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는 외국의 연금수급권을 유지하며 고국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지만, 현행 65세인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주동포 사회를 중심으로 지속 제기되고 있다.

표 9 「국적법」 제10조제2항제4호(65세 이상 고령동포)에 따른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대상자 현황

(단위 : 명)

전체	2019년 이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7,045	14,680	1,419	1,973	2,376	3,434	3,163

복수국적 등 국적제도의 변경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하는바, 법무부는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복수국적 적정연령을 포함한 국적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이해당사자(국내외 복수국적자, 재외동포 등) 등의 인식을 확인하였다.

* (수행자) 이민정책연구원, (대상) 국민 3,000명, 이해당사자 555명, (기간, 용역비) '24. 6. 7. ~ 10. 4. 약 5,800만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동포의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에 대해 국민의 65.5%와 이해당사자의 50.5%는 현행 복수국적 연령인 65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민은 노동력 확보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았고(동의 비율 각 35.6%, 34.8%), 장노년층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부담과 병역 기피 목적의 국적포기자 증가에 대한 우려(동의

비율 각 57.9%, 59.7%)가 확인되었다. 또한 국민의 76.5%는 국적회복을 허가하기 위한 조건 추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조건 추가가 필요하다고 본 응답자들은 국적회복 신청 전 한국 거주(80.3%), 한국에 주로 거주할 의사(79.4%), 충분한 자산·소득 보유(59.31%) 순으로 각 조건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 대해 일반 국민의 70.0%는 현행대로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시켜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이해당사자 중 이에 찬성하는 비율은 37.5%였다. 다만, 국민과 이해당사자 모두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외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자동상실시키지 않고, 국적선택을 위한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였다(국민 73.9%, 75.0%).

2 평가 및 발전방향

복수국적을 포함한 국적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기본적 구성요소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관련 정책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법무부는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를 참고하여 국적제도에 대해 국민 우려 사항을 보완하고,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제3항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공·사익 조화

국적과 사무관 배창준, 강성진

1 추진배경 및 경과

법무부는 우수 외국인재를 유치·확보하기 위해 2011. 1. 1.(2010. 5. 4. 「국적법」 개정)부터 우수인재 특별귀화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를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국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다. 국적심의위원회는 2022. 10. 1. (2022. 9. 15. 「국적법」 개정)부터 관련 부처와 다수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법률상

위원회로 격상되었고, 종전의 우수인재 특별귀화 이외에 국적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예외적 국적이탈허가) 등도 추가 심의하도록 하였다.

2024년 법무부는 국적심의위원회(위원장 : 법무부차관)를 총 4회(분과위원회 8회) 개최하여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98건, 예외적 국적이탈 144건, 사할린동포 국적판정 204건 등 총 446건을 심의하였다. 이를 통해 학술, 신산업·첨단기술 분야 등의 우수인재에 대해 연구실적 및 국익기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귀화(회복)를 허가하였으며,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대한민국과 실질적 유대관계가 없는 복수국적자는 직업선택의 자유 및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조화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국적이탈을 허가하였다.

우수인재 특별귀화와 관련, 2024. 4. 12.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법무부 고시)」를 개정하여 국익 기여 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2024. 7. 20. 「국적심의위원회 운영 지침(법무부 예규)」을 개정하여 기존의 과학, 경제, 문화, 예술, 체육 분야 외에 법률, 출입국, 병역, 재외동포 분야 전문가도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와 관련, 2024. 4. 29. 「국적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를 신청인이 이해하기 쉽게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하고, 필수항목 위주로 신청서 서식을 간소화하였다. 그리고 직업상 불이익이 임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속심사제'를 2024. 8. 19. 시행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국적심의위원회가 법률상 심의기구로 격상된 2022년부터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4년은 그간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위원회가 국익에 부합하고, 공·사익이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진 해이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적심의위원회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며, 안전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제4항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국적제도 안내·홍보 강화**

국적과 사무관 강성진

1 추진배경 및 경과

국가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해외 이주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국민이 외국에 정착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외국에서 출생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복수국적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계속해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지만, 병역의무와 출생경위 등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이 제한되기도 한다.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해 기간 내에 신고 등을 마치지 못해 불이익을 받거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바, 국적법령 및 제도에 대한 안내·홍보는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국적은 업무 특성상 동포, 병역, 가족관계등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들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의 협업은 매우 중요하다. 2024년 법무부는 병무청, 재외동포청, 재외공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우리 「국적법」을 적용받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하는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였다.

법무부는 기존의 「국적 및 병역 안내서」를 알기 쉽게 재구성하고 Q&A를 보완하여 재외공관에 배포, 공관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해외에 거주 중인 우리 국민과 재외동포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2024. 7월). 또한, 주일본대사관, 주나고야총영사관, 주오사카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관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국적설명회를 개최하여 재외동포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였다(2024. 10. 28. ~ 10. 31.).

그림 18 재일동포 대상 국적설명회(2024. 10. 28. ~ 31.)

주일본대사관



주나고야총영사관

재외동포청의 '찾아가는 통합민원 서비스 화상 상담회(2024. 4월 일본, 2024. 5월 호주, 2024. 6월 칠레, 2024. 9월 남아공 등)'와 병무청의 '재외국민 대상 온라인 병역·국적 설명회(2024. 9월 이탈리아 등)'에 참여하여 재외공관 직원 및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복수국적, 국적이탈 및 상실·회복 등 국적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였다. 재외동포청이 주최한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하여 한인회장 및 대륙별 연합회 임원 등을 대상으로 재외동포의 주요 관심사인 국적회복·복수국적 등의 제도취지 및 실무례를 설명하였다(2024. 10월).

2 평가 및 발전방향

국적은 개인과 국가의 법적 유대이자, 권리·의무 관계가 형성되는 시발점이므로, 국민과 재외동포 모두 대한민국 국적 취득과 상실 등 국적법령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국적법령 및 제도에 대한 홍보·안내·교육을 강화하여, 국민 및 재외동포들이 국적법령 및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제5항 귀화 제도 개선을 통한 민원인 편의 제고

국적과 사무관 김용국

1 추진배경 및 경과

귀화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국적법상의 법률행위로, 최근 5년간 귀화를 통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매년 평균 10,000명을 상회하고 있다. 국적 취득을 위해 귀화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외국인정책 추진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귀화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추진해야할 과제이다. 법무부는 2024. 7월 귀화 또는 국적 회복 신청자가 자신의 국적 심사 진행 상황을 온라인(하이코리아 웹사이트)상에서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국적심사 진행상황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을 개시하였다. 하이코리아에 회원 가입한 귀화 또는 국적회복 신청자가 동 조회 시스템에 접속하여 접수번호, 여권번호 및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귀화 심사 단계(6단계) 또는 국적회복 심사 단계(4단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2024년 하반기 동안 ‘국적심사 진행상황 조회 시스템’에 접속한 횟수가 102,100회에 달하는 등 귀화 및 국적회복 신청자들의 동 시스템에 대한 이용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국적심사 진행상황 조회 시스템’에 대한 접속 횟수 등으로 볼 때 조회 시스템 도입으로 민원인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는 귀화 및 국적회복 신청자에 대해서만 ‘심사 진행 상황’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향후 다른 유형의

국적 신청자 등으로 동 서비스 제공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 등 귀화 심사 환경의 변화 추세에 맞추어 이미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시행 중인 온라인 방식의 귀화 신청 접수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자 한다. 온라인 방식의 접수 제도는 귀화 신청자가 출입국 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귀화 신청이 가능하여 귀화 신청자 등의 편의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10 유형별 국적취득(귀화, 회복)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종류별	총계		귀화		국적회복	
		신청	허가	신청	허가	신청	허가
2020		18,899	15,649	16,529	13,885	2,370	1,764
2021		21,160	13,637	18,091	10,895	3,069	2,742
2022		22,789	13,291	18,079	10,248	4,710	3,043
2023		23,745	14,549	18,736	10,346	5,009	4,203
2024		24,955	14,616	19,470	11,009	5,485	3,607

제6절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균형있는 난민정책 추진

제1항 추진배경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테러·분쟁 등으로 인해 난민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1994년 난민제도를 시행한 이래 2024년 한 해에만 우리나라에 난민을 신청한 건수는 18,336건으로 역대 두 번째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경제약화 및 안보 등의 사유로 해외 주요국의 난민정책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난민인정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난민전담공무원 심사 역량 강화 교육 및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운영하였고, '23년 12월부터 시범운영하던 난민심사 화상면접을 '24년 5월 정식운영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성이 낮은 난민신청자를 위해 다국어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난민 현안 공유 및 기관 간 원활한 협업을 위해 재정착실무협의체를 개최하는 등 난민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절한 처우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다.

나아가 「난민법」 개정을 위해 국민 여론조사 및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구제를 위해 「난민법 시행령」, 「난민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표 11 난민신청 및 심사 대기 현황

(단위 : 건)

구분	2020	2020	2021	2022	2024	
난민신청	6,684	2,341	11,539	18,837	18,336	
대기	1차	14,983	7,649	11,066	20,249	27,704
	이의신청	5,115	4,526	4,887	6,489	8,137

※ 기준 시점에 따라 소송 결과 반영 등으로 수치 일부가 변동될 수 있음

제2항 2024년 난민 신청 및 심사 현황

난민정책과 사무관 김정욱

1994년 난민 업무를 최초 시행한 이후 2024년까지 총 122,095건의 난민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철회된 29,164건을 제외한 총 57,090건에 대하여 난민심사를 완료하였다. 심사 결과 1,544명에게 난민인정 지위를 부여하고 2,696명에게 인도적 체류허가를 결정하여, 총 4,240명에게 「난민법」에 따른 보호를 제공하였다.

2024년 난민신청 건수는 18,336건으로 전년(18,837건) 대비 3% 감소하였으나, 난민심사 대기 건수는 총 27,704건으로 전년(20,249건) 대비 37% 증가하였다.

2024년 난민심사결정 건수(1차 심사 후 이의신청까지 완료한 건수)는 총 5,610건으로 전년도 5,949건 대비 5.7% 감소하였고, 난민인정은 105건으로 전년도 101건 대비 4% 증가하였으나 인도적 체류허가는 101건으로 전년 125건 대비 19% 감소하였다.

제3항 「난민법」 개정 추진 및 하위법령 개정

난민정책과 사무관 김정욱

2023. 12월 해외 주요국과 달리 현행 「난민법」에는 국내에서 테러에 가담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난민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난민인정을 제한하거나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2024. 5월 개정안에 대해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다수가 난민법 개정에 찬성하고 난민법 개정 시 난민인식이 개선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 9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바, 이는 입법예고 이후 시민단체, 규제심사위원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쳤거나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난민인정을 제한하거나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한 것이다. 2024. 11월 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시민단체,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기도 하였다.

* (난민법 개정) 찬성 63.8%, 반대 18.1%, 모르겠다 18.1%
(난민법 개정 시 난민인식 개선 여부) 동의 57.5%, 동의안함 34.6%, 모르겠다 7.9%

2024. 12월 현행 난민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난민법 시행령」, 「난민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였다. 「난민법 시행령」에는 난민심사 화상면접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였으며, 난민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요건을 규정하였다. 또한 「난민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난민인정신청서 및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에 난민신청자의 대한민국 법질서 준수약속 제고를 위한 안내 문구를 추가하였다.

제4항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난민심사

난민정책과 사무관 박정원

적극적인 난민심사를 위해 난민면접 과정에서 난민인정신청서에 기재된 박해 사유 이외의 다른 박해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난민인정 여부 결정 시 난민신청자 진술의 신빙성 및 박해 가능성 유무 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였다.

또한 난민심사는 난민신청자의 진술과 출신국의 정황 정보, 기타 사실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난민지위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법무부는 전문적인 난민심사를 위해 매년 다양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24년에는 난민심사보고서 품질관리 제고를 위해 난민면접 기법 및 심사보고서 작성, 진술 분석 방법 등 교육과 난민전담공무원 직무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심리지원 교육, 유엔난민기구(UNHCR) 등 전문가를 초빙한 전문교육(총 6회), 법무연수원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 국내외 난민심사이론과 실무 심사기법에 대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함양하고 있다.

표 12 2024년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실시 현황

회차	참석인원	주요 내용	주최
1차 (2.22. ~ 2.23.)	3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식개선 및 인권감수성 교육 UNHCR 전문가 초청 강연 - 난민협약 일본난민인정실 법무전문가 강연 - 일본 난민심사제도 	법무부
2차 (5.9. ~ 5.10.)	2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난민면접 유의사항 및 심사보고서 작성법 난민소송 수행 기법 전문가 초청 강연 - 국제이주 시대와 난민문제 난민전담공무원 직무스트레스 완화 심리지원 교육 	법무부
3차 (상반기 거점자체교육)	5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난민면접 및 심사보고서 작성법 국가정황 정보 분석 난민전담공무원 직무스트레스 완화 심리지원 교육 	법무부
4차 (8.29 ~ 8.30.)	4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난민심사 노하우 공유 인지면담 및 진술 분석 방법 등 	법무부
5차 (12.5. ~ 12.6.)	4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난민소송 사례 분석 전문가 초청 강연 - 아시아 난민 국제이주 동향 난민지위심사(젠더) 	법무부
6차 (하반기 거점자체교육)	6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난민면접 및 진술 분석 난민소송 수행 절차 전문가 초청 강연 - 국가정황 분석, 심리지원 교육 	법무부

제5항 난민통역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

난민정책과 사무관 김정욱

2024. 12. 31. 기준 난민신청자의 국적은 139개국으로 국적과 구사 언어가 다양해지며 소수 언어에 대한 통역 수요도 함께 증가하였다. 법무부는 다양한 언어권 난민신청자에 대한 통역 지원을 위해 '12년부터 난민전문 통역인 풀(Pool)을 구축하여 난민전문통역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부터 난민통역의 전문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기관의 교육 및 평가를 통과하여 최종 인증받은 사람을 위촉하는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함)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2022. 1월 제1회 인증제를 통과한 30개 언어 160명의 통역인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한 바 있고, 이후 매년 시행하여 2023년 25개 언어 148명, 2024년 25개 언어 106명을 위촉하였으며, 2024년 제4회 인증제를

시행하여 2025년도에 위촉할 29개 언어 147명을 선발하였다.

또한, 통·번역대학원 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협업하여 201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난민(전문)통역인 통역능력평가를 2024년 1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난민(전문)통역인에게 난민통역 윤리, 난민통역실습 등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난민(전문)통역인의 역량강화 및 통역의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그림 19 2024년 난민전문통역인 위촉식 개최(2024. 1. 29.)



난민전문통역인 위촉식(윤리선서식)



난민전문통역인 위촉식 참가자 기념촬영

제6항 난민신청자 등의 처우 지원 지속

난민정책과 사무관 박정원

「난민법」 제18조(난민의 인정 등)는 기본적으로 난민인정 등에 대한 결정을 6개월 내에 마치도록 하고 있으며, 심사기간 동안 난민인정 신청자가 생계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법 제40조(생계비 등 지원)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개월 범위 내에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국적국의 박해로부터 긴급히 피난해오는 난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취업허가 등 경제적인 활동이 가능할 때까지 난민신청자의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2024년 한 해 난민신청자에게 지급된 생계비는 총 5억 7천만 원으로, 가구당 1회 생계비 지원 금액의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3 2024년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기준 금액

구분	(단위 : 원)				
	1인	2인	3인	4인	5인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비(非) 입주자	583,400	978,000	1,258,400	1,536,300	1,807,300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입주자	291,700	489,000	629,200	768,150	903,650

2024년 한 해 전체 난민신청자 18,336명 중 521명이 생계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며, 심사를 거쳐 283명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였다.

제7항 재정착난민 개선

난민정책과 사무관 박정원

2015년 최초 도입 이후 2023년 외국인정책위원회 기본계획에 따라 정규 사업으로 전환된 재정착난민 제도는 「난민법」 제24조(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에 따라 해외 난민캠프 등에 임시 거주하고 있는 난민 중 우리나라로의 재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착 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국내에 정착시키는 제도이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태국 내 임시 체류하고 있는 미얀마 난민 86명,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말레이시아 도시 난민 116명 등 총 250명의 재정착난민을 선발하여 재정착시켰다.

2024. 6월 재정착난민 지역사회 정착 및 처우 개선 관련 현안 공유 등을 위해 정부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재정착실무협의체를 개최하고, 「재정착난민 멘토링 가이드북」, 「재정착난민 수용업무 매뉴얼」 등 업무자료집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국정기조(마약범죄 강력 대응)와 재정착난민 사업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4. 12월 기초 건강검진 항목에 마약검사를 최초로 추가하여 시행하는 등 재정착난민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재정착난민 대상자를 추천하는 유엔난민기구(UNHCR)측이 말레이시아 거주 난민 선발의 어려움으로 출발지 국가 변경을 요청해 옴에 따라 2024년 출발지 국가를

태국으로 변경하는 등 국제기구와 원활한 소통을 통한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하였다.

표 14 재정착난민 수용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2	2023	2024
인원 (가구수)	22(4)	34(7)	30(5)	26(8)	37(15)	17(5)*	67(24)	12(6)	7(3)
사업수행국	태국	태국	태국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 2019년 수용 결정되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2020년 입국

제8항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

난민정책과 사무관 박정원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난민법」 제45조(난민지원시설의 운영) 규정에 따라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의 주거·교육·의료 등 기초생계를 지원하는 시설로, 2024년 신규 입소자는 총 48명이다.

지원센터는 수준별 한국어 및 한국 사회적응 교육 등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2024년에는 한국사회 초기 정착지원을 위해 재정착난민 대상 기초 법·질서, 필수 생활정보(교통, 의료, 교육 등) 등의 맞춤형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최초 실시하여 한국문화 이해도 제고를 통해 국내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제9항 글로벌 난민문제를 위한 국제교류·협력 강화

난민정책과 사무관 박정원

2024. 4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난민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국제기구인 유엔난민기구(UNHCR) 라우프 마조우(Raouf Mazou) 최고대표보와의 면담을 통해 양측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2024. 7월 UN 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석하여 위원 질의 사항에 충실히 답변하는 등 그간의 난민인정 절차 개선 노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도출하였다. 또한, 2024. 10월 제75차 UNHCR 집행이사회에 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는 등 국제사회의 난민보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림 20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보 면담(2024. 4. 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보 면담

제10항 난민에 대한 이해 증진

난민정책과 사무관 박정원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 차별의식을 완화하고, 난민 인권 보호를 위해 정책 고객별로 난민에 대한 이해를 증진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24. 7월 지자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재정착난민 정착지원 협업방안을 마련하였고, 인천광역시 소재 교육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4. 8월 난민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난민정책 홍보를 통한 난민 인식개선 및 유관기관 협력 등을 위해 '난민소식지 (RPM)'를 분기별로 총 4회 발간·배포하였다.

제11항 향후 추진계획

2025년에는 화상면접 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고, 국제기구·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와 협업하여 난민심사·통역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소수언어 등 난민전문통역인 인력풀 확충을 위해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계속 시행하는 등 난민심사 인프라를 강화하여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더욱 보호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사회 안정적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난민인정자 대상 사회통합교육을 활성화하고, 청소년기 난민인정자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등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치우 지원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안보나 공공질서에 위협을 초래하는 사람에 대해 난민인정을 제한하거나, 취소·철회할 수 있는 「난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제7절

공정하고 전문적인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

제1항 추진배경

2020. 2. 25.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된 난민심의과는 그간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에 대한 업무실적이 행정안전부 신설기구 평가지표를 충족하여 2024. 9월 정규 직제화되었다.

세계 각지에서의 전쟁 및 쿠데타 발발, 불안한 사회·경제 상황 등으로 2024년 난민신청 건수는 18,336건,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5,153건에 달하여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으로 회귀하였으며, 난민신청자의 출신국도 약 140개국으로 다양화되었다.

2024년 난민심의과는 난민위원회 총 5회, 난민분과위원회 총 48회(대면 분과위원회 2회 포함)를 개최하여 약 3,000건의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였고, 이의신청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난민 이의신청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해 나아가자 다각도로 노력하였다.

표 15 난민위원회 조직도(분과위원회별)



표 16 난민 이의신청 및 심사결정 현황

(매년 12. 31. 기준, 단위 :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이의신청	3,723	3,110	4,067	5,954	4,718	3,748	5,249	5,153
심사결정	4,415	2,584	3,431	3,792	4,997	3,080	3,143	3,002

※ 기준 시점에 따라 소송 결과 반영 등으로 수치 일부가 변동될 수 있음

제2항 난민 이의신청 심의 전문성 강화

난민심의과 사무관 배차준

지속적으로 변화·고도화되고 있는 국제적 난민심사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의 범주별 개념, 국내·외 사례 분석, 실무 적용 방식 등을 다룬 난민지위심사 안내서를 발간하였다. 발간에 앞서 국제기구(UNHCR 한국대표부), 국제법 교수 및 다문화 관련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를 초청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후 1차 심사기관 난민전담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안내서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다.

또한 난민심사 관련 특이사례 공유, 국내·외 판례분석 등 난민신청 사례에 대한 이론적·실무적 심층분석을 위한 워크숍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해외 연수·출장 등을 통해 습득한 선진국의 난민심사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난민조사관의 전문성 향상에 힘썼다.

제3항 난민 이의신청인의 절차적 권리보장 강화

난민심의회 사무관 박병건

2021. 7월 난민 이의신청서 서식을 개정한 이래 이의신청인의 의견진술 기회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2024년도에는 ▲의견진술 청취 대상자 선정 기준 구체화, ▲대상자 선정회의 및 대면 분과위원회 정례 개최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함으로써 이의신청인의 절차적 권리보장을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기존에 6개 언어로 배포해왔던 「난민 이의신청 절차 안내서」를 16개 특수언어(카자흐어, 힌디어, 튀르키예어, 미얀마어, 말레이어, 몽골어 등)로 추가 발간·배포하여 난민신청자가 난민 이의신청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의신청인이 직접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진행 경과를 상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이의신청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제4항 국가정황정보 수집·관리 체계 고도화

난민심의회 사무관 박병건

국제정세 불안 및 난민신청 사유 다변화로 인해 국가정황정보(County of Origin Information, COI)*의 중요성은 날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가정황정보 수집·분석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정황정보 조사 전문인력을 기존 5명에서 9명으로 대폭 충원하고, 「국가정황정보 조사팀 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행함으로써 업무의 통일성을 제고하는 등 국가정황정보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 난민신청자 출신국의 인권, 사회환경, 정치 상황 및 법체계, 주요 사건 등에 관한 정보로, 난민심사 결정시 활용하는 중요한 판단 근거 자료

국가정황정보 지식 및 조사기법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여 1차 심사기관 난민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신력 있는 외국기관 등에서 발간한 국가정황정보 보고서를 번역·감수하는 「해외 국가정황정보 번역사업」

추진, 주제별 국가정황보고서 발간 등 교육·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국가 간 난민 문제 공동 대응 필요성 증가에 부응하여 호주, 일본, 오스트리아 등 해외 국가정황정보 전담 기관과의 업무협의를 진행하여 난민인정 심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제5항 유엔난민기구(UNHCR)와 조사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 운영

난민심의과 사무관 박병건

2022년부터 국제적 수준에 걸맞은 심의 체계를 구축하여 이의신청 심의의 전문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와 정례적으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다. 2024년에는 난민면접 기법, 난민 요건 해당 여부 분석 기법 등 보다 심화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난민조사관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아울러, 2024년에는 국가정황정보 조사관을 대상으로 동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였고, 유엔난민기구 본부 소속 국가정황정보 전문가도 참석(온라인)하여 상호 소통·교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국가정황정보 조사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참여자들의 의견수렴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측과 공유함으로써 프로그램 내실화를 도모하기도 하였다.

제6항 향후 추진계획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와 공동으로 발간(2023. 7월)한 「이민·난민용어사전」 개정판 발간을 추진하여 이민·난민 정책 용어 표준화·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난민 이의신청 심의 제도 개선을 위해 국제기구 및 학계 등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간 국가정황정보 공동 조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그룹 회의 및 MOU 체결 등을 추진하여 향후 역내 난민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향후에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후 예산 확보를 마친 국가정황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로써, 국가정황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여 난민심사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주요 선진국 국가정황정보 DB와 연계·활용함으로써 아시아 단일 난민법 제정 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난민 이의신청인의 권리보장 강화 및 심의 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사실조사 및 의견진술 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난민지위심사 안내서를 비롯한 각종 연구자료 등을 지속 발간하고,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와 공동으로 난민조사관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정례화하여 난민 이의신청 심사의 전문성도 함께 높여 나갈 것이다.

제8절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출입국·이민정책 설계 및 추진

제1항 2024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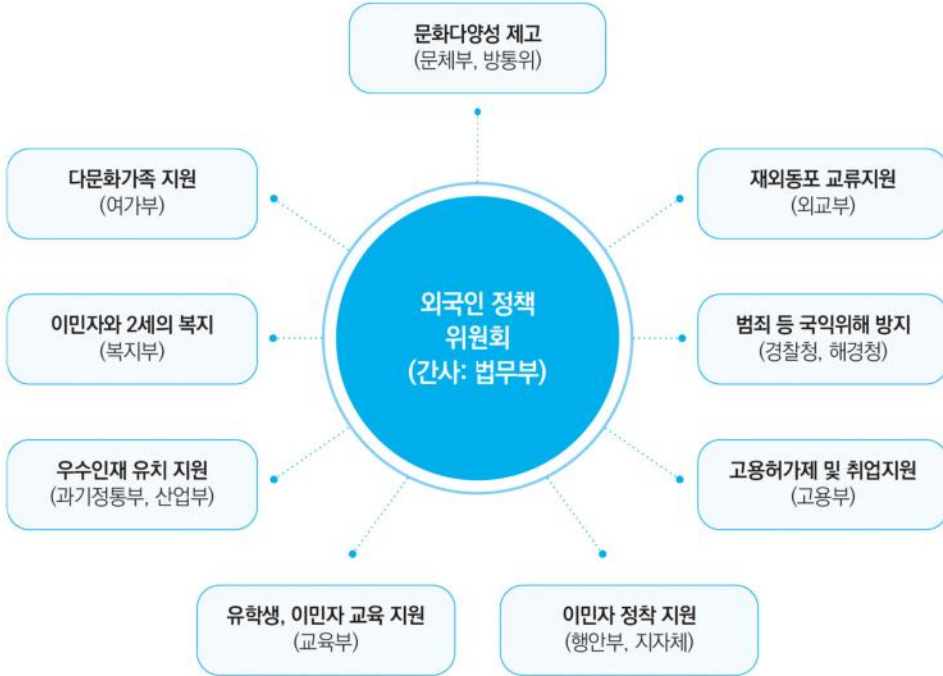
외국인정책과 사무관 전강섭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외국인정책¹⁾은 그 특성상 관련 분야가 많고 정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므로, 소관 부처별 개별적인 정책추진보다는 국가차원에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미리 설정하고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년)」의 연도별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2024. 5. 10. 제28차 외국인정책 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조정을 거쳐 「2024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1) 국경 및 출입국관리, 국적부여 정책과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민정책(Immigration Policy)를 의미하며,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외국인정책'이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구성원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용상 한계가 있고,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 인구구조 변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의 미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이민정책'으로 정책 명칭을 전환함

그림 21 외국인정책위원회



2 주요 내용

「2024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은 5년 단위의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3 ~ ’27년)」에 따른 5개 정책목표(경제, 안전, 통합, 인권, 협력/인프라)를 중심으로 21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자체가 협업으로 수립한 총 1,438개의 외국인정책 관련 과제(소요예산 약 6,857억여 원)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노동시장 수급 전망과 외국인력 유입의 영향 등을 고려한 과학적 총량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취업비자 분야별 발급 규모 사전공표제 시범운영
- 구인난이 심한 산업에 안정적인 인력 지원을 위한 숙련기능인력(E-7-4) 공급 확대

-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를 통한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교육의 질 관리 강화, 지자체 주도 대학지원체계(RISE) 내 지역맞춤형 해외인재 유치전략 마련
- 인구감소지역에 거주·취업하는 지역 우수인재와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체류 혜택을 부여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정규사업 실시
- K-컬처 융합형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해외 관광객 유치 및 크루즈 상품개발, 외국적 크루즈선 유치, 크루즈 체험단 운영 등 크루즈 관광 활성화

나.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 불법체류 외국인 상시 단속체계 가동 및 특별 자진출국제도 운영, 서민 일자리 잠식·국민안전 위협 분야 집중단속 실시 등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 외국인 밀집지역 중점관리, 외국인 고용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제도, 건설현장 불법체류 감축 지원 등 다부처 협력을 통한 체류관리 체계 구축
-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입 자격요건(최소 거주기간 6개월 추가) 강화
- 단체 관광객 신청 편의를 위한 전용 시스템 구축, 여권 판독 기능 개선, 공용어 중심의 다국어 확대 등 전가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 제고

다.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 이민자 사회통합지표를 활용하여 사회통합지수 측정(3년 주기) 및 정책컨설팅 실시
- 조선업종 등 지역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방문형'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확대 실시
- 전국 가족센터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초기 적응과 안정적 가족생활, 자립 지원 등 정착 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지원

- 재외동포 자격 단계적 통합 추진, 동포 취업활동 범위 확대 및 동포체류지원센터 활성화

라. 이민자의 인권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에 대한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점검,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및 상담소 확대, 인신매매 식별지표 활용 등 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 보호외국인 이동권과 소통권 등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개방형 보호시설 운영 확대
- 난민 심사 절차 개선 및 난민 이의신청인 의견진술 청취 확대 등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 제고, 출입국향 난민 전담공무원 역량 강화
-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에 관한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위한 국회 논의 지원

마.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 국가 백년대계 수립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 안정적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해 관계부처(법무부, 농식품부, 해수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 중앙·지방협력 실무분과위원회 운영, 지역 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통한 중앙부처·지자체·민간 협력 강화
- 실물 신분증의 신뢰성·보안성·정보 취약성 등 보완, 외국인의 디지털 불평등 해소 및 정보 전달 강화를 위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시스템 구축
- ICAO, UNHCR, IOM 등 이민 관련 다자 국제회의 및 지역 안보 워크숍 참여로 국제협력을 통한 대응 체제 구축, 해외 이민정책 담당자 교류 확대

표 17 과제 및 예산규모 현황

(단위 : 개, 백만 원)

정책목표	2024년		합 계		중앙부처		지자체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합계	1,438	685,709	167	374,764	1,271	310,946		
1. 개방	222	249,808	56	195,622	166	54,186		
2. 통합	52	12,239	31	10,022	21	2,217		
3. 안전	981	356,961	37	141,267	944	215,694		
4. 인권	124	52,886	20	17,712	104	35,175		
5. 협력/인프라	59	13,815	23	10,141	36	3,674		

제2항 중앙-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 개최

외국인정책과 사무관 전강섭

1 추진배경

국내 체류외국인 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외국인을 직접 마주하는 지자체(기초 포함) 공무원들은 출입국·고용·이민 등 외국인정책에 대한 지식 및 이해도 부족으로 관련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 위기의 대안으로 외국인정책이 부상하고 있으나 지자체 공무원들의 외국인정책 추진 역량은 부족한 실정이다.

2 추진경과

'14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방향에 대한 광역지자체 담당자들의 의견수렴 목적으로 최초 실시하였고, '22년부터는 기초지자체까지 참석범위를 확대*하고, 교육 횟수를 늘렸으며(연 1회에서 연 5회), '23년부터는 행정안전부와 협업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의 참석률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한 바, '24년 총 6회 개최하며 609명의 지자체공무원 등이 교육에 참가하였다.

* '20년 7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전라남도 도지사가 “기초지자체 공무원 대상 권역별 외국인정책 교육 확대 실시”를 국무총리님께 구두로 건의,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에서 전국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확대 실시

3 주요내용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는 연도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재한외국인 처우 개선을 위한 상호 협조 의무가 있어 지자체 공무원들의 정책 업무 역량 강화 및 지역 특색에 맞는 외국인·이민정책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중앙부처(법무부, 행안부 등) 외국인정책 주요 추진과제 및 지자체 우수 외국인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참석자들 간 논의내용(과제)들은 외국인정책실 무위원회 안건 등으로 상정하여 중앙부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림 22 중앙지자체 외국인정책 워크숍



'24년 제2회 중앙지자체 외국인정책 워크숍



'24년 제4회 중앙지자체 외국인정책 워크숍

제3항 2024년 정책발표회 개최

외국인정책과 서기관 이한식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24. 11. 15. 출입국·외국인 정책 환경변화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출입국관리 직원들의 창의적인 정책 제안 발굴 창구를 마련하고, 현장·실무 중심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수렴을 통해 현안 과제 대응에 활용하고, 미래지향적인 외국인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직원이 참여하는 제27회 정책발표회를 개최하였다. 2007년 이래 매년 출입국·외국인행정 실무와 관련된 정책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출입국·외국인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민원인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2024년 정책발표회에는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총 59개 과제가 제출되었으며, 내부 심사를 거쳐 10개 과제가 본선에 진출하였다. 2024. 11. 15. 개최된 제27회 정책발표회 본선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챗봇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이민행정 혁신 방안’이 최우수상을, ‘난민인정자의 국적국 여권 사용 규제’와 ‘생체정보 확인 기술을 활용한 출입국심사 혁신 방안’이 우수상을, ‘난민(신청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재입국 허가제도 활용’과 ‘체류 외국인 취업·영리활동 관리 강화 방안’ 및 ‘외국인 범죄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방안’이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정책발표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본부 현안 또는 중점 추진사항 중 지정과제에 대한 발표과제 선정 방식’을 추가하여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현장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창의적 해법을 모색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3 제27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책발표회(2024. 11. 15.)



제4항 2024년 이민정책포럼 개최

외국인정책과 서기관 이한식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원들의 이민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2007. 8. 29.부터 수요정책포럼이 시작되었다. 2016. 3. 24. 이민정책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주제 및 발표방식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였고, 2017. 9월부터 외부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수렴을 위하여 제도를 확대 운영하였으며, 2018년부터 e-나라 도움 화상회의를 활용하여 일선 기관 직원들이 포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하반기부터는 기존 대면 방식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나, 강의 집중도 저하 및 직원의 자발적 참여가 부족하여 2022. 5월부터는 운영방식을 다시 대면으로 전환하고 수요자 중심 운영방식으로 개선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포럼 운영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현안 주제에 대한 집중토론 방식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주요내용 및 평가

2024년 이민정책포럼은 총 8회 개최되었다. IOM 등 해외 전문가와 국제기구 파견 경험 내부직원, 대학교수, 현안 관련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채민석, 한국은행 고용분석팀), 지역 이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권채리, 동아대학교 교수), 이주 글로벌 콤팩트의 이해(이재호, IOM 한국대표부 정책 담당관), 난민과 이민자의 경계선(차용호,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 등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학자, 연구원, 정책담당자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외국인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질의·응답 및 토론을 하였다.

이민정책포럼은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이민정책 환경과 세계적 이민정책 동향을 듣고 서로의 생각 등을 공유함으로써 정책추진 역량 및 이해도를 향상시켰고,

외국인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및 대안을 모색하는 등 정책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림 24 2024년도 이민정책포럼



제9절

국제협력 강화

출입국기획과 사무관 이주호

2024년은 우리나라가 출입국·이민정책 분야에서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장하고, 국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 중요한 시기였다.

다양한 국제회의와 고위급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해외 이민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국경관리 및 불법 이주, 인신매매 등 초국가적 범죄와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新 출입국 이민정책 등 우리 정부의 우수 정책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향후 해외 우수 인재와 노동력 유치에 대한 전략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IOM 사무총장, UNHCR 최고대표보 등과의 면담을 통해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글로벌 이민환경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다.

제1항 국내외 주요 인사 면담 및 교류 협력 강화

인구 고령화, 인적 이동 확대, 불법 이민 증가 등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각국 및 국제기구 등 이해관계자들 간의 전략적 대화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각국·지역의 이민 당국 및 국제기구와 상호 교류를 확대하면서 제휴·협력을 강화하였다.

2024. 2월 법무차관이 에이미 포프(AMY POPE) 국제이주기구(IOM) 신임 사무총장을 만나 데이터에 기반한 이주 정책과 이민자에 대한 통합지원의 중요성 등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고, 2024. 4월에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라우프

마조우(RAOUF MAZOU)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보를 만나 두 기관의 향후 협력 강화 방안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베트남, 캄보디아 등 해외 주요 인력 송출국과의 대화·협력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치열해지고 있는 해외인력 도입 경쟁에서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2024. 4월 캄보디아 이민청의 초청으로 2023. 12월 한국에서 개최된 제1차 한·캄보디아 출입국관리 고위급 회의의 후속 회의가 캄보디아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양국은 인적 교류 활성화에 대비한 긴밀한 협력관계 필요성에 대해 상호 공감대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하였다.

또한 2024. 5월에는 9년 만에 베트남과 출입국관리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여 양국 이민당국 간 이민·이주·국경관리 정책 현안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한편, 국가 간 인구이동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협력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이 외에도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감소부 장관, 필리핀 이주노동자부 차관, 태국 하원 외교위원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당면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교류 협력을 강화하였다.

그림 25 국내외 주요 인사 면담 및 교류 협력 강화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감소부 장관 회담



IOM 사무총장 회담



필리핀 이주노동자부 차관 회담



태국 하원 외교위원장 회담



한-캄보디아 출입국관리 고위급 회의



한-베트남 출입국관리 고위급 회의

제2항 국제이민협력을 위한 다자간 국제회의 참여

제14차 국제이주개발포럼(GFMD), 제3차 아세안+한·중·일 이민청장회의, 제4차 도쿄 출입국 포럼, 제19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TRIP 심포지엄, APEC 산하 기업인 이동 실무그룹(BMG) 회의 등 다양한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세계적·지역적 이주 동향에 대해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을 참석 국가 및 국제기구에 홍보하고 정책 방향과 성과를 공유하였다.

특히, 8월 베트남에서 개최된 제3차 아세안+한·중·일 이민청장 회의 계기 일본, 중국, 태국과 양자 회의를 별도로 진행하여 출입국 절차 부분 이슈와 이민정책을 논의하는 대화 창구로 활용하였다.

‘기후 변화가 인간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국제이주개발포럼에서는 주요 국가들과 노마드 비자 도입 사례 공유 등 인재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2024. 11월 제115차 국제이주기구(IOM) 총회에는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이 참여(녹화 영상 송출)하여, 2024. 9월 발표된 ‘신 출입국 이민정책’ 등 공정하고 합법적인 이민 경로 마련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과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림 26 국제회의 참석



제3차 APT 이민청장 회의



APEC 산하 기업인 이동 실무그룹(BMG) 회의



제19차 ICAO TRIP 심포지엄



제4차 도쿄 출입국 포럼(TIF)

표 18 2024년 국제회의 참여 현황

연번	기간	국가	회의세미나 내용	참석자
1	1. 23. ~ 1. 25.	스위스	• 제14차 국제이주개발포럼(GFMD) 총회	외국인정책과 박지원 사무관
2	2. 29. ~ 3. 1.	페루	• APEC 산하 기업인 이동 실무그룹(BMG) 회의	출입국심사과 오유미 주무관 등 2명
3	6. 19. ~ 6. 21.	프랑스	• OECD 이주작업반(WPM) 정례회의	외국인정책과 박지원 사무관 등 2명
4	8. 14. ~ 8. 17.	베트남	• 제3차 APT(ASEAN+한·일·중) 이민청장·영사국장 회의(DGICM+3)	반재열 국적·통합정책단장 등 3명
5	8. 13. ~ 8. 15.	페루	• APEC 산하 기업인 이동 실무그룹(BMG) 회의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이미선 주무관 등 2명
6	9. 9. ~ 9. 11.	중국	• 이민 관리 협력 포럼	출입국심사과 김영오 사무관 등 2명
7	10. 14. ~ 10. 18.	스위스	• 제75차 UNHCR 집행이사회(EXCOM)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미라 사무관 등 2명
8	10. 9. ~ 10. 11.	프랑스	• OECD 이주전문가그룹(SOPEMI) 연례회의	이민조사과 곽준석 주무관 등 2명
9	11. 13. ~ 11. 15.	캐나다	• 제19차 ICAO TRIP 심포지엄	이민정보과 엄기복 사무관 등 5명
10	12. 9. ~ 12. 11.	일본	• 제4차 도쿄 출입국 포럼(TIF)	이민조사과 유성오 이민조사과장 등 4명

표 19 2024년 외국기관의 주요 인사 방문 현황

연번	기간	국가/기구	방문목적	예방자
1	1. 19.	몽골	•양국 인적교류 확대에 따른 출입국 이민당국 간 협력 방안 논의	우간바야르 네르구이 몽골이민청장
2	2. 21.	태국	•출입국·이주 노동 분야 협력 논의	루즈 탐몽콜 태국 영사국장
3	2. 29.	국제이주기구 (IOM)	•범무부-IOM 간 국제이주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상호 역할 등 논의	에이미 포프 IOM 사무총장
4	3. 27.	말레이시아	•불법체류 발생 방지를 위한 양국 간 공조 방안 논의	나자루딘 빈 자파르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대리(공사)
5	4. 4.	스페인	•양국 간 불법 이민 대응 및 난민관련 정책 상호 공유	안셀모 페스타나 파드론 스페인 중앙정부 카나리아 대표
6	4. 5.	유엔난민기구 (UNHCR)	•한-UNHCR 교류 협력 방안 논의	라우프 마조우 UNHCR 최고대표보
7	5. 2.	우간다	•보호 외국인 관련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 논의	토파스 카화 주한우간다 대사(일본 상주)
8	5. 8.	우즈 베키스탄	•출입국 및 이주 노동 분야 협력 논의	무사예프 베흐조드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감소부 장관
9	5. 21.	베트남	•출입국·이민 정책 분야 협력 논의	팜 당 코아 베트남 출입국관리국장
10	7. 12.	태국	•출입국·이민 정책 분야 협력 논의	타니 생랏 주한태국 대사
11	10. 2.	카자흐스탄	•출입국·이민 정책 분야 협력 논의	아슬란 아탈리코브 카자흐스탄 내무부 이민서비스위원회 위원장
12	10. 21.	일본	•출입국·이민 정책 분야 협력 논의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
13	11. 21.	태국	•출입국·이민 정책 분야 협력 논의	사랏사누 우노폰 태국 하원 외교위원장
14	11. 28.	필리핀	•계절근로자 등 출입국·이주 노동 분야 협력 논의	펠리시타스 큐 베이 필리핀 이주노동자부 차관

제10절

디지털플랫폼 구축을 통한 원스톱 이민행정 서비스 제공

제1항 전자칩(IC) 내장 외국인등록증 발급 추진

이민정보과 사무관 서제선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개인식별번호(PIN*)를 전자적으로 저장하기 위해 실물 외국인등록증에 전자칩(IC)을 내장하고 관련 법령 개정, 외국인등록증 디자인 및 발급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였다.

*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 사용자 식별을 위해 사용하는 통상 4자리 숫자

그림 27 전자칩(IC)내장 견본 이미지



전자칩 내장 외국인등록증

(일반) 외국인등록증

2 평가 및 발전방향

전자칩(IC) 내장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모바일 신분증 앱을 이용하여 실물 신분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으므로 모바일 신분증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체류 외국인의 디지털 차별 방지와 보다 편리한 생활 환경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제2항 출입국 사실증명 등 사실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이민정보과 사무관 서제선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국가유공자 등 유족 일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주민등록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면제되나 출입국·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 수수료는 면제되지 않아 수수료 면제에 대한 동일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였다.

2024. 12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출입국 관련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 주요 추진내용

관련 법령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이 부 또는 모인 경우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까지 사실증명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등도 수수료 면제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출입국 관련 사실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와 주민등록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수수료 납부의 형평성을 구현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외국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이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제3항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 지침」(법무부훈령) 개정

이민정보과 사무관 서제선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발급 가능한 증명서 종류를 반영하고, 회수·반납된 외국인등록증 폐기 시기와 관련하여 현행 문제점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였다.

2 주요 추진내용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외국인체류확인서를 기존에 발급하던 출입국·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증명서 종류에 추가하였다..

또한, 등록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출국하는 경우 반납된 외국인등록증의 보관 및 관리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보관기간(7일 → 필요한 조치 완료 후)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법령 개정사항과 실무상 애로사항을 업무처리 지침에 반영하여 업무처리 통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개정 필요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제4항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시스템 구축

이민정보과 사무관 서제선

1 추진배경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하고, 개인정보의 보호가 점차 강화되는데다, 실물 신분증 (외국인등록증)의 신뢰성 및 보안성 문제 등 한계에 따른 모바일 신분증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대국민 서비스 혁신, 과학적 국정운영, 민관 협력 생태계 조성 등 목적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모바일 국가신분증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2 주요 추진내용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법」을 개정(23. 12월 시행)하여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시스템 구축' 사업을 2024년도에 완료하여, 2025. 1. 10. 부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시작하였다.

그림 28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견본 이미지



기본 화면(민감정보 미표출)

상세 화면(민감정보 표출)

* 기본화면에서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화면을 터치하게 되면 민감정보를 표출한 상세화면으로 전환

3 평가 및 발전방향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정책 대상에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외국인을 포함함으로써, 외국인의 디지털 생활환경 불평등을 해소하고, 생활 밀접 정보의 전달을 강화하여 외국인의 소외를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뢰성 있는 디지털 신원증명체계를 수립, 신원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고, 능동적인 전자민원 서비스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 등 이민행정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반의 공공서비스 혁신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아갈 예정이다.

제5항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 사업

이민정보과 사무관 엄기복

2024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구역 확장으로 여객수용능력이 기존 대비 1.5배 이상 증대함에 따라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대 총 24대의 신규 증설이 필요했다. 이에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의 심사 속도를 개선하고 운영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동출입국심사대 신규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림 29 2024년도 자동출입국심사대(6세대) 설치



출국장 17대 설치(9. 30. ~ 10. 8.)



입국장 7대 설치(10. 11. ~ 10. 14.)

1 주요 추진내용

가. 자동출입국심사대 심사속도 개선

금번 도입된 총 24대의 자동출입국심사대에는 메인보드 성능 개선을 통해 다중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고, 심사대 제어PC의 OS를 최신 버전으로 변경하여 백그라운드 작업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등 심사속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반영되었다. 또한 자동출입국심사대 알고리즘 업그레이드를 통해 데이터 처리 속도 및 실시간 객체탐지 정확성을 제고하였다. 이러한 노력 끝에 1인당 평균 심사속도를 기존보다 약 1초가량 단축시킬 수 있었다.

그림 30 2024년도 자동출입국심사대(6세대) 성능 개선

개선사항	세부내용
메인보드 및 플래시 메모리 성능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메인보드 대비, MCU와 Flash Memory의 사양을 높여 다중처리 속도를 개선하고 향후 데이터 처리 확장성 확보 • 별도의 전원 On/Off 스위치를 적용하여 메인보드 탈부착 시 전기적 충격 방지
제어PC OS 버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사의 윈도우10 서비스 지원 종료(2025. 10. 14. 예정)에 따라 제어PC OS를 윈도우11로 변경 • 시스템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백그라운드 작업의 처리 속도 개선
다중감지 알고리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감지 알고리즘 버전 업그레이드: V1.14 → 2.01 • 데이터 처리 속도 및 객체탐지 정확성 개선

나. 자동심사대 운영 안정성 제고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 운영 서버를 이중화함으로써 기존 서버의 운영이 중단되어도 예비 서버로의 운영 전환이 즉시 가능해져 심사시스템의 24시간 무중단 운영 안정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방화벽 및 네트워크 장비를 이중화하여 각종 장애 및 비상상황 발생의 경우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 성능 개선과 인프라 이중화를 통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객들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한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첨단 자동화·정보화기술이 반영된 자동출입국심사대의 도입을 통해 내·외국인 여행객들의 이용 편의성 증대와 심사대 운영 안정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제11절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추진 및 데이터분석을 통한 과학적 외국인정책 수립 지원

제1항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사무관 송병희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국민과 달리, 외국인의 인적정보는 관리 체계가 통일되지 않아 부처마다 다르게 표기하여 조세 체납자 출국 정지 누락, 범법 외국인 동일인 확인 어려움 등 행정 비효율이 빈번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이 입국 시 사용한 여권상 영문 성명* 등으로 범정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표준화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 국제연합(UN)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여권상 표기된 영문 성명 등을 국제표준으로 제정

제21대 국회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2023. 4. 17. ~ 5. 30.)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3. 8. 22.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제22대 국회에서도 법무부는 정부안의 내용을 반영한 의원 발의안에 대해 적극적인 입법 지원 노력을 하여 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4. 12. 20. 공포되어, 2025. 6. 21.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그림 31 기관별 인적사항 표기 불일치 사례

2 추진 내용과 성과

개정안은 ▲ 기본인적정보의 정의(제2조의17), ▲ 정보 제공 및 사용 권고(제78조의2), ▲ 정보시스템 운영의 근거(제78조의3) 마련을 골자로 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입국 시에 행사한 여권상의 영문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사진, 여권번호를 비롯한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로 정의하였다.

행정기관 등에서 해당 법령에 따라 외국인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하여 법무부에 기본인적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기본인적정보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법무부의 정보시스템과 각 행정기관 등의 시스템을 연계하여 행정기관 등에서 표준화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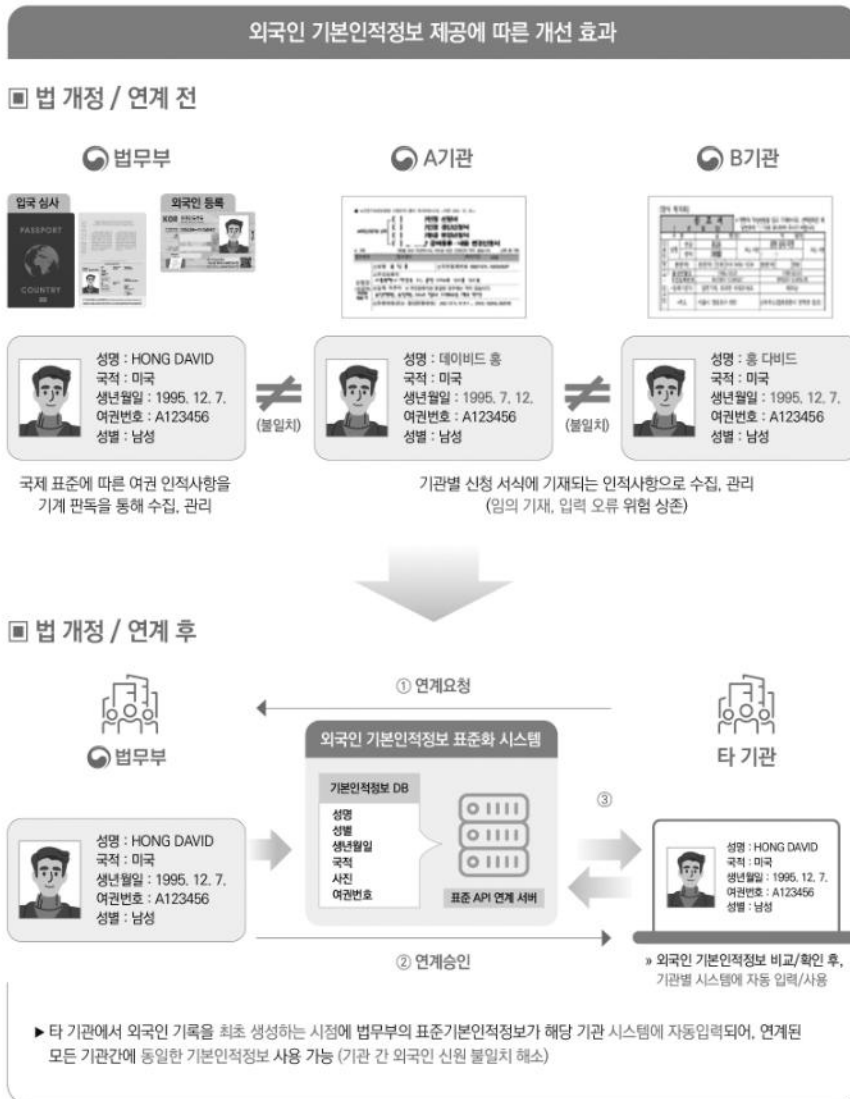
3 평가 및 발전방향

기존에는 각 기관별로 자체 서식을 통해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수집·관리하여 임의기재 또는 입력오류의 위험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정보시스템이 연계된 행정기관 등에서 외국인 기록을 최초 생성하는 시점에 법무부 기본인적정보가 해당 기관 시스템에 자동 입력되도록 하여, 연계된 모든 기관 간에 동일한 기본인적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추후, 신설된 제78조의2(정보 제공 및 사용권고) 및 제78조의3(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운영을 위한 세부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 법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여,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신청 서식, 정보시스템의 운영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규정된 표준화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및 사용의 확대를 위해서 외국인정책 관련 기관 및 형사사법기관 등과 정보시스템의 실질적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림 32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제공에 따른 개선 효과



제2항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플랫폼」 운영 개시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사무관 김창규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데이터기반 과학적인 외국인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 보유자료, 관계기관 간 공유데이터 등 외국인 관련 내·외부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자유롭게 분석·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였다.

2023. 11월 구축 완료된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플랫폼」을 2024. 1월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범 개시·운영하여 현안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분석의뢰를 받아 처리하였다.

이후, 지자체의 각종 통계 및 데이터 분석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2024. 10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총 26개 기초지자체) 소속 지자체 중 플랫폼 이용을 희망한 20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플랫폼 접근 권한을 부여하였다. 권한을 부여받은 지자체 담당자는 해당 지자체의 행정동 단위의 국적별, 체류자격별, 연령별(1세 단위) 외국인 시각화 자료 등을 열람하고, 필요한 자료 등을 직접 의뢰할 수 있게 되었다.

2024년 한 해 동안 내부 187건, 지자체를 포함한 외부기관 82건 총 269건의 분석 의뢰를 처리하였으며, 그중 체류 관련 134건, 출입국심사 관련 53건, 조사·사범·보호 관련 41건, 기타 41건이었다.

타 기관, 내부 직원들의 분석의뢰뿐만 아니라, 빅데이터팀에서 자체적으로 본 플랫폼에 적재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태국 국가신분증 번호를 활용한 불법체류자 분석', '외국인 차량 보유현황 분석' 등 과제를 10건을 발굴·선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33 '24년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분석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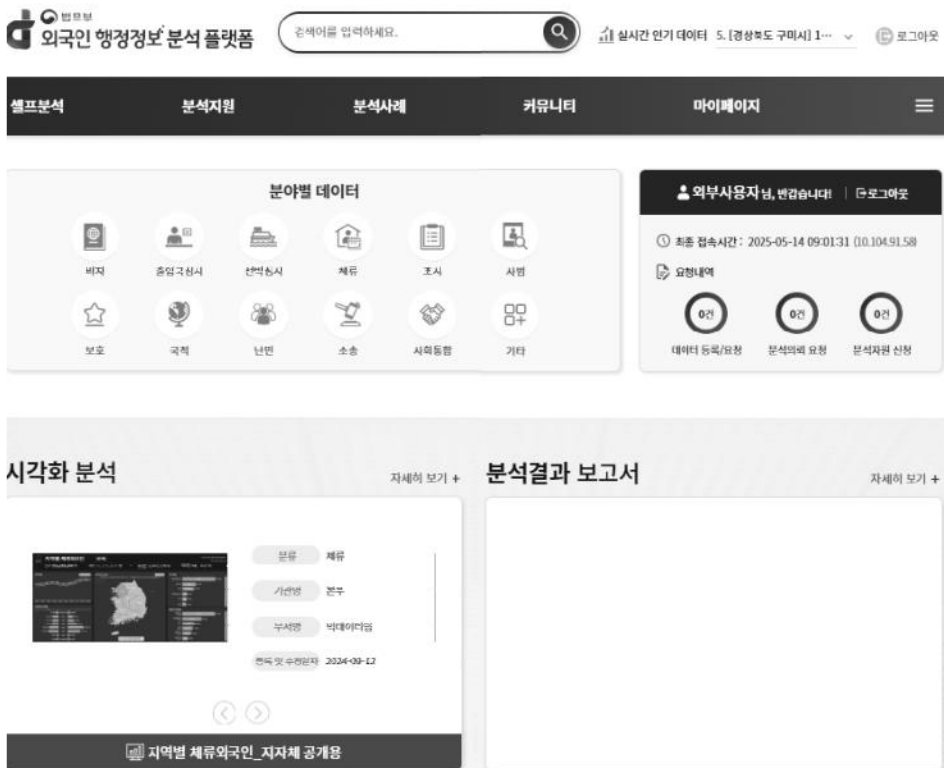
합계	체류	출입국심사	조사·사범·보호	난민	국적	기타
269	134	53	41	13	4	24

2 평가 및 발전방향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플랫폼」 구축으로 분산된 외국인 행정자료를 통합·분석하여 정책에 활용하는 것이 더욱 용이해졌으며, 더욱 정교하고 세밀한 데이터 기반 이민행정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플랫폼을 추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 지자체, 광역지자체(17개) 등에 확대 개방함으로써,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지자체의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고, 안정적 운영을 점검한 후, 최종적으로는 외국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 전체에 개방하여 중앙-지방 간 이민정책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림 34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플랫폼」 주요 내용



제3항 이민행정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자료 일반 공개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사무관 김창규

법무부 출입국·이민정책 데이터를 국민과 공공기관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5종*의 데이터 자료를 하이코리아 누리집(www.hikorea.go.kr) '정보광장' 내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메뉴를 통하여 2024. 3. 11.부터 공개하였다.

* ① 전세계 인구·이민자 현황, ② 국내 지역별 인구·외국인 현황, ③ 국내 지역별 거주 외국인 현황, ④ 국내 지역별 외국인정책 추진 현황, 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시각화 자료

해당 자료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국제연합(UN) 등에서 발표하는 관련 통계와 주요 정책추진 현황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도와 그래프로 시각화한 것이다. 이용자는 연도별, 국가별, 지역별 등 다양한 검색 조건을 조합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의 지역별 분포와 변화 및 관련된 출입국 이민정책 추진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중 국내 지역별 거주 외국인 현황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자료는 시각화하여 매월 14일경 업데이트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림 35 하이코리아 누리집에 공개된 이민행정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화면



전 세계 인구·이민자 현황

국내 지역별 거주 외국인 현황

앞으로도,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현황,' '외국인 고용 현황' 등 이민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모델을 추가 개발하여, 관련 부처, 지자체 및 국민과 함께 공유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이민 행정, 외국인 관련 데이터의 접근성 및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4항 지자체 맞춤형 외국인정책 수립 지원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사무관 김창규

지역의 구체성을 반영한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책 부서와 지자체의 외국인행정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2022년부터 지자체와 맞춤형 외국인 빅데이터 분석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결혼이민자 가족을 지원하였다.

법무부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기간 동안 각 지자체의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동포 유학생 결혼이민자 거주 현황, 지역별 외국인 고용 현황 및 산업별 현황 등을 분석·시각화하여 제공하였다. 지난 3년간, 총 45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외국인 동포·유학생·결혼이민자 거주 현황 및 지역별 외국인 고용·산업별 현황 등을 분석·시각화하여 제공하였다.

표 20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분석 요청·처리 실적

연도	분석 대상 지자체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라남도,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전남 강진군·영암군·장흥군·해남군, 충남 논산시·예산군·보령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경북 영주시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경북 영주시, 영천시, 의성군, 고령군, 성주군, 안동시, 충북 제천시
20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라남도 영암군, 영광군, 경기도 가평군, 연천군
총계	45개 지자체

2024. 9. 13.에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소속 지자체 외국인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관련 통계 및 데이터의 조회, 분석 시각화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 플랫폼 이용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많은 호응을 얻었다.

향후에도 지자체가 요청하는 외국인행정 데이터 분석자료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관심이 있을 법한 분석 주제를 발굴하여 정책 부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선제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제5항 외국인행정 빅데이터 분석 교육훈련 과정 운영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사무관 송병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기관 직원들이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플랫폼」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추출·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4. 2. 15.부터 2. 16.까지 2일간 법무연수원에서 「외국인행정 빅데이터 분석·활용 실무 과정」을 운영하였다.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소속 직원 총 5명이 직접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플랫폼의 분석·시각화 도구를 활용하여, ‘파이썬을 이용한 데이터셋 만들기’ 등의 실습 과정을 진행하였다. 총 20명의 직원이 참여하였으며, 직접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여 분석을 진행하는 등 관심과 열의를 보였다.

2024. 8. 5.부터 5일 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 의뢰하여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외국인 행정 빅데이터 분석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였다. 교육과정에 총 15명의 직원이 참여하였고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외국인정책 추진에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표 21 2024년 외국인행정 빅데이터분석 교육훈련 과정 프로그램

일자	교육주제	교육내용
1일차	빅데이터 분석 개론 데이터 활용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데이터 개요 • 빅데이터 분석 계획, 수집 및 저장
2일차	빅데이터 분석 이해 및 Tableau 활용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데이터 분석 이해 • Tableau 활용 방법 이해 및 실습
3일차	데이터 분석도구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 소개와 활용 사례 소개 • R 및 R Studio 설치 및 활용 실습
4일차	빅데이터 분석 및 가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데이터 가시화 실습 • 빅데이터 분석 실습 • 빅데이터 활용법 실습
5일차	외국인행정 빅데이터 분석 및 가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정보 빅데이터 전처리 실습 • 외국인정보 빅데이터 변환 및 검색처리 실습 • 외국인정보 빅데이터 통계 분석 및 가시화 실습

제12절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제1항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고도화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사무관 김명훈

1 추진배경

초고령사회 진입(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 생산연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외국인력 활용이 중요한 대안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국민 일자리 침해·불법체류 등 부작용에 대한 사회 일각의 우려도 상존하게 되었다.

법무부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현장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위하여 비자종류별(숙련수준별) 인력 부족 규모와 외국인 유입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취업비자 발급규모를 산정 및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도입하였다.

* 취업비자 총량제 도입을 위한 해외사례 및 계량분석 연구(2023, 서울대 산학협력단 주관)

2024년에는 추가 정책 연구를 통해 기존 분석 모델을 고도화하고, 농업과 제조업 등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체류 및 범죄 등 이민 유입의 사회적 비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등, 제도의 정식 운영 기반 구축에 초점을 맞추었다.

표 22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 흐름



2 주요내용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외국인력 유입이 국민 고용과 임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농업 분야 실태조사를 통해 농업 분야 계절근로자(E-8) 수요, 상용·임시·일용근로자 부족 수준,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여 제도 개선 및 계절근로(E-8) 비자 발급규모 산정에 반영하였으며, 제조업 분야 실태조사를 통해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고용 시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하였다. 또한 각 산업별·비자종류별 인력부족 수준을 각 권역별(수도권, 광역시, 기타)로 구분·산출하여 지역별로 예상되는 상이한 노동부족 패턴을 이민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분야별 노동부족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체계를 시범적으로 고안하였다.

법무부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각 부처에 공유하고, 2025년 비자 발급규모, 전문·기능인력 도입 필요 분야, 외국인력 도입 조정 필요 분야 등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다. 이어 각 산업 주무 부처와의 논의, 비자별 협의체 논의 결과, 2024년 비자 발급 현황, 전문가 자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5년 주요 취업비자별 발급규모를 산정하였다.

우선, 전문·기능인력 비자(교수(E-1)~특정활동(E-7))의 경우 그간 도입이 허용된 분야는 별도로 도입규모를 제한하지 않되, 신규 도입 대상 분야(2024년 시범 도입 분야 포함) 및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비자에는 기존과 같이 상한을 설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비전문인력 비자의 경우에는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등의 인력부족 규모 분석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관련 관계부처 위원회 또는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반영한 상한을 설정·운영하기로 하였다.

표 23 2025년 주요 취업비자별 발급규모

구분	업종	2024년 발급량 (비자 발급 상한)	2025년 비자 발급 상한	비고	
기 민 인 력	판금·도장 정비원 (E-7-3)	자동차 종합수리업	해당 없음	추후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자 제한제”를 통해 비자 발급규모, 발급 요건 등 확정 예정 • 2024년 시범 도입 3개 분야* 비자 발급규모 상한은 동일 수준 (300 ~ 400명) 유지 * 요양보호사(E-7-2), 항공기(부품)제조원(E-7-3) 송전전기원(E-7-3)
	건설기계제조 용접·도장원 (E-7-3)	건설기계 제조업			
	자동차부품제조 성형·용접· 금형원(E-7-3)	자동차 부품 제조업			
	도축원 (기능직군 한정) (E-7-3)	도축업			
숙련기능인력 (E-7-4)	제조업, 건설업 등	13,474 (35,000)	35,000 (2024년과 동일)	• 제조업 인력 부족 규모, 전환 시뮬레이션 결과, 최근 제도 개선사항 및 관계부처 의견 고려	
비 전 민 인 력	계절근로(E-8)	농·어업	56,802 (67,778)	74,689 ¹⁾	•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 결정 (2024. 11. 26.)
	고용허가제(E-9)	제조업, 건설업 등	81,470 (165,000)	130,000	• 제45차 “외국인력 정책위원회” 결정·공고(2024. 12. 27.)
	선원(E-10)	어업 등	21,644 ²⁾ (23,300)	23,300 (2024년과 동일)	• 총 체류인원 한도 내 발급 (2024년과 동일)

1) 2025년 계절근로(E-8) 비자 발급규모는 상반기 배정 인원 기준

2) 21,644명은 현재 기준 총 체류 인원을 의미하며, 비자 발급 건수를 의미하지 않음

법무부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정식 운영함으로써 기업·근로자 등 정책 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향후계획

법무부는 2025년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본격 운영과 더불어 현장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범부처 데이터에 대한 통합 분석 및 불법체류·범죄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비자 정책 체계를 갖추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통해 매년 과학적 분석을 거쳐 외국인력 도입 대상 분야 및 규모를 설정함으로써, 외국인력 도입이 국민 고용을 침해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않고 중장기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 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 나갈 것이다.

그림 36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관련 서울대학교 - 이민정책연구원 학술포럼



서울대학교 - 이민정책연구원 학술포럼(2024. 9. 27.)

제2항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 확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사무관 이재인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22. 10월부터 실시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이어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정식사업 시행 이후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의 참여도 및 호응도가 높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사업 시행 초기부터 있었던 대상지역 확대 요구를 반영하고, 지역특화형 비자의 전환요건 및 체류관리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의 대상지역 확대가 인구감소지역의 외국인 유치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였다.

2 주요내용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기초지자체에서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총 107개 기초지자체로 대상지역을 확대하였으며,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를 신설함으로써 비전문취업(E-9) 외국인도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에 포함되도록 설계하여 E-9 → E-7-4R → F-2-R 전환 경로를 마련하였다.

3 향후계획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지자체별 인원 배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통하여 지자체별 수요인원 신청의 적절성, 인구감소 위험도, 기존 지역특화형 비자의 성과 등을 반영하여 인원을 배정하고, 2025년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표 24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 현황

(단위 : 명)

구분	배정	추천	허가
지역특화 우수인재	3,291	1,734	1,332
지역특화 외국국적동포	-	235	124

표 25 지역별 지역특화형 비자 등록외국인 현황

(단위 : 명)

구분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F-2-R	2,762	186	63	97	53	290	371	640	228	559	275
F-4-R	230	10	4	1	0	48	57	14	36	59	1

제3항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사무관 이재인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현재 저출생 기조 장기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해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고, 지역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가 대두됨에 따라 인력난과 인프라 부족 등 지역 간 불균형을 겪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정주인구 및 활동인구 확보,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한 지역기반 이민정책의 도입 및 확대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외국인이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 조성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2024. 8. 13.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부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기반 이민정책 도입의 필요성 및 지역의 상황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이민정책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2024. 9. 26.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 과제로 광역형 비자를 반영함으로써 광역형 비자의 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2024. 12.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비자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위한 광역지자체 공모를 시작함으로써 국가 이민정책과 지역사회 발전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첫걸음을 시작하였다.

2 주요내용

법무부가 광역형 비자의 요건을 마련하면, 광역형 비자 사업에 공모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 및 인력수요, 외국인 주민 사회통합 계획 등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한다. 법무부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광역형 비자 심의 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여 광역형 비자 시행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광역형 비자 사업 시행이 확정된 지자체는 지역에 유치 및 정착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선발하여 추천하고, 법무부는 지자체의 추천서 및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요건 등을 확인하여 비자를 발급한다.

법무부는 광역형 비자 등 지역기반 이민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유입 증가와 더불어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외국인 비중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지역사회 내부의 갈등 등도 세심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광역형 비자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연도별 평가를 실시하여 각 지자체가 실시한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 인원 충원율, 불법체류율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3 향후계획

2025. 4월 광역형 비자 대상 지자체 선정 및 사업 시행 여부 등을 결정하고 2026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범사업 운영과 동시에 2027년 광역형 비자 정식사업을 위한 준비를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광역형 비자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외국인과 지역 주민 간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됨과 동시에 지역사회가 외국인을 포용하며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림 37 지역기반 이민정책 활성화 관련 간담회



광역지자체 부단체장 간담회(2024. 8. 13.)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설명회(2024. 12. 13.)



3

CHAPTER

법령·예규 정비

제1절 법령

제2절 훈령·예규 정비

제1절

법령

제1항 법률

1 출입국관리법

가. 추진배경

- 외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정보를 기관 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기·관리하여 행정업무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외국인 인적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제공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추진경과

- 2024. 5. 29. 제21대 국회, 정부안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 2024. 7. 11. 제22대 국회, 의원안^(유상범) 발의
- 2024. 11. 27. 국회 의결
- 2024. 12. 20. 법률 제20578호로 공포

다. 주요내용

- 외국인이 입국 시 행사한 여권상의 '영문 성명, 생년월일, 국적' 등을 비롯하여 외국인등록번호(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로 규정하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외국인의 기본인적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제2항 대통령령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입국신고서 정보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입국심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의 일자리 침해 우려가 없고, 인력난을 겪는 산업 분야 일부에 대해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의 취업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 보완

나. 추진경과

- 2024. 4. 9. 대통령령 제34393호로 공포

다. 주요내용

- 외국인이 입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입국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설치·운영(시행령 제15조의2)
-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이 임업용 종묘 생산업 등의 업체에 임업 단순 종사원으로 취업하거나 택배서비스사업이나 항공기하역업을 하는 업체에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함(시행령 별표1의2)

2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업무범위를 민원 안내·상담뿐만 아니라 민원에 관한 통역·번역 지원까지 확대하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742호, 2023. 10. 24. 공포)

나. 추진경과

- 2024. 4. 9. 대통령령 제34393호로 공포

다. 주요내용

-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

3 난민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의 면담이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심사관의 면접을 원격영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난민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했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난민 관련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 난민조사관, 난민심사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의 요건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보완할 필요

나. 추진경과

- 2024. 12. 3. 대통령령 제35023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난민심사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면담(면접) 방식으로 출입국항 회부결정 면담 또는 난민인정 심사 면접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 난민조사관 및 난민심사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의 요건을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4급 ~ 7급)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 ~ 라급)으로서 난민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마친 사람으로 규정

- 난민면접 시 출석요구서를 발급하도록 명시하고, 면접 또는 사실조사를 위해 발급한 출석요구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송달

제3항 총리령 및 법무부령

I. 제정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전자비자센터를 온라인체류·사증민원센터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종전에는 입국신고서 서식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하는 경우와 그 외의 지역에 입국하는 경우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일원화하여 입국신고 편의를 증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외국인등록증 및 영주증의 발급 수수료에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 내장에 따른 비용을 반영하고, 산업현장의 구직난을 해소하기 위해 구직(D-10) 및 계절근로(E-8) 자격의 국내 체류기간 상한을 각각 1년 및 8개월로 연장하며, 우수한 외국인 인재가 기존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부수적으로 벤처투자 및 기술창업을 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 및 기술창업(D-8) 자격에 대한 체류자격 외 활동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추진경과

- 2024. 10. 29. 법무부령 제1083호로 공포
- 2024. 12. 24. 법무부령 제1086호로 공포

다. 주요내용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전자비자센터”를 “온라인체류·사증

- 민원센터”로 변경(시행규칙 제78조)
- 전자입국신고 제도 도입에 따라 입력자의 편의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입국신고서 서식 개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외국인등록증 및 영주증에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을 내장함에 따라 발급 수수료를 종전 3만원에서 3만 5천원으로 변경(시행규칙 제72조)
 - 구직(D-10) 및 계절근로(E-8) 자격의 국내 체류기간 상한을 종전 각각 6개월, 5개월에서 1년, 8개월로 연장(시행규칙 별표1)
 - 벤처투자 및 기술창업(D-8) 자격에 대한 체류자격 외 활동을 허용(시행규칙 별표5)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수수료에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 내장에 따른 비용을 반영하고, 국내거소신고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해 재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추진경과

- 2024. 12. 24. 법무부령 제1087호로 공포

다. 주요내용

- 국내거소신고증에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을 내장함에 따라 발급 수수료를 종전 3만원에서 3만 5천원으로 변경(시행규칙 제12조)
- 국내거소신고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재발급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시행규칙 제12조)

3 난민법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난민조사관의 요건을 대통령령에 상향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난민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023호, 2024. 12. 3.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난민인정신청서의 안내사항에 난민신청자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 개선·보완할 필요

나. 추진경과

- 2024. 12. 3. 법무부령 제1084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난민인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난민인정신청서(재신청자용)(별지 제2호서식), 난민인정신청 접수증(별지 제3호서식)에 난민신청자에게 대한민국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 추가
- 난민심사 면접 또는 사실조사를 위해 난민신청자 등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별지 제4호서식)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송달하고, 그 내용을 출석요구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
- 난민인정신청서의 영문 용어 개선 및 오역 정정

4 국적법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복수국적자가 「병역법」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지 못해 「국적법」상 특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고,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적이탈

허가신청인 및 그의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출입국 사실에 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 2024. 4. 29. 법무부령 제1076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국적이탈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 일체를 시행규칙에 명시
 - 시행령 및 '별표'를 확인하지 않고도 신청인이 제출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제출서류를 직접 규정
- 정보 확인에 동의하면 출입국 사실에 관한 자료 제출 불요
- 국적이탈 허가신청서 서식 간소화(별지 제8호의2서식)

제2절

훈령·예규 정비

제1항 훈령

번호	일자	제목	주요골자	비고
1478	8. 1.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 인권보호관 지정 세부 기준 및 인권침해신고 세부절차등을 규정하고, 물품 소지 제외 기준 구체화 등을 통해 보호외국인 처우 및 인권 보호 강화 방안 마련	이민 조사과
1541	10. 31.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	• 「귀화 민간면접관의 '직무윤리 서약서' 제출 의무화 • 타 훈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서식 정비	국적과
1549	11. 25.	법무부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 규정	• 이민정책 현안 자문기구인 이민정책위원회에 연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자문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존 규정의 미비점 보완	외국인 정책과
1553	12. 2.	투자이민협의회 규정	•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 민간위원 위촉기한 조항 삭제 및 협의회 개최 통보 조항 개정	체류 관리과
1554	12. 9.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위탁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하위 훈령에 위탁 근거 및 세부 운영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	체류 관리과
1555	12. 9.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 보호(일시)해제된 난민신청자의 지원센터 이용기간 연장허가 조건 규정 명확화	난민 정책과

제2항 예규

번호	일자	제목	주요골자	비고
1335	1. 15.	국적업무처리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관계가 단절된 사람도 장애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면접심사 면제대상에 추가 • 국적선택신고 반려 시 반려통지서 서식 마련 • 국적이탈허가 심사결과 등의 통지절차 마련 • 국적취소 당사자의 절차적 권익보장을 위한 소명의 기회 부여의 구체적 절차 마련 	국적과
1338	2. 26.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관리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기반 평가(CBT, Computer Based Test)시행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평가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평가 배점 및 난이도를 조정하는 등 현행 평가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이민 통합과
1344	7. 20.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동포청 국장을 정부위원으로 지정 • 민간위원 위촉 대상 분야를 확대하여 명시 	국적과

제3항 주요지시

일자	제목	주요골자	수신처	비고
1. 3.	「2024년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출입국심사 지원 방안 알림	• 「2024년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참석자에 대한 출입국편의 제공 지시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출입국 심사과
1. 5.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지침 개정 알림	• 부정하게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자에 대한 제재 기준 마련, 교육 및 평가 일정 등을 반영한 지침 개정 알림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이민 통합과
1. 8.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개정·시행 알림	•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정의 및 허용인원 조정, 재입국 추천제도 정비 등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재외공관	체류 관리과
1. 9.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본계획 알림 및 관서별 자체 행사계획 수립 지시	• 제17회 세계인의 날(2024. 5.20.) 기본계획 시달 및 관서별 자체 행사 계획 보고 지시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이민 통합과
2. 4.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출입국심사 지원 방안 알림	• 「2024년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참석자에 대한 출입국편의 제공 지시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출입국 심사과
2. 14.	2024년도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 지침 개정 알림	• 교육 참여대상에 외국인 근로자, 재정착난민 추가, 강사·멘토 배정기준 개선 등을 반영한 지침 개정 알림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이민 통합과
2. 16.	「국적증서 수여식 운영 지침」 제정 알림	• 구체적이고 통일된 업무 기준을 통해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제도 체계화·활성화	기	국적과
2. 26.	한러가정 자녀의 국적회복 등 지원방안 알림	• 명확한 체류·사범심사 기준 마련, 국적회복신청 시 신속 심사	기	국적과
2. 27.	규제자 사증심사 철저 지시	• 입국규제 중인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사례 전파 및 사증발급 심사 철저 지시	전 재외공관	체류 관리과
3. 8.	마약 예방교육(시민교육) 실시 지시	•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시민교육으로 마약예방교육 실시 지시	출입국·외국인기관	이민 통합과
3. 11.	한-에티오피아 외교관, 관용·공무여권 사증면제협정 발효 알림	• 에티오피아 외교관, 관용·공무여권 사증면제협정 발효에 따라 입국심사 시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부여 등 적의 조치 지시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출입국 심사과
3. 11.	「한-사우디아라비아 외교관, 특별·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발효 알림	• 사우디아라비아 외교관, 특별·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발효에 따라 입국심사 시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부여 등 적의 조치 지시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출입국 심사과
3. 20.	사회통합이민자 멘토단과 함께하는 이민자 다문화 인식개선 홍보영상 배포 및 활용 지시	• 기초법·질서 지키기 캠페인 및 마약예방 홍보 영상 배포 및 활용 지시	출입국·외국인기관	이민 통합과
3. 22.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보호 관련 특별교육 실시 지시	• 단속 중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단속규정 및 인권보호 관련 특별 직업교육 실시 지시	출입국·외국인기관	이민 조사과

일자	제목	주요골자	수신처	비고
4. 5.	조선업종 외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E-7, E-9) 대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기초 ~ 중급) 운영 ※ 기관 : 부산, 수원, 대전, 울산, 창원, 전주, 청주 	출입국·외국인기관	이민통합과
4. 9.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시행 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외 기어 가능성에 대한 입증 요구 강화, 추천서 제출 등 유의사항 고지, 국적회복 신청자 사전 동의항목 신설 등 	기, 관계부처	국적과
4. 24.	「결혼이민(F-6)사증 및 체류관리 통합지침」 중 한국어 능력 입증자료 추가 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추가(한국어능력시험(TOPIK) IBT 1급이상 증명서) 	외교부,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이민통합과
5. 22.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출입국심사 지원 방안 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자에 대한 출입국편의 제공 지시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출입국심사과
7. 5.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안내 및 협조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노동부-서울특별시 주관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세부사항 안내 및 협조 필요사항 전파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재외공관	체류관리과
7. 10.	화성 화재사고 유가족에 대한 체류허가 등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성 화재사고 유가족의 장례 및 보상 절차 진행을 위한 체류허가 지시사항 전파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재외공관	체류관리과
7. 15.	국적이탈허가 신속 심사제 시행 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상 불이익이 임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속한 심사를 위한 별도 절차 마련 	기, 재외동포 서비스지원센터장	국적과
7. 26.	전자민원 적체 해소를 위한 집중 심사기간 운영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민원 적체 해소를 위해 민원종류에 따라 신속심사팀과 일반 심사팀으로 구분 운영하고, 처리기간 목표 설정 및 일일 업무처리량 관리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재외공관	체류관리과
7. 22.	교정시설 출소 외국인의 의료처우 정보 관련 업무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용시설 출소 보호외국인 중 질병이 있는 자에 대해 질환명, 의료정보 및 의약품을 연계하도록 교정기관과 협의 	출입국·외국인기관	이민조사과
9. 13.	자동출입국심사대 및 국민심사대 이용 독려를 위한 홍보 강화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영주자격 소지자에 대한 국민심사대 이용 홍보 지시 	출입국·외국인기관	이민통합과
9. 25.	결혼이민자 등의 국민 입국심사대 및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이민자 및 동반가족 등이 국민 입국심사대 및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못하는 경우가 있어 소속기관에 관련 홍보 강화 지시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출입국심사과

일자	제목	주요골자	수신처	비고
9. 26.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구술능력 강화반 운영 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기본 또는 심화 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구술능력 강화반」 시범 운영 	출입국·외국인기관	이민 통합과
11. 15.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 및 선정 심사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기간이 '24. 12. 31. 만료됨에 따라 운영기관 신규 지정 지시 ※ 신규 지정기간 : '25. 1. 1. ~ '27. 12. 31. 	출입국·외국인기관	이민 통합과
11. 27.	「결혼이민(F-6) 사증 및 체류관리 통합지침」 개정 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구 인원수별 소득요건 기준금액 변경 등 결혼이민 사증 발급요건 개정 알림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이민 통합과
11. 27.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개정·시행 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형 인력 활용 범위 확대, 최소임금보장기준 합리적 조정, 결혼이민자 초청방식 개선, 계절근로 체류자격 통합 등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재외공관	체류 관리과
12. 5.	사회통합프로그램 대학연계과정 활성화 방안 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이 학부 정규과정(교양과목 등)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시, 과정에 참여한 유학생에게 사회통합 프로그램 동일단계 이수를 인정 (100시간 → 80시간 변경) 	출입국·외국인기관	이민 통합과
12. 30.	보호시설 관리·운영 체계 강화방안 시행 관련 업무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본부-소속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기관장 점검리스트 마련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이민 조사과



4
CHAPTER

주요 통계

제1절 출입국자 현황

제2절 체류외국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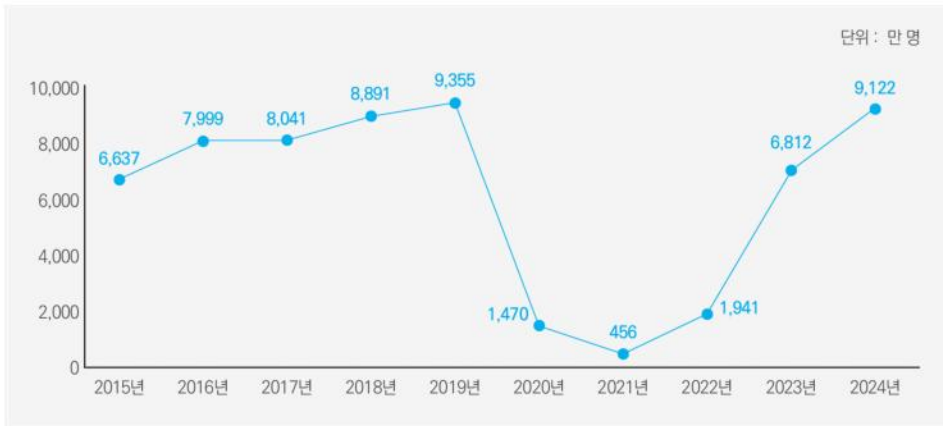
제3절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처리현황

제4절 국적 및 난민 업무 처리현황

제1절

출입국자 현황

1 출입국자 증가 추이



1960년 출입국자 현황

(단위 : 명)

총계	입국		출국			
	소계	국민	외국인	소계	국민	외국인
33,984	18,402	9,727	8,675	15,582	7,856	7,726

2024년 출입국자 총괄

(단위 : 명)

구분	출입국자	입국자	출국자
총계	91,222,927	45,815,006	45,407,921
소계	57,567,576	28,846,803	28,720,773
국민	53,958,806	26,965,473	26,993,333
승무원	3,608,770	1,881,330	1,727,440

구분		출입국자	입국자	출국자
외국인	소 계	33,655,351	16,968,203	16,687,148
	승 객	31,534,245	15,826,656	15,707,589
	승무원	2,121,106	1,141,547	979,5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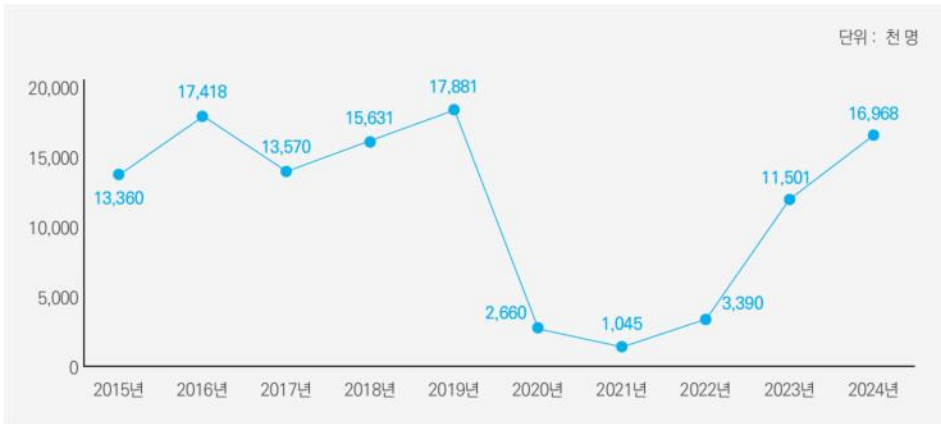
■ 최근 10년간 출입국자 추이

(단위 : 명)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국 민	19,580,398	22,659,640	26,765,503	28,945,447	28,905,763	4,301,903	1,234,697	6,580,145	22,756,008	28,720,773
	외국인	13,901,391	17,255,769	13,393,163	15,418,228	17,872,201	2,870,505	1,082,631	3,135,053	11,197,461
	소계	33,481,789	39,915,409	40,158,666	44,363,675	46,777,964	7,172,408	2,317,328	9,715,198	33,953,469
국 민	19,531,418	22,654,258	26,679,527	28,914,223	28,889,626	4,869,578	1,197,820	6,309,021	22,667,305	28,846,803
	외국인	13,359,701	17,418,307	13,569,509	15,630,522	17,880,503	2,659,845	1,044,545	3,390,009	11,500,883
	소계	32,891,119	40,072,565	40,249,036	44,544,745	46,770,129	7,529,423	2,242,365	9,699,030	34,168,188
출입국자총계	66,372,908	79,987,974	80,407,702	88,908,420	93,548,093	14,701,831	4,559,693	19,414,228	68,121,657	91,222,927

2 외국인 입국 현황

■ 외국인 입국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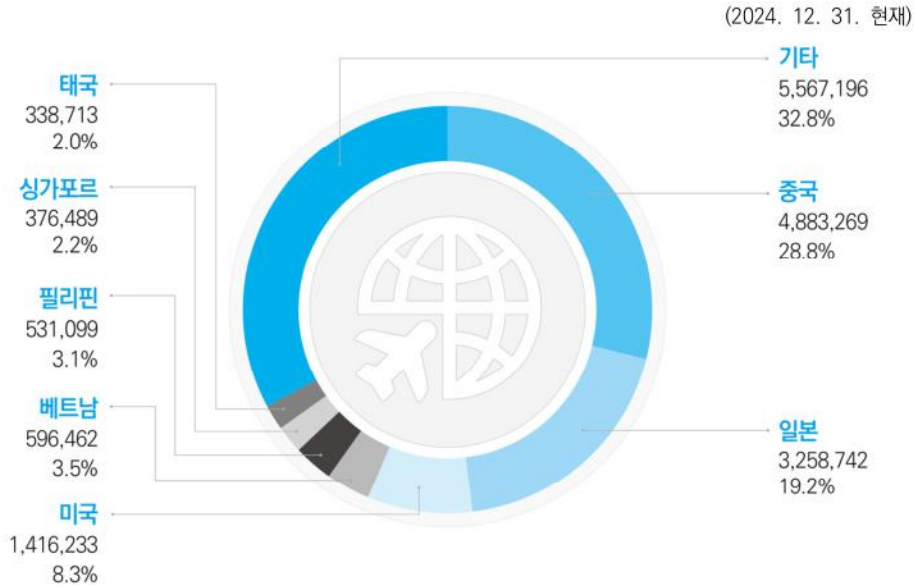


■ 외국인 입국자

(단위 : 명)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인원	13,359,701	17,418,307	13,569,509	15,630,522	17,880,503	2,659,845	1,044,545	3,390,009	11,500,883	16,968,203

■ 주요 국가 국민 입국 현황



※ 전년대비 입국자 : 중국 120.7% 증가, 미국 20.8% 증가, 필리핀 49.2% 증가, 일본 38.9% 증가

■ 외국인입국자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계	2,659,845	1,044,545	3,390,009	11,500,883	16,968,203
미 국	265,134	251,203	610,103	1,172,266	1,416,233
중 국 ²⁾	740,039	187,908	206,883	2,212,966	4,883,269
한국계	132,191	65,929	43,993	255,562	292,433
필 리 핀	120,171	117,316	206,529	356,046	531,099
미 안 마	43,637	57,023	66,301	57,212	76,957
인 도 네 시 아	67,301	46,998	108,178	252,473	339,037
러 시 아(연방)	75,117	35,235	63,810	165,217	204,581
인 도	34,299	31,633	66,018	124,736	179,119
캐 나 다	35,437	30,201	94,589	205,369	258,571
베 트 남	112,938	25,359	239,269	504,347	596,462
독 일	24,543	20,381	66,002	134,506	159,263
일 본	438,708	18,025	309,460	2,345,679	3,258,742
프 랑 스	19,891	16,195	63,984	135,850	167,430

2) 한국계 포함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우즈베키스탄	17,570	16,177	42,314	60,170	67,259
우 크 라 이 나	11,834	14,540	13,779	16,435	22,921
네 델 란 드	12,636	13,542	25,958	49,736	55,572
카 자 흐 스 탄	11,100	9,504	33,932	51,693	59,351
태 국	78,878	9,351	185,409	391,285	338,713
영 국	21,124	9,337	46,414	124,415	150,966
싱 가 포 르	18,136	7,625	165,713	348,736	376,489
몽 골	22,535	6,511	67,146	141,638	150,201
캄 보 디 아	12,447	5,908	28,164	45,631	52,872
타 이 완	171,943	5,779	77,707	978,311	1,496,000
터 키	6,734	5,505	18,490	32,548	47,068
말 레 이 시 아	48,741	4,596	70,988	261,103	302,409
기 타	248,952	98,693	512,869	1,332,515	1,777,619

■ 외국인입국자 체류자격별 현황

(단위 : 명)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년대비
총계	2,659,845	1,044,545	3,390,009	11,500,883	16,968,203	47.5%
사 증 면 제(B-1)	222,306	19,938	663,699	1,689,221	1,936,862	14.7%
관 광 통 과(B-2)	939,748	115,029	945,123	5,121,560	7,546,051	47.3%
단 기 방 문(C-3)	503,028	89,288	439,865	1,919,908	3,340,109	74.0%
단 기 취 업(C-4)	12,750	18,193	21,451	25,009	29,202	16.8%
유 학(D-2)	89,414	53,366	111,101	247,596	348,096	40.6%
일 반 연 수(D-4)	29,048	26,718	41,094	66,384	87,033	31.1%
상 사 주 재(D-7)	2,045	1,044	2,539	5,145	5,847	13.6%
기 업 투 자(D-8)	9,252	4,574	13,009	28,760	36,010	25.2%
무 역 경 영(D-9)	3,169	2,562	3,418	5,792	6,920	19.5%
교 수(E-1)	2,061	964	2,460	4,114	4,544	10.5%
회 화 지 도(E-2)	11,326	5,376	11,868	20,998	21,031	0.2%
연 구(E-3)	2,569	1,618	4,346	6,945	7,282	4.9%
기 술 지 도(E-4)	444	233	461	830	896	8.0%
전 문 직 업(E-5)	578	76	358	578	592	2.4%
예 술 흥 행(E-6)	1,790	1,934	3,816	7,807	9,169	17.4%
특 정 활 동(E-7)	12,398	5,827	20,099	49,101	68,829	40.2%
계 절 근 로(E-8)	-	565	9,051	30,401	56,895	87.1%
비전문취업(E-9)	41,992	16,732	135,167	168,755	178,173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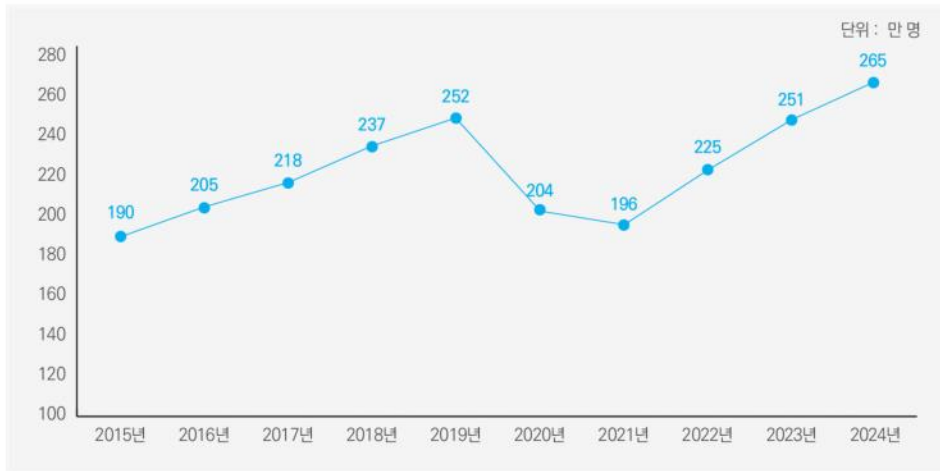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년대비
선 원 취 업(E-10)	6,325	4,895	9,329	11,344	10,556	-6.9%
방 문 동 거(F-1)	32,329	11,306	46,485	84,677	93,663	10.6%
거 주(F-2)	13,330	3,637	12,238	45,436	66,941	47.3%
동 반(F-3)	13,651	9,254	21,388	34,935	41,731	19.5%
재 외 동 포(F-4)	112,752	64,246	123,610	389,703	495,456	27.1%
영 주(F-5)	34,140	11,644	24,322	136,492	189,786	39.0%
결 혼 이 민(F-6)	46,119	15,504	66,847	151,521	180,903	19.4%
방 문 취 업(H-2)	58,992	53,799	29,480	77,479	94,491	22.0%
기 타	458,289	506,223	627,385	1,170,392	2,111,135	80.4%

제2절

체류외국인 현황

1 체류외국인 총괄 현황

■ 체류외국인 증감 추이



■ 체류외국인 총괄 현황

(2024. 12. 31. 현재, 단위: 명, %)

구분	총계	등록	거소신고	단기체류
2023년	2,507,584	1,348,626	533,295	625,663
2024년	2,650,783	1,488,353	553,664	608,766
전년대비 증감률	5.7%	10.4%	3.8%	-2.7%
구성비	100%	56.1%	20.9%	23.0%

■ 불법 체류외국인 총괄 현황

(2024. 12. 31. 현재, 단위 : 명, %)

구분		총계	등록	단기체류	거소신고
2023년	전 체	423,675	137,954	283,687	2,034
	15 ~ 59세	405,461	134,349	269,907	1,205
2024년	전 체	397,522	134,580	260,818	2,124
	15 ~ 59세	378,510	130,620	246,584	1,306
전년대비 증감률(전체)		-6.2%	-2.4%	-8.1%	4.4%

※ 거소신고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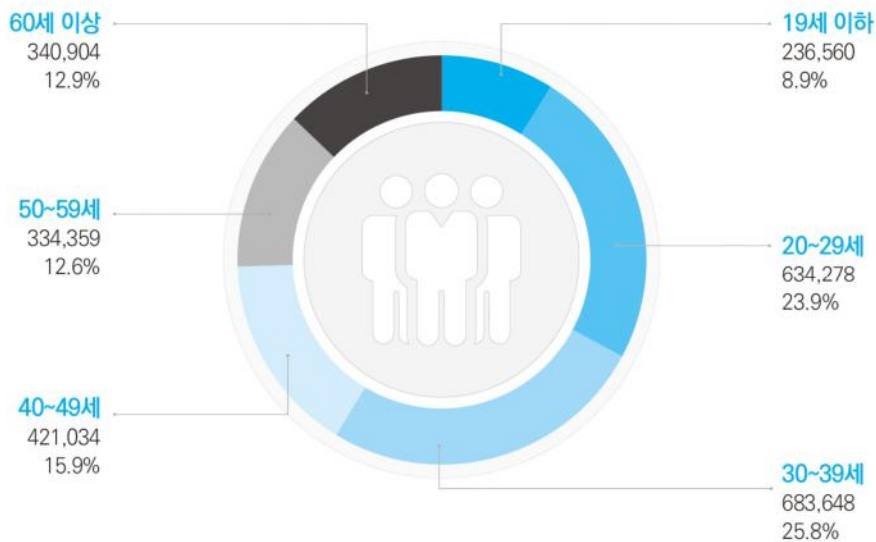
■ 체류외국인 연도별 증감 추이

(단위 : 명)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등록 외국인	1,143,087	1,161,677	1,171,762	1,246,626	1,271,807	1,145,540	1,093,891	1,189,585	1,348,626	1,488,353
단기체류 외국인	431,646	518,902	597,399	679,874	792,853	425,752	386,945	557,057	625,663	608,766
거소신고	324,786	368,862	411,337	441,107	459,996	464,783	475,945	499,270	533,295	553,664
총계	1,899,519	2,049,441	2,180,498	2,367,607	2,524,656	2,036,075	1,956,781	2,245,912	2,507,584	2,650,783

■ 체류외국인 연령별 분포

(2024. 12. 31. 현재, 단위 : 명)



■ 체류외국인 국적별 현황

(2024. 12. 31. 현재, 단위 : 명)

구분	총체류자
총계	2,650,783
중 국 ³⁾	958,959
한국계	(643,277)
베 트 남	305,936
태 국	188,770
미 국	170,251
우즈베키스탄	94,893
러시아(연방)	69,252
필리핀	70,392
캄보디아	63,681
몽골	57,093
네 팔	74,641
인도네시아	73,180
카자흐스탄	44,549
일본	65,216
미얀마	53,914
캐나다	28,604
스리랑카	35,792
타이완	35,838
방글라데시	31,220
파키스탄	18,355
인도	16,851
오스트레일리아	19,430
키르기즈	11,784
영국	8,697
기타	153,485

3) 한국계 포함

■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2024. 12. 31. 현재, 단위 : 명)

구분	총체류자	합법체류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
총계	2,650,783	2,253,261	397,522
사 증 면 제(B-1)	206,546	55,813	150,733
관 광 통 과(B-2)	153,101	132,760	20,341
단 기 방 문(C-3)	162,719	80,278	82,441
단 기 취 업(C-4)	2,848	2,384	464
유 학(D-2)	178,519	168,939	9,580
기 술 연 수(D-3)	1,808	622	1,186
일 반 연 수(D-4)	87,887	62,947	24,940
종 교(D-6)	1,773	1,719	54
상 사 주 재(D-7)	1,053	1,041	12
기 업 투 자(D-8)	8,376	8,209	167
무 역 경 영(D-9)	2,526	2,462	64
교 수(E-1)	1,802	1,801	1
회 화 지 도(E-2)	13,443	13,409	34
연 구(E-3)	3,426	3,422	4
기 술 지 도(E-4)	209	207	2
전 문 직 업(E-5)	214	209	5
예 술 흥 행(E-6)	4,406	3,184	1,222
특 정 활 동(E-7)	63,580	60,707	2,873
계 질 근 로(E-8)	24,530	20,930	3,600
비 전 문 취 업(E-9)	337,279	283,371	53,908
선 원 취 업(E-10)	21,922	12,069	9,853
방 문 동 거(F-1)	99,051	94,662	4,389
거 주(F-2)	61,292	59,807	1,485
동 반(F-3)	52,651	52,015	636
재 외 동 포(F-4)	555,968	553,713	2,255
영 주(F-5)	202,968	202,968	0
결 혼 이 민(F-6)	148,376	144,807	3,569
방 문 취 업(H-2)	93,302	90,339	2,963
기 타	159,208	138,467	20,7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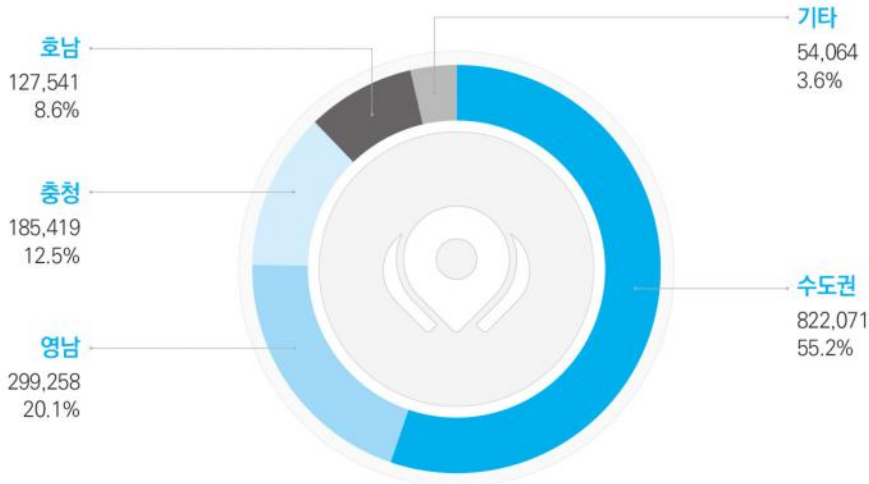
2 등록외국인 현황

■ 등록외국인 연도별 증감 추이

(단위 : 명)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법체류	1,058,118	1,086,436	1,088,925	1,156,559	1,175,992	1,036,875	968,869	1,051,572	1,210,672	1,353,773
불법체류	84,969	75,241	82,837	90,067	95,815	108,665	125,022	138,013	137,954	134,580
총계	1,143,087	1,161,677	1,171,762	1,246,626	1,271,807	1,145,540	1,093,891	1,189,585	1,348,626	1,488,353

■ 등록외국인 거주지역별 분포현황



※ 수록된 자료는 반올림되어 표 내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024. 12. 31. 현재, 단위 : 명)

계	경기	서울	충남 ⁴⁾	인천	경남	경북	부산	충북
1,488,353	467,398	265,544	102,869	89,129	102,333	76,768	55,805	56,301
	전남	전북	대구	광주	제주	강원	대전	울산
	57,189	43,795	36,710	26,557	27,990	26,074	26,249	27,642

4) 세종특별자치시 6,182명 포함

■ 등록외국인 국적별 현황

(2024. 12. 31. 현재, 단위 : 명)

구분	총계	합법체류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
총계	1,488,353	1,353,773	134,580
총 국 ⁵⁾	465,881	454,063	11,818
한국계	246,988	243,212	3,776
베 트 남	261,581	209,992	51,589
우 즈 베 키 스 탄	61,733	56,005	5,728
캄 보 디 아	61,006	50,832	10,174
네 팔	72,151	67,539	4,612
필 리 핀	51,991	43,762	8,229
인 도 네 시 아	58,248	48,311	9,937
태 국	43,459	37,323	6,136
미 국	34,886	34,767	119
미 안 마	52,034	48,976	3,058
몽 골	37,664	33,558	4,106
일 본	28,005	27,930	75
스 리 랑 카	33,965	29,219	4,746
타 이 완	17,384	17,072	312
방 글 라 데 시	27,875	26,338	1,537
카 자 흐 스 탄	20,482	17,838	2,644
러 시 아(연방)	24,833	23,419	1,414
인 도	14,762	14,070	692
파 키 스 탄	15,950	14,410	1,540
키 르 기 즈	8,170	7,764	406
영 국	5,144	5,130	14
프 랑 스	5,314	5,305	9
캐 나 다	4,452	4,437	15
기 타	81,383	75,713	5,670

5) 한국계 포함

■ 등록외국인 자격별 현황

(2024. 12. 31. 현재, 단위 : 명)

구분	등록외국인	합법체류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
총계	1,488,353	1,353,773	134,580
문 화 예 술(D-1)	52	49	3
유 학(D-2)	178,107	168,688	9,419
일 반 연 수(D-4)	79,805	55,803	24,002
종 교(D-6)	1,736	1,696	40
상 사 주 재(D-7)	1,030	1,021	9
기 업 투 자(D-8)	8,321	8,159	162
무 역 경 영(D-9)	2,467	2,406	61
교 수(E-1)	1,801	1,800	1
회 화 지 도(E-2)	13,348	13,317	31
연 구(E-3)	3,397	3,393	4
기 술 지 도(E-4)	208	206	2
전 문 직 업(E-5)	213	208	5
예 술 흥 행(E-6)	4,013	2,934	1,079
특 정 활 동(E-7)	62,975	60,330	2,645
계 절 근 로(E-8)	19,690	16,948	2,742
비 전 문 취 업(E-9)	328,114	276,416	51,698
선 원 취 업(E-10)	21,548	12,022	9,526
방 문 동 거(F-1)	96,797	92,569	4,228
거 주(F-2)	61,039	59,554	1,485
동 반(F-3)	51,298	50,706	592
영 주(F-5)	202,738	202,738	0
결 혼 이 민(F-6)	146,672	143,540	3,132
관 광 취 업(H-1)	3,577	3,565	12
방 문 취 업(H-2)	91,818	89,034	2,784
기 타	107,589	86,671	20,918

3 단기체류외국인 현황

단기 체류외국인 연도별 증감 추이

(단위 : 명)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법체류	306,885	303,561	386,113	430,259	415,830	499,703	143,895	124,694	287,525	341,976	347,948
불법체류	112,788	128,085	132,789	167,140	264,044	293,150	281,857	262,251	269,532	283,687	260,818
총계	419,673	431,646	518,902	597,399	679,874	792,853	425,752	386,945	557,057	625,663	608,766



단기 체류외국인 국적별 현황

(2024. 12. 31. 현재, 단위 : 명)

구분	전체
총계	608,766
태 국	145,305
미 국	84,576
중 국 ⁶⁾	103,534
한국계	6,745
베 트 남	44,354
몽 골	19,428
일 본	36,353
필 리 핀	18,388
카 자 흐 스 탄	9,607
러 시 아(연방)	11,056

6) 한국계 포함

구분	전체
오스트레일리아	11,922
인도네시아	14,671
싱가포르	10,896
말레이시아	7,814
캐나다	6,460
우즈베키스탄	4,349
방글라데시	3,345
캄보디아	2,666
네팔	2,490
뉴질랜드	2,321
파키스탄	2,405
스리랑카	1,827
기타	64,999

4 불법체류외국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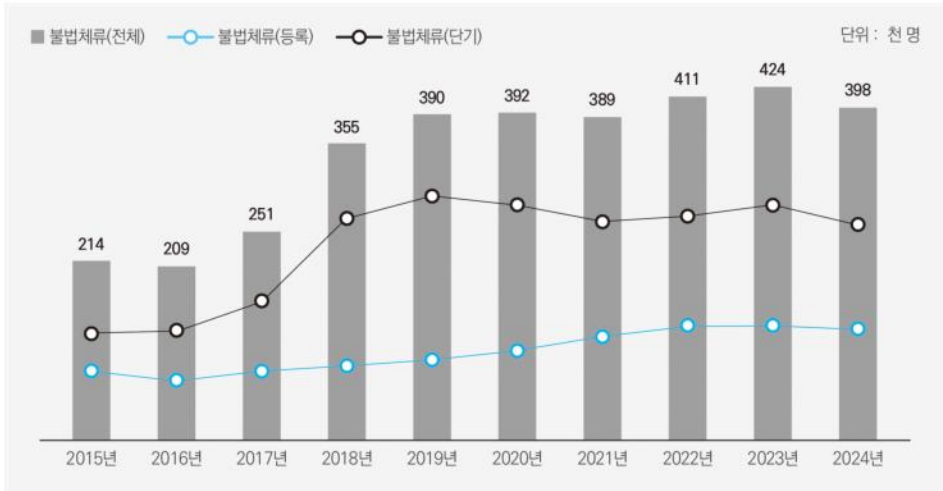
■ 불법체류외국인 및 불법체류율 연도별 증감 추이

(단위 : 명)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등록외국인	84,969	75,241	82,837	90,067	95,815	108,665	125,022	138,013	137,954	134,580
단기체류 외국인	128,085	132,789	167,140	264,044	293,150	281,857	262,251	269,532	283,687	260,818
거소신고	1,114	941	1,064	1,015	1,316	1,674	1,427	3,725	2,034	2,124
총계	214,168	208,971	251,041	355,126	390,281	392,196	388,700	411,270	423,675	397,522
불법체류율 (%)	11.3	10.2	11.5	15.0	15.5	19.3	19.9	18.3	16.9	15.0

※ 불법체류율 : 총체류외국인 대비 불법체류외국인 비율

■ 불법체류외국인 증감 추이 비교



5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현황

■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총괄 현황

(2024. 12. 31. 현재, 단위 : 명)

구분	총계	합법체류	불법체류	비율
총계	570,759	495,817	74,942	13.1%
전문인력	89,928	85,323	4,605	5.1%
단순기능인력	477,033	406,709	70,324	14.7%

■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2024. 12. 31. 현재, 단위 : 명)

구분	총계	합법체류	불법체류	비율
총계	570,759	495,817	74,942	13.1%
소계	89,928	85,323	4,605	5.1%
단기취업(C-4)	2,848	2,384	464	16.3%
교수(E-1)	1,802	1,801	1	0.1%
회화지도(E-2)	13,443	13,409	34	0.3%
연구구(E-3)	3,426	3,422	4	0.1%
기술지도(E-4)	209	207	2	1.0%
전문직업(E-5)	214	209	5	2.3%

구분		총계	합법체류	불법체류	비율
단순 기능 인력	예 술 흥 행(E-6)	4,406	3,184	1,222	27.7%
	특 정 활 동(E-7)	63,580	60,707	2,873	4.5%
	소계	477,033	406,709	70,324	14.7%
	계 절 근 로(E-8)	24,530	20,930	3,600	14.7%
	비 전 문 취 업(E-9)	337,279	283,371	53,908	16.0%
	선 원 취 업(E-10)	21,922	12,069	9,853	44.9%
	방 문 취 업(H-2)	93,302	90,339	2,963	3.2%
	기타 관 광 취 업(H-1)	3,798	3,785	13	0.3%

■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국적별 현황

(2024. 12. 31. 현재, 단위 : 명)

구분	총체류자
총계	570,759
중 국 ^{가)}	95,130
한국계	80,342
베 트 남	77,075
캄 보 디 아	53,332
네 팔	55,725
인 도 네 시 아	54,621
필 리 핀	34,213
미 안 마	36,599
태 국	31,207
우즈 베 키 스 탄	25,090
스 리 랑 카	28,879
방 글 라 데 시	17,495
미 국	8,322
몽 골	5,363
카 자 흐 스 탄	4,785
파 키 스 탄	6,052
동 티 모 르	4,465
인 도	3,319
남아프리카공화국	3,745
영 국	2,433

가) 한국계 포함

구분	총체류자
키 르 기 즈	2,536
캐 나 다	1,518
일 본	3,040
기 타	15,815

■ 비전문취업(E-9) 업종별 현황

(2024. 12. 31. 현재, 단위 : 명)

구분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총계	337,279	283,371	53,908
소계	332,815	283,260	49,555
제 조 업(E-9-1)	252,572	226,071	26,501
건 설 업(E-9-2)	10,301	7,178	3,123
농 업(E-9-3)	42,817	32,993	9,824
어 업(E-9-4)	25,932	15,921	10,011
서 비 스 업(E-9-5)	1,148	1,052	96
임 업(E-9-9)	34	34	0
광 업(E-9-10)	11	11	0
기 타 ⁸⁾	4,464	111	4,353

■ 비전문취업(E-9) 국적별 현황

(2024. 12. 31. 현재, 단위 : 명)

국적	총체류자
총계	337,279
캄 보 디 아	48,998
네 팔	47,108
베 트 남	41,547
태 국	28,236
인 도 네 시 아	40,758
미 안 마	32,667
필 리 핀	25,386
스 리 랑 카	23,773
우 즈 베 키 스 탄	14,813
방 글 라 데 시	13,630
몽 골	4,087

⁸⁾ 기타 : 과거추천연수(E-9-95) ~ 과거합법조치(E-9-98)

국적	총체류자
파 키 스 탄	4,563
동 티 모 르	4,419
중 국 ⁹⁾	2,392
한국계	506
기 타	4,902

6 결혼이민자¹⁰⁾ 체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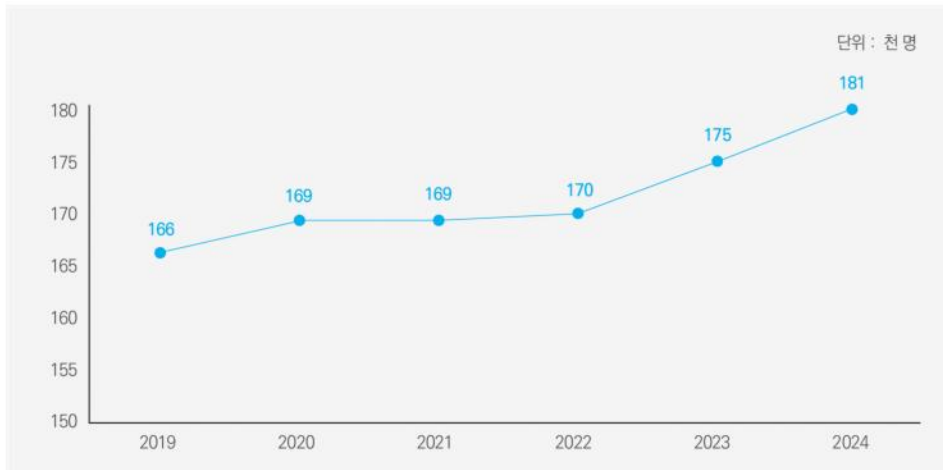
■ 결혼이민자 연도별 증감 추이

(단위 : 명)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인 원	166,025	168,594	168,611	169,633	174,895	181,436
전년대비 증감률	4.3%	1.5%	0.0%	0.6%	3.1%	3.7%

<참고>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혼인귀화자 (전체누계)	135,056	141,773	148,118	154,926	161,357	166,941



⁹⁾ 한국계 포함

¹⁰⁾ 결혼이민자 체류자격 : 2009년 이전(F-1-3, F-2-1), 2010년 이후(F-2-1, F-5-2), 2011년 12월 이후(F-2-1, F-5-2, F-6)

■ 결혼이민자 거주지역별 분포 현황(등록외국인)

(2024. 12. 31. 현재, 단위 : 명)

계	경기	서울	인천	경남	충남 ¹⁾	경북	부산	전남
	56,099	28,488	13,386	11,287	10,795	8,407	7,771	6,903
179,617	전북	충북	대구	강원	광주	울산	대전	제주
	6,154	5,996	6,017	4,109	3,910	3,535	3,593	3,167

■ 결혼이민자 국적별·성별 현황

(2024. 12. 31. 현재, 단위 : 명)

국적 구분	계	중국 ²⁾	한국계	베트남	일본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미국	기타
전체	181,436	60,681 (20,878)	41,779	16,214	12,794	9,751	4,897	5,308	30,012	
남자	35,705	14,098 (8,165)	5,025	1,329	643	146	921	3,562	9,981	
여자	145,731	46,583 (12,713)	36,754	14,885	12,151	9,605	3,976	1,746	20,031	

※ 여성 80.3%, 남성 19.7%

※ 중국 33.4%, 베트남 23.0%, 일본 8.9%, 필리핀 7.1% 순임

1) 세종특별자치시 917명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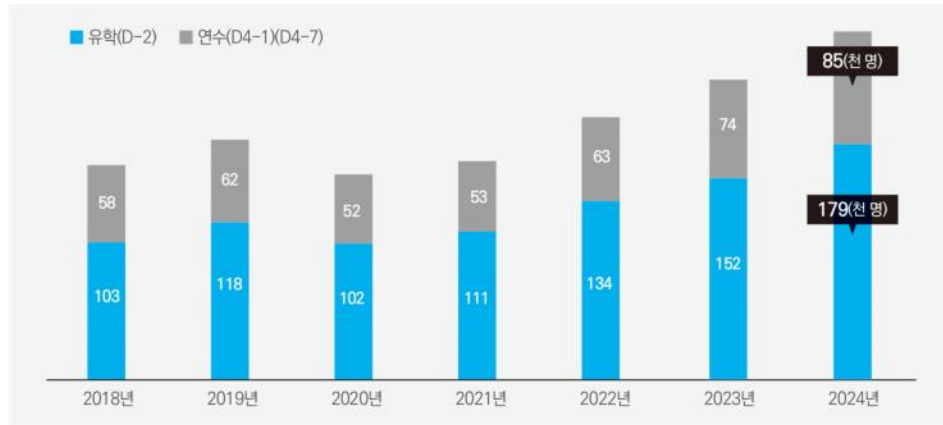
2) 한국계 포함

7 외국인 유학생¹³⁾ 체류 현황

외국인 유학생 연도별 증감 추이

(단위 : 명,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96,357	115,927	135,087	160,671	180,131	153,361	163,699	197,234	226,507	263,775
유학(D-2)	66,334	76,040	86,875	102,690	118,254	101,810	111,178	134,062	152,094	178,519
한국어연수(D-4-1)	30,017	39,873	48,208	57,971	61,867	51,545	52,506	63,146	74,361	85,173
외국어연수(D-4-7)	6	14	4	10	10	6	15	26	52	83
전년대비증감률	11.5%	20.3%	16.5%	18.9%	12.1%	-14.9%	6.7%	20.5%	14.8%	16.5%



외국인 유학생 국적별 현황

(2024. 12. 31. 현재, 단위 : 명)

구분	총계	유학(D-2)	한국어연수(D-4-1)	외국어연수(D-4-7)
총계	263,775	178,519	85,173	83
베 트 남	96,957	41,359	55,596	2
중 국 ¹⁴⁾	75,149	68,078	7,071	0
(한국계)	(230)	(226)	(4)	(0)
몽 골	16,655	10,471	6,184	0
우즈베키스탄	15,352	13,054	2,297	1
네 팔	9,229	8,867	349	13

¹³⁾ 2009년 이전(D-2전체 및 D-4-4), 2010년 이후(D-2전체 및 D-4-1), 2014년 8월 이후(D-2전체 및 D-4-1, D-4-7)

¹⁴⁾ 한국계 포함

구분	총계	유학 (D-2)	한국어연수 (D-4-1)	외국어연수 (D-4-7)
미 안 마	7,525	3,243	4,282	0
일 본	4,203	2,826	1,377	0
방글라데시	2,977	2,757	154	66
인도네시아	2,680	2,304	376	0
러시아(연방)	2,403	1,400	1,003	0
인도	2,025	1,714	311	0
미국	2,012	1,712	300	0
파키스탄	1,934	1,817	117	0
프랑스	1,876	1,600	276	0
키르기즈	1,787	897	890	0
카자흐스탄	1,535	1,178	356	1
(타이완)	1,497	1,032	465	0
독일	1,200	1,119	81	0
말레이시아	1,183	1,039	144	0
기타	15,596	12,052	3,544	0

8 체류허가업무 연도별 처리현황

(2024. 12. 31. 현재, 단위 :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계	2,004,345	1,749,212	1,788,051	2,019,999	2,232,431
기간연장	1,052,327	728,693	587,287	587,672	642,615
자격부여	10,755	12,622	35,356	7,484	7,736
자격변경	119,463	104,604	121,019	139,417	159,040
재입국	41,374	111,320	36,485	816	770
체류지변경	456,788	461,287	563,572	764,439	856,275
자격외활동	15,109	12,024	9,085	16,820	25,046
근무처(장소)변경·추가	49,853	40,570	45,954	67,556	75,723
외국인등록	119,085	104,797	207,817	281,509	296,824
거소신고	37,557	55,854	58,625	56,302	51,505
등록사항변경	102,034	117,441	122,851	97,984	116,897

제3절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처리현황

1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연도별 처리

(단위 : 명)

연도	총계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고발	기타*
2020	118,829	11,843	44,597	2,100	2,605	57,684
2021	121,225	9,986	29,567	2,922	1,304	77,446
2022	98,350	10,196	28,585	2,067	1,478	56,024
2023	134,083	31,932	40,538	1,922	1,880	57,811
2024	139,727	35,124	44,151	1,931	1,737	56,784

*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 등

제4절

국적 및 난민 업무 처리현황

1 국적업무 처리 현황

■ 연도별 및 국가별 국적취득 현황

(단위 : 명)

연도	종류	총계		귀화		국적회복	
		신청	허가	신청	허가	신청	허가
2019년		19,952	12,357	16,852	9,914	3,100	2,443
2020년		18,899	15,649	16,529	13,885	2,370	1,764
2021년		21,160	13,637	18,091	10,895	3,069	2,742
2022년		22,789	13,291	18,079	10,248	4,710	3,043
2023년		23,745	14,549	18,736	10,346	5,009	4,203
2024년		24,955	14,615	19,470	11,008	5,485	3,607

국가	연도	유형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계		귀화	9,914	13,885	10,895	10,248	10,346	11,008				
		회복	2,443	1,764	2,742	3,043	4,203	3,607				
중	국	귀화	4,371	7,932	5,145	4,480	4,904	6,249				
		회복	181	120	185	114	98	92				
베	트	남	귀화	3,867	4,076	4,225	4,431	3,807	2,951			
			회복	39	29	14	18	23	20			
필	리	핀	귀화	423	375	241	203	243	284			
			회복	11	7	25	11	14	9			
몽	골	귀화	102	145	103	60	126	81				
		회복	6	10	3	6	8	7				
우	즈	베	키	스	탄	귀화	78	138	97	119	113	107
						회복	6	8	12	10	13	8

국가	연도	유형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일	본	귀화	14	15	20	30	29	24
		회복	41	54	86	94	120	113
태	국	귀화	52	68	78	89	110	148
		회복	3	7	6	7	9	4
파 키 스 탄		귀화	48	26	34	26	13	21
		회복	0	0	0	0	0	0
기	타	귀화	959	1,110	952	810	1,001	1,143
		회복	2,156	1,529	2,411	2,783	3,918	3,354

■ 연도별 및 국가별 국적이탈·상실 현황

(단위 : 명)

연도	종류	총계	상실	이탈
2019년		24,539	22,078	2,461
2020년		28,685	25,034	3,651
2021년		25,579	21,271	4,308
2022년		28,686	25,425	3,261
2023년		29,302	25,399	3,903
2024년		26,494	22,887	3,607

국가	연도	유형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계		상실	22,078	25,034	21,271	25,425	25,399	22,887
		이탈	2,461	3,651	4,308	3,261	3,903	3,607
미	국	상실	14,109	10,238	10,292	14,955	17,147	16,415
		이탈	1,933	2,961	3,330	2,592	3,115	2,682
캐 나 다		상실	2,807	2,948	4,157	4,489	2,911	2,409
		이탈	133	144	207	151	219	212
오스트레일리아		상실	1,804	1,396	1,238	2,728	2,466	1,646
		이탈	39	26	80	62	58	151
일	본	상실	841	8,832	3,541	724	662	542
		이탈	256	374	464	287	299	332
뉴 질 랜 드		상실	807	355	584	909	787	613
		이탈	14	36	48	19	42	26

국가	연도	유형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영	국	상실	372	210	191	337	233	224
		이탈	16	14	16	23	15	19
독	일	상실	297	239	270	255	178	185
		이탈	16	17	40	26	46	26
기	타	상실	1,041	816	998	1,028	1,015	853
		이탈	54	79	123	101	109	159

2 연도별 난민심사 및 처리현황

구분	연도	총계	'94 ~ '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신청	1차	122,095	22,791	9,942	16,173	15,452	6,684	2,341	11,539	18,837	18,336
	이의 신청	48,563	12,843	3,723	3,110	4,067	5,954	4,718	3,748	5,247	5,153
	소계	103,172	25,958	9,634	6,879	9,306	11,894	10,979	8,543	10,230	9,749
심사 결정	1차	65,227	16,457	5,219	4,295	5,875	8,102	5,982	5,463	7,087	6,747
	이의 신청	37,945	9,501	4,415	2,584	3,431	3,792	4,997	3,080	3,143	3,002
	소계	31,645	2,819	1,245	2,412	4,264	6,230	4,003	2,966	3,069	4,637
철회*	1차	29,164	2,542	1,197	2,305	4,138	5,929	3,693	2,659	2,567	4,134
	이의 신청	2,481	277	48	107	126	301	310	307	502	503

* 1차 심사의 경우 직권종료 처리 건 포함

※ 기준 시점에 따라 소송 결과 반영 등으로 수치 일부가 변동될 수 있음

3 난민신청 심사결과

구분	연도	총계	'94 ~ '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심사완료		57,090	13,163	5,874	3,954	5,060	6,237	6,842	4,892	5,458	5,610
난민	소계	4,240	1,838	437	651	308	223	121	230	226	206
	(보호율, %)	(7.4)	(14.0)	(7.4)	(16.5)	(6.1)	(3.6)	(1.8)	(4.7)	(4.1)	(3.7)
인정 (보호)	인정	1,544	678	121	144	79	69	72	175	101	105
	(인정률, %)	(2.7)	(5.2)	(2.1)	(3.6)	(1.6)	(1.1)	(1.1)	(3.6)	(1.9)	(1.9)
	인도적 체류	2,696	1,160	316	507	229	154	49	55	125	101
	불인정	52,850	11,325	5,437	3,303	4,752	6,014	6,721	4,662	5,232	5,404

※ 기준 시점에 따라 소송 결과 반영 등으로 수치 일부가 변동될 수 있음

※ 인정취소 8건 및 철회 4건 포함



주요 보도 (설명) 자료

2024년 보도(설명) 자료 배포 일지

일일	주요내용
1. 2.	정부, 적극적인 비자제도 개선으로 조선업 구인난 해소
1. 4.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시범 운영
1. 4.	난민인정심사에 화상면접 도입
1. 5.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급 4급 인사
1. 10.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인사
1. 1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이상 인사
1. 29.	법무부, 난민전문통역인 확대 운영
2. 7.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및 유학생 유치 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2. 26.	법무부, 봄철 농번기 농·어촌 현장 지원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 마련
3. 11.	‘지역별 거주 외국인 현황’ 데이터 시각화로 한눈에 파악한다 - 법무부 이민 행정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서비스 제공 -
3. 14.	법무부, 「제3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위촉식 개최
3. 27.	법무부, 계절근로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본격 시행
4. 4.	법무부장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정책현장 방문
4. 8.	법무부 「농·어업 외국인력 지원TF」 현판식 개최
4. 12.	법무부, '24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4. 29.	법무부, 산업현장에 직접 찾아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실시
5. 4.	법무부장관,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감소부 장관 면담
5. 13.	주한공관원 대상 외국인 체류·사증 정책 설명회 개최
5. 20.	법무부,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6. 4.	'조선업 연수생(D-4-6) 기능인력(E-7-3) 전환 시범사업' 성료

월일	주요내용
6. 20.	산업수요 맞춤형 외국인력 관리체계 마련
6. 25.	(법무부 알림)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6. 27.	동남아 3개국 단체관광 비자 발급대상 확대 시범운영 기간 2년 연장
6. 28.	법무부-보건복지부, 요양보호 분야 전문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
7. 1.	과학기술분야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 위해 연구유학생(D-2-5), 연구원(E-3) 비자 확대
7. 10.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7. 11.	법무부장관,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정책현장 방문
7. 12.	법무부, '24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약 1만 8천명 출국조치
7. 23.	법무부장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정책현장 방문
7. 25.	법무부 '24년 제1회 사회통합자문위원회 개최
8. 12.	독립 영웅의 후예 27명, 대한민국 국민 되다.
8. 12.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 시범운영
8. 12.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도주자 검거 관련
8. 13.	지역기반 이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법무부,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 개최
8. 16.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사
8. 29.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신설
9. 4.	출입국 심사, 이것만 알아도 더욱 편리!
9. 10.	법무부장관, 충청남도 도지사 및 도청 관계자 접견
9. 1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인사
9. 26.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대비 -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9. 27.	법무부, '24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및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10. 2.	내년부터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부 유료화 시행
10. 2.	중기부, 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와 함께 지방소멸 대응 협력체계 본격 시행
10. 7.	무단이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검거 관련
10. 18.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11. 6.	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를 위한 혁신적 비자제도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도입
11. 26.	계절근로자 업무 허용범위 확대 등 농·어촌 계절근로 제도 활성화 추진

제1장 일반사항

제2장 주요 업무 추진실적


제3장 법령·예규·경비

제4장 주요 통계

제5장 주요 보도(설명) 자료

일일	주요내용
11. 27.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 시행
11. 27.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2개월 연장
11. 28.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범정부 통일 사용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 2.	법무부, 지역 맞춤형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시행
12. 19.	법무부, '24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약 1만 8천명 출국조치
12. 20.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 20.7만명 도입 추진
12. 30.	서울 소재 최초 「사회통합프로그램 서울 CBT센터」 개소

■ 정부, 적극적인 비자제도 개선으로 조선업 구인난 해소('24. 1. 2.)


법무부
보도자료

일 줄이는 정부
더 편안한 국민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 12. 31.(일)

[2023년 법무부 정책 돋보기]

정부, 적극적인 비자제도 개선으로 조선업 구인난 해소

- 정부는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협업을 통해 3분기 만에 조선업계에 필요 인력 14,000명을 공급하였으며, 전문인력비자(E-7) 조선업 직종 확대 등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 우리 조선산업은 코로나19 이후 맞이한 수주호황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구인난으로 인하여 생산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업체별 외국인 근로자 도입 허용비율 확대(20%→30%) 및

■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시범 운영('24. 1. 4.)


법무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4. 1. 4.(목)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시범 운영

- 법무부는 인구감소에 따른 산업 전반의 외국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정주 적합성이 높은 전문·숙련인력을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기업·근로자 등 정책 수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 해소를 위하여, 내년도 주요 취업비자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범 운영합니다.
- 총량 사전 공표제가 적용되는 비자는 전문인력(E1-E7) 및 비전문인력(E8-E10) 취업 비자이며, 법무부는 시범 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통계 분석 고도화 등을 거쳐 '25년부터 제도를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 최근 산업계 전반에서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난 대응을 위하여 외국인력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가운데, 그간 외국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비전문인력뿐만 아니라 정주 적합성이 높은 전문·숙련인력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러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간 전문성·숙련성을 보유한 외국인의

제1장 일반 사항


제2장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제3장 법령·예규·경비

제4장 주요 통계

제5장 주요 보도(설명) 자료

■ 난민인정심사에 화상면접 도입('24. 1. 4.)


법무부

보도자료

밀착하는 정부
더 편안한 국민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4. 1. 4.(목)
 [2024년 법무부 정책 돋보기]

화상면접 심사 도입으로 난민심사 인프라 보강

- '23. 12월 시범 운영을 거쳐 '24. 4월부터 정식 운영 추진 -


● 법무부는 '94년 난민제도 시행 이후 난민심사 면접을 대면심사만으로 진행하였으나, 소수언어를 구사하는 지방 거주 난민신청자의 면접 접근성 향상과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의 안전한 면접환경 제공을 위해 화상면접 심사를 도입합니다.

'94년 난민제도 시행 이후 난민심사 면접은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 통역인이 같은 면접실에 모여 진행되는 대면면접으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난민전문통역인의 78%가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소수언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이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통역인을 구하기가 어려웠으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난민심사 면접이 중단되어 난민심사 대기기간이 장기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는 재류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통역인은 거주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면접에 참여하는 화상면접을 도입합니다.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급 4급 인사('24. 1. 5.)


법무부

보도자료

당시 장관인홍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4. 1. 5.(금)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급, 4급 인사

□ 법무부는 '24. 1. 8.(월) 부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급, 4급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부이사관(3급) 승진 (1명)

신임직	성 명	현직
계 주 출 입 국 · 외 국 인 청 장	바 재 완	법 무 부 이 민 조 사 과 장

○ 부이사관(3급) 전보 (1명)

260 제5장 주요 보도(설명)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급 4급 인사('24. 1. 10.)

법무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서로로 품안에 안아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4. 1. 10.(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인사

□ 법무부는 '24. 1. 15.(월) 부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서기관(4급) 승진 (8명)

신입직	성 명	현 직
법 무 부 외 국 인 정 보 빅 데이터 팀 장	고 동 중	법 무 부 출 입 국 기 획 과
인천공항출입국· 외 국 인 청	유 현 송	수 원 출 입 국 · 외 국 인 청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급 4급 인사('24. 1. 19.)

법무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서로로 품안에 안아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4. 1. 19.(금)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이상 인사

□ 법무부는 '24. 1. 22.(월) 부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이상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일반직고위공무원 승진 (1명)

신입직	성 명	현 직
법 무 부 국 적 · 통 합 정 책 단 장	반 재 열	법 무 부 출 입 국 기 획 과 장

■ 법무부, 난민전문통역인 확대('24. 1. 29.)

법무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4. 1. 29.(월)

각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법무부, 난민전문통역인 대폭 확대(308명→414명) 운영

- 제3회 난민전문통역인 106명 추가 위촉으로 난민면접 통역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 기대 -

- '24년 1월 29일 법무부는 난민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난민면접 심사에 통역을 담당할 민간인 통역인 106명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인증하고 이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앞으로 414명(34개 언어)이 난민신청자에 대한 통역을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 법무부는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도록 난민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원활한 통역지원을 위해 지난 '21년부터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난민전문통역인은 난민심사공무원과 난민신청자 사이에서 진행되는 난민면접 과정에서 통역을 담당하는 전문가로서, 난민분야 통역에 적합한 외국어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및 유학생 유치 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24. 2. 7.)

법무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4. 2. 7.(수)

각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인증대학 134개교(전년대비 14개교 증가), 비자발급제한대학 20개교 확정
- 외국인 유학생은 '22년 16.7만명에서 '23년 18.2만명으로 약 1.5만명 증가
- 인증대학에 유학생 시증(VISA) 발급 심사 원회 등 혜택 부여

법무부(법무부 장관대행 심우정)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그 결과를 2월 7일(수)에 각 대학에 통보하고, 2024학년도에 입학하는 유학생부터 적용하게 된다.

인증대학이 되면 외국인 유학생 시증(VISA) 발급을 위한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주중 시간제 취업 활동 허가 시간을 5시간 추가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미인증대학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 관리하게 된다.

■ 법무부, 봄철 농번기 농·어촌 현장 지원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 마련('24. 2. 26.)


법무부

보도자료

*다시 돌아온 민족!
서로호응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4. 2. 25.(일)

**법무부, 봄철 농번기 농·어촌 현장 지원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계절근로 초청 대상 유학생(D-2) 부모까지 확대', '지자체간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협력 방안' 시범 시행 및 '지자체 대상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본격적인 봄철 농번기 등을 앞두고, 농·어촌 현장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투입되어 농·어촌의 일손을 도울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유학생(D-2) 부모 계절근로 초청 제도 도입

국내에서 체류 중인 가족의 도움으로 계절근로자의 조기 정착이 가능하고 고용주와의 갈등 해소도 용이하며 계절근로 활동 중 무단이탈의 우려가 적은 친인척 초청방식의 장점을 고려하여, 국내 연고자의 현지 가족 초청 대상을 결혼이민자의 친인척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친숙한 유학생의

■ '지역별 거주 외국인 현황' 데이터 시각화로 한눈에 파악한다('24. 3. 11.)


법무부

보도자료

*다시 돌아온 민족!
서로호응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 3. 11.(월)

**'지역별 거주 외국인 현황'
데이터 시각화로 한눈에 파악한다**


- 법무부 이민 행정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서비스 제공 -

□ 법무부는 공공·민간 분야의 '데이터 기반 외국인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출입국·이민정책 데이터를 국민과 공공기관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 이번 서비스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국제연합(UN) 등에서 발표하는 관련 통계와 주요 정책추진 현황 데이터를 지도와 그래프로 시각화한 것으로,

- 인터넷 하이코리아 누리집(<https://www.hikorea.go.kr>) '정보광장' 내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메뉴를 통하여, 3월 11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 「제3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위촉식 개최('24. 3. 14.)


법무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4. 3. 14. (목)

법무부, 「제3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위촉식 개최

- 한국사회 모범적으로 정착한 이민자, 총 21개국 39명을 새내기 이민자 멘토로 위촉 -

- 법무부는 2024. 3. 14.(목) 15:00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새내기 이민자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39명(21개국)의 「제3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을 선정하여 위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 위촉 기간 : '24. 3. 14. 부터 '26. 3. 13. 까지(2년, 2회 연임 가능)
 - 위촉식 개최에 앞서 오전부터 약 4시간에 걸쳐 멘토단 위촉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회통합정책 개요, 경사역량 교육, 비자제도 소개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 이민자 멘토단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한국 사회에 모범적으로 정착한 이민자로서 교수, 강사, 공무원, 회사원 등 다양한 직업군들로

■ 법무부, 계절근로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본격 시행('24. 3. 27.)


법무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4. 3. 27. (수)

법무부, 계절근로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본격 시행

- 경기도 이천시를 시작으로 상반기 중 18개 기초 지자체 약 2,500명 교육 예정 -

- 법무부는 '24. 3. 22.(금) 경기도 이천시에서 초청한 베트남 출신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41명을 대상으로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24년도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첫 번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 입국 초기의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 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법·제도와 다양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
- 그간 조기적응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 제외동포, 외국인 연예인,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운영해 왔으나, 계절근로자의 경우에도 인권침해, 무단이탈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기적응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법무부장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정책현장 방문('24. 4. 4.)


법무부
보도자료
다시 돌아온다!
서로호 국민의 약속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4. 4. 4.(목)

법무부장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정책현장 방문

-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외국인 정책 수립을 위한 현장 점검 -

-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취임 후 세 번째 정책현장 방문 일정으로 2024. 4. 4.(목) 15:00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배상업)을 방문하여 외국인 출입국사범 처리 절차, 국적·난민 심사 업무 현황, 체류민원실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 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외국인·비자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체류 외국인의 실효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 법무부장관은 업무 보고를 받은 후 2년 연속('22년 ~ '23년) 불법체류

■ 법무부 「농·어업 외국인력 지원 TF」 현판식 개최('24. 4. 8.)


법무부
보도자료
다시 돌아온다!
서로호 국민의 약속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4. 4. 8.(월)

법무부, 「농·어업 외국인력 지원 TF」 현판식 개최

농·어촌 외국인력 체계적 지원 위해 법무부·농식품부·해수부 협업 강화

-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어업 외국인력 지원 TF」(이하 '지원 TF')를 발족하고 2024. 4. 8.(월) 16시 현판식을 개최 하였습니다.
- '지원 TF'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총괄하는 법무부와 농·어업 분야 인력 수요 부처인 농식품부·해수부 실무자가 과제 중심으로 한 곳에 모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발족되었습니다.

■ 법무부, '24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24. 4. 12.)

법무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4. 4. 12.(금)

법무부, '24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추진
- 국민 안전 위협,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출입국사범 집중 단속

□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 추진 2년 차를 맞아 불법체류 문제에 대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 (시행 기간) '24. 4. 15.(월) ~ 6. 30.(일), 77일간

○ (참여 부처)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 법무부, 산업현장에 직접 찾아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실시('24. 4. 29.)

법무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4. 4. 29.(월)

법무부, 산업현장에 직접 찾아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실시

□ 법무부는 '24. 4. 27.(토)~4. 28.(일) 이틀에 걸쳐 울산광역시 소재 HD현대중공업(조선업종)과 진주시 소재 산업단지(비조선업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총 13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된 사회통합교육
- ** (사전평가)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민자의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 측정을 통하여 교육단계를 배정하는 평가(필기 및 구술시험)

□ 그간 이민자가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 법무부장관,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감소부장관 면담('24. 5. 4.)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024. 5. 8.(화) 14:30 법무부에서 '무사예프 베흐조드'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감소부장관을 만나, 양국 간 출입국·노동 분야의 상호 협력 및 우즈베키스탄 거주 교민들의 체류 편의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참석 인사

- (법무부)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 (우즈베키스탄측) 무사예프 베흐조드(MUSAEV Bekhzod) 고용빈곤감소부장관, 라흐모노프 사르도르벡(RAKHMONOV Sardorbek) 해외노동정책국장 등

■ 주한공관원 대상 외국인 체류·사증 정책 설명회 개최('24. 5. 13.)

법무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4. 5. 13(월)

주한공관원 대상 외국인 체류·사증 정책 설명회 개최

- 대한민국 비자제도 소개 및 체류외국인 관련 협력네트워크 강화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대한민국 체류·사증 정책을 소개하고, 외국인 체류 관리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5. 13.(월) 14:00 정부과천청사에서 주한공관원을 대상으로 2024년 외국인 체류·사증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네팔 등 취업비자 소지 외국인 비중이 높은 15개국 공관의 노무관 등 영사들이 참석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및 숙련기능인력(B-7-4) 전환 제도 등 대한민국 체류·사증 정책을 이해하고 외국인 체류관리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산업현장 및 지역사회 등 그 저변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시점에서 자국민 보호 및 노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 법무부,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24. 5. 20.)

법무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4. 5. 20.(월)

법무부,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 각국 주한 외교사절, 국제기구 한국대표, 인요한 박사, 자자체장 등 600여명 참석 -

□ 법무부는 5. 20.(월) 과천시민회관에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2008년 제1회 기념식을 시작으로 매년 5월 20일에 기념식을 개최해 왔습니다.

※ 「새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규정

- 이날 기념식에는 20개국 주한 외교사절을 비롯하여, 국제이주기구

■ '조선업 연수생(D-4-6) 기능인력(E-7-3) 전환 시범사업' 성료('24. 6. 4.)

법무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4. 6. 4.(화)

'조선업 연수생(D-4-6) 기능인력(E-7-3) 전환 시범사업' 성료

- '23. 9월 입국한 베트남 연수생 24명 비자 전환 허가
- 적응 현황 모니터링 등 성과 분석 후 지속 실시 여부 검토 예정

□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베트남 국적의 조선업 연수생(D-4-6) 24명에 대한 기능인력(E-7-3) 비자 전환을 허가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작년 9월,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으로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조선업 연수생(D-4-6) 기능인력(E-7-3) 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 조선업체 사내교육기관에서 6개월 연수(D-4-6) 후 자격 요건 및 한국어 요건 충족 시 일반기능인력(E-7-3) 비자로 전환 허용

- 연수생들은 HD현대미포의 6개월 연수 과정을 정상 수료하여 실무 기량 및 한국어 능력을 갖추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용추천을

■ 산업수요 맞춤형 외국인력 관리체계 마련('24. 5. 20.)

법무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4. 6. 20.(목)

다시 생각하는
새로운 국민의 나라

산업수요 맞춤형 외국인력 관리체계 마련

- 관계부처 합동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 발표-

- ▶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등 부처 역할 강화
- ▶ 비전문외국인력의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 구축
- ▶ 외국인력 관련 정책 심의기구의 일원화
- ▶ 민간 도입방식 제도화 및 공공 책임성 강화
- ▶ 전문·숙련인력 확대 및 유학생 활용 강화 등

□ 정부는 6.20(목)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 생산가능인구 지속 감소에 따라 급증하는 산업현상의 외국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단장: 국무조정실장)」를 구성하여, 현장

■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24. 6. 25.)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이번 사고로 큰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대다수 사망자가 외국인 근로자인 만큼 법무부에 구성된 비상대책본부(본부장:출입국정책단장)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유가족의 신속한 입국 및 체류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 하였습니다.
- 화성시를 관할하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도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외국인 사상자의 신원확인, 유족 보호자의 입국 및 체류지원, 통역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 또한, 법무부는 사상자와 유가족에게 피해복구를 위한 법률지원, 검찰청 범죄피해지원센터를 통한 치료비,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 제공과 함께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 치유서비스 제공 등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동남아 3개국 단체관광 비자 발급대상 확대 시범운영 기간 2년 연장('24. 6. 27.)

법무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배포 2024. 6. 27.(목)

동남아 3개국 단체관광 비자 발급대상 확대 시범운영 기간 2년 연장

- '23. 6. 동남아 3개국 단체관광 비자제도 대상 확대 후 단체관광객 2배 증가
- 시범운영 기간 2년 연장 및 이탈자 현황 모니터링하여 지속 실시 여부 검토 예정

-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동남아 3개국(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 비자 대상 확대 시범운영 기간을 2년 동안 연장합니다.
- 법무부는 '23. 6. 27.부터 동남아 관광객의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자 신청이 간소화된 단체관광 비자의 발급 대상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일반 여행객까지 확대 운영해왔습니다.
- ※ (기준) 5인 이상 구성된 기업 인센티브 관광단, 대학교 이하 수학여행단
(확대) 3인 이상 구성된 기업 인센티브 관광단, 대학교 이하 수학여행단, **일반여행객**
- 1년간 시범운영 결과, '23년 상반기 23,781명이었던 3개국 단체관광 입국자는 제도 시행 후 하반기에는 47,397명으로 약 2배 증가하였으며, '24년 1월부터 5월말까지 전년 하반기보다 많은 56,427명이 입국하는

■ 법무부-보건복지부, 요양보호 분야 전문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24. 6. 28.)

부처합동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배포 2024. 6. 28.(금)

법무부-보건복지부, 요양보호 분야 전문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

-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 2년 간 시범운영
-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장려
- 내국인 처우개선을 위한 요양보호사 승급제 운영 등 지속 추진

-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①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②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장려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요양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 요양보호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돌봄인력 공급이 부족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젊고 전문적인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평균연령 61.7세('23.12.), '27년 부족인원 약 7.9만 명 예상

■ 과학기술분야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 위해 연구유학생(D-2-5), 연구원(E-3) 비자 확대('24. 7. 1.)

법무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약속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4. 7. 1.(월)

과학기술분야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 위해 연구유학생(D-2-5), 연구원(E-3) 비자 확대

- 우수 국내대학의 경우 연구유학생(D-2-5)으로 학사 과정 재학생 초청 허용
- 우수 국외 석사 연구인재의 경우 연구원(E-3) 비자 발급 시 경력 요건 면제

□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과학기술분야의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유학생(D-2-5), 연구원(E-3)의 비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그간 연구유학생(D-2-5) 비자는 석·박사학위 소지자, 특정연구기관*이 초청한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에 한해 허용해 왔으나, 그 밖의 국내 대학은 국외 학사 과정 유학생 초청을 할 수 없어 해외 연구인력 영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24. 7. 10.)

법무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약속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4. 7. 10.(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승진 : 4명(서기관)
- 전보 : 8명(서기관)
- 인사 일정 : 2024. 7. 15.(월)

■ 법무부장관,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정책현장 방문(‘24. 7. 11.)

법무부

보도자료

과시 대한민국
서로가 이웃이 되어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4. 7. 11.(목)

법무부장관,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정책현장 방문

- ①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방문
- ② 센터 관계자 및 이민자 현장 간담회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024. 7. 11.(목) 10:30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를 방문하여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를 격려하고, 한국어 등 사회통합교육에 참여하는 이민자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안산시에서 '13년도에 다문화가족 등의 정착지원을 위해 설립한 기관으로 ¹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²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³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입주해 있음

먼저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4층)에서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 법무부, '24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약 1만 8천명 출국조치(‘24. 7. 12.)

법무부

보도자료

과시 대한민국
서로가 이웃이 되어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4. 7. 12.(금)

법무부, '24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약 1만 8천명 출국조치

- ① 불법체류 외국인 10,756명 단속, 불법 고용주 등 2,085명 적발
- ② 법무부의 일관된 단속정책에 따라 2023. 10월 43만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7월 현재 41.4만 명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

법무부는 2024. 4. 15. ~ 6. 30.(77일간)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 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10,756명, 불법 고용주 2,063명, 불법취업·입국 알선자 22명 등 총 12,841명을 적발하였습니다.

※ 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 참여

■ 법무부장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정책현장 방문('24. 7. 23.)

법무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4. 7. 23.(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법무부장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정책현장 방문

- 출국 대기실, 난민신청 대기실 등 운영실태 점검 -

□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024. 7. 23.(화) 11:00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출입국 심사 현장 등 국경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경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 현장 방문은 청장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출국심사장, 출국 대기실*, 보안상황실, 입국심사장, 난민신청 대기실**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 입국 불허된 송환 대상 외국인의 인도적 처우 및 원활한 출국과 환승 구역 내 안전 확보를 위해 외국인이 대기하는 시설

** 난민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받기 전(신청서가

■ 법무부 '24년 제1회 사회통합자문위원회 개최('24. 7. 25.)

법무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4. 7. 25.(목)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법무부 '24년 제1회 사회통합자문위원회 개최

- 한국어 교육 등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정책의 효율화 방안 논의 -


□ 법무부는 2024. 7. 25.(목)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회의실에서 '24년 제1회 사회통합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사회통합자문위원회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4를 근거로 사회통합 관련 사안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15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입니다.

□ 이번 회의는 체류외국인 증가로 이민자 사회통합교육에 대한 수요증가와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민사회 대비 사회통합정책 추진방향'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유효화 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요)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 데 필요한

■ 독립 영웅의 후예 27명, 대한민국 국민 되다.(‘24. 8. 12.)


법무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4. 8. 12.(월)


독립 영웅의 후예 27명, 대한민국 국민 되다.

- 법무부장관, 최이봉 선생 등 독립유공자 14명의 후손 27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 -

□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8. 12.(월) 15:00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제79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행사는 △ 독립유공자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 그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온전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로, 이종찬 광복회장 등도 참석하여 함께 축하를 하였습니다.

■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 시범운영(‘24. 8. 12.)


법무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4. 8. 12.(월)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 시범운영**

- 특정활동(E-7) ‘송전전기원’ 직종 신설, 2년 간 시범운영
- 입찰 가정 부여, 지역 청년 채용 등으로 국민고용 창출·지원 추진

□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송전전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9개 직종에 한하여 허용하는 취업 비자

□ 송전선로 건설 전문인력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전기차 보급 확대 등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할 원전·재생에너지 수송망 확충에 반드시 필요하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특성으로

■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도주자 검거 관련('24. 8. 12.)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도주자 검거 관련)

-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인계받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남, 25세)이 2024. 8. 8.(목) 20:40경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도주하였으나,
- 사건 발생 즉시,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수원남부경찰서 등 출입국관서와 경찰이 합동으로 검거만을 편성하여 CCTV 등을 통해 도주 경로를 확인 및 추적하여,
- 8. 9.(금) 20:09경 경기 이천시 인근에서 도주자를 검거하였습니다.
- 향후, 검거된 도주자는 관련법에 따라 수사 후 강제퇴거 등 의법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지역기반 이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법무부,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 개최('24. 8. 13.)

법무부
보도자료

다시 돌아오세요!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4. 8. 13.(화)

**지역기반 이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법무부,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 개최**

-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 계기, 중앙-지방 이민정책 협력의 장 마련 -

법무부는 지난 7. 25.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 후속조치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8. 13.(화) 14:00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우정 법무부차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충북, 충남, 경북 부지사 및 시·군·구청장협의회관계자 등 총 14명이 참석하였으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시 지방자치단체들의 건의 사항에 대한 향후 이행방안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수요를 비자 등 이민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법무부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표방하는 “지역기반 이민정책 체계 구축 방향”을 중심으로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정식 시행, 계절근로자 확대 등 주요 과제 추진 성과를 공유하였으며,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참여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사('24. 8. 16.)

법무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4. 8. 16.(금)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사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24. 8. 16.(금)자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에 배상업('67년생) 현(現)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임용하였습니다.

신임 배상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2000년 제43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한 후, 법무부 출입국 기획과장,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등 본부 및 일선 주요보직을 역임한 출입국·이민행정 전문가입니다.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신설('24. 8. 29.)

법무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4. 8. 29.(목)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신설

□ 법무부는 지난 8. 13.(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차 회의에서 발표한 산업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산업안전교육 의무 대상인 고용허가제(E-9) 자격 외에 취업이 허용되는 여타 체류자격 외국인에게도 안전교육을 제공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써 금년 9월부터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안전보건기본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교육을 시행합니다.

-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된 사회통합교육으로 전국 335개 운영기관에서 운영 중

276 제5장 주요 보도(설명) 자료

■ 출입국 심사, 이것만 알아도 더욱 편리('24. 9. 4.)

법무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4. 9. 4.(수)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출입국 심사, 이것만 알아도 더욱 편리!

-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영주자격 소지자도
자동출입국 심사대 및 국민 심사대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심사 -

□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024. 9. 4.(수) 14:00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사회통합 이민자 멘도단*(이하 '멘도단')과 함께 다양한 출입국심사 제도 등에 대해 홍보하였습니다.

* 법무부가 한국 사회에 모범적으로 정착한 21개국 39명의 외국인을 위촉하여, 일반 외국인 대상 한국 사회 적응에 대한 경험 공유 및 사회공헌 활동 등 (환경정화 캠페인, 상호문화 이해증진 홍보영상 제작)을 실시하고 있음

○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승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박성재 장관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출입국심사

■ 법무부장관, 충청남도 도지사 및 도청 관계자 접견('24. 9. 10.)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충청남도 도지사 및 도청 관계자 접견)

○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024. 9. 10.(화) 15:00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충청남도 도지사 및 도청 관계자들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외국인정책 추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참석 인사

- (법무부)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정도 출입국정책담당장 등
- (충남도청) 김태흠 도지사, 안호 산업경제실장 등

제1장 일반사항

제2장 주요업무 추진실적

제3장 법령·예규·경비

제4장 주요통계

제5장 주요보도(설명) 자료

Annual Report 277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인사(‘24. 9. 19.)

법무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4. 9. 19.(목)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인사

□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고위공무원 전보(1명)

신 임 직	성 명	현 직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장	반재열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대비 -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24. 9. 26.)

법무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4. 9. 26.(목)

-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대비 -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 주요 정책 및 기대 효과 >

- ① (우수인재 유치) “톱티어(Top-Tier) 비자”, “청년 드림 비자” 등 새로운 비자 제도를 통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우수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
- ② (지자체·민간 참여 확대) “광역형 비자” 도입, “지역특화형 비자” 및 농·어업 “계절근로자 제도”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 제고
- ③ (사회통합 강화) “이민 2세대 자립 지원”과 “맞춤형 사회통합교육”, “통합정책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회통합 촉진 및 갈등 방지
- ④ (과학적 도입관리)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통해 국민 일자리 침해 예방 및 선별 유입, “비자 심사 인프라 강화” 및 입국 전 검증 강화

⇒ (기대효과) 선제적 우수인재 유치를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입 선별과 통합 촉진을 통해 국민 일자리 보호 및 사회갈등 예방

■ 법무부, '24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및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24. 9. 27.)

법무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4. 9. 27.(금)

다시 생각하는
이토록 국민의 아내

법무부, '24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및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 국민 안전 위협 및 민생침해 출입국사범 등에 대한 중점 단속
- 정부합동단속 기간 동안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칙금 및 입국규제 면제 조치

□ 법무부는 불법체류 문제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하여 '24년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 (기간) '24. 9. 30.(월) ~ 11. 30.(토), 2개월간
- (참여)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
- (중점 단속 분야)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배달업 등 국민 일자리 침해 업종, 유증업소 중시지, 불법 입국 및 취업 알선 행위 등

■ 내년부터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부 유료화 시행('24. 10. 2.)

법무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4. 10. 2.(수)

다시 생각하는
이토록 국민의 아내

내년부터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부 유료화 시행

- 이민자의 사회적 책무 강화 -

□ 법무부는 현행 무료로 제공하는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비용 일부 유료화를 '25. 1. 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된 사회통합 교육

□ 법무부는 '09년부터 이민자의 우리 사회 적응과 사립을 위해 전액 정부 재정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 그간 무료로 교육을 제공함에 따라 참여자 학습동기 및 학업성취도 저하 등 부작용이 있어,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참여자가 교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교육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이

■ 중기부, 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와 함께 지방소멸 대응 협력체계 본격 시행('24. 10. 2.)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대한민국
이로운 국민이
아니

보도시점 배포 즉시보도 배포 2024. 10. 1.(화)

중기부, 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와 함께 지방소멸 대응 협력체계 본격 시행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공동 추진
- 행안부와와의 협업구조를 법무·농식품부까지 확대하고, 부처별 정책 수단 연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법무부(장관 박성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0월 2일(수)부터 10월 21(월)까지 '2025년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 프로젝트' 모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지난해부터 중소기업부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지역혁신 공모사업)'의 협업구조를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까지 확대하였다.

■ 무단이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검거 관련('24. 10. 7.)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무단이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검거)]

-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9.15.(일) 무단 이탈한 필리핀인 가사관리사 2명을 오늘(10.4.) 부산 연제구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검거하였습니다.
- 이민특수조사대는 사건 발생 이후 신병확보를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녀 소재를 추적해 오던 중, 상기인들이 불법취업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검거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관련법에 따라 조사 후 강제퇴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24. 10. 18.)


법무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4. 10. 18.(금)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승진 : 2명(서기관)
- 전보 : 2명(서기관)
- 시행일 : 2024. 10. 21.(월)

■ 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를 위한 혁신적 비자제도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도입(‘24. 11. 6.)


법무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4. 11. 6.(수)

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를 위한 혁신적
 비자제도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도입

- 사업성·혁신성 평가로 비자 발급을 통한 해외 유망 스타트업 적극 유치
- 11.7(목)~11.20(수) 신청 접수, 이달 말 최초 특별비자 발급 예정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11.7(목)부터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한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지난 7월말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개소식에서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도입 계획을 발표한 후 운영방안 마련을 통해 이번에 공식적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서울 역삼동) : 외국인 창업자의 거주 정착·법률·회계 상담, 비자취득 및 법인설립 지원, 사무공간 및 네트워킹 제공, 육성 프로그램 등 외국인 창업 종합지원

■ 계절근로자 업무 허용범위 확대 등 농·어촌 계절근로 제도 활성화 추진('24. 11. 26.)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4. 11. 26. (화)

계절근로자 업무 허용범위 확대 등 농·어촌 계절근로 제도 활성화 추진

- ▲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허용범위 확대, 최소임금보장기준 합리적 조정, 결혼이민자 초청방식 개선 및 계절근로 체류자격 통합 등 운영 효율화
- ▲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및 관계기관 협업 강화

□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와 함께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①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허용범위 확대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월급제로 운영되어 축염·장마 등으로 농가에서 일하지 못하더라도 농협에서 임금을 지급하나, 유휴인력의 농협 사업장 근무는 허용되지 않아 운영 손실이 확대됨을 고려하여 공공형 운영 사업장(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내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및 1차 가공, 육묘 관리 등 임무를 허용*합니다.

■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 시행('24. 11. 27.)

법무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4. 11. 27. (수)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 시행

- ①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도입
- ②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합리적 개선

▲ (사례 1) A 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원이 부족하여 외국인력 채용을 희망하나, 어느 부처에 어떻게 건의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 (사례 2)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체류 중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작업반장으로 근무 중인 외국인 B는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을 원하나, 시간이 없어서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를 취득하기 어렵다.

▲ (사례 3) C 건설회사는 매년 바뀌는 연평균 공사금액으로 인해 필요한 숙련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

□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24. 9. 26. 발표한 신(新)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로 ①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도입하고, ②숙련기능인력(E-7-4)

■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2개월 연장('24. 11. 27.)

법무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4. 11. 27.(수)

다시 생각하는
새로운 국민의 나라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2개월 연장

- '25. 1. 31.까지 자진출국하는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 및 입국규제 면제 -

- 법무부는 현재 시행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24.9.30.~11.30.)을 '25. 1월 말까지 2개월간 연장 운영합니다.
- 이번 연장 조치는 보다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스스로 출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연말연시 연휴 등으로 귀국 항공편 예약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25년 1월 말까지 연장하여 운영합니다.
- (기간) '24. 12. 1.(일) ~ '25. 1. 31.(금)
- (대상) 특별 자진출국기간 내에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범정부 통일 사용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4. 11. 28.)

법무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4. 11. 28.(목)

다시 생각하는
새로운 국민의 나라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범정부 통일 사용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법무부는 범정부적으로 통일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입국시 사용한 여권상의 영문성명, 생년월일, 국적 등을 관계 부처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 이에 위 내용을 반영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오늘(11. 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정의) 외국인이 입국 시 행사한 여권상의

■ 법무부, 지역 맞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시행('24. 12. 2.)


법무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4. 12. 1.(일)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

법무부, 지역 맞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시행

- 법무부는 '24. 9. 26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체류 비자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2025년부터 실시합니다.
- 이번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2024년 12월 광역지자체 공모를 시작으로 내년 3월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여 2026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번 시범사업에서 추진될 광역형 비자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무부, '24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약 1만 8천명 출국조치('24. 12. 19.)


법무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4. 12. 19.(목)

법무부, '24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약 1만 8천명 출국조치

- ① 7,419명 강제퇴거, 11,107명 자진출국 조치
- ② 불법 고용주 등 1,692명 적발

□ 법무부는 2024. 9. 30. ~ 11. 30.(62일간)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8,476명, 불법 고용주 1,692명,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16명 등 총 10,184명을 적발하였고 자진출국자 11,107명 포함 총 18,526명을 출국조치 하였습니다.

※ 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 참여

○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불법체류 및 취업 외국인 총 8,476명을

■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 20.7만명 도입 추진('24. 12. 20.)


법무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4. 12. 20.(금)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 20.7만명 도입 추진

- 고용허가(E-9) 13만명, 계절근로(E-8) 7만5천명 등 -
- 업종별 수급전망, 수요조사 결과 및 내년 경기 전망 반영 -

정부는 12.20일(금)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 비전문 외국인력을 20.7만명 수준에서 도입하기로 하였다.

최근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활용의 체계적·통합적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금년 6월 20일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그동안 비자 소관 부처별로 가가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산정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고용허가(E-9), 계절근로(E-8), 선원 취업(E-10) 등 비전문 외국인력의 도입 총량을 협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 서울 소재 최초 「사회통합프로그램 서울 CBT센터」 개소('24. 12. 30.)


법무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4. 12. 30.(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

서울 소재 최초 「사회통합프로그램 서울 CBT센터」 개소

- 법무부와 (재)한국이민재단은 '24.12.30.(월) 이민자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 이해 등 기본소양 평가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서울 컴퓨터 평가(Computer Based Test)센터 개소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 **사회통합프로그램**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 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 한국문화 이해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된 사회통합교육
- 서울 컴퓨터 평가센터(서울 종로구 인사동7길 12 백상빌딩 12층)는 외국인의 체류허가, 영주권 및 국적신청시 이수혜택을 부여하는 「법무부 사회

제1장 일반사항

제2장 주요 업무 추진실적

제3장 법령·예규·경비

제4장 주요 통계

제5장 주요 보도(설명) 자료



APPENDEIX

부 록

- ① 체류자격 일람표
- ② 사증면제협정 현황
- ③ 주요 행사 연설문
- ④ 발간 책자 및 연구 보고서
- ⑤ 역대 출입국관리국장 및 본부장 명단
- ⑥ 본부 및 소속기관 간부 명단
- ⑦ 주요 언론 보도

부록1

체류자격 일람표

(24. 12. 31. 기준)

체류자격	체류자격 대상 및 활동 범위
A-1(외교)	외국 정부의 외교사절단 또는 영사기관의 구성원과 그 가족
A-2(공무)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수행자와 그 가족
A-3(협정)	SOFA 협정에 따른 주한미군, 군속, 초청계약자 및 그 가족
B-1(사증면제)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
B-2(관광·통과)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는 사람
C-1(일시취재)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는 사람
C-3(단기방문)	관광, 상용, 방문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는 사람
C-4(단기취업)	단기간 취업·영리활동을 하는 사람
D-1(문화예술)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
D-2(유학)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정규 교육을 받는 사람
D-3(기술연수)	국내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으려는 해외 법인 생산직 근로자
D-4(일반연수)	대학부설 어학원, 사설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를 받는 사람
D-5(취재)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는 사람
D-6(종교)	외국의 종교단체 등에서 파견되어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
D-7(주재)	외국 기업 등으로부터 국내 지점 등에 파견된 필수 인력
D-8(기업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투기업의 필수전문인력 및 벤처기업·기술창업자
D-9(무역경영)	회사 설립 및 경영, 무역 또는 수입기계 등의 설치·산업설비 제작 등을 위해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
D-10(구직)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 해당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E-1(교수)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 등에 근무하는 사람
E-2(회화)	외국어전문학원 등에서 회화지도에 근무하는 사람
E-3(연구)	자연과학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 분야의 연구원
E-4(기술지도)	산업상 특수한 분야 등에 속하는 기술을 보유한 사람
E-5(전문직업)	법률, 회계, 의료 등 전문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

체류자격	체류자격 대상 및 활동 범위
E-6(예술홍행)	수익을 목적으로 예술활동, 연예, 운동경기 등 활동을 하는 사람
E-7(특정활동)	특정 분야에서 전문, 준전문, 숙련기능인력으로 근무하는 사람
E-8(계절근로)	농작물 재배·수확,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
E-9(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6개 송출국가 국민으로서 제조업 등 단순노무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
E-10(선원취업)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내항선원 등으로 근무하는 사람
H-2(방문취업)	18세 이상 7개 국적의 동포로서 모국 방문 또는 취업하려는 사람 (중국,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F-1(방문동거)	친척방문, 가족 동거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F-2(거주)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장기체류자, 난민인정자 또는 일정요건을 갖춘 투자자
F-3(동반)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 자격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
F-4(재외동포)	「재외동포법」 제2조 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
F-5(영주)	국내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으로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음
F-6(결혼)	국민과 혼인한 사람
H-1(관광취업)	관광취업(Working Holiday) 협정 등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
G-1(기타)	산재·질병치료, 난민신청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부록2

사증면제협정 현황

(24. 12. 31. 기준)

※ 일시중지

주별	국가명	적용 대상여권	협정상 체류기간	발효일자	참고사항
아시아주	라 오 스	외교, 관용	90일	'09.06.26.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말 레 이 시 아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83.09.09.	
	몽 골	외교, 관용	90일	'12.12.26.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단기사증 발급수수료 면제
	미 안 마	외교·관용	90일	'11.04.01.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방 글 라 데 시	외교, 관용, 일반 선원수첩	90일	'83.03.17.	※ '08.7.15 일반여권 및 선원수첩 소지자 사증면제 일시중지(불체급증 사유)
			15일		
	베 트 남	외교, 관용	90일	'99.01.13.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싱 가 포 르	외교, 관용, 일반	90일	'82.11.01.	
	아 르 메 니 아	외교, 관용	90일	'12.05.22.	
	아랍에미리트	외교, 관용, 특별, 일반	90일	'16.09.21.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오 만	외교, 관용, 특별 및 공무	90일	'15.04.11.	
	우즈베키스탄	외교	60일	'09.06.10.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이 라 크	외교			
	이 란	외교, 관용	3개월	'76.12.21.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이 스 라 엘	외교, 관용, 일반	90일	'95.05.24.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91일 이상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인 도	외교, 관용	90일	'05.10.03.	
	인 도 네 시 아	외교, 관용, 공무	30일	'20.02.12.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주재공관원 : 부임 전 사증 취득
	일 본	외교, 관용	90일	'98.12.07.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조 지 아	외교, 관용	90일	'13.04.01.	
	중 국		외교	30일	'13.08.18.
관용			30일	'14.12.25.	
카 자 흐 스탄	외교, 관용 일반	90일	'07.12.05.		
		30일	'14.11.29.	◦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180일 내 최장 60일 체류)	
키르키즈스탄	외교, 관용	30일	'11.05.19.		
캄 보 디 아	외교, 관용	60일	'06.12.20.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쿠 웨 이 트	외교, 관용, 특별	90일	'15.06.24.	※ 총체류기간은 각 180일 기간 중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타 지 크 스탄	외교, 관용	90일	'13.01.08.		

주별	국가명	적용 대상여권	협정상의 체류기간	발효일자	참고사항
아시아주	태국	외교, 관용	제한없음	'67.10.10.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일반	90일	'81.12.09.	
		선원수첩	15일		
	튀르키예	외교, 관용, 일반	90일	'72.05.03.	○ 1987. 3. 1. 양해각서 개정
	투르키메니스탄	외교, 관용	30일	'08.12.06.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30일	'19.05.17.	
	파키스탄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85.06.08.	※ '01.10.1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일시종지(불체금증 사유)
	필리핀	외교, 관용	제한없음	'70.09.01.	○ 체류기간 59일이하의 일반상용(C-3-4), 단기방문(C-3) : 사증발급 수수료 면제
	요르단	외교	90일	'17.05.22.	○ 여권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카타르	외교	제한없음	'22.09.16.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특별, 관용, 일반		90일			
사우디아라비아	외교, 특별	180일 중 90일	'24.02.20.		
미주	과테말라	외교, 관용, 일반	90일	'07.10.04.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91일 이상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외교, 관용, 일반	90일	'91.01.27.	
	그레나다	외교, 관용, 일반	90일	'95.04.08.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선원수첩	15일		
	니카라과	외교, 관용, 일반	90일	'82.03.04.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선원수첩	15일		
	도미니카공화국	외교, 관용, 일반	90일	'90.03.30	
	도미니카연방	외교, 관용, 일반	90일	'79.04.06.	○ 사증수수료, 연장허가수수료 면제
		선원수첩	15일		
	멕시코	외교, 관용, 일반	90일	'84.03.11.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선원수첩	15일		
	바베이도스	외교, 관용, 일반	90일	'88.09.04.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선원수첩	15일		
	바하마	외교, 관용, 일반	90일	'94.11.03.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외교관용여권에 한함)
선원수첩		15일			
베네수엘라	외교, 관용	30일	'94.11.03.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외교관용여권에 한함)	
	일반	90일	'07.12.22.		

주별	국가명	적용 대상여권	협정상 체류기간	발효일자	참고사항
미주	벨 리 즈	외교, 관용	90일	'07.02.08.	※ 파견국 영사관의 외교공헌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가능
	볼 리 비 아	외교, 관용	90일	'11.04.18.	
	브 라 질	외교, 관용	90일	'92.02.10.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외교관용여권에 한함)
		일반	90일		
	세인트루시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90.03.30.	
		선원수첩	15일		
	세인트빈센트 그 레 나 딘	외교, 관용, 일반	90일	'90.07.06.	
		선원수첩	15일		
	세 인 트 키 츠 네 비 스	외교, 관용, 일반	90일	'90.03.30.	
		선원수첩	15일		
	수 리 남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76.08.03.	○ 재입국허가 면제
		외교, 관용, 일반	90일	'90.03.21.	
	아 이 티	선원수첩	15일		
		외교, 관용	90일	'04.07.31.	
	앤티가 바부다	외교, 관용, 일반	90일	'94.12.29.	
		선원수첩	15일		
	에 과 도 르	외교	제한없음	'86.05.29.	
		관용	3개월		
	엘 살 바 도 르	외교, 관용, 일반	90일	'97.02.14.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선원수첩	15일		
	우 루 과 이	외교, 관용, 일반	90일	'94.01.19. '13.01.10.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외교관용여권에 한함)
		외교, 관용, 일반	90일	'93.11.27.	
	자 메 이 카	선원수첩	15일		
외교, 관용		90일	'00.07.18.	○ 재입국허가 면제 (단, C-2, D-7, D-8, D-9에 한함)	
칠 레	일반	90일	'04.10.20.		
	외교, 관용, 일반	90일			
코 스타 리 카	선원수첩	15일	'81.10.22.		
	외교, 관용, 일반	90일			

주별	국가명	적용 대상여권	협정상의 체류기간	발효일자	참고사항
미주	콜롬비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81.12.25.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트리니다드 토바고	외교, 관용, 일반	90일	'94.10.15.	
		선원수첩	15일		
	파나마	외교, 관용, 일반	90일	'01.08.09.	
	파라과이	외교, 관용	90일	'83.01.01.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외교관용여권에 한함)
	페루	외교, 관용, 일반	90일	'82.06.12.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선원수첩	15일		
유럽	그리스	외교, 관용	제한없음	'74.05.15.	
		일반	3개월	'79.02.25.	
	네덜란드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70.06.01.	◦ 재입국허가 면제
	노르웨이	외교, 관용, 일반	90일	'69.10.01.	◦ 재입국허가 면제
	덴마크	외교, 관용, 일반	90일	'69.10.01.	◦ 재입국허가 면제
	독일	외교, 관용	제한없음	'62.01.01.	◦ 주재공무원 : 재임기간
		일반	90일	'74.01.24.	◦ 재입국허가 면제 : '97. 4. 14
	라트비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03.06.27.	◦ 주재공무원 : 재임기간
	러시아	외교, 관용	90일	'04.11.20.	※ 2006.12.31 관용 추가 협정
		일반	60일	'14.01.01.	※ 총체류기간은 각 180일 기간 중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루마니아	외교, 관용	90일	'96.06.06.	◦ 주재공무원 : 재임기간
		일반	90일	'16.03.13.	※ 총체류기간은 각 180일 기간 중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룩셈부르크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70.06.01.	◦ 재입국허가 면제
	리투아니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02.05.09.	◦ 주재공무원 : 재임기간
	리히텐슈타인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79.06.28.	◦ 재입국허가 면제
	몰도바	외교, 관용	90일	'12.07.03.	
	몰타	외교, 관용, 일반	90일	'93.10.23.	
	벨기에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70.06.01.	◦ 재입국허가 면제
	벨라루스	외교, 관용	90일	'08.07.24.	※ 조약 제1902호
	불가리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94.08.13.	◦ 주재공무원 : 재임기간
사이프러스	외교, 관용	90일	'00.12.16.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스웨덴	외교, 관용, 일반	90일	'69.10.01.	◦ 재입국허가 면제	
스위스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79.06.28.	◦ 재입국허가 면제	

주별	국가명	적용 대상여권	협정상 체류기간	발효일자	참고사항
주 편 국	스 페 인	외교, 관용, 일반	90일	'72.04.08.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선원수첩	15일	'75.04.18.	
	슬로바키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95.07.15.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아이슬란드	외교, 관용, 일반	90일	'70.04.01.	
	아일랜드	외교, 관용, 일반	90일	'89.07.12.	
	아제르바이잔	외교, 관용	30일	'08.11.21.	
	에스토니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01.08.18.	
	영 국	외교, 관용, 일반	90일	'69.12.19.	
	오스트리아	외교, 관용	180일	'79.06.25.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일반	90일		
	우크라이나	외교, 공무	90일	'14.09.17.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이탈리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75.05.05.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 상호주의로 90일간 체류기간 부여 (2003. 6. 15.)
	체코	외교, 관용, 일반	90일	'94.11.05.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크로아티아	외교, 관용	90일	'01.06.16.	
	포르투갈	외교, 관용, 일반	90일	'79.09.19.	○ '18. 4. 60일 → 90일로 변경 ※ 쟁건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포르투갈에서 90일 체류 가능, 포르투갈 정부에서 상호주의 요청하여 변경
		선원수첩	15일		
폴란드	외교, 관용, 일반	90일	'93.12.24.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프랑스	외교, 관용, 일반	90일	'67.04.12. ('89.10.01.)	○ 재입국허가 면제	
핀란드	외교, 관용, 일반	90일	'74.03.01.	○ 재입국허가 면제	
헝가리	외교, 관용, 일반	90일	'91.04.25.		
가봉	외교, 관용	90일	'13.08.14.		
아 프 리 카 주	라이베리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82.09.23.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 '19.7.18 일반여권 및 선원수첩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 일시중지(반사회 범죄, 불체증가 사유)
		선원수첩	15일		
	레소토	외교, 관용, 일반	60일	'71.09.05.	
	모로코	외교, 관용, 일반	90일	'93.09.01.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2000. 8. 3 추가 협정)
선원수첩		15일			
베냉	외교, 관용	90일	'92.07.01.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외교관용여권에 한함)	

주별	국가명	적용 대상여권	협정상의 체류기간	발효일자	참고사항
아 프 리 카 주	알 제 리	외교, 관용	90일	'06.08.30.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앙 골 라	외교, 관용	30일	'12.05.25.	
	이 집 트	외교, 관용	90일	'98.06.24.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튀 니 지	외교, 관용, 일반	30일	'69.08.17.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재입국허가수수료 면제 ◦ 30일 이상 체류시 연장수수료 면제 (단, 6개월 초과 불가)
	카 보 베 르 데	외교, 관용	90일	'15.10.14.	
	모 잠 비 크	외교, 관용	90일	'17.02.16.	
	탄 자 니 아	외교, 관용	90일	'18.10.05.	※ 총체류기간은 각 180일 기간 중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에 티 오 피 아	외교, 관용	90일	'23.11.24.	※ '19.08.26. 협정 서명, 발효 대기
	적 도 기 니	외교관, 관용, 공무	90일	'22.09.22.	
대 양 주	뉴 질 랜 드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94.09.30.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뉴질랜드의 ISLANDS, NIUE, TOKELAU 제외
	바 누 아 트	외교, 관용	90일	'18.02.21.	

주요 행사 연설문

“ 주한공관원 대상 외국인 체류·사증 설명회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재유입니다.

금일 “외국인 체류·사증 정책 설명회” 참석을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법무부를 방문해주신
주한공관 영사님들과 직원 여러분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참석하신 오늘 설명회는
기존에 우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개최한
여러 행사들과는 다르게
외국인 체류정책과 비자제도에 주안점을 맞춘 행사로,
자국민에 대한 노무 등 영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어 대한민국 체류정책의 방향을 이해하고
담당자들과 직접 소통,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사에서 최단시간에
가장 빨리 성장한 국가이자,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회복 속도가 빠른 국가입니다.
이제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산업계 등 그 저변에서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역할 또한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외국인정책이 필요한 이 시점에,
 그 중심 국가의 실무진 여러분들과 모여
 최근 도입, 개정된 체류·사증 정책의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들이 해당 제도를 이해하고
 대한민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가교역할로 대한민국 정부와
 본국 정부와의 협력 또한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체류·사증 정책에 대한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이 설명회를 통해 공유하는 내용은
 우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과 방향에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이 설명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상호간에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13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재유**

“ 제17회 세계인 날 기념식 ”

I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부 장관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각국 대사님 등 주한 외교사절단과 국제기구 한국 대표,
인요한 박사님, 김포시장님, 과천시장님을 비롯하여
오늘 주인공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재한외국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으로 규정된 이래로
제17회를 맞이하는 「세계인의 날」입니다.

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률로 지정한 기념일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뜻깊은 기념식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17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올해의 이민자’ 상을 받으시는
 라이안 제라딘 수녀님을 비롯하여
 수상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II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관심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이미 산업계 곳곳에서도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에 필요한 외국인력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
 숙련기능인력 확대, 지역특화형 비자, 계절근로자 제도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고,
 코로나19 이후 감소한 유학생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한편,
 K팝, K드라마 등 한류로 인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려는 외국인과
투자나 창업을 통해 코리안드림에 도전하려는
외국인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감소와
국제적 인구이동 추세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이며,
우리의 직장동료,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민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다양성이 낯설 수도 있지만
질서 있고, 균형 잡힌 사회통합에 힘쓴다면
우리 사회의 역동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새로운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II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재한외국인 여러분!

이와 같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을 이루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민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연간 분야별 취업비자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총량 공표제”를 통해,
 우리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우수 인재의 유입을
 적극 확대하면서도 국민 일자리를 침해하는
 무분별한 유입은 억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이 지역사회에서 잘 정착하고
 지역주민과 공존할 수 있도록
 부처간 벽을 허무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및 민간과도 협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정기적인 정책협의를 활성화하고,
 민간과도 충분히 소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들어
 협력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언어교육과 상호이해 등 사회통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이 불합리한 차별을 겪지 않고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따뜻한 법치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V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내·외국인이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며
또한 사회통합에 공헌한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외국인의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고,
국민과 외국인의 통합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과
행사를 준비해주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20일

법무부장관 박성재

“ 제79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

I

반갑습니다.

법무부 장관 박성재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받기 위해 와주신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예로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이종찬 광복회장님을 비롯한 내외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조국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광복절을 앞두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장소를 제공해 주신 기념관 측에도 감사드립니다.

II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

대한민국은 선조들의 숭고한 피와 땀으로 지켜져 왔습니다.

여러분의 선조들은 목숨을 걸고 일제에 무장 투쟁했던 ‘최이봉’ 선생과 ‘박영’ 선생!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군중을 이끌던 ‘박진성’ 선생과 ‘김필선’ 선생!

지구 반대편 쿠바에서 민족교육과 군자금 모집에 앞장섰던 ‘임천택’ 선생 등!

모든 분들의 이름과 공적을 이루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오로지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III

자랑스러운 독립 영웅의 후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서 있습니다.

해방 이후로는 80여 년간 국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제는 경제와 문화 강국으로 성장하여 어엿한 선진국 반열에 올라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후대에게 더 나은 삶의 터전을 물려주고자 온 국민이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이 여기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받으면, 곧바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됩니다.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이 나라의 당당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께서 35년간의 쓰라린 식민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스스로가 나라의 주인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특별한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자 기둥이 되어 선조들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가치를 한 층 더 높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IV

법무부는 지금까지 여러분을 포함하여 1,392(천 삼백 아흔 두)분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독립유공자는 물론 그 자랑스러운 후손들의 이름까지도 대한민국의 역사에 새겨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후손을 계속 찾아내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의 품 안에서 건강과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12일

법무부장관 **박성재**

부록4

발간 책자 및 연구 보고서

가. 일반 책자 목록

발간 시기	책자 명
2024. 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위한 외국인 업무 지침서
2024. 2.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2024. 6.	2023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나. 전문가 연구 보고서 목록 (www.prism.go.kr 참조)

발간 시기	연구 보고서 명	연구자(단체)
2024. 10.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	이민정책연구원
2024. 11.	이민행정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주)빅스인테크놀로지
2024. 12.	사증심사 및 지원체계 고도화 해외 선진사례 연구	한국행정학회
2024. 12.	이민자 사회통합지수 측정 및 정책 컨설팅	이민정책연구원
2024. 12.	이민행정 분야 중앙-지방 협력 활성화 방안	한성대학교
2024. 12.	「취업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계량분석 연구	이민정책연구원
2024. 12.	외국인 유학생 취업에 관한 비자제도 개선 해외사례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4. 12.	난민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해외 입법사례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록5

역대 출입국관리국장 및 본부장 명단

('24. 12. 31. 현재)

• 출입국관리국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이영환(李永煥)	1970. 9. 1. ~ 1971. 8. 25.	1970. 8. 20. 신설
2 대	정익원(鄭益源)	1971. 8. 26. ~ 1972. 11. 21.	
3 대	안경열(安慶烈)	1972. 11. 22. ~ 1976. 6. 20.	
4 대	이길주(李桔柱)	1976. 6. 21. ~ 1978. 2. 10.	검사장급
5 대	정명래(鄭明來)	1978. 2. 11. ~ 1980. 6. 8.	
6 대	김용인(金用璘)	1980. 6. 9. ~ 1981. 4. 26.	
7 대	김기춘(金淇春)	1981. 4. 27. ~ 1981. 12. 16.	
8 대	정구영(鄭錫永)	1981. 12. 17. ~ 1982. 6. 17.	
9 대	박희태(朴熿太)	1982. 6. 18. ~ 1983. 7. 31.	
10 대	안태현(安泰鉉)	1983. 8. 1. ~ 1987. 2. 28.	일반직
11 대	조기현(曹麟鉉)	1987. 3. 2. ~ 1989. 4. 14.	
12 대	김우진(金宇鎭)	1989. 4. 15. ~ 1991. 6. 30.	
13 대	김시평(金時評)	1991. 7. 1. ~ 1993. 9. 30.	
14 대	홍석종(洪錫宗)	1993. 10. 1. ~ 1995. 3. 31.	
15 대	유병량(兪炳亮)	1995. 4. 1. ~ 1997. 5. 31.	
16 대	구창덕(具昌德)	1997. 6. 1. ~ 1999. 4. 1.	
17 대	김수영(金秀永)	1999. 4. 2. ~ 2001. 6. 30.	
18 대	최수근(崔洙根)	2001. 7. 1. ~ 2003. 11. 21.	
19 대	이민희(李珉熙)	2003. 12. 5. ~ 2005. 12. 4.	계약직
20 대	강명득(姜命得)	2005. 12. 5. ~ 2007. 4. 15.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추규호(秋圭昊)	2007. 7. 10. ~ 2009. 7. 10.	계약직
2 대	석동현(石東炫)	2009. 8. 12. ~ 2011. 8. 21.	검사장
3 대	이창세(李昌世)	2011. 8. 22. ~ 2013. 4. 3.	검사장
4 대	정동민(鄭東敏)	2013. 4. 10. ~ 2013. 12. 23.	검사장
5 대	한무근(韓武根)	2013. 12. 24. ~ 2015. 2. 10.	검사장
6 대	김영준(金英峻)	2015. 2. 11. ~ 2015. 12. 23.	검사장
7 대	진경준(陳景準)	2015. 12. 24. ~ 2016. 5. 22.	검사장
8 대	김우현(金宇鉉)	2016. 5. 23. ~ 2017. 7. 31.	검사장
9 대	차규근(車圭根)	2017. 9. 4. ~ 2021. 7. 1.	일반직
10 대	이재유(李在兪)	2021. 7. 2. ~ 2024. 8. 15.	일반직
11 대	배상업(裴祥業)	2024. 8. 16. ~	일반직

부록6

본부 및 소속기관 간부 명단

(’24. 12. 31. 현재)

가. 본부

직 위	성명	발령일
본부장	배상업	’24. 8. 16.
출입국정책단장	김정도	’22. 9. 19.
국적·통합정책단장	공석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최문정	’24. 7. 15.
출입국기획과장	하용국	’24. 1. 22.
출입국심사과장	이기흠	’23. 8. 17.
체류관리과장	이재형	’24. 1. 22.
이민조사과장	유성오	’24. 1. 8.
이민정보과장	윤철민	’24. 1. 22.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	박주현	’24. 2. 29.
외국인정책과장	이종철	’24. 1. 22.
국적과장	장희정	’23. 8. 17.
이민통합과장	김기락	’24. 7. 15.
난민정책과장	김태형	’24. 1. 22.
난민심의과장	김재원	’24. 10. 21.
외국인정책과 서기관	이한식	’24. 7. 1.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김명훈	’24. 1. 15.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이재인	’24. 7. 15.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이윤호	’24. 9. 7.
출입국기획과 사무관	이주호	’24. 1. 15.
출입국기획과 사무관	임연주	’23. 2. 8.
출입국기획과 사무관	신하균	’24. 10. 21.
출입국기획과 사무관	옥효재	’22. 1. 24.
출입국기획과 사무관	최준호	’23. 2. 8.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김영오	’22. 1. 24.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이상배	’24. 1. 15.
체류관리과 서기관	전동균	’24. 10. 21.
체류관리과 사무관	황민하	’23. 7. 3.
체류관리과 사무관	유수열	’24. 1. 15.
체류관리과 사무관	김은호	’24. 1. 15.
체류관리과 사무관	박정석	’23. 4. 11.
체류관리과 사무관	김진겸	’24. 9. 7.
이민조사과 사무관	홍창기	’24. 10. 21.

직 위	성명	발령일
이민조사과 사무관	김준철	’24. 1. 15.
이민조사과 사무관	김택균	’24. 1. 15.
이민정보과 사무관	서제선	’22. 1. 24.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사무관	김창규	’24. 1. 15.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사무관	송병희	’23. 6. 8.
외국인정책과 사무관	전강섭	’24. 1. 15.
외국인정책과 사무관	박지원	’23. 7. 3.
국적과 사무관	배창준	’23. 2. 25.
국적과 사무관	김용국	’24. 7. 15.
국적과 사무관	강성진	’24. 1. 15.
이민통합과 사무관	김종승	’24. 7. 15.
이민통합과 사무관	최민수	’22. 7. 20.
이민통합과 사무관	주도현	’24. 7. 15.
이민통합과 사무관	박창현	’24. 10. 21.
난민정책과 사무관	김정욱	’22. 1. 24.
난민정책과 사무관	박정원	’24. 1. 15.
난민심의과 사무관	안재필	’21. 1. 1.
난민심의과 사무관	박병건	’23. 2. 28.
법무부 부이사관	박상욱	’23. 2. 1.
법무부 부이사관	박재완	’24. 1. 24.
법무부 서기관	서석주	’24. 3. 27.
감찰담당관실 사무관	김관영	’24. 1. 15.
국무조정실(일반행정) 서기관	김민경	’24. 8. 26.
국민통합위원회 서기관	김병철	’24. 8. 29.
방첩정보공유센터서기관	김세진	’24. 1. 8.
법무연수원 사무관	홍동우	’24. 7. 15.
재외동포청 사무관	윤정희	’24. 7. 15.
재외동포청 사무관	최은영	’24. 7. 15.
국가인권위 사무관	박준현	’24. 1. 15.
KOTRA 사무관	오동록	’23. 2. 24.
국무조정실(대테러센터)사무관	김태진	’24. 1. 15.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	윤영봉	’24. 1. 15.

나. 소속기관

직 위	성명	발령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인천공항청장		공석
인천공항 지원국장	유현송	'24. 7. 15.
인천공항 심사1국장	길강목	'23. 8. 17.
인천공항 심사2국장	최문정	'24. 7. 15.
인천공항 총무과장	이은경	'24. 7. 15.
인천공항 심사지원과장	최해원	'24. 1. 15.
인천공항 입국재심1과장	박창두	'24. 1. 15.
인천공항 입국재심2과장	소윤주	'24. 1. 15.
인천공항 심사 1과장	신안선	'24. 7. 15.
인천공항 심사 2과장	고귀영	'24. 7. 15.
인천공항 심사 3과장	최종문	'24. 1. 15.
인천공항 심사 4과장	김홍수	'24. 1. 15.
인천공항 심사 5과장		공석
인천공항 심사 6과장	이동진	'24. 1. 15.
인천공항 심사 7과장		공석
인천공항 심사 8과장	곽은상	'24. 7. 15.
인천공항 심사 9과장	김관영	'24. 7. 15.
인천공항 심사10과장	최웅석	'24. 1. 22.
인천공항 심사11과장	황선주	'24. 7. 15.
인천공항 심사12과장	최인섭	'24. 1. 15.
인천공항 심사13과장	박영숙	'24. 7. 15.
인천공항 심사14과장	이운선	'24. 7. 15.
인천공항 심사15과장	이재인	'24. 7. 15.
인천공항 정보분석과장	최성은	'23. 2. 8.
인천공항 조사과장	박광균	'23. 2. 8.
인천공항 감식과장	조근휘	'24. 7. 15.
인천공항 보안관리과장	심미림	'24. 1. 15.
인천공항 정보관리과장	김영규	'23. 3. 27.
인천공항 서울역소장	정해정	'23. 2. 8.

직 위	성명	발령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서울청장	반재열	'24. 9. 14.
서울 총무과장	은기범	'22. 1. 28.
서울 관리과장	배덕환	'24. 10. 21.
서울 이민특수조사대장	임용성	'24. 1. 8.
온라인체류사증민원센터장	이향숙	'24. 7. 15.
서울 국적·통합과장	이청훈	'24. 1. 15.
서울 난민과장	이미라	'24. 1. 15.
서울 사법과장	김종오	'24. 7. 15.
서울 조사과장	조기수	'24. 1. 15.
서울 이민특수조사대	이정민	'24. 1. 15.
서울 사무관	김경아	'24. 1. 15.
서울 사무관	황미숙	'24. 7. 15.
서울 정보화센터장	김희성	'22. 7. 1.
서울정보화센터사무관	이용규	'24. 5. 1.
서울정보화센터사무관	권만희	'23. 3. 27.
서울 세종로소장	이원호	'24. 7. 15.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부산청장	이동휘	'22. 3. 8.
부산 관리과장	이상한	'24. 7. 15.
부산 심사과장	김순옥	'23. 2. 8.
부산 조사과장	곽범현	'24. 7. 15.
부산이민특수조사대장	정영부	'24. 1. 8.
부산 사무관	손병찬	'22. 2. 21.
부산이민특수조사대 사무관	김종기	'24. 10. 21.
부산 김해소장	정승화	'24. 1. 15.
부산 감천소장	권선희	'24. 7. 15.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인천청장	송소영	'24. 1. 8.
인천 관리과장	조승래	'24. 7. 15.
인천 심사과장		공석

직 위	성명	발령일
인천 조사과장	김두섭	'24. 1.15.
인천 사법과장	최연준	'24. 1.15.
김포다문화센터장	안숙향	'24. 7.15.
인천 사무관	문영희	'24. 7.15.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수원청장	김현채	'23. 2. 8.
수원 관리과장	정금심	'24. 1. 8.
수원 사법과장	유심희	'24. 7.15.
수원 조사과장	천영우	'24. 1.15.
수원 평택항만소장	윤병승	'23.11. 7.
수원 평택소장	최진혁	'24. 1.15.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청장	차용호	'24. 1.24.
제주 관리과장	박상원	'24. 1.15.
제주 심사과장	이정철	'24. 1.15.
제주 조사과장	이동용	'24. 7. 3.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서울남부사무소장	이승현	'24. 7.15.
서울남부 관리과장	김기성	'24. 1.15.
서울남부 사법과장	이호수	'24. 7.15.
서울남부 조사과장	김병권	'23. 2. 8.
영등포센터장	서봉희	'23. 7. 3.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안산사무소장	구본준	'23. 2. 8.
안산 관리과장	김종무	'24. 7.15.
안산 조사과장	주재봉	'24. 1.15.
안산다문화센터장	이대수	'24. 7.15.
시흥다문화센터장	배용호	'24. 1.15.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김해공항사무소장	소장	
김해공항 심사지원과장		공석
김해공항 심사과장	박민구	
김해공항 사무관		공석

직 위	성명	발령일
김해공항 정보관리과장	공석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구사무소장	김홍규	'24. 1. 8.
대구 관리과장	김병희	'24. 7.15.
대구 심사과장	최재원	'24. 1.15.
대구 조사과장	용창식	'24. 7.15.
대구 구미소장	박영신	'24. 1.15.
대구 포항소장	조은주	'24. 1.15.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전사무소장	이종국	'23. 9. 1.
대전 관리과장	김용진	'24. 1.15.
대전 조사과장	박인순	'24. 1.15.
대전 천안소장	신한진	'24. 1.15.
대전 천안사무관	김대곤	'24. 7.15.
아산문화센터장	이수영	'24. 7.15.
대전 서산소장	박홍상	'24.10.21.
대전 당진소장	백종규	'24. 7.15.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여수사무소장	김태완	'24. 1. 8.
여수 관리과장	박형술	'24. 1.15.
여수 사법과장	신학수	'23. 7. 3.
여수 보호과장	김대중	'23. 2. 8.
여수 의무과장		공석
여수 광양소장	정왕교	'24.10.21.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양주사무소장	이호원	'24. 7.15.
양주 관리과장	권육례	'24. 7.15.
양주 사법과장	김종철	'23. 2. 8.
양주 조사과장	조홍남	'23. 3. 7.
양주 고양소장	이명표	'24. 1.15.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울산사무소장	박진수	'24. 1. 8.
울산 관리과장	이성문	'24. 7.15.

직 위	성명	발령일
울산 심사과장	이강록	'23. 2. 8.
울산 보호과장	배천기	'24. 7.15.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김포공항 사무소장	구병모	'24. 7.15.
김포공항 심사과장	최은숙	'24. 7.15.
김포공항 사무관	안현숙	'23. 2. 8.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주사무소장	김용규	'23. 8.17.
광주 관리과장	최종원	'24. 7.15.
광주 조사과장	강형욱	'24. 1.15.
광주 목포소장	김형진	'24. 7.15.
광주 무안공항소장	조영주	'24. 1.15.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창원사무소장	김재남	'24. 1. 8.
창원 사무관	전성엽	'24. 1.15.
창원 사무관	김성	'24. 1.15.
창원 거제소장	조재용	'24. 1.15.
창원 통영소장	권오인	'24. 7.15.
창원 사천소장	김효수	'24. 7.15.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춘천사무소장	박찬순	'24. 1. 8.
춘천 사무관	김기협	'24. 1.15.
춘천 속초소장	김종석	'23. 7. 3.
춘천 동해소장	김윤기	'24. 7.15.
춘천 고성소장	박송배	'24. 7.15.

직 위	성명	발령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청주사무소장	김종복	'24. 1. 8.
청주 심사과장	하재춘	'24. 1.15.
음성다문화센터장	강대평	'24. 1.15.
청주 사무관	이연주	'24. 7.15.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주사무소장	임은진	'24. 1. 8.
익산다문화센터장	홍정임	'24.10.21.
전주 사무관	공석	
전주 군산소장	김호진	'24. 7.15.
〈화성외국인보호소〉		
화성보호소장	강성록	'24. 1. 8.
화성보호소 관리과장	김일곤	'24. 1.15.
화성보호소 사범과장	임휴빈	'24. 7.15.
화성보호소 보호과장	유용재	'24.10.21.
화성보호소 의무과장	윤석영	'21. 9.27.
〈청주외국인보호소〉		
청주보호소장	서영군	'24. 7.15.
청주보호소 관리과장	이우진	'24. 3. 7.
청주보호소 사범과장	김현호	'24. 7.15.
청주보호소 보호과장	김상희	'24. 7.15.
청주보호소 의무과장	박은실	'17. 4.24.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출입국지원센터장	류재석	'23. 8.17.
출입국지원센터 사무관	임동규	'24. 7.15.
출입국지원센터 사무관	공석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부록 ⑦
부록 ⑥
부록 ⑤
부록 ④
부록 ③
부록 ②
부록 ①

서울경제

2024년 01월 05일 금요일 A04면 종합

단체관광 비자 수수료 면제국 확대

관광·소비 활성화

내국인 '여행가는달' 2회로 늘려

정부가 올해 방한 관광객 2000만 명 달성을 위해 비자 제도를 개선한다. 숙박 쿠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 내국인의 국내 지역 관광도 유도한다.

우선 지난해 한시 도입된 중국인 단체관광객 전자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1만 8000원 상당) 조치를 1년간 연장하고 면제 대상국에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인도·캄보디아 등의 5개국을 추가한다.

전자 비자 발급이 가능한 의료관광 우수 유치 기관 선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역시 검토한다. 현재는 의료관광 초청 실적 50건 또는 외국인 진료 실적

500건 이상인 경우 법무부의 의료관광 우수 유치 기관에 지정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단체 여행 트렌드를 반영해 승합차 등 소규모 맞춤형 관광 교통수단도 확보할 방침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 요금에 붙은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정책은 손본다. 기존 관광호텔뿐 아니라 한국전통·수상관광·의료관광·가족·소형 호텔, 호스텔, 휴양 콘도미니엄에도 부가세 환급을 적용하기로 했다.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당근책 또한 준비한다. 매년 6월 진행된 '여행 가는 달'이 연 2회(2·6월)로 늘어나고 이와 연

세계일보

2024년 01월 05일 금요일 008면 사회

'취업비자 총량 사전공표제' 시범 도입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 분류도 정책 수요 예측 가능성 제고 기대

백준우 기자 jm100@segye.com

법무부가 연간 취업비자 발급 총량을 산업 분야별로 사전 공표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시범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적용 대상은 전문인력(E1~E7) 및 비전문인력(E8~E10) 취업비자다.

법무부는 전문인력 비자에 △요양보호사(추후 확정) △항공기기·항공기부품 제조원(300명) △송전 전기원(300명) 등 3개 분야를 신규 도입하고, 비자 발급 총량을 설정했다. 또한 매년 3만 5000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비전문인력 비자의 경우 계절근로(E8) 4만9286명, 비전문취업(E9) 16만5000명, 선원취업(E10) 2만 2000명 한도 내에서 각각 발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제도 도입 배경에 대해 인구 감소에 따른 산업 전반의 외국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문·숙련 인력을 체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26~2031년 인력 부족 규모는 제조업에서만 최소 27만6000명, 사회복지업은 최소 21만5000명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채용 기업과 국내 외국인 유학생 등 정책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 또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 측은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올 한 해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통계 분석을 고도화한 뒤, 내년부터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체계적인 이민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발굴하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07 주요 언론보도

서울경제

2024년 01월 09일 화요일 A23면 사회

외국인·고령자↑ 청년·40대 ↓ 활력 잃어가는 국내 고용시장

고용부, 작년 12월 노동시장 동향
고용보험 상시가입 29.6만명 증가
34개월만에 처음으로 30만명 하회
경제 하리 40대는 두달 연속 감소

국내 고용 시장이 활력을 점점 잃고 있다. 청년과 40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점점 줄고 그 자리를 외국인 근로자, 고령자가 대신하는 일종의 자리바꿈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이 상황은 자연적인 인구 감소와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확대 정책에 기인한 만큼 당분간 바뀌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고용행진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5만 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만 6000명 증가에 그쳤다. 상시 가입자 수 증가 폭이 30만 명대 밑으로 떨어진 것은 34개월 만에 처음이다.

고용 시장 지표 곳곳이 활력을 잃어가는 모양새다. 우리나라 산업 조업 가입자 수 증가 폭도 11개월 만에 그쳤다. 지난해 7월 11만 7000명 기록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한 것은 우리나라 40대 가입자의 감소다. 지난해 11월 2000명에 이어 11월 1900명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40대 가입자 감소는 1998년 2

40대 고용보험 가입자 추이



도입 이래 처음이다. 40대 가입자는 두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이제 추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40대 인구 자체가 13만 9000명 감소했기 때문이다. 29세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이미 지난해 8월부터 5개월 연속 마이너스 1%대를 기록했다.

이런 고용 시장의 공백을 메우는 주체는 외국인 근로자와 고령자다. 12월 고용 하회제 대상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규모는 13만 8000명이다. 전체 가입자 증가 폭(29만 6000명)의 절반에

국민일보

2024년 01월 11일 목요일 014면 사회

정선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폭 확대

라오스 사이타나와 업무협약

김원도 정선군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폭 확대한다.

최승준 정선군수와 지역농협 조합장으로 구성된 정선군 방문단이 10일 라오스 사이타나에서 우수 농업종사자 선발과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확대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올해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524명을 운영하고 자치단체 간 우호 교류를 늘려가기로 했다.

정선군은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227명을 농가에 배치했다. 여량농협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시범 설치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50명을 운영하는 등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8%가 계절근로자 도입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농가에 배치되는 인원과 운영 기간 확대를 요청하는 답변도 97%로 높게 나타났다.

올해는 80개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379명이 배치된다. 정선·에미·여량·

임계농협 등 지역농협 4곳에서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145명을 운영한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특정 농가가 아닌 지역 농협에 소속돼 일손이 필요한 농가가 신청하면 농가에 찾아가 농사일을 돕는 사

업이다. 또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제도를 통해 모집한 계절근로자 85명도 16개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서승진 기자 sjseo@kmbi.co.kr

서울경제

2024년 01월 11일 목요일 A26면 문화

일과 여행을 동시에... '디지털 노마드' 모셔라

세계 '워케이션 비자' 발급 확산
에콰도르·스페인 등 38개국 운영
한국도 올해부터 시범 운영 도입
1년이상 체류로 관광·경제 활성화
IT 등 고소득 인력 치열한 유치전

30대 미국인 피터는 지난 주말 갈라파고스섬을 다녀왔다. 이번 주말에는 명산인 코트파사산을 등반할 예정이다. 미국 IT 대기업 소속인 그는 지난해부터 에콰도르에서 근무하고 있다. 에콰도르 정부로부터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발급받아서다. 인터넷이 미국 내에 비해 다소 느린 하지만 생활비가 저렴하고 레크리에이션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미국 본사와 시간대가 같은 것도 장점이다.

노마드(유목민)처럼 세계를 여행하면서 원격으로 일하는 고소득 인력을 자국 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디지털 노마드 비자 유치전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디지털 노마드 비자는 전통적인 워킹비자와 달리 소득원이 본국에 있어 여행자가 내국인과 과 일차리를 두고 경쟁을 하지 않는 반면 여행국가에서 소비세율은 높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비자 가이드북 드를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디지털 노마드 비자' 시스템을 운영 중인 나라는 에콰도르를 비롯해 도미니카·케이맨제도·그리스·스페인·조지아 등 38개국에 달했다. 신청자의 소득과 근로 형태, 거주지, 재산, 신용 등을 감안해



해외 원격근로자들이 국내에서 관광하며 정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가 올해 도입된다. 사진은 인천 무의도의 워케이션 시설. 사진 제공=관광공사

국가명	체류 기간	월 소득 제한	국가명	체류 기간	월 소득 제한
그리스	1년(최대 2년)	504만원	에콰도르	2년	168만원
스페인	1년	316만원	두바이	1년	490만원
포르투갈	1년(최대 5년)	72만원	말레이시아	1년(최대 2년)	263만원
조지아	1년	263만원	한국	1년(최대 2년)	708만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발급하며 1년 이상의 장기 체류, 면세 혜택, 근무 공간 정보 등을 제공한다.

과거 중남미의 서인도제도 국가나 남태평양 도서·노마드가 발급하던 이 비자는 쿠

는 신청자에게 최대 2년까지 자국에 머무를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스페인은 월 2400달러(약 318만원)의 소득과, 최소 18세 이상인 한해

우레과라도 올해부터 디지털 노마드 비자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달 29일 법무부는 소득이 한국의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외국인의 신청에 대해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신청자의 연 소득은 8500만원이 되어야 한다. 아시아에서는 대만과 말레이시아, 두바이에 이어 4번째 디지털 노마드 비자 발급 국가가 됐다.

다만 10일 현재 비자 신청은 아직 없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관광업계에서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가 쇄빙기 위해

서울경제

2024년 01월 16일 화요일 A04면 종합

日 외국인 전문인력 26%...韓은 6% 그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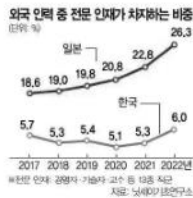
< 전체 외국인력 대비 >

日정부, 외국인 유학생 정착 주력
韓도 단순노동 인력정책해서 탈피를

"한국은 단순노동 인력 중심의 외국인 정책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일본 대표 싱크탱크닛세이(초연구조소의 경영중추연구원)는 서울경제신문을 만나 최근 겪은 당혹스러운 경험을 털어놓았다. 일본의 한 유학 언론사가 한국의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정책'을 취재하기 위해 김 수석연구원을 찾아왔는데 전말 말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2004년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한국이 일본보다 외국인 수용에 더 열려 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우수 전문 인재'로 꼽혀 보면 일본이 한국보다 한참 앞서 있었다"고 말했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2022년 일본의 외국인 취업자중 전문인력(경영자·기술자·고수 등 13종 직군) 비중은 26.3%로 한국(6.0%)의 4배가 넘는다. 우수 인재 유치 속도도 일본이 한층 빠르다. 일본의 전문인력 비중은 5년 새 7.7%포인트 뛰었지만 한국은 0.3%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랬다. 한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은 30년 이상 단순노동 인력 중심의 외국인 정책을 지속한 반면 일본은 2013년부터 우수 인재 유치 정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전문 인재 영입에 공들였던 것은 고령화로 기업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일본 부족은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일정 부분 배울 수 있었다. 하지만 여성은 육아를 병행하고 고령자는 체력 등의 이유로 적은 근무시간을 선호한다는 점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작

을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정착시키는 데 우선 주목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비영어권인 일본에 대해 외국인이 가지는 심리적 벽이 높다고 판단해 일본어에 익숙한 유학생을 먼저 공략한 것"이라며 "정부 유학 생활 초기부터 취업 상담, 인턴십 지원에 나서는 센터를 직접 운영한 것에 대한 효율이 컸다"고 말했다.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 중 일본에서 최

대한 학생의 비중은 40%(2020년 기준)에 달한다. 한국(16%, 2022년)의 두 배가 넘는다. 일본은 외국에서 직접 인재를 유치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일본은 세계 대학 순위에서 100위권 이내 대학 졸업생이 일본에서 취업하기 위해 입학할 경우 단기 체류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2년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연봉이 2000만 엔(약 1억 8000만 원) 이상인 외국인인 회사 학위가 있거나 경력 10년 이상이면 1년 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10년까지 끌려던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셈이다.

도쿄·박광자 기자



07 주요 언론보도

한국일보

2024년 01월 23일 화요일 A12면 종합

“이민청 우리가 최적” 지자체 유치 총력전

1500명 일자리 1조 경제 효과
지역내 생산인력 증가 등 기대

김포·인천·고양 등 수도권 지자체
외국인 많은 도시 부각시키고
전남·경북 등 지방소멸 위기경조

정부가 지난해 12월 저출생 고령화
에 따른 '인구절벽'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관리하는 '가정·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 방침을 밝히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속속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 유치시 경제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비수도권은 물론 외국인 거주가 많은 수도권 지자체들도 자신들이 적격지임을 자처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이민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확정 한 법무부는 이민청 신설로 1,500명 일

자리창출 △1조 원 이상 경제효과 △지역 내 생산인력경제활동 인구 증가 등 예상했다. 이민청은 1차장 1관 4국 규모 구성이 유력하고 2027년 개청이 목표다.

전국 지자체들은 각기 자기 지역의 특장점을 내세우며 유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김포시가 지난해 5월 일찍이 유치에 공식화했다. 김포시는 외국국적동포보다 등록 외국인이 많은 다문화 도시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인천-김포국제공항과 경인항이 30분 내외인 점도 강조한다.

이미 재외동포청은 송도신도시에 위치한 인천시도 '이민이 대한민국 이민역사의 시작'이라며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인천시는 재외동포청으로 지역 내 연간 생산유발 968억 원, 부가가치 유발 587억 원, 1,100여 명 일자리창출 효과를 기대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는데, 이민청 유치는 여기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도 올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경기도에는 대한민국 전체 외국인의 33%인 약 75만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이중 고양과 주포현 등 경기도 북부권에는 11만 명이 거주하는 만큼 고양시가 이민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에서 외국인 인구가 가장 많은 기초단체인(10만 1,850명, 2022년 통계청) 경기 안산시도 300명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몰이에 나섰다.

전남도는 고령화 비중이 전국 1위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이민 정책 컨트롤 타워 최적지임을 내세운다. 광안항 무안국제공항-KTX-고속도로 등 육해공 교통 인프라를 갖춘 동북아 관문도시로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도 홍보의 포인트다. 경북도는 22개 시군 중 15개 시군이 인구소멸 지역, 고령화 비중도 전국 2위, 2040년까지 생산연령인구 30%

감소(전국 평균 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민청 유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부산시도 지난해 9월 시민단체 중심으로 '이민청 부산유치 시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이민청 유치 작업을 본격화했다. 충남 천안시는 KTX 천안-아산역일원을 최적지로 꼽으며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10만 시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충남도도 비수도권 가운데 가장 많은 외국인 거주(13만 6,000명)라는 광역단체라는 점을 내세워 천안시 유치를 뒷받침 자처하고 있다. 김호근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민희망자도 결국 교통·복지·교육 등 정주여건을 우선시할 것이라 수도권과 견줘도 손색없는 지방도시들의 정주여건 개선이 이민청 설립에 선행돼야 할 과제"라며 "공공기관인 이민청이 비수도권에 설치된다면 다양한 문제를 더 심각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수 기자

세계일보

2024년 01월 25일 목요일 001면 종합

인구위기 극복 '이민'에 답 있다

연중기획 **소멸위기 대한민국, 미래전략 세우자**

저출생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
"출산율 제고 장기적 플랜 필요"
블루칼라 공급 넘어 새들 짜야"

이종민·이민경·박지현·구윤모 기자, 세종·이희경 기자
jngnm@segye.com

"데르하비(안녕하세요)"

지난 19일 점심 무렵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 케밥 가게. 식당에 들어선 손님에게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아르바이트생 카산(25)씨가 튀르키예어로 인사를 건넸다. 손님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다소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곧장 "헬로우. 헬

캅"이라고 영어로 고쳐 말하며 자리를 안내했다.

가게 안에서 금발의 외국인들이 영어로 대화를 나누는가 하면 다른 낯선 언어도 곳곳에서 들려왔다. 카산씨가 말하는 이 작은 가게는 다문화·다인종·다민족·다국적 국가로 변모하는 '글로벌 뉴 코리아'의 축소판이다. <시리즈 5편>

대한민국은 체류외국인 250만명 시대를 넘어 300만명 시대를 맞고 있다. 24일 법무부·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거주 장단기 체류외국인 수는 250만 7584명으로 전체 인구(5132만 5329명)의 4.89%에 달한다. 전월보다는 8.1%, 전년보다는 11.7% 늘어난 수치다. 체류외국인 수는 2016년 200만명, 2019년 252만명을 각각 돌파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춤하다가 2022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 나라의 외국인 비율이 5%를 넘는 경우 다문화사회로 보고 있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국제적으로도 다문화 국가에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국가소멸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는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대대적 외국인 유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그 배경엔 '육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한국'(뉴욕타임스)의 위기가 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3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만 753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50명(7.6%) 줄었다. 이는 1981년 월간 통계 작성 이후 11월 기준 최저치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4월(1만 8484명)부터 8개월 연속 1만명대에 머물렀다. **▶ 5면에 계속**



서울경제

2024년 02월 03일 토요일 A05면 경치

與 ‘한동훈표’ 이민청 설립 법안 발의

출입국 업무 범무-이민청 이관
당장 “쌀값 안정, 5만톤 더 매입”
“천원 아침밥” 정부지원 2배 늘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민정책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고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한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설립안이 2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이민청 신설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무부 중심으로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유관 부처 조율을 거친 뒤 의원입법 형식을 띠었다.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이민청을 신설하고 42개 법률에 적시된 출입국 업무를 법무부 장관에서 이민청장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이 시행되면 이민청은 출입국 및 체류 관리, 국적, 난민, 외국인 사회 통합 등 출입국·이민 관리에 관한 사무 전반을 맡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면 이민청 신설 필요성과 세부 계획 등에 대한



한동훈(앞줄 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설 명절 요역을 구획한 뒤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방침이다. 다만 총선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현 21대 국회 회기 내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여당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간의 쌀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11월 발표한 5만 톤에 더해 농협 등 민간 물량 5만 톤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렇게 확보한 총 10만 톤의 쌀을 식량 원조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함께 참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 협조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에 쌀을 배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다가는 세 학기부터 연행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한다. 한 위원장이 전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원 단가 인상 방침을 공개한 데 이어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단가 인상을 공식 확정했다.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현재 학생이

세계일보

2024년 02월 08일 목요일 001면 종합

연중기획 소말리아 대한민국, 미래전략 세우자

다문화 인구 115만명 시대 정책이끌 참정 기회 넓혀야

총 인구의 2.2%~ 국회의원 단 1명
도전장 내달렸던 후보 번번이 고배
자역 기만 약해 비례후보 포진 필요
정치권 공감은 하자만 논의 무관심

박지현·구필호 강승훈기자, 도쿄·광주영 특파원
g1@segye.com

초저출생·초고령화에 따른 국가소멸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이 생존을 목표로 ‘이민국가’를 모색하고 있으나 귀화 한국인, 다문화 가정 출신이 스스로 국적과 지방정치가에 참여해 정치적 의사결정권을 갖는 여건이 열소하다. 다문화 가정 2·3세의 정치적 기반이 아직 미약한 만큼 이들의 권익 증진과 차별 해소를 포함해 총합적인 목소리를 우리 정치 과정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치권이 여성, 청년과 같은 세대 정책을 전개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7일 법무부 통계청에 따르면 1996년 이래 2022년까지 총인구의 1.9%인 21만 2천 233명이다. 2022년 기준 귀화인이나,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결혼이민자 기구를 뜻하는 ‘다문화가정’은 39만 3천 396가구, 그 구성원인 ‘다문화인구’는 115만 1천 004명에 이른다. 이는 한국 총인구(2022년 5167만 2569명)의 2.2%

에 해당한다. 인구비율로 계산하면 국회의원 경수 300명 중 6명은 다문화 출신이어야 자연스럽다. <관련기사 6면> 실제 상황은 만만치 않다.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76년간 귀화한 다문화가정 출신 전 현직 국회의원은 1명. 지방의원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누적 탈북민 3만 4078명(지난해 12월 기준) 중 국회의원 3명(태영호·지성호 의원, 조영철 전 의원)이 배출된 것과 비교해도 미미하다.

현 21대 국회에서 귀화한 다문화 출신은 임기 만료 4개월을 남기고 지난 1월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의원(대전)이 유일하다. 필리핀계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여의도에 입성할 어중만 출신 국회의원 1호다.

이 의원에 앞서 국회의원에 도전한 귀화인은 번번이 고배를 대셨다. 최초의 귀화인 출신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기록된 필리핀계 헤르난데스 주디스 알레그레는 2008년 18대 총선(초선) 한국당 비례대표 7번에, 리사에게 박노자 노태우가 국립오송로대 교수(한국학)는 19대 총선(초선)신당 비례대표 6번에 나섰으나 금배지를 받지 못했다. 베트남계 원유금 이주연(전 동행 대표)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민교원심사단 투표에서 탈락하며 아쉬움을 삼켰다. **▶ 6면에 계속**

부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07 주요 언론보도

매일경제

2024년 02월 13일 화요일 A21면 사회

“우크라 전쟁 징집 싫어”... 난민 신청 러시아인 폭증

韓정부에 작년 5700명 접수
2022년 대비 5배 넘게 늘어

지난해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러시아인이 5700여 명으로 직전 연도보다 5배 넘게 뛴 것으로 집계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늘어났다. 12일 법무부의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에 접

수된 난민 신청 건수는 총 1만8838건이었다. 난민 신청 건수는 2021년(2341건)과 2022년(1만1539건)에 이어 꾸준히 증가 중이다. 지난해에는 러시아 국적자의 신청이 5750건(30.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카자흐스탄(2094명) 중국(1282명) 말레이시아(1205명) 인도(1189명) 등의 순이었다. 직전 해인 2022년에는 카자흐스탄 국적 신청자

가 2456명으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 국적 신청자는 1038명이었지만 1년 만에 러시아 국적 신청자 수가 5배가 된 것이다.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4년부터 2019년까지 26년간 러시아인 난민 신청을 합친 숫자(5814건)와도 비슷한 규모다. 난민 신청 사유로는 ‘기타’를 제외하면 징집 거부 등을 포함해 ‘정치적 의견’을 접은 사례가 4580건으로 가

장 많았다.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러시아 국적자의 난민 신청이 증가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어 종교(2665건) 특정 사회 구성원(1205건) 가족 결합(887건) 인종(719건) 등의 순이었다. 다만 난민 인정률은 1%대에 그쳤다. 지난해 난민 심사가 완료된 5950건 중 난민으로 인정된 사례는 101건(1.7%)으로 인정률이 제2년(3.6%) 대비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인도적 체류(129건)를 포함한 보호율은 3.9%였다. 이송유지자

세계일보

2024년 02월 13일 화요일 010면 종합

“2030년 軍 장병 5% 다문화가정 출신”

저출산 영향 2030년 1만 전방
“적성 등 고려 보직 배치 필요”

국방연구원 정책 발전 보고서

구원모 기자 | segye.com

2030년에는 현재 군 장병의 5%가 다문화 가정 출신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홍숙지 KIDA 연구위원은 ‘군 다

문화 정책 발전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예측했다.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들은 병역법이 2009년 개정되면서 입대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인종과 피부색과 관계없이 병역 의무를 지게 됐기 때문이다. 2010년에는 51명에 그쳤지만 2018년은 한 해에만 1000명이

넘는 다문화가정 출신이 입대했다. 2030년에는 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2년에는 군 장병 중 다문화가정 출신의 비율은 1% 수준이었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인한 입영 장병 수 감소와 맞물려 2030년부터는 5% 수준을 유지하리라는 게 홍 위원장의 전망이다. 홍 위원은 “현재 다문화 장병에 대한

지원정책은 일부 종교 및 식단 지원 등 최소 복지에 국한됐다”며 다문화 장병들이 군의 일원으로 원활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다문화 장병을 관리할 때 한국에서 태어난 다문화 장병보다 우리 문화에 친숙하지 않은 중도 입국 다문화 장병을 따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을 확인한 뒤 적성 등을 고려해 보직 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재언했다.

한국일보

2024년 02월 13일 화요일 A11면 사회

사회복무요원 소집 3년 대기... 법원 “한국 국적 취득 기회 줘야”

장기간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다가 자리가 나지 않아 결국 전사근로 역병역판정검사 5급으로 전사제단 군 사지원입부에 투입되는 인원으로서 편입된 이중국적자는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아 한국 국적 취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국적 선택 신고와 병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93년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A씨는 2017년 병역판정검사(신검)에서 신체

“전사근로역 편입된 이중국적자 군 복무 마친 것으로 봐야” 판단
등급 4급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그 시기 사회복무요원 편입 인원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자 군 당국은 A씨 소집을 3년가량 미뤘고, 2021년 결국 A씨를 소집하지 못한 채 전사근로역에 편입했다. 이에 A씨는 이듬해 “사실상 군 복무를 마친 것이나 다름없다”며 출입국청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내고 한국 국적 선택을 신고했다.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한국의 국적법상, 만 20세가 되기 전에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은 22세 이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어른이 되어서까지 한국·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중국적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엔 복수국적을 유지한 채로 한국인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출입국 당국은 A씨가 병역을 제대로 마치지 않았다고 판단.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집되지 않은 3년간 대기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현역에 입대하거나 타 지역 기관을 적극적으로 알아볼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는 이유다. 지침상 전

사근로역 편입자 본인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그러나 A씨 손을 들어줬다. △군 복무를 하지 못한 건 A씨 책임이 아닌 데다 △병역 회피 우려가 없었으며 △언제 소집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학업이나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은 점을 참작한 것이다. 재판부는 “외국 국적 불행사 사유를 통해 복수국적을 용인하는 것은 병역의무 이행을 권장하기 위한 취지로서, A씨를 대상에 포함해도 입법취지에 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기 기자

서울신문

2024년 02월 14일 수요일 009면 종합

인구 늘리고 경제 살리는... '지역특화 비자' 외국인 3291명 온다

전북 김제시 관내 중소기업에선 '지역특화 비자'를 받은 외국인 160명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근무하고 있다. 국내 전문학사 이상 졸업, 한국어 능력 3급 이상을 갖춘 외국인 우수 인재다. 기업은 양질의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정주 인구가 증가해 만족도가 높다.

13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지역특화 비자가 지방의 새로운 인구 정책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특화 비자는 거주·취업·소득·학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우수 인력에게 광역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2-2)를 발급하는 제도다. 지자체·지역 기업·외국인이 모두 만족하는 맞춤형 비자 정책으로 법무부가 지난해 시범 도입했다.

법무부는 올해 지역특화 비자 발급 대상 쿼터 3291명을 최근 전국 지

시도별 지역특화비자 배정인원



자체에 배정했다. 지난해 1500명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취업할 수 있는 업종도 26개에서 음식·서비스업, 방문 보건업 등을 추가해 29개로 늘렸다.

대상 지자체도 지난해 9개 시도 28개 시군에서 10개 시도 66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했다. 시범사업 추진 결과 성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되며, 지역특화 비자 신청 지자체가 크게 늘었다. 다산업 구조, 지역 특성을 종합 분석해 필



지자체들이 지역특화 비자 쿼터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인구를 늘리고 경제도 살릴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기 때문이다. 지역특화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가족까지 동반 거주·취업이 가능해 이탈률도 낮다. 전북도가 지역특화 비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인 70.3%, 기업은 84.6%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치권도 가세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총선 공약으로 '지역특화 비자 사업'을 확대해 인구 감소 지역에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고 일손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외국인 우수 인재의 정착을 도모해 지역 생산과 소

재 규모와 조건을 법무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가고 있다.

올해 지역별 지역특화 비자 쿼터는 경북도가 지난해 290명에서 700명으로 2.4배, 충남은 150명에서 488명으로 3.25배 늘었다. 지난해 전국에서

국민일보

2024년 02월 14일 수요일 036면 미션

신학대 2곳 '비자 발급 제한 대학' 지정 유학생 공백, 정원 조정해 충격 최소화

고신대·총신대 외국인 선발 못해 교육국제화역량 우수 인증대학에 서울신대 신학대 중 유일하게 선정

외국인 유학생 유치율 두고 국내 주요 신학대학들 사이에 회비가 교차하고 있다.

일부 신학대가 '어학연수·학위 과정'에서 1년간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하지 못하게 됐다. 교육부·법무부가 최근 유학생 유지·관리 실태조사 등을 거쳐 이들 대학의 비자 발급을 제한한 것이다. 비자 발급 제한 대학 선정 기준에는 불법체류율(학위 과정 및 어학연수 과정)이 반영됐다. 이들 대학은 오는 2학기부터 1년간 외국인 신입생을 선발하지 못한다.

국내 주요 신학대 중에선 총신대(어학연수 과정)와 고신대(학위 과정)가 비자발급 제한 대학에 지정되면서 각 과정 유학생 선발이 일시 중단됐다. 고신대 국제교류팀 관계자는 1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학위 과정 유학생 12명 가운데 3명이 불법체류자가 됐다"며 "코로나19 중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비자 연장을 받지 못하면서 생긴 일"이

라고 밝혔다. 총신대 대외협력팀 관계자는 "한국어학당 학생들의 불법체류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서울신대(총장 황덕형)는 교육국제화역량 우수 인증대학에 선정됐다. 전국 18개 대학이 선정됐는데 신학교 중에선 서울신대가 유일하다. 권대현 서울신대 국제교류팀 과장은 "서울신학 멘토·버디 프로그램" 등 한국인과 유학생을 연결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다"며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유학생도 별도로 모아 소그룹 공부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교회와도 협업한다"고 밝혔다. 우수 인증대학은 정부 초청 장학생(GKS) 사업 대상 선정에서 가산점을 받는다.

고신대와 총신대는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2개 과정 가운데 유 지원에 걸리지 않은 나머지 과정 모집 인원을 늘리는 쪽으로 대책을 강구 중이다. 고신대 측은 "어학연수 과정 모집 인원을 늘리고 유학생 장학금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다. 총신대 측은 "내년에 '외국인 전담학과'를 만들어 유학생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성 기자 sage@kmb.co.kr



07 주요 언론보도

세계일보

알카에다에 자금 건넨 우즈베크인, 2심도 실행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유엔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무장단체에 자금을 보낸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소1-2부(재판장 김수경)는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

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즈베크스탄 국적 A(35)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테러단체의 존속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자금을 제공한 것"이라며 "액수와 관계 없이 그 자체로 테러단체의 활동을 용이하게 만들기 때문에 국제평화와 국가·공공의 안

"액수 관계없이 안전 저해 위험 커" 항소심, 징역 1년6개월 원심 인정

전을 저해할 위험이 매우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테러단체를 지원하겠다는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시작한 것은 아닌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형이 종료되면 우즈베크스탄으로 강제추방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감형을 요

2024년 02월 14일 수요일 011면 사회

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2021~2022년 '카티바 알타 우하드 알자하드'(KTJ)가 사람을 살해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테러단체라는 점을 알면서도 조직원 2명에게 20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 금품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옛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 '자브트 알누스라'의 전두부대인 KTJ는 2014년 시리아 정권 타도와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결성됐다.

真日報

2024년 02월 15일 목요일 A23면 문화

"유학생 불법 체류 늘어나 비자 발급 막혀" ... 지방대학 '한숨'

정부, 비자 발급 제한 대학 지정

"불법 체류 문제가 없었던 학생들도 유학생 커뷰의 한에서 권보의 영고 불법 체류자가 되는 일이 적지 않다. 지방대에서는 손쓸 도리가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올해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비수도권 A대 관계자는 13일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 불법 체류 중을 비자발급 제한 대학으로 지정 중점심사를 하고, 교육부는 문제가 있는 대학을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지정하고 있다. 시외로 갈수록 불법 체류 대학도 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비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영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데에 더 만족"하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13일 당국에 따르면, 일부 대학은 유학생이 유학생 없이 일반 유학생 수를 늘려야 하는 데, 인력 등을 감안하면 유학생 관리까지 큰 부담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 **원부 불법 체류 유학생 급증-불법 체류도 늘어**
최근 세계적인 연두 열풍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늘면서 불법 체류 유학생도 상당한 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외국 유학생은 1만2400명이다. 선유 프로그램인 이스타 캠프(영양보호사)가 확산되어 2022년 11만2000명(1만2400명)이 유학생이었다. 그러나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체류 유학생은 총 30만2000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약 30%에 달한다. 불법 체류 유학생 수는 2023년 1월 기준 전년 2023년 1월 10만7000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학생 관리·감독 실패, 조세 불복, 불법 체류, 불법 취업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달 7일에도 광주 남부대 등 학원 과정 20개교와 의대 순환병대 등 약 40개교,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분류됐다.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 체류, 불법 취업 등을 목적으로 각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관리 체계 불



매년 유학생 관리체계 실패 조사
부실 대학은 일정 기간 비자 제한
학생 관리 어려운 소규모 학교
유학생 못 받아 지정난 학사완
"정부-지자체 지원 매뉴얼 없이
관리 업무 대학에 일임" 비판도

가한 결과인데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은 올해 1학기부터 1년 동안 외국인 유학생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이러한 소규모 대학 중에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A대 관계자는 "소규모 대학은 유학생 관리 인력과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불법 체류율이 높은 경우가 적지 않다"며 "학교 재정이 외국인 유학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관리 부실 등으로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지정돼 재정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했다.

●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 대학 한**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정부가 일임한 것도 문제가 되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들어오면 이후 생활은 각 대학이 전담해 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유

생 관리 책임도 찾아보아야 하겠다.

그런데 대학에서는 유학생이 장기 결석하면 전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정도가 될 수 없다. 대학은 수시/원시입학 확대와 유학생 유치에 나주까지 수혜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시까지 전학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올해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B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전에는 불법 체류율도 높고, 유학생이 없는 대학이 이후 세계 경제가 어렵다 보니 학교에 안 나오고 돈을 벌러 다니는 유학생이 많다"며 "우리 대학의 현재 유학생 불법 체류율은 절반에 육박한다"고 했다. 또 "올월까지 한 학기 남긴 유학생이 갑자기 전학이 끊겨 소액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관리가 어려워도 지정되는 외국

인 유학생 유치도 포기할 수 없다. 교육부의 등록금 통틀 들어 있어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은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통가는 계속 오르므로 등록비 증가로 유학생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자 발급이 제한된 유학생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대학 재정이 한층 더 어려워지는 구조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선발과 지원에서 한국이 구사 능력이나 인력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이유를 자체적으로 파악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교육부도 지역혁신지구 내 외국인 유학생 선발 체류 인력 지원 등을 추진하면서 외국인 유학생 불법 체류 방지를 위해 대학 대상 컨설팅 등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주거 | korea@korea.com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한국경제

2024년 02월 15일 목요일 A03면 종합

빨라지는 제조업 고령화 ... 외국인이 속속 대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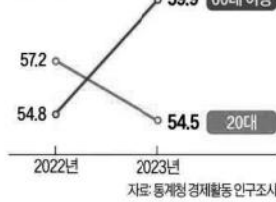
취업자, 60대 이상이 20대 추월
생산직서 젊은세대 이탈 가속

외국 인력 고용이 이미 허용된 제조업에선 외국인이 20~30대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 한국 젊은 층의 제조업 기피 현상이 지속되는 한 외국 인력의 지속적인 유입은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제조업 고용보형 상시가입자는 382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8000명(2.6%) 늘었다. 이 가운데 외국인 가입자 증가분은 10만9000명에 달했다. 외국인 가입자를 빼면 내국인 보험 가입자는 1만1000명 정도 줄었다는 얘기가.

고용부는 20~30대 젊은 층이 정규 일자리를 떠나고 이 빈자리를 외국인이 메우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구인 공고를 내면 50대 이상

제조업 연령별 취업자수 (단위:만명)



또는 불법 체류 외국인만 지원한다"며 "시급을 올려도 20~30대 젊은 인력은 잘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조업을 포함한 정규 일자리 전 영역으로 넓혀도 외국인 근로자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05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1000명(2.3%) 증가했다. 늘어난 가입자의 36.6%인 12만5000명은 외국인 근로자의 몫이었다. 플랜트 업계 관계자는 "건설·플랜트 분야에서 기술

과 경험을 갖춘 숙련 인력은 대부분 고령층"이라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건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자 기업들이 젊고 생산성도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했다.

20대의 제조업 기피 현상 속에 지난해 제조업 분야에 종사한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20대를 앞지르는 일도 나타났다. 지난해 60세 이상 제조업 취업자는 59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1000명(9.3%) 늘었다.

반면 20대 제조업 취업자는 54만5000명으로 한 해 전보다 2만7000명(4.7%) 줄었다. 제조업에서 60세 이상 취업자가 20대보다 많아진 건 2014년 제10차 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통계를 집계한 뒤 처음이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지방·중소 기업 일자리 기피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20대의 빈자리를 외국인이 채우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

2024년 02월 15일 목요일 Y24면 사회

경북, 외국인 정착 돕는 '글로벌 학당' 문 열었다

5억 투입 - 광역단체론 첫 설립
27개국 유학생·근로자 등 교육

경상북도는 14일 예천 경북도립대에서 외국인 유학생 등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경북 글로벌 학당을 개소하고 현판식을 열었다.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설립된 외국인 전용

교육기관이다. 경북 글로벌 학당은 27개국 총 680명의 유학생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한다. 교육은 유학생 교육과정(2주간)과 외국인 근로자 교육과정(1일)으로 구성된다. 한국어 토익, 외국인 정책, 법과 제도, 생활정보, 문화·산업·경제·정주 여건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으로 편성됐다. 산업현장도 방문한다. 이날 학당 개소를 기념해 이철우 경

북지사가 '한국에서 펼쳐는 꿈'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문화, 경북의 정신, 경북의 산업 현황 및 문화자원, 외국인정책 등에 관해 특별 강연을 했다. 경북 글로벌 학당 개소를 위해 경상북도는 올해 5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운영은 경북도립대가 맡는다. 경상북도는 향후 교육과정 확대 및 다문화, 수요자 비자 발급 인센티브, 일자리 매칭 및 사회 적응 지원 등을 추진해 경

북 글로벌 학당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확보하고 외국인 정착 지원 우수 모델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지사는 "경북 글로벌 학당을 통해 경북 유학생들이 경북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며 "입국에서부터 정착까지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총총하고 따뜻한 상생·포용 정책을 펼쳐겠다"고 강조했다.



07 주요 언론보도

한겨레

2024년 02월 21일 수요일 013면 전국

제천시, 고려인 정착 도와 지방소멸 막는다

중북 제천시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하려고 추진한 고려인 유치 효과가 보고 있다. 제천 중심가에 고려인 상점이 생기는가 하면 기업·학교 등에도 고려인이 늘고 있다.

제천시는 20일 "지난해 말 이후 고려인 33가구 76명이 제천으로 이주했다. 올해 안에 국내의 고려인 100가구 300여명을 추가로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천 고려인들은 경기 안산, 인천, 광주 등 전국에서 왔으며, 러시아 사할린 등도 2명도 제천으로 이주했다. 이들 가운데 고려인 22가구 55명은 제천 지역 업체에 취업하고, 자녀들은 초·중·고·대학 등 공교육 과정에 진학해 정착하고 있다. 이신규 제천시 인구정책팀장은 "제천시는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12만명대 월 기준 12만9632명로 떨어지는 등 인구감

인구 13만명선 붕괴로 적극 유치 한국어·문화 교육하고 숙소 제공 돌봄수당·장학금·의료비 등 지원

"주민등록은 안되지만 지역에 활력을 300명 유치...3년간 1천명 목표"

소와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곳"이라며 "제천이주 고려인들은 주민등록상 제천 인구에 포함되지 않지만 생활인구로 제천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말했다.

제천시는 지난해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고려인 유치가 나섰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등 중앙

아시아 3국을 방문해 고려인 단체 등과 고려인 유치 협약을 하기도 했다. 이어 제천경찰서·제천교육청·제천상공회의소 등 기관·단체 등과 고려인 등 재외동포 이주·정착 지원 업무협약을 맺어 고려인 유치를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제천시는 지난해 10월24일 제천 대원대 기숙사를 새로 단장해 102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재외동포지원센터를 조성했다. 지역 직용, 조기 적응, 사회 통합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고려인 정착을 돕는다. 초기 6일 동안 진행되는 지역 적응은 교육·지역·문화·소비 등을 익히는 '제천 공부' 시간이다. 발문부가 정한 3시간 조기 적응 교육을 마치면 한국어, 한국 문화, 한국 사회 이해 등으로 개인·사회 통합 프로그램 교육을 받는다. 제천이주 고려인들은 모두 이를 프로그램으로 이수하고 있다.

제천시는 고려인 취업·주거·교육·복지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고려인 자녀에게 1인당 30만원씩 돌봄수당을 주고,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해 연간 20만원씩 의료비도 지원한다. 제천시는 인재육성재단을 통해 1년 이상 제천에서 생활한 고려인 초·중·고생에게 50만원, 대학생에게 100만원씩 장학금을 주고 병과 후, 병학 중 돌봄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제천시는 올해 고려인 300명을 유치하는 등 3년 안에 고려인 1천명을 유치하는 게 목표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에 선정된 제천시는 단기 체류, 방문 취업, 재외동포 영주 등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고려인 동포를 대상으로 이주·정착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한겨레

2024년 02월 22일 목요일 013면 전국

국가가 외면한 시리아 난민, 충주가 품었다

12년간 수차례 난민인정 거부돼 용산동 복지센터·지역사회 나서 취업 알선·긴급생활비 등 지원

시리아 난민의 충주 정착기가 '해피 엔딩'으로 마무리됐다.

시리아에서 온 모(44)씨는 지난해 20일께 아내 쿠(33)씨, 두 딸(15·3)을 데리고 충주로 이사했다. 제주에서 생활하던 모씨가 가족은 자인의 권유로 중동인 모임 등이 형성돼 있는 충주에 거처를 마련했다.

하지만 모씨 가족은 최근 전입신고와 두 자녀 취학 등을 위해 용산동 행정복지센터

를 찾았다가 벽에 부딪혔다. '난민 지위'를 받지 못한 이방인의 충주 정착은 쉽지 않았다. 모씨는 시리아 내전을 피해 2012년 제주에 왔다. 수차례 난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금도 해마다 출입국 사무소를 찾아 '인도적 체류허가(GI비자)'를 갱신하면서 지낸다.

모씨 가족의 사정을 안 용산동 행정복지센터가 이들의 정착 도우미로 나섰다. 용산동 복지센터는 충주교육지원청에 모씨 가족 상황을 알리고, 큰딸의 전학과 작은딸의 유치원 입학 등을 요청했다. 다음엔 모씨 취업 알선에 나섰다. 시리아에서 자동차 정비·판매업을 한 이력, 제주의 세차장 등에서 일한 경력 등을 내세워 관련

업체 문을 두드렸다. 충주의 한 자동차공업사가 취업 문을 열었고, 모씨는 지금 이곳에서 일한다.

용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거들었다. 모씨 가족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긴급생활비 50만원과 생필품 구매용 상품권 20만원, 큰딸 교육구매비 등을 지원했다.

엄태정 용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언어·얼굴은 달라도 지구 공동체라는 마음으로 시리아 난민 가족을 안은 지역 사회와 주민 등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행정복지센터는 "모씨 딸 르양이 '아빠 취업, 동생 유치원 입학 등 일이 잘 풀려 다행이다. 따뜻하게 맞아준 시민들이 너무 고맙고, 충주에서의 생활이 기대된다'는 말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부록 ⑦
⑥
⑤
④
③
②
①

서울경제

2024년 02월 26일 월요일 A22면 사회

“외국인 유학생 부모도 계절근로 초청”

법무부, 농어촌 일손 확충 조치

정부가 계절근로 초청 대상을 외국인 유학생 부모까지로 확대한다. 봄철 농번기를 앞두고 농·어촌 일손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25일 비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가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유학생 부모 계절근로 초청 시범사업’을 올해 말까지 실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계절근로 제도 보완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소재 인종대학 1년 이상 재학 중인 유학생의 만 55세 부모는 범죄경력 등 특별한 문제점 다면 최장 8개월까지 자녀가 유학

지역에서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다. 계절근로자의 조기 정착이 가능하고 무단이탈 우려가 적다는 ‘친인척 초청방식’의 장점을 고려해 대상을 결혼이민자 친인척에서 유학생 부모까지 확대한 것이다. 법무부는 또 계절근로 인력 송출 국내부 사정 등으로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맺은 업무협약(MOU)을 통해 인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시범사업 형태로 올해 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시범사업 기간 중 운영과정에서의 애로 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를 개

매일경제

2024년 02월 28일 수요일 A01면 종합

필리핀 가사도우미 6월 들어온다

정부, 서울부터 100명 도입 최저임금 적용 논란은 여전

이르면 3개월 뒤부터 서울에서 필리핀 국적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가사 분야에서 공식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첫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지급하는 임금 관련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이르면 오는 6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개시한다. 연말까지 서울 전역에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을 우선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서울에 거주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은 필리핀 가사도우미 고용이 가능해진다. 풀타임이나 파

트타임으로 출퇴근하는 방식이 원칙이다. 서울시는 예산 1억5000만원을 투입해 가사도우미의 숙소와 교통, 통역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처우는 최저임금 수준이다.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을 적용하면 필리핀 가사도우미 월급은 206만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적용하는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달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적은 비용으로 고용할 수 있어야 제도의 본래 취지인 저출생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각 가정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임금 지급 체계를 정하는 것이 큰 문제”라며 “최저임금 위원회가 가동되면 관련 논의에 불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



07 주요 언론보도

한겨레

2024년 02월 29일 목요일 005면 종합

외국인 250만 시대인데, 정착 지원은 소홀

지나해 말 전체 인구의 5% 육박
정부, 외국인 노동력 공급에 초점
전문가 “동등한 구성원 되게 지원을”

최악의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 감소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내에 외국인 유입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를 보면, 국내 외국인 체류자는 지난 1월 말 현재 244만8401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14.1% 늘었다. 이 중 장기 체류 외국인이 189만3911명으로 단기 체류자의 3배를 넘는다. 국내 체류 외국인 규모는 2021년 말 약 196만명에서 2022년 말 225만명, 지난해 말에는 251만명으로 불어났다. 전체 인구의 약 5%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는 외국 인력과 이민자 유입을 차츰 확대하는 추세다. 지방과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인구 절벽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며 외국 인력 유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는 까닭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및 고용 허가제(E-9) 비자 발급, 숙련 기능 인력의 연간 쿼터 확대 등과 함께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도 추진 중

이다.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 도입을 통해 돌봄과 서비스 분야도 문을 열 예정이다.

이런 정부 정책이 국내에 부족한 ‘노동력 공급’ 쪽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정착 외국인의 정주여건 조성 등 정착·지원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고용 허가제 비자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이 어려운 탓에 열악한 조건에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일해야 하거나, 임금 등에서 차별 처우를 받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외국

인 가사 노
을 배제하

한동훈
부 장관 때

에서 “이민
아니다. 철

위한 방향
에서도 이

히 돌봄 등
하는 터라

자”는 태도
는 우려도

원 부연구
계 하는 규

하는 등 외
구성원이

했다.

서울경제

2024년 02월 29일 목요일 A12면 경제 금융

임업도 외국인 근로자 허용

산지이용·산림 활성화 규제 개선
보조금 지급 직불제 자격요건 완화
3만㎡ 보전산지 해제된 시도지사

정부가 농업에 이어 산에서 나무를 베는 등의 임업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임업 종사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임업직불제는 자격 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산지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임업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농축어업에는 이미 고용허가제가 시행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지만 임업은 제외돼 있었다. 이런 가운데 업무 강도가 높은 임업에 종사하려는 인구는 줄면서 산업 경쟁력도 저하됐다. 정부는 7월부터 산림사업 시행 법인과 산림용 종묘 생산법인이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한다.

규제혁신추진단은 임업직불제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원자도 감소와할 계획이다. 2022년 현재 임업직불금을 받는 사람은 2만여 명, 예산은 512억 원으로 농업직불금 예산의 2%에 불과하다. 정부는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인 임산물생산·육류업 종사 일수를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해 수혜 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산림산업 활성화 방안

임업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임업 직불금 자격 요건 완화

소규모 보전산지 해제된 지자체 위임

근거 명확할 때만 공익용 산지 지정

자료 : 국무총리실 규제혁신추진단

정부는 또 자연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지정된 보전산지 중 규모가 작은 것은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주기로 했다. 보전산지는 국내 산지 면적 중 약 78%를 차지할 정도로 넓지만 해제하려면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산림청까지 올라가야 해 해제까지 수개월이 걸렸다. 앞으로는 3만 ㎡ 미만의 소규모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해 공공 복지시설이 보다 빠르게 들어설 수 있게 도울 방침이다.

규제혁신추진단은 아울러 법령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만 공익용 산지를 지정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공익용 산지를 추가 지정할 수 있어 사유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었다. 정부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 같은 논란을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전국토의 63%가 산이지만 각종 규제로 산지 이용 및 관련 산업 발전이 저조하다”며 “앞으로도 국민 편의성과 임업 경쟁력 차원에서 산림활용성 확대를 위해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규 기자

3월

東亞日報

2024년 03월 07일 목요일 H16면 지방

농어민 부담 줄고 근로자 편의 높고

전남도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
지자체-농협서 고용-숙식 도맡아
농가 신청에 따라 인력 제공하고
농협에서 임금 지급해 착취 차단
“올해 322명으로 확대 운영할 것”

6일 오전 9시 전남 곡성군 곡성읍 사설하우스에서 리오스 출신 계절근로자 4명이 감자 캐기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농민 김현수 씨(43)는 하우스 감자 출하 시기인데 일손이 없어 감자 캐기를 못 하는 이웃 농가까지 도우며 10일째 리오스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있다. 김 씨는 “외국인 근로자 근로시장 일당은 최소 15만 원이지만 공공형 계절근로자 일당은 10만 원으로 책정돼 있어 인건비 부담이 크게 줄었다”며 밝게 웃었다.

이날 곡성지역 감자, 딸린, 두릅, 묘목 농가 7곳에선 리오스 계절근로자 19명이 채용돼 농사일을 도왔다. 이처럼 농민들의 인건비 부담이 경감된 것은 올해 곡성군, 곡성농협이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처음으로 운영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곡성농협에 최소 5일 전까지 전화로 신청해야 한다. 근로자 일당 10만 원을 곡성농협에 먼저 입금해야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제는 농가가 직접 외국인을 고용하고 숙식까지 제공하는 농촌형,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이 고용 및 숙식을 제공하는 공공형으로 나뉜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농협에서 농민들의 신청을 받아 1, 2일 단위로 인력을 제공해 인건비 부담이 적다. 또 농협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월급제로 지급하고 안정적인 숙식을 제공해 일부 농촌형 계절근로제에서 볼거진 인권침해 논란 등에 대한 우려도 적다.

곡성군과 곡성농협 직원 5명은 1월 리오스 트랑 타파킷군을 방문해 공공형 계절근로제 후보자들을 면접 보고 20~40대 초반의 근로자 30명을 뽑



나주에 원예농협은 지난해 베트남 출신 근로자 50명을 채용한 후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운영해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사진은 베트남 출신 근로자들이 배를 수확하는 모습. 나주에 원예농협 제공

았다. 선발된 근로자들은 지난달 22일 곡성에 도착해 나흘 동안 각종 교육 등을 받고 농촌 현장에 투입됐다. 리오스 근로자들은 곡성군 고달면 안개마을 농촌휴양체험시설에서 한글과 문화를 배우고 한국 생활에 꼭 빠졌다. 문진 곡성군 농업정책팀장은 “농민들의 공공형 계절근로자 신청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근로시간 준수 등 인권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 일당을 11만 원 이하로 지급하자”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내걸린 전남 나주는 공공형 계절근로를 운영해 성과를 거뒀다. 나주에 원예농협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베트남 출신 여성 근로자 50명을 계절근로자로 채용했다. 이들 베트남 출신 계절근로자들은 7개월 동안 일당 11만 원을 받고 농가 902곳에서 일했다. 베트남 계절근로자들은 비어 있던 대학 기숙사에서 단채로 숙식하며 일했다. 이들 덕분에 외국인 인건비가 2만~5만 원가량 절감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나주시 동강면에서 배농사를 짓는 신동환 씨(66)는 “작업 반장의 지도를 받은 베트남 근로자들이 꼼꼼하게 일을 해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농협 2곳, 70명으로 운영한 공

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올해는 농협 10곳, 322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통해 적정 인건비 형성과 인권 존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전남 22개 시·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5800명을 채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5.5%에 머물고 있다.

올 1월 전남의 한 지역에서는 필리핀 출신 농촌형 계절근로자 2명이 인력 알선업자로부터 임금 착취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가 접수돼 전남경찰청이 수사하고 있다. 전남 시·군들은 그동안 수산 분야 계절근로자 인력 80%가량을 필리핀 출신으로 채용했다. 필리핀 정부는 올 1월 계절근로자 해외 인력 송출을 일시 중단했다가 지난달 재개하기도 했다.

전남 7개 시·군은 어업 분야 계절근로자 2778명을 채용할 예정인데 인력 파견 국가를 필리핀, 베트남, 몽골, 리오스, 인도네시아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수산 분야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제 도입을 모색하고 있지만 물때에 따라 일을 하는 어업의 특성상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s09@donga.com



07 주요 언론보도

東亞日報

2024년 03월 12일 화요일 J16면 지방

농번기 앞둔 충북, 인력 확보 팔 걸었다

괴산군 외국인 근로자 493명 도입
음성군 농기계 빌려줘 노동력 절감
제천시 구인농가와 구직자 연결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촌지역 지방자치 단체마다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1일 충북도내 각 지자체에 따르면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계절근로자 도입,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 농촌인력증가센터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영동군은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359명을 배정받아 차레대로 농가에 투입할 계획이다. 필리핀 자매도시인 두마게테사에서 173명이 5회에 걸쳐 단체로 입국하고, 결혼이주여성으로 최초로 베트남 등에서 156명이 들어올 예정이다. 충주시도 계절근로자 54명을 최근 지역 농가에 배치했다. 이들은 5~8개월간 인삼과 담배, 고구마, 수박, 버 등의 작물 경작을 돕는다. 5월에는 캄보디아와 라오스에서 농기계 계절근로자 120명을 추가로 지원 받는다.

201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작한 괴산군도 올해 농가 직접 고용형 436명, 공공형 40명, 결혼 이민자 초청 17명 등 49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한다. 군은 이들을 군내 120여 농가에 배치할 계획이다. 괴산군은 2015년 당시 군과 자매결연한 중국 지린(吉林)성 지안(集安)시 출신 중국인 남녀 19명이 절임배추 작업장 등에서 일하고 돌아갔다. 이듬해에는 6개 지자체로 늘어난 뒤 지금은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 중이다.

계절근로자는 농번기에 입국해 지정된 농가에서 일하고 출국해 다음 농번기에 다시 입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자체가 필요한 외국인 수를



충북 충주시에 온 계절근로자들이 입국에 앞서 마약 약물 검사와 기본교육을 받는 모습. 충주시 제공

법무부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90일 내에서 체류 가능한 단기취업(C-4) 비자를 내준다. 또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위한 공공형 계절 근로자도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한 뒤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하루 단위로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음성군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5곳을 운영한다.

가에 1만1300여 명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일자리 참여자에게는 교통비와 숙박비, 영농작업 반장수당 등이 지급된다. 산업재해에 대비해 단체 상해보험도 가입해 준다.

음성군도 6월까지 '농촌인력지원 상황실'을 운영한다. 군청과 행정복지센터, 지역농협 등이 은-오프라인으로 연결돼 인력이 필요한 농가와 일손

싼 비로
절감할
이 취약
진행한
효율을
지자
추진하
제한
농가와
이수
정을 거

한국경제

2024년 03월 12일 화요일 A25면 사회

우리동네 '외국인 거주현황' 한눈에 본다

법무부,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지도·그래프로 통계자료 확인

△국내 지역별 외국인 정책 추진 현황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시각화 등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누어 있다. 국내 외국인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별 거주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와 어떤 체류 자격을 부여받았는지, 연령대와 성별 등을 월 단위로까지 볼 수 있다. 정책 추진 현황에는 지역별 3차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 건수와 예산, 적용되는 외국인수 등이 나타나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현황과 관련 정책 정보를 국민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를 시각화했다"며 "출입국·이민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모델을 추가로 개발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 국민에게 공유하고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지도와 그래프를 통해 전국 각지의 외국인 거주 현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1일 출입국 이민정책 관련 데이터를 각종 그래픽으로 표현해 보여주는 '이민 행정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각화한 통계자료는 출입국 관련 전자민원 포털인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픽은 정부가 기존에 구축해놓은 통계와 유엔 등 국내외 기관이 발표한 자료를 활용해 제작한다.

시각화 자료는 크게 △세계 인구·이민자 현황 △국내 지역별 인구·외국인 현황 △국내 지역별 거주 외국인 현황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The JoongAng

2024년 03월 13일 수요일 009면 종합

‘저출산 출구’ 외국인 고교생... 졸업 후엔 국내 취업 길 없다

현재 취업비자는 대졸자에만 나와 한국 기업 희망해도 비자가 걸림들 교육부 “비자 규제 완화 등 연구”

» 먼 외국 유학생에서 계속

이들은 무상교육을 받은 한국 학생처럼 학비를 내지 않는다. 다만 가족사이나 체력감퇴 등 추가 비용은 국내 학생과 동일하게 부담한다. 경북 지역 특성 있고 유학생은 국내 학생처럼 입학할 때 연간 장학금으로 72만원을 받는다.

교육청 등 정부나 공공기관 차원에서 정시 입학 전형 등을 통해 고교 유학생을 유치한 것은 처음이다. 교육자치권이 확대된 시도 교육감이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외국인 유학생 전형을 포함하면 학교별로 선발할 수 있다. 경북 지역 고교는 입학전형 요건을 만들고 각국 정부기관과 협약을 맺어 지난해 현지에서 학생을 선발했다. 외국 현지 채용 과정에서 한국 유학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한국국제대학교 등 학교는 4명 모집에 40여 명이 몰려 경쟁률 10대 1을 기록했다. 이들 학생은 면접과 서류전형 등 3차 과정을 통해 선발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한국



지난 11일 경북 영주시 한국국제대학교에서 2024학년 입학식이 진행됐다. 왼쪽 사진은 이날 입학식에서는 몽골에서 온 남미 유학생 4명이 무대에 올라 몽골어로 자소서를 했다. 김경서 기자



이 K컬처 등 세계적으로 알려진 대중 문화를 보유한 선진국이라는 인식 때문에 유학을 오려는 학생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이 외국인 고교 유학생 선발에 나선 것은 학생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차원이다. 임종서 경북교육감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산업 현장의 만성적인 인력 감소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졸업 이후 지역 기업에 취업하고 계속 머무르는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경북교육청은 내년에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발표한 학생 수 추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생 수는 매년 줄어 2026년에 500만 명 선이 무너질 전망이다. 경북 지역은 학생인구가 2023년 34만6500명에서 2040년 19만2429명으로 44%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은 22개 시군 중 15곳 68%이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한다. 고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할 전망이다. 최근 전북 부안·경원 등도 지자체 차원에서 고교생 유학생을 유치하겠다고 나섰다. 내년에는 전남교육청도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김경서 경북 영주시와 인근 지자체 봉화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100명이 채 안 된다고 한다. “인구가 감소하는 다른 지역 고등학교도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찬주 안동대 교수는 “국내 경제 산업에서 고졸 이후 수준 인력이 필요한 분야가 80%에 이르지만,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취업하면 산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점도 있다. 외국인 유학생은 졸업 후 한국 기업 취업을 희망하지만 고교 졸업 예정자나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비자가 없어 졸업 후 본국에 돌아갔다가 비자 발급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김미정 경북교육청 창의인재과 장학사는 “앞으로도 외국인 고교생이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들이 국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취업 비자는 대졸자에게만 나온다”며 “취업비자 규제 완화 해외 사례 등에 대해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고용주 살해’ 카자흐인, 도주 20년 만에 법정에

2004년 범행 후 자국으로 도피 범무부 요청 끝 현지서 구속 기소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국내에서 고용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은 카자흐스탄인이 자국으로 도주했지만,

카자흐스탄 당국과 법무부의 공조 끝에 법정에 서게 됐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검찰은 살인 혐의를 받은 A(49)씨를 지난달 28일 구속기소했다. A씨가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한 지 20여 년 만이다. 2003년 11월 취업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A씨는 이듬해 5월23일 고용주인

피해자 B(당시 48)씨를 살해하고 인근 저수지에 사체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며칠 후 사체가 발견되자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를 요구했지만, 카자흐스탄 당국은 2007년 1월 카자흐스탄 헌법상 자국민의 인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법무부는 2009년 1월 A씨를 현지에서 사라도 기소해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카자흐스탄 측에 수사 기록을

제공하고 수차례의 실무 협의와 현지 출장, 화상회의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 당국을 설득했다. 법무부는 “범죄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카자흐스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물론, 외국 당국과의 촘촘한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사안별·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범죄인이 세계 어느 곳으로 도주하더라도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03월 13일 수요일 012면 사회



07 주요 언론보도

한겨레

2024년 03월 15일 금요일 012면 전국

유학생 강제출국 논란 한신대 교내인권센터 조사 방해 의혹

“학교, 노조와 사전 협의 않고
담당자 부임 두달만에 인사이동
학생들, 시국기도회 열어 규탄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 출국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한신대가 교내인권센터의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또 한번 내용에 휩싸였다.

한신대 신학대학 시국기도위원회는 14일 오후 4시 경기 오산시 한신대 캠퍼스 장공관 앞에서 기도회를 열어 “학교는 교내인권센터의 유학생 강제 출국 사건 조사 방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 출국 사건이 알려진 직후 열린 첫 기도회에 이어 석달 만에 다시 열린 기도회다. 이날 참석한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믿

음이 깨졌기 때문에” 다시 기도회를 열었다고 했다.

시국기도위원회 말을 들어보면, 학생들은 지난 1월 인권센터에 사건을 신고했다. 하지만 학교는 ‘경찰이 수사 중이고, 학내에 이미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는 이유로 인권센터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학생들의 의의 제기로 2월에야 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했지만, 최근 인권센터 담당자가 부임 두달 만에 인사이동 조치를 당하며 조사위원회 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유학생을 대리해 강제 출국 사건을 인권센터에 신고한 신학과 3학년 김소휘(23)씨는 “학교가 꾸린 특별조사위원회는 총장이 조직한 것으로 감사실 소속이다. 인권센터에 신고를 당한 총장이 총장 본인을 조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라고 비

판했다. 유두영 전국대학노동조합 한신대 지부장은 “단체협약상 2년 이내에 인사이동을 시킬 경우 노조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하지만 이 과정이 없었고, 인사 이유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다”며 “강성영 총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권센터에 신고했다”고 했다.

앞서 한신대는 지난해 11월27일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2명을 출입국 관리소에 간다는 말로 숙여 버스에 태운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강제로 귀국시켰다. 한신대는 지난해 12월 한겨레 보도로 이 사실이 드러나자 총장 명의로 담화문을 내어 “범명의 여지가 없다”고 사과할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은 경기 오산경찰서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각각 수사와 조사를 하고 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매일경제

2024년 03월 15일 금요일
A25면 사회

“여자친구 오빠에 폭행당해 난민신청” 결과는

아프리카튀니지 국적 외국인 남성이 결혼 전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오빠들에게서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며 한국에 난민 신청을 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이겼다.

인천지법 행정2단독 최영각 판사는 튀니지 국적인 A씨(25)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 심사 불허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튀니지에서 사귀던 여자친구의 오빠들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라면서 “결혼 전 성관계가 (이슬람) 교리에 위배된다며 폭행하고 협박했다”면서 한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 판사는 ““여자친구 오빠들에게서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A씨 주장은 개인의 위협에 해당해 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작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위협의 근본적인 원인이 종교적 이유라면 박해에 해당할 수 있어 난민 심사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천 지홍구 기자

세계일보

2024년 03월 18일 월요일 Z11면 지방종합

경제효과 1조... 경기 지자체 이민청 유치 '후끈'

고양·안산·김포시 도내 설치 건의
외국인 많은 화성·시흥도 나설 듯
경기 冊 “생산유발만 5152억 추정”

수원=오상도 기자 sdo@seggye.com

정부가 지난달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인구 감소를 해소하고 1조원 가까운 경제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이민청 유치 의사를 표명한 곳은 고양·

안산·김포시 3곳이다. 여기에 화성·시흥시 등의 합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4월 총선 이후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 정부 계획에 따라 유치 경쟁을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양·안산시의 경우 지난달 28일 민선 8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이민청의 도내 설치를 공동 건의하는 건의서를 작성해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 역시 전국다문화도시시험의 회장을 지낸 김병수 시장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유치 제안을 가장 먼저 법무부에 전달하는 등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인천·김포국

제공항, 경인·인천항 등을 30분 안팎에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강조했다.

도 안팎에선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거주하는 화성·시흥시 등도 경쟁에 뛰어들 것이라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228개 시·군·구의 외국인 주민은 안산(10만1850명), 수원(6만8633명), 시흥(6만8482명), 화성(6만6955명) 등의 순이었다. 다만, 화성·시흥시의 단체장들은 이민청 유치에 아직 별다른 관심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앞서 경기연구원은 이주민 관련 기능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이민청이 도내에 설립될 경우 생산유발 5152억2800만원, 부가가치유발 3530억8600만원 외에 취업유발 4198명의 효과가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朝鮮日報

2024년 03월 21일 목요일
A14면 사회

한국 귀화 후 베트남男과 재혼하는 베트남女 급증

한국 국적 노린 '계획 결혼' 주의보

한국 남성과 결혼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베트남 남성과 재혼하는 베트남 여성이 크게 늘고 있다. 귀화를 노리고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 남성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은 792명이었다. 2022년(586명)보다 35.2%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한국 여성+외국 남성' 전체 혼인 증가율(7.5%)의 4.7배다. '한국 여성+베트남 남성' 혼인 건수는 2013년 279건에서 10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한국 여성과 결혼한 미국·중국·캐나다 국적의 남성이 각각 21%, 47%, 41%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베트남 남성과 결혼하는 한국인 여성이 유독 크게 늘어난 이유는 뭘까. 국내 혼인·이혼 관련 세부통계를 분석하면 어느 정도 단서를 찾을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한국 여성 556명 중 482명(86.7%)은 귀화한 한국인이었다. 이들 중 국적 확인이 어려운 2명을 제외한 480명의 귀화 전 국적은 모두 베트남이었다.

한국인으로 귀화해 베트남인과 재혼하는 베트남 출신 여성이 급증하면서 일각에선 “한국 국적을 노리고 ‘계획 결혼’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결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베트남 여성과 결혼했는데 한 달 만에 짐을 나갔다” 등의 피해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김지섭 기자

서울신문

2024년 03월 27일 수요일 009면 종합



한인 2·3세는 왜 '잠재적 병역기피자'가 됐을까

美 한인단체 국적법 개정 청원

만 18세 국적이탈 신고 안 하면 만 38세 후에야 국적 포기 가능
비자·현지 공직 진출 등 불이익
법무부·병무청도 혼선만 거듭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인 한인 2세 A(30대)씨는 2022년 공무원수행을 위해 한국 입국을 준비하던 중 비자를 신청한 워싱턴 총영사관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다. 자신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였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우리나라 국적법에 따라 미국 등 속주주의를 취하는 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외국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게 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에 따라 A씨는 한국 국적도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잠재적 병역기피자'로 분류돼 국내 입국이 거부된 것이다. A씨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조차 몰랐는데 황당하다"고 말했다. A씨는 결국 한국 출장을 포기했고, 비자발급을 거부당한 사실이 소속기관에 알려져 승진 등에 어려움을 겪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해외 한인 2·3세대 사이에서 A씨처럼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인정돼 국내 입국이 거부되거나 현지 공직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미국 뉴욕한인회 등 한인단체들은 지난 19일 대통령실에게 "복수국적 축소를 풀어야 달라"며 국적법 개정을 청원했다. 하지만 26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국내 정부 기관들조차 복수국적자의 국내 입국에 대해 상반된 답변을 내놓는 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논란은 2002년 가수 유승준씨가 병역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자 국회가 2005년 국적법을 개정하면서 벌어졌다. 선천적 복수국적을 가진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 한국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만 38세 후에야 국적 포기가 가능하도록 법이 바뀐 것이다. 유씨처럼 이중국적을 이용해 병역을 회피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였다.

문제는 한인 2·3세대들이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만 18세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내 입국을 거부당할뿐더러 '잠재적 병역기피자'로 분류돼 현지 공직진출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음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한인단체에 보낸 공문에서 "국적 포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병역의무가 새롭게 발생하거나 불이익 등 제재가

있지는 않다"라고 밝혔다. 반면 병무청은 지난해 8월 공문을 통해 "선천적 복수국적자 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병역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병무청은 이어 "병역연기는 가능하며 1년 중 6개월 미만으로 국내에 체재하거나, 영리활동 시 60일 이상 체재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병역연기를 위해 출생신고와 국외여행허가서 발급이 필요한데 사실상 비자 발급이 안 돼 불가능한 상황이다.

워싱턴DC의 이민법 전문 전종준 변호사는 "원정 출신, 이민 출신 등을 구분해 국적 자동상실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업 선택의 장애 등 예외적인 사안에 대해선 국적이탈 신고를 용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진 기자

서울신문

2024년 03월 27일 수요일 D12면 전국

직접 면접하고 이민자 가족 뺏으니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 확 줄었다

진안 등 충북 6곳 브로커 배제
필리핀 등 현지 찾아가서 채용

이탈률 1년새 31.9%→+6.6% '뚝'
"전담기구로 통합관리시스템을"

전북 진안군은 지난 1월 필리핀 키리노주 등을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면접을 했다. 진안군 공무원과 진안농협 관계자들은 지원자들을 만나 가족관계, 농업경력, 신체 능력, 한국어 능력 등을 확인한 뒤 채용 여부를 결정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현장에서 직접 면접하고 채용하는 방식이 이탈률을 크게 줄이고 영농

현장 적응력을 높이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무단이탈로 골머리를 앓던 지자체들이 현지 브로커에 의존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 방식을 직접 면접으로 전환하고 있다.

전북도에서는 14개 시군 가운데 익산시,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순창군 등 6곳이 지난해부터 직접 채용 면접을 하고 있다. 이 방식은 브로커에게 보증금을 떼이거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들도 반겼다.

결론이민자 가족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하는 방안도 이탈률을 줄이는 성과가 높다. 직접 채용 면접을 하지 않는 나머지 시군들은 결론이민자 가족 위주

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초청한다. 결론이민자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관리하는 보증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자체 직접 면접과 결론이민자 가족 채용 이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률이 크게 줄었다. 전북의 경우 2022년 1006명 가운데 31.9%인 321명이 이탈했으나 지난해에는 2826명 가운데 6.6%인 187명이 이탈해 대폭 감소했다.

결론 이민자들의 가족만을 초청해 온 김제시는 지난 2년간 이탈자 수가 현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가족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규 전북도 농업정책과장은 "예전에는 현지 브로커와 양해각서

(MOU) 방식을 선호했는데 무단이탈자들이 많이 발생했다 보니 가족 초청이나 현지 직접 방식으로 변경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매년 늘어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담 기구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형열 전북도 의원은 "지속 가능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용하기 위해 계절근로자의 엄밀한 관리를 비롯해 교육, 인력관리 등을 일원화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15년 19명에서 지난해 3만 9657명, 상반기 4만 9286명으로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전주 임숙희 기자



07 주요 언론보도

4월

서울경제

2024년 04월 01일 월요일 A22면 사회

불법체류자 양산 ‘무비자 입국’ 문턱 높인다

법무부, 제도개선 용역 발주
불법체류 42만명 중 42% 차지
반사회적 범죄 증가율 등 살펴
대상국 지정 제도 재검토하고
장기기준 통보제 외교마찰 방지

4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정부가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 손잡고 나선다. 총 불법 체류자 중 약 42%를 차지하는 무사증 입국자에 대한 심리 조사를 통해 향후 제도 개선으로 전체 불법 체류자를 줄이겠다는 포석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무사증국가 불법체류자 발생 억제 방안’에 관한 연구 임할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했다. 용역 기간은 오는 9월까지다. 무사증 입국 제도만 사용되면 제정된 통보를 벗어 나지 않아 한국 입국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도 사증면제(2-1)와 관광·통과(2-2) 등을 통해 현재 112개 국가 국민의 사증 없이 국내 입국이 가능하다.

불법체류 외국인인 2022년 9월 처음으로 40만 명대를 넘어섰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중단됐던 무사증 입국이 같은 해 4월 재개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입국문제가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최근 3년 간 불법 체류자 10명 중 4명 꼴로 무사증 입국제도를 통해 입국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무사증 합계 국가 출신의 불법 체류자는 18만7239명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태국 14만 2000명, 중국 1만 4000명, 가자흐스탄 1만 명, 캄보디아 1900명, 방글라데시 1400명 순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사증면제 및 관광·통과 자격 입국 외국인의 불법체류 원인 등 심리 분석하고, 해당 제도의 대상국을 지정하는 기준을 재검토한다. 구체적으로 특정 국가의 불법체류자 증가율, 관련 국제자의 대약 등 반사회적 범죄 증가 정도 등을 조사한다. 경찰청 외국인 범죄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하던 4대 범죄(살인·강도·강도·폭력)는 2019년 1만2704명에서 2023년 1만2704명 수준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이번 현실 속에서도 일시정지 명령을 시스팀 연구가 아닌

장에 공지하고, 기존 초과 시 일시정지 조치하는 등 대응체계를 더욱 가능하게 할으로써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미국과 경우도 외국인인 국가 인보에 높은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증면제프로그램에서 즉시 제외, 일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단계별 처리절차를 두어 사증면제프로그램 관리한다.

장부는 그간 합동단속 시행 및 임시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2021년 5월부터 무사증국가 대상의 전자여행허가제(ETA)를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왔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의 국민이 현지 출발 전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로 입국 목적에 소명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선 입국을 불허할 수 있다. 최근 이 제도로 인한 태국인 입국 불허 증가로 태국 관광업체의 불만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내일신문

2024년 03월 29일
004면 자치행정

부산, 외국인유학생 3만명 유치

지방대 위기 타개책 마련 취업·정주까지 지원 나서

부산시가 지방대 위기 상황 타개책 일환으로 외국인 유학생 3만명을 유치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28일 박형준 시장 주재로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산형 유학생 유치양성 방안 마련을 위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회의를 통해 2028년까지 현재 1만3000명 수준인 외국인 유학생 수를 3만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유학생의 이공계 비율은 현재 12%에서 30%로, 취업·구직 비자 전환율도 22%에서 4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자체 최초로 지역 맞춤형 유치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유학생 유입 국가 다양화를 위해 이공계열을 확대하고 유학생 신수요를 창출키로 했다. 단순히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취업으로 이어져 부산에 정주하는 유치전략이다. 이를 위해 시와 지역대학은 물론 산업계와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를 즉시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부산의 해외유학생 무소 및 교육부의 한국교육원 내 연계를 통해 유치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해외 유학생 박람회 참가 및 적극적인 부산 유학설명회를 개최해 잠재수요를 파악하고 해외 학교간 협력도 지원할 예정이다.

유학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치장학금(GBS)을 신설해 400만원 한도 내로 항공권 및 체류비를 지급한다.

또 시는 지역대학과 협력해 학위과정과 취업을 연계한 유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산업별 기업수요에 맞는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을 개설하기로 했다.

조선기자재산업 등 부산의 강점을 활용한 맞춤형 현장실습제를 지역대학과 협력해 도입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정주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기업에서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을 매칭시킬 경우 현행 6개월에서 1년 이상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특화 비자(광역 비자) 제도' 신설을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대상지도 인구소멸지인 서구 동구 영도구를 넘어 부산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학원연구 감소와 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로 연결되는 만큼 유학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획재무 기자 doiboc@nail.com

한겨레

2024년 04월 02일 화요일 012면 전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함양에 문 열었다

전국 처음...모텔 거주시설로
군·단위농협 공동설립해 운영
사위실·침대·냉장고 갖춰 쾌적
주방·에선 요리 해먹을 수 있어

숙박비 월 20만원에 이용 가능
베트남 어주노동자 "만족해요"



권남 함양군은 일·전국 처음으로 계절근로자용 기숙사인 '함양군 계절근로자 지원센터'를 개관했다.

호반까우(31)는 "한국에 처음 들어온 날은 추워서 깜짝 놀랐는데, 이젠 편해요. 좋은 점수를 받아서 내년에 또 일하러 오고 싶어"라며 웃었다. 호반릭(33)도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러 한국에 왔어요. 부모님과 아내, 그리고 두 아이가 있어요. 기숙사 생활은 처음인데, 시설이 매우 좋아서 만족스러워요"라고 말했다.

이들을 포함한 베트남 출신 어주노동자 20명은 지난 20일 농업 계절근로자로 한국에 들어온 뒤 경남 함양군이 제공한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다. 다음달 말에는 15명이 추가로 입국할 예정이다. 기숙사는 함양군이 1일 개관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기숙사는 함양읍에 있는 지상 3층짜리 모텔을 사들여 계절근로자용으로 개조한 것

이다. 1층엔 식당·주방·세탁실·사무실을 배치했다. 2층에 여성용, 3층엔 남성용 방이 있다. 방은 2인실 17개, 4인실 2개 등 모두 19개이다. 모든 방에는 샤워 시설을 갖춘 화장실과 2층집대, 텔레비전, 에어컨, 냉장고가 갖춰져 있다. 입주 노동자들은 3개조로 나뉘어 요리·청소 등을 자율적으로 한다. 점심 식사용 도시락 등 모든 식사는 요리를 맡은 조원들이 식재료를 사서 직접 준비한다. 고수 등 베트남인들이 즐기는 나물은 따로 텃밭을 만들어 기를 계획이다.

기숙사 운영은 함양군 5개 단위농협이 공동 설립한 함양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맡았다. 법인은 농가와 계절근로자를 연결해주는 일도 한다. 농가에서 노동자를 보내 달라고 신청하면, 미리 정한 순번에 따라 노동자를 배정한다.

계절근로자는 하루 8시간 일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쉰다.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1인당 9만6천원의 일당을 받는데, 하지만 법인은 실제 근로일수와 상관없이 모든 계절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최소 178만2690원의 월급을 지급한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 200만원이 되는데, 초과근로수당도 따로 지급한다. 기숙사를 이용하는 노동자는 월 20만원의 숙박비, 보험료 절반액, 소독세 등 월 38만원가량을 내면 된다.

기숙사를 열기 전 함양군과 법인은 교류협력 계약을 맺은 베트남 풍남성 남파미련을 지난해 말부터 한국에서 일할 노동자들을 직접 선발했다. 농업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평균 나이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중심이다. 기숙사엔 생활수칙과 상벌제도가 있다. 복종·절도·도박 등 범죄행위, 무단 퇴장·이탈 등으로 10일 이상 벌점을 받으면 강제 출국된다. 반대로 10일 이상 상점을 받으면 내년도 우선 초청 대상이 된다.

법인은 작업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 3명을 작업반장으로 채용했다. 작업반장은 자신의 차량으로 노동자들을 출퇴근시키고, 현장 통역을 맡는다. 모든 작업은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서 진행된다. 한국 생활 12년째인 레티미

(34·여) 작업반장은 "복소리만 크면 된다. 일은 별로 어렵지 않다"고 했다.

정동진 함양군 귀농귀촌계장은 "지난해 처음으로 받은 계절근로자 18명을 민박 시설에서 지내게 했는데, 숙박근 등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함양군의 정동함에 가까운 함양읍에 기숙사를 마련했다. 경남 거창·전북 무주·장수 등 인접 지역과 협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석기 함양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과장은 "모든 것을 하나하나 새로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전국 곳곳에 생긴 계절근로자 기숙사의 선례가 될 것이라는 자부심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8개월 동안 일하고 돌아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2017년부터 받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 3만9657명을 배정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4만9286명에 이르는 등 배정 인원이 지난해의 2배를 넘길 전망이다. 이들은 대부분 농가나 숙박업소에서 지낸다. 당면히 농가와 노동자 모두 불편하고, 지자체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에 계절근로자용 기숙사 20개소를 짓고 있는데, 올해 10월에 첫 기숙사가 완공될 예정이다.

출처: 사진 최성현 기자 csh@hancore.com

매일경제

2024년 04월 03일 수요일 A12면 경제



청부가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기업들로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한식 음식점, 호텔, 콘도업도 처음으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가능해진다. 2일 서울을출국 외국인청에서 외국인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김효영 기자

한식음식점·호텔·콘도 7월부터 외국인 고용

고용부 22일부터 신청받아

올해부터 한식음식점과 호텔·콘도업 업체도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이들이 입국하는 7월부터 인력난에 승용이 트일 전망이다.

2일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제 조업 2만5906명, 조선업 1824명, 농축산업 4965명, 어업 2849명, 건설업 2056명, 서비스업 4490명 등이다.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배정(2만명)을 활용·배정한다.

특히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던 음식점(한식업)과 호텔·콘도업 사업

장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했다. 한식 음식점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서울 25개 자치구를 포함해 전국 100개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해야 한다.

호텔·콘도업체는 서울·부산·강원·제주 등 4개 지역에서만 외국인 근로자를 영소원이나 주방 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다.

이윤식 기자



07 주요 언론보도

한국일보

2024년 04월 03일 수요일 A11면 종합

지역 R비자 도입으로 이민부터 정착까지 인구 소멸위기 극복 '경북형 청사진' 마련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지역 R(Region) 비자' 도입 등 이민에서 사회통합까지 전주기 이민 정책 모델을 마련했다. 인구 유출을 막고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해선 적극적인 이민 정책 수립과 실천이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경북도는 2일 '다름에 대한 현대 K-드림 외국인 책임제'를 주제로 한 경북도 이민 정책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외국인 실태조사와 도민 인식도 조사 등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한 정책이다. 이민 활성화를 위해 도는 △유입-글로벌 인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정착-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시스템 구축 △개방-상호 이해를 통한 경북형 개방사회 조성 3대 전략과 27개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먼저 해외 우수인재 유치에 대해

3대 전략·27개 세부 과제 설정 정부 추진 이민청 유치 복안도

역(R)을 뜻하는 R비자 제도를 추진한다. 경북도 등은 법무부의 비자발급 권한을 비수도권 광역단체장에게 부여하는 '광역비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이에 앞서 시행령 개정안으로 시작할 수 있는 R비자부터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비자 발급 절차와 요건, 지원을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들자는 취지다.

유치한 인재들이 무단 이탈하거나 귀국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산업현장 적응교육 △현장 맞춤형 교육을 위한 실습인턴제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인 '취업인턴 마이크로디그리과정' 등을 추진한다. 외국인의 취업과 창업 지원을

위해 '외국인 전용 K-드림 워크넷 시스템'과 '글로벌 비즈니스 부트캠프'도 각각 구축한다.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조성하고,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되지 않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병원진료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캠페인, 직장 내 차별 방지를 위한 임직원 교육을 시행한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방사회 선행 학습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민 정책들을 토대로 경북도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이민청을 경북에 유치한다는 복안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민정책 추진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민자에 대한 안정적 정착 지원으로 글로벌 이주 허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동=정광진 기자

한국경제

2024년 04월 09일 화요일 A01면 종합

'외국인 장인·장모님' 국내 돌봄취업 허용

결혼이민자 가족에 비자 발급

정부가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본국 가족에게 돌봄 노동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라 '가사사용인' 자격으로 취업하는 방식이다. 인력난과 고임금 등 '이중고'를 겪고 있

는 국내 돌봄 서비스 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8일 "결혼이민자 부모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가사사용인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시범사업 운영 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가사사용인은 가사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개인 생활과 관련한 '가구내 고용' 형태로 최저임

금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현재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에게는 '자녀양육지원 방문동거비자(F-1-5)'를 발급한다. 외국인 등록과 함께 체류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취업은 허용하지 않는다. 법무부는 이 비자 소지자에게 돌봄 업무에 한해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A4면에 계속 귀용희/허란 기자

東亞日報

2024년 04월 10일 수요일 A12면 사회

“행정 실수로 무국적 다문화 남매, 국적 줘야”

대법, 사실혼 부모사이 태어난 남매 성인된 후 국적 취소에 파기 환송

부모가 사실혼 관계인 다문화가정 남매가 행정청 실수로 무국적자가 될 위기에 놓였다가 5년의 소송 끝에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고모 씨 남매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적 비보유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2일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 씨 남매는 1998년과 2000년 사실혼 관계인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국적법에 따라 다문화가정 미성년 자녀가 한국 국적을 얻으려면 부모가 법적으로 혼인관계여야 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모가 따로 ‘인지신고’(법적 혼인 외 출생자를 생부 또는 생모가 신고하는 것)를 해야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만약 자

불가능하고, 귀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한다.

부모는 1997년 혼인신고를 하려 했으나 읍사무소에서 관련 서류를 분실해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1년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남매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됐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됐다. 그러나 2009년 행정청은 ‘외국인과의 혼외 출생’이란 이유로 남매의 출생신고가 ‘장정 대상’이라며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했다. 이후 법무부는 2013년과 2017년 부모에게 국적 취득 절차를 안내했으나 부모는 이행하지 않았고, 2019년 법무부는 남매의 국적이 한국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다.

남매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승소했지만 2심은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남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미성년자일 때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신뢰’를 (정부가) 부여하다가 성인이 되자 그에 반하는 처분이 이루어졌다”며 “원고들은 국적법에 따라 간편하게 국적을 취득할 기회를 상실했다”

한국경제

2024년 04월 17일 수요일 Y24면 사회

소멸 위기 경북 ‘아시아 이주 허브’로 키운다

‘광역비자’ 도입해 인력 유치
거주 외국인 2배 늘리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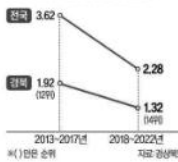
저출생 대응 조직도 확대개편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박차

경상북도 가 갈수록 떨어지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이민자를 두 배로 늘리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조직을 강화하는 등 행정의 무게중심을 인구-저출생 대응 사회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출생률 하락과 인구 감소, 인제 부족으로 최근 10년간 1%대로 떨어진 경제성장률의 근원적 노력이기 위해 ‘저출생과의 전쟁’ ‘아시아의 이주 허브’를 선언하고 인구 관련 기관 유체에도 본격적으로 나섰다.

경북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2013~2017년 1.92%로 전국 3.62%보다 크게 낮은 12위였다. 2018~2022년은 전국 14위로 떨어졌다. 이 기간 청년인구는 11만6000명 줄었다.

경상북도는 최근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7월 1일자로 미대기회단의 테스코포스(TF) 조직이던 저출생과전생분부를 저출생대책본부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이다. 저출생대책본부는 기존 복지건강국과 여성노동정책관실에서 담당해 온 출산과 아이돌봄, 여성청소년 정책 및 지방시대정책국의 교육 업무까지 가져와

경북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단위%)



경상북도 10대 이민정책 과제

- 광역비자(비자) 제도 마련
- 유학생 K-디플로마 프로그램
- 유학생 연계 지원
- 계절근로 농업인력양성체계 운영
- 행정합동추진관 조성
- 외국인 자녀 교육 지원
- 외국인 의료사자차대응 시스템
- 도민-이주노동자 교류
- 글로벌 이주허브 기반 구축
- 이민형 유치

자료: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과 관련된 시책 전반을 총괄한다. 저출생대책본부는 경제부서에서 추진해 온 규제자유특구와 비슷한 특별유형특구를 국내 최초로 준비해 저출생고령화위원회에 신청할 예정이다.

경상북도는 지난 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외국인 유입부터 정착, 사회통합까지 아우르는 경북형 이민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경상연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이 지난 2일 경상북도의 이민정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병우 기자

캐나다의 성공한 이민 정책인 ‘보이카프’ 정책, 미국의 ‘달러드롭’처럼 경상북도를 아시아의 이주허브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성현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현재 10만 명인 경북 내 외국인을 2030년까지 20만 명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경상북도는 이민자 유입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광역비자인 R비자 마련을 추진하기로 하고 법무부에 관련 내용을 건의했다. 기존 A-H까지 비자 기종에 지역을 뜻하는 R을 추가하고 R비자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요건과 지침을 만들어 가는 내용을 담았다.

경상북도는 해외 현지에서 직접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경북인재유치센터

를 설치해 한국어 및 지역기업 맞춤형 기술교육을 입국 전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또 유학생의 지역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K-소셜 교육과정의 산업패러디스 실시 등도 추진한다.

경상북도는 인구정책연구원 설립과 이민형 유치 등에 나섰다. 인구 관련 기관을 집중해 경북이 저출생, 인구감소, 외국인 유치 정책 등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신체적 조치다.

이원우 경북지사는 “이민형 유치는 물론 선도적인 이민정책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민자의 인적적 정착을 위한 전주기 지원을 통해 경북을 아시아 이주허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07 주요 언론보도

한겨레

국내 거주 외국인 143만명...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코로나19 시기에 한국을 떠났던 외국인 취업자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 10명 중 6명은 수도권에 거주했고, 10명 중 7명의 소득은 월 300만원 아래였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3년 이민자체

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15살 이상 외국인(귀화자 포함)은 143만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 9천명 증가했다. 2012년 이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증가 폭이다. 국내체류

2024년 04월 18일 목요일 017면 경제

증가하다가 2022년(130만2천명)에 처음 전년 대비 감소한 바 있다. 코로나19 시기에 한국을 떠난 외국인들이 다시 입국하면서 그 숫자가 증가한 것이다. 이런 경향성은 비전문취업(E-9) 외국인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이들의 숫자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5만2천명에서 2022년 21만명까지 줄었으나, 올해 다시 6만명이 늘어나 26만9천명으로

한국일보

2024년 04월 18일 목요일 A10면 사회

외국인 노동자 20% “비닐하우스에서 살아요”

통계청 '체류자격별 생활' 발표
비전문취업으로 거주 환경 열악
고립 생활... 수입 절반은 고국에

흔히 '외국인 노동자'로 불리는 비전문취업 외국인 5명 중 1명은 거주 용도가 아닌 열악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외국인 경제활동인구가 더 늘고, 저출산과 맞물려 국내 산업 의존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공개한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을 17일 발표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역대 최대인 143만 명에 달하는 등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데 맞춰, 이들 생활상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체류자격별로 분석한 통계다.

비전문취업 외국인은 지난해 26만 9,000명으로 외국인 경제활동인구(97만 5,000명) 중 비중이 가장 컸다. 비전문취업 비자(E-9)는 자격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 직종 외에 취업해 체류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주로 국내 노동력이 부족한 제조·건설업, 농·축산업 등이다. 결혼이민은 여성(79.6%)이 많은 데 반해, 비전문취업은 남성

(91.2%)이 대다수다.

이 같은 비전문취업 외국인 52%는 기숙사에, 20.2%는 관갓잡·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기타 거처에 거주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숙박업소, 고시원·점점방 등도 기타 항목에 해당된다. 방문취업(84.6%)·재외동포(71.6%)·유학생(70.9%) 등 다른 체류자격 외국인의 거처는 모두 일반주택이 절반 이상인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30대 이하(89.8%), 우즈베키스탄 등 기타 아시아 국적(86.9%), 광제조업 종사자(80.4%)가 다수다. 월평균 200만~300만 원을 버는 이들이 66.5%였는데, 이렇게 번 돈은 본국의 가족 등에게 보내는 데 쓰였다. 총소득 대비 국내의 송금(56.5%)은 최고, 생활비(20.5%)·주거비(2.6%) 지출은 최저 수준이다. 비전문취업을 제외하면 모두 생활비 지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반면, 가족친인척 등과 함께 사는 비율은 2.3%로 전체 평균(5.1%)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비전문취업 외국인들이 대개 한국어 실력이 그리 높지 않은 상태에서 고립된 채 돈을 벌고, 지출을 최소화해 소득을 자국에 보내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 이해도를 높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이민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이민 통계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세종=이유지기자



07 주요 언론보도

朝鮮日報

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B02면 경제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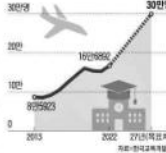
3D업종에 머물던 외국 인력, 번듯한 직장까지 확대한다

중기부, 10년 만에 '외국 전문 인력 도입 지원 사업' 재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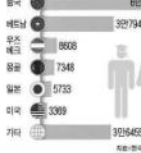
대중 이산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 10년 만에 부활한다. 과거 '국내 청년층 해외취업을 위한 인력 개발사업'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인력 지원사업'이 폐기된지 10년 만에 다시 추진된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인력 지원사업이 10년 만에 부활한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인력 지원사업이 10년 만에 부활한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인력 지원사업이 10년 만에 부활한다.

지난 2001년부터 15년 동안 시행됐던 정부는 지원 대상자로 확장된 기업에 외국인 근로자의 제재, 임금 할증, 임금 일부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당시 '국내 청년층 해외취업을 위한 인력 개발사업'이 폐기된지 10년 만에 다시 추진된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인력 지원사업이 10년 만에 부활한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인력 지원사업이 10년 만에 부활한다.

국내 고등교육기관 내 외국인 유학생 수 추이



주요 국가별 유학생 현황 2023년 기준



「지자체 지원 대학 유학생」이 나서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취업 인원이 확대된다는 소식이 지자체와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유학생 유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총재는 지역 대학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 15일 유학생을 위한 대학 유학생 유치 활동을 했다. 교육부는 지방 대학들을 '글로벌 대학'으로 지정해 해외 유학생 유치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학생을 유치하는 '글로벌 대학'을 만드는 등 대학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지방 인력난이 한층 심해지면서 정부는 외국인 전문 인력 도입 카드도 꺼내들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내 인식이 달라진 것도 고려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지방 4년제 대학 졸업생도 수도권으로 취직하려 하지 지방 기업에 눈길을 주지 않는다"며 "지역에 대해 남아 있을 전문 인력을 유입할 수 있도록 국책은 선관일"고 말했다.

2001년부터 15년간 시행됐지만

「한국 청년들 일자리 배양」
특히 비만 일면서 전격 폐지
그사이 저출생 따른 인력난 심화

K컬처 열풍에 유학생 크게 늘어
한국어 능통하고 지원파들 많아
지자체·지방 대학 유학생 모시기

중기부는 다면 세련된 해외에서 인력을 데려오지 않고, 국내에 있는 외국 유학생을 고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내 유학생이 이미 한국 생활에 적응해서 한국어까지 능통해 기업이 선호하는 인력이다. 해외에서 인력을 데려오는 수고와 비용도 덜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계 부처와 협의하고, 관련 연구 유력도 맡았다. 지난 10년 사이 'K컬처' 열풍 등으로 한국에서 유학하는 외국인도 급증했다. 2013년 8만5000명이었던 외국인 유학생은 2023년 16만5000명으로 늘었다. 2023년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시대 가 될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한림대 중산연구소가 발표한 '글로벌 인재'는 "유학생 상당수가 한국에서 취직하고 싶어 하더라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워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흔하다"며 "이런 불운이란 해결책도 상당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The JoongAng

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14면 종합

“인구 감소 마지노선 지켜라” 정착비에 항공료도 내준다

지자체 인구 유입 당근책 확대
경남 고성, 학생 전일 멘바우치
예산은 근로자에 정착금 1년 지원
부산 '외국인 유학생 3만명 유치'

타 지역에서 온 학생이 주소를 옮기면 며칠 수면권을 준다. 또 도자사가 직접 주소 이동을 도와주는가 하면, 자기 지역에 전일 신고로 근로자에게 정착지원금을 주는 지자체도 있다. 외국인에게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비자를 내준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의 인구 유입 지원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경남 고성군은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주소지 이전을 홍보 중이다. 이를 학교 기숙사로 바꾸는, 타 지역에 주소 옮긴 학생이 대상이다. 고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200명에 이어 올해 1000여명 학교 기숙사로 주소를 옮겼다.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13~18세 청소년에게 '고성군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주면서, 월 5만~7만원의 문화, 교육, 식사 등에 쓸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지난해 인구가 5만 명 이하로 떨어지



데, 바우처가 학생 복지 증진과 인구 유입에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70만 인구가 무너진 제주도도 인구 늘리기엔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가 공개한 '제주도 인구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내·외국인을 포함한 제주 인구는 692,925명으로 지난해 말 70만 7000명보다 145명 감소했다. 오영은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도의회에서 "영이 교육도시 입주민의 주소 이전 비율이 50%가 채 되지 않는다"며 도의원에

게 주소 이전을 특별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 내생원외 59만 2000명 부지에 조성된 영어교육도시 내 생활인구(살기+유동인구)는 1만 3000여 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 전일 주민은 4600명에 그쳤다. 제주도는 이들 생활인구 가운데 영어 교육도시 내 4개 국제학교 재학생과 교직원 등 약 5000명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대부분 학부포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학교는 유학부터 고등학교까지 과정을

운영한다. 이 때문에 '영어를 혼자 두는 게 걱정된다'며 국제학교 인근에 집을 빌려 생활하는 학부모가 많다고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를 학부모가 제주로 전이하면 인구도 늘고, 주민세·소득세 등 세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충남 예산군은 전일한 중·소·중간기업 청년 근로자(18~45세)에게 정착지원금으로 매월 20만원씩 1년간 지급하고 있다. 충남 서천군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공직자에게 주소를

옮기도록 권장하고 있다. 서천군 인구는 2023년 12월 4만 명대로 떨어진 이후 계속 줄고 있다. 외국인 유치도 인구 증가 대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남도는 일부부 지역 특화형 비자 공모사업을 활용, 국내 유학·취업 중인 외국인이 연구·조사 지역을 한·중·일과 거주하면 특별 비자(1-2주)를 발급해 주고 있다. 이 비자를 받은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 부산시는 2023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이들 유학생이 지역에 머물도록 특별할 방침이다. '부산형 유학생 유치 정착금' CGBS'도 신청, 월 60만원 6개월 선불해 1년간 400만원 한도의 항공권과 체류비를 지급한다.

다양한 출신·나이·종교 정책도 쏟아지고 있다. 최근 충남도는 '아이도 성과'로 인정, 육아유치자에게 A등급 이상의 성과 등급을 부여하고 근무성적평정도 가점을 주도록 했다. 또한 0~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에 주 1일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이대훈·최승환·김민우 기자**
andadun@joongang.co.kr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서울경제

2024년 04월 29일 월요일 A14면 산업

“한국기업서 일하고 싶지만...인턴십 기회도 없어요”

베트남유학생 취업설명회 기보나

“한국에서 먼저 공부한 인턴이 한국 기업 취업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취직을 잘 준비할 수 있을지 배우고 싶어 현장을 찾았습니다.” (한국외국어대 1학년 재학 베트남 유학생 김민지)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연세대학교 베트남 유학생 취업설명회. 이날 행사에는 유학생을 모집하는 기업 대표와 유학생들이 만났습니다. 유학생들은 취업에 관심이 많았지만,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과 언어 능력, 그리고 인턴십 기회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턴십 기회 부족은 유학생들이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데 큰 장애물로 꼽혔습니다. 유학생들은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과 언어 능력, 그리고 인턴십 기회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국적 학생까지 400명 배극 “한국, 문화·언어 친숙도 높지만 비자·행정적 장애 크다” 호소 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하려면 문화 다양성 가진 인재 뽑아야

취직 수 있을 정도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거 몰려왔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 기업 취업을 모색하는 다국적 유학생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업계 종사자와의 연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 기획에 참여한 베르나 출신 김민지(연세대 컴퓨터공학과 3학년) 씨는 “많은 유학생이 한국 기업 취업을 원하지만 기회가 극도로 제한돼 있다”며 “기업의 문을 넓히고 싶어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일제 이념 행사들 못은 유학생 대부분은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데 관심이 많지만 문화적 차이가 커서 어렵다”고 말했다. 김 씨는 “언어 장벽이 있는 젊은 유학생이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의 문을 넓히고 싶어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베르나 출신 김민지(연세대)가 베트남 유학생들과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SKY(서울, 고려, 연세대) 베트남 유학생 취업 설명회”에 참석하고 있다.

어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것은 유학생 입장에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내일엔 3000명 이상의 유학생이 참가할 예정이다. 유학생들은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과 언어 능력, 그리고 인턴십 기회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취업자 수 (단위: 명) 2019년 86,200명, 2021년 85,500명, 2023년 92,200명

에서 2015년 80만 9000명에서 80만 명대로 줄어든 뒤, 지난해에는 92만 3000명을 기록하면서 100만 명에 근접했다. 하지만 채용 자격별로 이들을 분류했을 때 대부분은 재외동포(약 4만 명) 또는 비전문취업(E-9 비자) 또는 전문취업(E-7 비자) 관련 정책만 쫓아온 채로 인턴십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수의 전문직은 외국인 취업 활성화가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매일경제

2024년 04월 30일 화요일 A05면 종합

노동인력 절벽 코앞...유학생 구직비자 만들어 외국인재 수혈을

중장기전략 수립 당국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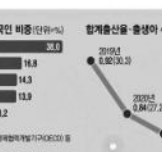
유학생 장학금 지급 확대 등 교육 인력 유치에 미해 달려 외국인 비중 1% 늘 때마다 경제활동인구 32만명 늘어

중구난방 지원 생길 위험

각종 지원 생길 위험... 유학생 구직비자 만들어 외국인재 수혈을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0.92%에 달했던 경제활동인구 비중은 지난해 0.72%까지 내려갔다. 경제활동인구를 예측한 전망치도 어둡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22년부터 2032년까지 경제활동인구가 310만 000명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2019-2022년 증가율(0.14%)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고 박사는 외국인재 유치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유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재 유입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활동인구 증가 전망 (단위: 명) 2019년 27,900,000명, 2021년 31,100,000명, 2023년 31,900,000명



경제활동인구 증가 전망 (단위: 명) 2019년 27,900,000명, 2021년 31,100,000명, 2023년 31,900,000명

중장기전략 수립 당국에 유학생 장학금 지급 확대 등 교육 인력 유치에 미해 달려 외국인 비중 1% 늘 때마다 경제활동인구 32만명 늘어

중구난방 지원 생길 위험... 유학생 구직비자 만들어 외국인재 수혈을

중장기전략 수립 당국에 유학생 장학금 지급 확대 등 교육 인력 유치에 미해 달려 외국인 비중 1% 늘 때마다 경제활동인구 32만명 늘어

중장기전략 수립 당국에 유학생 장학금 지급 확대 등 교육 인력 유치에 미해 달려 외국인 비중 1% 늘 때마다 경제활동인구 32만명 늘어

중이 1%포인트 늘면 경제활동인구는 325000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해외 주요국에 이를 외국인재 채용 전략을 수립하고, 글로벌 인력시장에 대한 정보와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재 유치에 힘쓰는 방안도 이날 제시됐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저출생 관련 예산으로 총 280조원을 지원한다. 기존 아동수당·부양급여·저년층에 등을 통해 해외로 유학생의 유입을 늘리는 정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장기전략의 방향이다.



07 주요 언론보도

5월

한국경제

2024년 05월 01일 수요일 A19면 사회

무늬만 연수생 ... '불법취업' 통로 된 어학당

☞ 호학생들, 돈 벌러 한국행 - 서울 아닌 지방대로

"학교에서 아무리 관리한다고 해도 불법 취업을 의심하고 들어온 외국 학생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일용직업계에 베트남-우즈베키스탄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어 불법 취업이 쉽습니다."(한 지방시립대 어학당 관계자)

국내 학생들로 정원을 채우지 못해 외국인 학생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는 지방시립대 어학당이 불법 취업 경로가 되고 있다. 한국어연수 과정으로 손쉽게 입국한 뒤 수업을 받지 않은 채 돈을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에 뛰어드는 사례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국내에 한국어연수(D-4-1) 비자로 들어온 학생의 국적은 베트남이 4만2748명(65.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 16654명(9.18%), 몽골 4864명(6.71%), 우즈베키스탄(1976명 2.72%) 순이었다. 반면 프랑스(0.36%), 미국(0.33%) 등 서구권 학생의 어학연수 비자 비중은 크게 낮았다.

동남·중앙아시아 출신 학생은 주로

베트남 입국자 30%가 불법취업
우즈베키스탄-중국-몽골인 등도 많아

어학비자로 들어와 '감감무소식' 재경난 지방대는 알고도 유치
현지 설명회서 '한국취업' 어필도

지방대 부속 어학당으로 향한다. 실제로 가톨릭경동대는 165명 전원이 베트남 사람이다. 김동원주재는 101명 중 71명(70.3%), 충남 건양대 한국어교육센터는 70~80%가 베트남 학생이다.

서울에 있는 대학 어학당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결핵대 국제교육원은 중국 학생이 약 60%, 일본 학생이 20~30%, 영미권 학생이 약 10%다. 연세대 한국어학당은 아메리카대륙 출신이 24.8%로 국내 어학연수생 대비 비중(0.96%)보다 훨씬 높다.

☞ 불법취업 만연한 '지방 어학당' 표면적인 이유로는 서울과 지방의 생활비 차이가 꼽힌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국내 한국어연수 외국인 국가별 비중

국가	인원(명)	비율(%)
베트남	42748	65.5
중국	6654	9.18
몽골	4864	6.71
우즈베키스탄	1976	2.72
일본	1198	1.65
프랑스	254	0.35
미국	242	0.33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고 전했다.

학원인구 감소로 만성적인 재정 위기에 처한 지방대 입장에서는 '외국인 어학생 모시기'가 유일한 자구책이나 다름없다. 불법 취업을 우려하면서도 학생 확보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한 지방국립대 관계자는 "국내 학생 부족으로 등록금이 구멍이 난 상태에서 어학당 학생은 중요한 수입 수단"이라며 "영세 시립대는 현지 설명회를

The JoongAng

2024년 05월 02일 목요일 001면 종합

외노자 52만 '공존의 시대' - 일터는 느는데

외노자 관리 따로국밥 사령탑 이민청 급하다

외국인 고용허가 3년세 3배 급증
호텔업·임업·택배업까지 개방
관리는 부처·지자체마다 조개지
이민청법은 6달째 국회서 낚음

다 4만5000명(37.5%) 늘었다. 2021년에는 5만2000명, 이듬해에는 6만9000명이었다. 외국인 고용허가 규모가 3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고용부 외국인 학업담 박진영 팀장은 "고용허가제 규모는 내국인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년 넘게 5만 명 수준으로 유지해 왔다"며 "인구감소로 인력수급 문제

를 겪는 업종이 점점 늘면서 고용허가제 외인력 수요도 늘었다. 2023년 12만 6만9000명, 2022년 5만2000명, 2021년 5만2000명

늘었다"고 말했다. E-9 고용허가 업종도 기존 제조업·건설업 등 외에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 택배업(상하차 직종), 광학 지식산업(상하차 직종), 음식점업(주방보조원), 호텔·콘도업(건물청소원 등), 방업, 임업 등 7개가 추가됐다.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은 상반기 서울·부산·제주·강원 등에서 시범시업을 진행했다. 산림청은 7월부터 임업 분야에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하기로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 노동은 원천적 산악 지형에서 일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선택 내지는 사람이 없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적극적이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에 필리핀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최종관·김윤호·김민주 기자

choi.jongkwon@joongang.co.kr

» 8면 '외노자'로 계속

The JoongAng

2024년 05월 02일 목요일 007면 특집

“건설현장 사망자 11.7%가 외국인”… 외노자 늘자 산재 증가 우려 목소리

“한국인이 기피하는 업무 무렵 사망
언어·국가별 안전감사 육성 필요”

▶ **면 외노자에서 계속**

대상자는 관련 경력·지식 등 언어 능력을 평가하고 범죄 기록 등 신원 검증, 다
약류 검사 등을 실시한 뒤 선정된다. 일
급은 최저 시급을 적용한다.

하지만 이렇게 국내 채용 외국인 늘
면서 ‘부적응’도 증가하고 있다. 일 경험
결핍의 잠재를 보던 국내에서 외국인
자녀를 보던 경우는 2008년 3만4840명
에서 2022년 3만3367명으로 줄었다. 2009년
(2만9969인)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대학 범죄(대약류

범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는 같은 기
간 63건에서 212건으로 오히려 3.19배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중 일부
가 고령 근로 대신 손쉬운 돈벌이를 찾아
대야에 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외국 인력이 ‘노노 감독’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석유화학·제철
분야 등 플랜트 건설에 외국인 인력을
낮추려 하지 만주·총이 반발하고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찰학부 교수는 “SD 산
업 현장을 채우던 외국인력이 여전히 더
좋은 고급 노동시장으로 옮겨 갈 편 이
런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며 “정부가 노사
충분히 논의를 외국인력 증가에 따른 관
등 문제를 논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재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
다. 일터생산건강증진위원회 정혜선
위원장은 보건 의료정책연구소는
“이미 국내 건설 현장 사망자의 11.7%가
외국인”이라며 “언어 소통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되고, 내국인이
기피하는 위험한 업무를 떠맡게 되는
구조가 원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에게 실시
하는 안전교육은 기본 수준에서 현
에서 위험에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이라
며 “현장 업무에 숙련된 외국인을 언어
국가별 안전 감사로 육성하고, 위험한
업무가 외국인에게 물리지 않도록 가
이드라인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장이 어떤데도 정부의 외국인 관리
정책은 각 부처를 따르고 있다. 법무부
가 채용 관리 등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
고 있지만, 외국 인력 수급과 근로 관리·
감독은 고용부가 맡는다. 외국인 정책
지원에 행정안전부, 다문화가족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학교 정책은
교육부 관할이다. 제철근로자 도입은 지
방자치단체가 각 국가와 업무협약을 맺
고 진행했다.

외국인 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출
입국 이민관리청(가칭)’ 설립도 진
행 중이다. 이민정책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지난 2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총선 등 영향으로 4개월째 제자리걸음
중이다. 정지윤(국회교육경연) 정치대
상입대위원 교수는 “외국인 근로자 관
리 지원 등 입국·법무부·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지자체에 흩어져 ‘보편적
법’으로 돌아갈 것 같다. 내외국인
트러블을 줄여야 하고 이민정책이 필요
다”고 말했다. 이어 “인입 현황 수요와 외
국인 인력 공급 마스제정 현상, 근로자
이탈 등 기존 문제에 제3도 대응하려면
다문화 사회 전환이 등 인력 양성도 서
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정책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
을 대의의원 행정안전위원회-통일
정책위원회가 지난 2월 국회에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민정책을 더 다룰 수
있는 과”라고 말했다.

세계일보

2024년 05월 03일 금요일 007면 사회

“돌봄 외국인력 도입 시 내국인 고용 보장을”

서울시, 가사노동자 설문 결과

83% “일자리 확보·지원 방안 필요”

이용자 70%도 “대체 마련됨” 응답

하반기 필라핀 인력 100명 투입에

이용자 면접 결과 찬반 의견 분조

비용 절감 기대 속 문화적 갈등 우려

“고소득층 등 수요 안정적” 인식도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외국인 가사도
우미 도입을 앞둔 가운데, 서울의 가사
노동자와 가사서비스 이용자 모두 외국
인 투입에 따른 국내 인력시장 잠식 등
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서울시의 ‘가
사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보고서
에 따르면 서울에서 일하는 가사노동
자 73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 실시
한 설문조사 결과 유효응답자의 83.
13%가 “외국인 도입 시 내국인 일자리
확보와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
2%에 그쳤다.

응답자들의 시간당 보수는 약 1만
5000원선으로 최저임금보다는 높았
다. 다만 외국인 인력의 보수가 최저임
금 수준으로 책정될 경우 가사노동 시
장 전반의 임금수준이 낮아질 것에 대
한 우려와 내국인에 대한 수요가 줄어
들 것이라 비판적 전망을 내놨다.

가사서비스를 이용 중인 서울시민
가운데서도 외국인 도입 시 내국인의
일자리 확보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가사서비스 이
용자 17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70.45%는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
다”고 답했다.

반면 외국인 가사노동자 수요가 한
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도 관측됐

다. 가사노동자 중개업체 6곳 관계자
와 가사노동자 6명, 가사서비스 이용
자 3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결과,
이들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계층
이 영어 사용이 가능한 고학력·고소득
층에 국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원이 검증되지 않은 외국인에 대
한 신뢰 문제와 국가별 육아관 차이 등
상호 갈등을 빚을 만한 요소가 산적한
만큼, 내·외국인 간 임금 차이가 클
주에만 외국인을 고용할 것이라는 답
변도 나왔다.

심층면접에 응한 한 가사서비스 이용
자는 “비용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면
내국인으로 할 것이지만, 비용이 많이
차이난다면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용

을 고려할 것”이라며 “인력 기간처럼 잘
적용하는지 먼저 사용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던 통을 잘 같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말정하게 일상을
다 오를(공개)하게 되는 사람만 만큼 정
확한 신분 확인이 가능한지를 염두에
두고 (외국인 도입 정책)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 의뢰로 한국고용
복지연구연구원(연구책임자 전용일 성
군대인 경제학과 교수)이 위탁 수행했
다. 보고서는 2022년 하반기 서울 소재
가사노동자를 총 13만3665명으로 추계
했다. 이중 12만2011명이 내국인, 외국
인(중국동포)은 1654명이었다. 가사노
동자 수요 대비 공급이 약 1470명 부족
한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시
는 올해 하반기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에 필라핀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가사노동자 인력 확보가
난제인 상황인 만큼, 새로운 계층인 청
년이나 남성의 고용 촉진을 유도하고
공적 기관을 통해 경력 인정 시스템 마
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규희 기자 ikh@segye.com



07 주요 언론보도

朝鮮日報

2024년 05월 06일 월요일 A12면 사회

‘1호 난민 카렌족’ 어린이, 한복 입고 K팝 떴창

미안마서 온 카렌족, 첫 단체 여행

지난 4일 오후 경북 김천의 국립김천치유예술 미안마 카렌족 출신 아이 20여 명이 K팝 가수 불멸간시춘기의 ‘어렘’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나인구(18)군은 자자나무와 잣나무가 어우러진 숲에서 ‘힐링’이 되는 기분이라며 웃었다. 가족들과 함께 산채비빔밥을 먹던 나군은 “비빔밥도 좋아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빼해장국”이라고 했다. 나군은 아버지 나이우(38)씨와 함께 지난 2015년 난민 신분으로 한국에 왔다. 본래 이름은 나이쿠였다. 이름의 앞글자를 따서 성을 나씨로 정했다.

카렌족은 2013년 시행된 난민법에 따라 해외 난민 캠프에서 국내로 재정착하게 된 대한민국 1호 난민이다. 미안마에서 소수민족으로 탄압받자 태국-말레이시아에 난민 캠프를 꾸렸는데, 이 중 일부인 250여 명이 2015년부터 유엔난민기구(UNHCR) 추천으로 국내에 들어왔다. 자녀를 올바른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 한국행을 결정했다고 한다. 주로 인천과 경기도에 자리 잡았다.

이날 김천에서는 어린이날을 맞아 카렌족 난민들의 1박 2일 숲 나들이가 열렸다. 카렌족 난민이 단체로 여행을 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행에는 생후 22개월 자녀부터 60대 부모까지 43명, 아홉 가족의 카렌족이 참석했다. 초등학교 6학년인 김재훈(12)은 “이렇게 숲에서 놀 수 있어서 정말 즐겁다”고 했다. 해먹에 누운 김양은 친구들에게 “내 모습이 변태가 같다”며 “관 나비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세훈(10)군은 “해먹에 누는 건 무서워서 그때처럼 앉아서 탄다”며 “일요일까지 여기서 놀고 월요일도 휴일이라 쉬고 화요일도 학교 운동회”라며 “앞으로 늘 일만 남는 것 같아서 행복하다”고 했다.

유년기를 한국에서 보낸 아이들은 “이제는 한국이 고향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국내 재정착 1호 난민인 카렌족 가족들이 어린이날을 맞아 경북 김천의 국립김천치유예술을 찾았다. 지난 4일부터 1박 2일간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이 신이 난 모습이다. 카렌족 250여 명은 2013년 난민법이 시행되면서, 유엔난민기구의 추천으로 2015년부터 차례로 일국에 국내로 정착 중이다.

카렌족

동남아시아의 소수민족으로, 대부분 미얀마 남부 지역에 살고 있다. 미안마로부터 분리 독립을 요구하며 반정부 무장군을 벌여왔고, 1980년대부터는 정부 탄압을 피한 일부가 태국-말레이시아 등 난민 캠프에 살고 있다.

어린이날 맞아 특별한 1박 2일 국내서 유년시절 보낸 아이들 “한국이 이제 고향처럼 느껴져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빼해장국 대학 가고 직장도 갖는 게 꿈”

여섯 살 때 한국에 온 나세준(14)군은 “축구와 럭비를 가장 좋아하는데, 최근 연 돌 중 럭비에 열정을 더 쏟고 있다”며 “럭비를 열심히 해서 대학도 가고 안전에 대한민국의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고 했다. 나인구군은 “인천기계공고 2학년이

다니고 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 전공인 전기와 관련한 직장을 갖는 게 꿈”이라고 했다.

이날 아이들과 함께 숲 나들이에 동행한 소예소(48)씨는 자녀들과 함께 자자나무로 만든 활쏘기 체험을 하고 있었다. 2018년 입국한 그는 인사말과 간단한 대화 외엔 한국어가 서툴렀다. 아들인 소민우(23)씨가 병역예외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아들 소씨는 “아버지는 헬강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나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기 김포시의 식품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아버지가 처음 한국에 오셨을 때 새벽 4시부터 출근해 매일 뜨거운 찰 제조 현장에서 격투에 시달리면서 힘들어하셨다”고 했다. 2015년 국내에 들어온 초크리(34)씨는 “아이들과 기본적인 말은 한국어로 대화하지만, 아이들보다 한국어를 잘 못해 가끔 소통이 힘들다”며 “언어 습득이 더 어렵다”고 했다. 이 카렌족 난민 부모 세대는 여전히 한

국 적응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이번 숲 나들이는 경기글로벌센터와 산림청, 김천시의 지원으로 진행됐다. 송인천 경기글로벌센터장은 “어린 자녀들은 그나마 낫지만, 부모 세대 카렌족이 한국에 와서 뒤늦게 한국어를 공부해 생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2015년에 1기로 들어온 난민 부모 세대는 대부분 바로 다음 해 공장 등에 취업해 이제 7-8년 차 직장인이 됐지만, 대부분은 언어적 어려움 때문에 아직도 월급 인상 없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했다.

카렌족 난민 가족들은 5일 김천 사랑대사공원을 찾아 전통복식 체험으로 한복을 입어 보고, 직지사를 방문했다. 첫 여행을 마친 난민들은 “조금 더 한국 사회에 깊이 들어간 느낌”이라고 했다. 국립김천치유예술 박물관 센터장은 “어린이날을 맞아 한국에 있는 난민들에게 한국의 숲과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해 정착 생활을 격려하고 싶었다”고 했다. 김천=김우석 기자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세계일보

“외국인 인재 300명 모십니다”

충북지역 기업들이 채용박람회 열 어 외국인 인재 300명을 채용한다. 충북도는 다음 달 13일 청주체육관 에서 '2024 충북 외국인 우수인재 채용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기업의 인력난 해 소와 외국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도가 주최하고 충북기업진흥원이 주관한 다. 도내 외국인지원센터 등은 지원기 관으로 동참한다.

도는 이번 채용박람회를 통해 도내 기업 30곳과 연계해 지역대학의 외국 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 자 등 3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방 침이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지 역특화형 비자 사업'과 '숙련기능인력 (K-point E74) 확대 사업'을 연계해 추 진한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우수 외국 인에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및 취업 하는 조건으로 거주(F-2) 비자 변경을 지원한다. 또 숙련기능인력 비자 사업 은 일정 요건을 갖췄을 때 장기 취업비 자인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가산점(30점)을 주는 제도다. 채용박람회에서는 기업과 외국인 구 직자 간 채용을 위한 일대일 면접, 입사 지원서 작성, 면접 상담, 이력서 사진

촬영을 지원한다. 또 지자체 외국인 비 자사업(지역특화형·지자체숙련기능 인력 비자)의 신청방법도 안내한다.

충북기업진흥원은 홈페이지에서 구 인기업과 외국인 구직자를 모집하고 있다. 참여 희망자는 사전등록이나 현 장 방문 등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도내 채용 외국 인이 6만4975명으로 전년보다 8500여 명 증가했다”며 “외국인 채용박람회 로 지역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정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청주=윤고근 기자 sejejun@segye.com

2024년 05월 09일 목요일 Z10면 지방종합

내달 13일 충북 인재채용 박람회
도내기업 30곳 일자리 제공 방침

내일신문

2024년 05월 10일 금요일 019면 기획

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국가책임 인정”

법원 “최소한의 존엄성 침해, 1000만원 배상”

이번바 '새우껍기' 등 경기 화성의 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외국인 인권 침해에 대해 법원이 국가책임을 인정 했다. 새우껍기란 손목과 발목을 뒤 로 묶어 포박한 뒤 새우등처럼 몸을 뒤로 꺾이게 하는 자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1단독 김 영수 판사는 9일 모로코 국적의 피해 자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A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 결했다. A씨 청구액은 4000만원이 었다. 재판부는 “숙성 새우껍기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인간으로 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비인

도적인 조치”라며 “보호소측에서 주 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소측에서 A씨를 결박하기 위해 발목 수갑, 케이블타 이, 박스테이프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장비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권·시민단체는 지난 2021년 9월 미등록 외국인 A씨가 가혹행위 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11월 법무부는 A씨에게 법령에 근거없는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A씨의 진술과 폐 쇄외로(CC)TV 녹화 내용 등을 종합 하면 이 같은 행위는 세 차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측은 지난 2022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날 선고 후 김지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오늘 법원의 판결은 국가 의 이름으로 행하여진 국가폭력이 명 백한 위법이었다고, 다시는 발생해선 안 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말해준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A씨가 쏘아 올린 작은 공으 로 수많은 결과가 있었음에도 정작 새우껍기를 비롯한 국가폭력 피해자 인 A씨에 대해선 그 누구도 사과 한 번 한 적이 없다”며 “위법행위도 인정 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3년간이나 끊임없이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음에도 그 누구도 잘못 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법무부는 항 소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07 주요 언론보도

세계일보

기 고

농어촌 인력난 해소,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돕는다

2024년 05월 23일 목요일 025면 오피니언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

대한민국은 최근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 감소와 노동시장의 변화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권으로의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한 열손 부족 문제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많다.

농어촌 지역의 인력 부족은 농수산물 가격 상승, 생산 포기로 인한 수입 의존도 증가로 이어져 결국은 우리 국민의 일상 식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에 반해, 농어촌 지역은 근로 특성상 외국인을 동원 농어촌에서 몇 년씩 계속해서 고용하기 힘든 구조여서 고용허가제 등 기존 외국인력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고, 이는 농어촌의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15년부터 농어촌 지역의 계절적 인력수요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활발하게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올해 상반기에만 전국 1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4만900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했다.

그동안 계절근로자 제도가 순탄하게만 운영된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에는 계절근로 외국인력 입국이 중단되면서 그나마 계절근로자에게 의존해오던 일부 농어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 코로나19 이후에는 급격히 증가한 농어업 인력 수요에 따라 계절근로자 입국이 증가하면서 여타자 발생, 제불입금이나 폭행 등 인권 문제, 불법 브로커 개입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그간 계절근로 문제 발생의 원인을 분석해 기존 5개월이던 국내 체류 기간을 8개월로 확대했다. 개별 농어가 직접 고용 방식만 허용하던 것을 농업 등을 통한 공공형 계절 근로를 새로 도입해 개별 농어가 부담을 완화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은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자체 간 업무협약(MOU) 방식과 결혼이민자 친척 초청 방식에 한정됐던 도입 유형을 국내 유학생 부모

에게도 계절근로를 허용하도록 확대했다. 본국 출신 결혼 이민자나 국내 유학 경험자 등 한국어 가능자를 언어소통 도우미로 배치해 고용 부담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은 2021년 17.1%, 2022년 9.6%, 2023년 2.3%로 대폭 감소했다. 농어촌 지역에 인형적으로 많은 계절인력을 공급하는 동시에 이탈률이 낮아지는 성과가 있었다.

정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올해 4월 법무부, 농식품부, 해수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농어업 외국인력 지원 TF'를 발족했다. 내년 말까지 계절근로 관련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계절근로자 선발·도입·운영에 대한 체계를 개편하고, 인권침해 및 이탈방지 등 부작용 해소, 농어가 및 운영 지자체 부담완화 방안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어업 맞춤형 외국인력 제도인 계절근로자의 정점을 살리고 부족율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정책개선을 통해 농어인이 인력 격정 없이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세계일보

2024년 05월 23일 목요일 Y09면 지방종합

기항8시간중 입출국수속만 4시간 지갑 열 틈 없는 제주 크루즈 관광객

수속절차 개선 목소리 고조

제주에는 갖는 국제 크루즈 관광객 입출국 수속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그만큼 크루즈 관광객의 체류 시간이 짧아 흥분이 줄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제주를 찾은 여행인 크루즈는 310척으로 관광객은 작년보다 7배 많은 7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시설이나 인력은 늘어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출입국 검사대는 모두 24개를 갖지만 인력이 부족해 절반만 사용 못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크루즈 승객 평균 3000여명의 입국 절차에 2시간 넘게 걸린다. 관광객들이 돌아갈 때도 보안검색 등 출국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류에 채워지는 시간은 선박 기항 8시간 중 약 4시간에 불과하다.

일본의 경우 크루즈 입국 수속 소요 시간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1시간가량 짧다. 여행사 관계자는 "입국할 때 한국은 무조건 여권을 갖고 내려야 하고 일일이 여권을 스캔해 통과하는 반면 일본은 여권을 안 가지고 복사본만 가

올해 크루즈 관광객 70만명 전망

인력·시설 부족한데 절차도 복잡

실질적인 체류시간 약 4시간 그쳐

1인당 지출 경비 8년새 76% '폭'

1인당 1시간-4시간 평균인식 대개

"시간 단축해야 소비 향상 기대"

지고 내린다. 그리고 스캔하지 않고 복사본 뒤에 입국 허가 스타커를 붙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과정에서 체류가 일본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1시간가량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중국 상하이는 영권 인식으로 수속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전날 서귀포시 감항민국여행에 기획한 MSC 크루즈 투가드 파스쿠알레크 제요한국여행사 대표는 "제주는 대체 없고 매력적인 아시아 크루즈 목적지로서 충분하지만 모객 여건이나 출입국 절차 등이 개선된다면 더 속도를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크루즈 방문객 증가에 따른 효과를 누려야 하는 지역 관광업계의 표정은 마냥 밝지 않다. 크루즈 관광객의 소비

금액이 줄었기 때문이다. 중국 경기 침체 이유도 있지만, 기항지의 짧은 체류 시간과도 무관하지 않다.

제주관광공사가 지난 3월 공개한 '방문 관광객 실태조사 10개년도 통합 보고서'를 보면 제주를 찾은 크루즈 관광객의 1인당 지출 경비는 2014년 724달러(약 98만6600원)에서 2023년 1885달러(약 25만2000원)로 74% 급감했다. 최근 10년간 크루즈 관광객 1인당 지출 경비가 가장 많았던 2015년(802달러)과 비교하면 1인당 지출 경비 감소 폭은 76% 수준으로 커진다.

이에 더해 크루즈 방문객의 평균 체류 시간 역시 2014년 7.1시간에서 2023년 4.2시간으로 2.9시간(41%) 감소하면서 크루즈 관광객의 지갑이 열 틈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김이근 제주관광협회장은 "크루즈 관광객은 일반 관광객보다 3배 이상 높은 소비를 할 수 있다"며 "크루즈 관광에도 개별 관광객으로 변화하고 있어 크루즈항을 중심으로 쇼핑 등 배후시설과 대중 교통 등 갖춰져 체류가 아시아 크루즈 목적 관광지로서 손꼽힐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07 주요 언론보도

6월

한국일보

2024년 06월 07일 금요일 A11면 사회

법원 “수사 중 이유, 출국금지 무제한 연장 위법”

중업체에 ‘영업비밀’ 빼돌린 혐의
“27개월간 25회 연장은 지나쳐”

‘수사 진행 중’이라는 막연한 이유로, 수사 대상 피의자의 출국을 2년 넘게 가로막은 법무부의 출국금지 조치는 위법하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이용우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국금지로 달성할 공약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한 용란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국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중국 동종업체로 이직했다. 그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생활하다가 2022년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전 회사에서 빼돌린 기술 정보를 중국 회사에 넘겨 부경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였다. 수사기관은 A씨를 압수수색하고, 그해 2월 출국금지했다.

그러나 A씨가 주고받은 자료가 ‘영

업비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서 수사는 지지부진해졌다. 결국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3월 검찰 특허수사자문관에게 자문을 의뢰해 관련 회신이 도착할 때까지 수사를 잠정중단(시한부 기소중지)하고, A씨에 대한 출국금지 명령만 유지하기로 했다.

그사이 출국금지는 25회나 연장됐다. 2년 3개월간 중국으로 가지 못한 A씨는 “회사에서 일할 수 없게 돼 가족까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불적 증거가 이미 확보됐고 별다른 수사 진척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국내에 붙잡아 두기만 하는 건 과도한 조치라는 주장이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출국금지 처분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불응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 근거가 함께 제시돼야 한다”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출국금지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땐 즉시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다원 기자**

한국경제

2024년 06월 04일 화요일
A25면 사회

외국인 ‘입국신고서’ 이젠 온라인으로 작성

외국인이 국내로 입국할 때 수기로 써야 하는 ‘종이 입국신고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여행객, 노동자 등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달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이 법 제15조에 따르면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입국 심사 단계에서 여권과 함께 입국신고서를 내야 한다. 그간 외국인은 기내 또는 공항에서 서면 입국신고서에 간단한 신상 정보와 한국 체류 주소, 입국 목적 등을 작성해야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전자화된 방식으로 입국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일본 비자재팬, 필리핀 이트레블과 같이 모바일 등으로 미리 입국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별도 정보통신망을 설치·운영한다.

한편 법무부는 방문취업(H-2) 체류 자격을 주는 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법령 개정으로 H-2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이 입업 중 단순종사원, 육상·항공 분야 택배 서비스업체의 하역·적재 단순 종사원으로 취업할 수 있게 하고, 제조업 부문 취업 허용 범위에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을 포함할 계획이다. **정서우 기자**

한국일보

2024년 06월 07일 금요일 A12면 종합

“하늘길 넓혀라” 지자체, 지역 공항에 국제선 확대 ‘구슬땀’

편의가 저자화되어 지역 공항의 국제 노선 확대를 위한 노력에 분주하다. 지자체의 재정적 행방지침을 타진하는가 하면 국제선 신설이나 확대를 정부에 요청하고 시설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다.

6월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국제선 중앙관리 노선 확보 차원에서 오는 12월까지 ‘김해공항 국제화노선 신규 취항 항공사입자 공모’를 진행한다. 5,000ha 이상 장거리의 경우 10월 말 승용과 관계없이 운영권장 정기편은 1,000만 원, 부항기편은 2,000만 원 을 지원한다. 2,500~5,000ha 미만 중 거외지점에는 평균 탑승률이 기존 탑 승률인 80% 미만일 때 운영권장 500 만 원을 지급한다. 김해공항 부산시 공항 기지와 공항운영체 개편을 앞둔 국 제 노선 확보를 위해 지난해보다 부정 기편에 대한 지원도 전액 대폭 증액하 고 지원금도 늘렸다”며 “부항기편을 피운 뒤 여는 정도 수치를 확인하면 정 기편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김해공항에서 두바이, 이스 람불, 파리, 런던, 프랑크푸르트 등 주 요 항공 거점 도시와 연결하는 노선 확 골도 진행 중이다. 이어 밀집으로 다른 국가와 항공회담 때 국가 간 운수협

“관할 수요 늘고 경제 활성화 도움” 부산, 부항기편 2000만원 지원 등 12월까지 신규 취항 사업자 공모 출산, 부항기편 조건 완화 요청 무안, 내년 호남고속철 정차 추진 충북-청주 재정 지원 강화 업무협약

이러한 ‘도사(도청 운수사업) 확보’를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앞서 도 시지원 운수편을 통해 부산-싱가포르 와 울란대 바르샤바 노선을 확보한 지 이 몇 개월이다. 아울러 부산-세이 노선 신설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노선 확대 추진은 관공제에 수요와 여건 제어나 신설, 이차전 지 운수 지원 선양(노선) 운영에 연관 령 상용여객 수로도 감당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측했다.

민간의 운산지도 울산공항 활성화 를 위해 부항기 국제선 취항과 노선 신 설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말 목표

지난해 지방 공항별 국제선 이용객수

▲이전 10년간 최대 실적 기록한 공항(단위:만 명)

순위	이용객수
1위	6,592,518
2위	1,195,005
3위	1,115,003
4위	522,033
5위	233,337
6위	55,587

▲이전 10년간 최대 실적 기록한 공항(단위:만 명)

국제선을 위한 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는 곳도 있다. 대구국제공항은 여객 터미널의 수송능력을 키워기 위해 연인 월 효율을 개조한 국제선 행사를 오는 9 월 말 완공한다. 지금까지 국내선의 국 제선을 같이 사용 중이던 여객터미널을 국제선 전용으로 분리한 것이다. 올해도 추진하고 있다. 2024년말 목표

이용객이 늘었다”며 “공항 연선과 도로를 개선해 노선 개설에 결집들이 앞으로 확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남 푸타공항은 내내까지 활주로를 기존 2,800m에서 3,160m로 연장하고 호남고속철이 정차하도록 한다는 계획 이다. 가나구 한남도 철도교통망은 “항공수요가 증가할 경우 1일 400여 이 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비행기 노선이 늘고 수요가 집중되는 산출물 구조가 기대된다”며 “항공 운영에서 부담하게 고 숙철도가 평가하게 되면 이용 편의가 대 폭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남도는 지난 3월 푸타공항 국제선 취항 시 2억 원의 운영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겨울 재해예방을 시도(도)와 최단 기간에 최단 기간에 선 다량으로 지원해 주고, 산간 노선 개설 지원 1억 2천만 원, 비행기 재항 목적 지원 등을 통해 하는 업무협 약을 맺었다. 충북도는 국제선을 취항하 는 항공사에 운영장려금으로 2억~4억 원의 지원하고 있다. 2024년말 목표

국민일보

2024년 06월 11일 화요일 Z14면 사회

‘유학생 유치만이 살길’... 광주권 대학, 사활 걸고 유치 경쟁

조선대-전남대-광주대-호남대 등 향후 대학 생존 직결 핵심 사안 ‘청주형-취업형’ 다각화 방안 제시

광주권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저출산이 따른 학생 수 감소 등 재학생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전략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유 학생을 끌어들이고 있다.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현재 광주권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60여 만, 전문대학을 합치면 20만 6000

명 늘어난 4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선대는 지난해 18~19일 주일급 한국 대학원과 국민국제교육원의 졸업생으로 해외에서 개최된 ‘2024 유망 한국유학박람회’에 참가했다. 지난 3월에는 중국 북 조로 한도기업 남성과 유학생 입학처 장 출을 위한 ‘가제위사 구축 산학 교류 협 약’을 맺었다. 이후 ‘학업연계형 외국인 신생 전형’을 새로 도입해 취업 지원이 일관되도록 이어지도록 하는 등 맞춤형 외국인 유학생 취업 지원에 나섰다.

광주와 여수 2곳에 캠퍼스를 둔 전남 대는 광주, 여수 구도심 번영을 위한 유 학생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광주시가 1400여명의 노 후 대학원생 170여명을 유치한 여수시와 시립과 연세형 ‘캠퍼스 300’ 프로젝트에 참가했다. 이를 통해 지방소멸에 대응하러던 서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꾀해 지역사회 활성시킨다는 복안이다.

세계 64개국, 60여 개 대학, 46개 연구 기관과 협정을 체결 중인 전남대는 올해부터 전액비 협업을 통한 글로벌 혁신 인재를 구축해 유학생 300명이 지역에 거주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023~2024년 4년 연속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으로 선정된 광주대는 유 학생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유학생 선 보 자료 등 인준서 제출을 완료해 필 수교육과 대두된 해외 유학생 교류에 주 령하는 중이다. 광주대는 올여미 베트 남 주수교관을 잇따라 방문해 체계적 학 령 강화에 주력하고 교육국제화 역량 증 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유학이 무척이나 ” “30여명의 향후 생존과 직결된 핵심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특화대학’으로 꼽히는 호남대 는 10월 졸업이 많은 중국, 베트남, 우스 베트, 캄보디아 등 유학생 940여명에 대한 ‘열 령 캠퍼스’를 지난 7월 개최했다. 호남 대에는 지난해 기준 광주에서 3개 캠퍼 스 1300명의 외국인이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학생 조선대 대학원(박사과정)은 10월 “캠퍼스에 대한 관심을 조성하고 국제화 인지도 높여 유학생 유치 경쟁 령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무척이나 ” “30여명의 향후 생존과 직결된 핵심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3~2024년 4년 연속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으로 선정된 광주대는 유 학생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유학생 선 보 자료 등 인준서 제출을 완료해 필 수교육과 대두된 해외 유학생 교류에 주 령하는 중이다. 광주대는 올여미 베트 남 주수교관을 잇따라 방문해 체계적 학 령 강화에 주력하고 교육국제화 역량 증 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유학이 무척이나 ” “30여명의 향후 생존과 직결된 핵심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특화대학’으로 꼽히는 호남대 는 10월 졸업이 많은 중국, 베트남, 우스 베트, 캄보디아 등 유학생 940여명에 대한 ‘열 령 캠퍼스’를 지난 7월 개최했다. 호남 대에는 지난해 기준 광주에서 3개 캠퍼 스 1300명의 외국인이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학생 조선대 대학원(박사과정)은 10월 “캠퍼스에 대한 관심을 조성하고 국제화 인지도 높여 유학생 유치 경쟁 령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무척이나 ” “30여명의 향후 생존과 직결된 핵심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학생 조선대 대학원(박사과정)은 10월 “캠퍼스에 대한 관심을 조성하고 국제화 인지도 높여 유학생 유치 경쟁 령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무척이나 ” “30여명의 향후 생존과 직결된 핵심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학생 조선대 대학원(박사과정)은 10월 “캠퍼스에 대한 관심을 조성하고 국제화 인지도 높여 유학생 유치 경쟁 령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무척이나 ” “30여명의 향후 생존과 직결된 핵심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학생 조선대 대학원(박사과정)은 10월 “캠퍼스에 대한 관심을 조성하고 국제화 인지도 높여 유학생 유치 경쟁 령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무척이나 ” “30여명의 향후 생존과 직결된 핵심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07 주요 언론보도

서울신문

2024년 06월 12일 수요일 010면 전국

인구감소 지자체 살리는 '지역특화형 비자'

유학·취업 외국인들 정착 유도
경남 '지역인재 유형' 신청 급증
경북, 어학당 열어 한국어 교육
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력 기대

지역특화형 비자가 지역소멸·생산인구 감소 대응에 단비가 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며 사업배정 인위 확대 등을 꾀하고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우리나라에 유학·취업 중인 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인구감소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하고 취업·창업·취업 지원 등을 위해 해당 장기 거주가 가능하도록 특별 비자(F-2-2) 거주비자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지역

인재 유형과 특화 동포 유형으로 나뉘는데 전년도 1명당 국민총소득 70% 이상의 소득·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력·5년 이상 모집 지역 거주·취업 또는 창업, 모집 지역 2년 이상 거주·60세 미만 외국국적 동포 등 유형별 조건이 있다.

경남도는 지난 3월 지역특화형 비자 접수를 시작한 후 두 달 만에 지역인재 유형으로 150명이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배정받은 지역인재 정원(250명)의 60%를 채운 것이다.

도는 특히 생활인구개년 효과로 밀양·함안지역 신청자가 100여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생활인구는 통근·통학·관광 등의 이유로 월 1회·하루 3시간 이상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

지 그 지역 인구가 거주하는 개념이다. 도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생활인구를 적용, 인구감소지역 11개 시·군에 살아도 제조업·농어업 분야 취업과 창업은 경남 어디서든 가능하도록 했다.

경남도는 "경남 지역이 아닌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졸업한 유학생도 경남에 일자리를 구하고 정착하고자 찾아오는 사례가 있다"며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소멸관심지역(통영·사천)까지 사업 대상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도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에 팔을 걷어붙였다. 올해 700명을 배정 받은 경북은 지난 4월 93명에게 비자 혜택을 부여했다. 도는 또 2월 전국지

자체 최초로 유학생·외국인 노동자 지역 정착을 돕는 어학당을 개소, 한국어 교육도 시작했다.

지역특화형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가족까지 동반 거주·취업이 가능해 이탈률이 낮다. 인구를 늘리고 경제도 살릴 수 있는 대안이기에 각 지자체는 사업 확대에 힘쓰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제도가 정착하려면 자본 지원 강화나 지속적인 모니터링·현장 컨설팅 등 정부 차원의 꾸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관련 정책을 총괄할 기구 출범, 지역주민 대상 다문화 수용성 증진 노력 등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이정 기자

한겨레

2024년 06월 13일 목요일 013면 전국

베트남에서 직접...농번기 외국인 노동자 모집이다

농림부 '계절근로사업' 강진군 선정
농협이 고용 뒤 소규모 농가에 파견
5개월간 20명 마늘·양파 수확 도와

"일손 부족했다면 너 나서서 와서 도와준게 고맙지요. 겨우겨우 송풍이 트입니다." 12일 오후 전남 강진군 신전면 봉암마을에서 만난 이영숙(67)씨가 말했다. 그는 "농촌에 사람이 없으니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면 농사 짓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같이 일해보니 부지런한데다 손도 아무지다"고 엄지를 치켜 세웠다. 이씨는 이날 아침 7시부터 베트남 노동자와 함께 모내기예 쏘 모판을 이앙기에 옮기는 일을 하고 있었다. 지난 4월 한국에 처음 온 베트남 출신 레프억흥(32)은 "한국 농업이 베트남과 달라 처음엔 적응하기가 조금 힘들었지만, 지금은 괜찮다. 풍량이 없어도 휴대전화 앱 덕분에 답답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모내기 작업은 오후 5시가 다 돼 끝이 났다.

전남 강진군은 올해 처음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지역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고용한 뒤, 소규모 농가에서 하루나 이틀 단위로 일손이 필요할 때마다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12일 오후 전남 강진군 신전면 봉암마을 일대에서 이영숙씨와 베트남 근로자 레프억흥이 모내기하고 있다. 권진군 제공

기존 농가형 계절근로사업의 경우 각 농가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하고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소규모 농가에선 숙식 등 문제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투입하기가 힘들어 인력난에 허덕여왔다. 영농철 부족한 일손을 덜어주려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초대'하기 위한 묘수를 짜낸 셈이다.

강진군과 도암농협은 4월22일부터 5개월간 베트남 노동자 20명을 계약직 형태로 고용해 마늘·양파 수확에 나섰다. 최치수 강진군 농정실 농정팀 주무관은 "강진 도암농협은 사설 인력중개소와 달리 중개수수료

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일당이 11만 원으로, 평균 15만 원보다 더 저렴하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아예 직접 지난해 베트남 풍하업현 및 허우장성과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유채선 도암농협 조합장은 "언어와 문화가 낯선 한국에 와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로 전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19곳 시·군 3846명에 이른다. 2017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코로나 19 사태 때 활용되지 못하다가 지난해부터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김길식 전남도 농업정책과 주무관은 "공공형 계절근로제 고용은 시·군이 총괄해 관리하고 있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영암군도 계절근로자 300명을 멜론·고추·무화과·고구마 등을 재배하는 100여개 농가에 투입하고 있다. 영암군 측은 "지역 내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가족·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영암에 온 외국인들이 상당수"라고 말했다. 영암군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까지 시종면에 48억 원을 들여 50명이 생활할 수 있는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할 예정이다.

최태하 기자 daeha@hani.co.kr

서울경제

2024년 06월 14일 금요일 A17면 산업

“육성형 이민정책 도입해야 인력난 해소”

중기중앙회 연구감소 대응전략 지방 제조업도 외국인 이발 가속 ODA와 이민 연계하는 방안 제시 인재양성대학 등 사업 확대 거론도

이민 정책에 적극 뛰어들어든 일본 사례를 참고 하는 등 숙련된 외국 인력 확보를 위해 파격적인 대책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한국어 교육 지원 확대,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한 육성형 이민 정책 도입, 외국인력(E-9) 허용업종 확대(네거티브 방식 전환)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관에서 ‘인구감소 대응 전략-일책, 중소기업 외국인력 확보 전략’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병 토론회는 생산인구 감소 등 중소기업 인력난이 갈수록 악화하는 가운데 일본 사례 비교를 통해 향후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오학수 일본노동정책연구원수기부 박사는 일본의 노동시장 및 일본의 외국인력 확보정책의 현황을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1인당 연봉수준이 높고, 외국인 근로자 연봉 역시 일본보다 더 높은 것”이라며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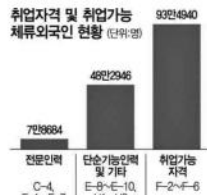
지난해 7월 부산 동구 부산통국제민선센터(BPEX)에서 열린 ‘지역특화형 비자 유학생 채용박람회’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는 외국인력의 능력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는지 현행 고용허가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2019년 ‘특정 기능 제도’를 도입하는 등 파격적인 이민 정책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특정 기능 제도는 기능심사생보다 업무 숙련도가 있고 일본어 소통도 가능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5년간 부여하는 노동 비자다. 일본인과 같은 임금과 노동 시간을 보장하고 이직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특정 기능 1호에서 2호로 승격되면 가족을 데려올 수 있고 체류 자격도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올해 초 ‘특정 기능’ 체류 자격 인원을 약 2.4배로 늘리는 방안을 예고했다.

확보 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육성형 이민정책’이 도입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했다. 가령 이미 한국 사회에 적응한 유학생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유학생의 취업비자(E-7) 취득 기준을 완화하거나 졸업 후 취업 지원 체계를 대폭 확충하자는 것이다. 국내에서 이미 10년 가까이 운영한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사업 등을 확대 운영하는 것도 대안으로 거론됐다. 이 사업의 경우 2015년 이후 입학생을 꾸준히 늘린 결과 지난해까지 967명의 졸업자를 배출했다. 졸업자 중 지방검증 합격 수는 692명에 달한다.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박사는 “외국인력 확보 정책을 넘어 이민정책 관점의



*2024년 4월 기준. 자료: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청

외국인력 확보를 위한 기본 전략으로 이민과 ODA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육성형 이민정책 관점에서 유입-체류관리-기업활용-사회통합-귀환·정주 등 전체 사이클을 고려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임장을 고려해 한국에 교육 지원 확대, 외국인력(E-9) 허용업종 확대(네거티브 방식 전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기중 중기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장은 “지난 마 등 외국 인력의 약 80%는 한국으로의 사소통이 어렵다고 응답했다”며 “국가 안보와 직결된 일부 업종을 제외한 산업에서 는 외국 인력 도입시 네거티브 비자를 전면 도입하는 등 파격적인 대책을 검토

朝鮮日報

2024년 06월 18일 화요일 B03면 경제종합

K팝 꿈나무에 장기체류 ‘특별 비자’ 내준다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발표 현재 90일 ‘예비 연습생’ 체류 늘려 외국 직장인 위케이션 비자도 검토

정부가 K팝에 도전하는 외국인 ‘예비 연습생’ 등이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별 비자를 도입하기로 했다.

17일 정부는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산 콘텐츠 인기 에 힘입어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지만, 관광 경기 지체는 더디게 회복되는 현상을 개선해보자는 취지다. 지난 1~4월 방한 관광객 수는 487만명으로 코로나 전인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90% 수준까지 회복한 반면, 1~4월 관광 수입은 49억달러로 2019년 같은 기간의 70%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외국인들이 편하게 국내로 입국해, 충분히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먼저 K팝이나 K안무를 배우러 한국을 찾은 ‘예비 연습생’ 등을 위한 ‘K팝차 연구 비자’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엔터테인먼트사와 정식으로 계약한 외국인 연습생들은 E-6 비자를 발급받아 최대 2년까지 체류할 수 있지만, 예비 연습생들은 90일까지만 체류할 수 있다. 정부는 예비 연습생들이 국내에서 더 오랜 기간 머무를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체류 기간과 대상자는 업계 논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확정하기로 했다.

새로운 특별 장기 체류 비자로 ‘지역 특화형 디지털노마드’ 비자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디지털노마드 비자란 해외 원격 근무자가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며

최대 1년까지 체류할 수 있는 위케이션(휴가지 원격 근무) 비자를 뜻한다. 이를 지역별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심사 인력 등을 늘려 동남아 지역의 관광비자 발급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통상 관광비자 발급에는 일주일만 걸리지 않지만, 동남아 지역에서는 관광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비자 발급에 2주에서 한 달까지 걸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 열리는 MICE(기업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전시행사)에 참석하는 외국인인 입국시 ‘패스트트랙’(입국 우대 심사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MICE는 행사 참여와 가족들이 국내로 돌아오면서 호텔과 쇼핑 등도 덩달아 살아날 수 있다”고 했다. 김우형 기자

매일경제

2024년 06월 20일 목요일 A05면 종합

‘인력난’ 가사돌봄, 외국인근로자 가족·유학생에 허용

정부가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주범인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가사돌봄을 허용한다. 연내 서울에 시행될 ‘필리핀 가사도우미’ 역시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고 규모도 1200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외국인 유학생(D-2),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F-3) 등에게 가사돌봄활동을 허용하는 시행규칙을 5000명 규모로

해외인력 공급 확대

5000명 규모 돌봄 시행사업
‘필리핀 도우미’도 견국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시행사업 주에는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행한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지난 3월 20일 진행된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배

우지에 대한 취업 제한을 완화해 가사돌봄 서비스 수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며 이 같은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올해만기 고용부와 서울시가 100명 규모의 시범 도입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정책은 내년에 지역을 확대해 1200명 규모로 실시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서울시의 추진한 시행사업을 마치면 내년에는 이를 서울시민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서울시 시행사

업은 필리핀만 하고 있는데 필리핀만으로는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사업 규모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민간기관이 도입·중개·관리하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 중개업체가 외국인을 소개하고 이를 국내 개별 가정이 계약해 가사 업무를 맡기는 방식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최저임금 저하와 필요성이 제

기되는 가운데 가사돌봄으로 취업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서비스 인증기관에서 직접 근로자로 채용하는 형태에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주 5일 8시간씩 고용하면 한 달에 200만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해 필요성이 떨어져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윤식 기자

서울신문

2024년 06월 25일 화요일 009면 사회

복수국적 허용 55세로 하향 추진 “인구소멸 완화” “복지 혜택만 누려”

생각나눔

**국적 회복 연령 낮추는 방안 논의
재외동포청 “인재 유치에 기여”**

**“남세·병역의무 등 불공평” 반론
법무부, 대국민 여론조사 본격화**

재외동포청이 최근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 해결 등을 내세워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소관 기관인 법무부가 이에 대한 여론 조사가 나서면서 관련 논의가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연행 국적법은 외국 국적을 가지려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해외동포가 ‘만 65세’를 넘겨 영구 귀국을 원하면 일정 조건 하에 국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놔는데, 법무부가 이 연령 기준을 ‘55세 이하’로 낮추는 데 대한 찬반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재외동포청 등 동포 사회에서는 “저출산 등 인구 문제 해결과 우수 인재 유

연령별 국적회복 현황 (단위: 명)
※2022년 기준



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내에선 “한국 국적 포기로 남세 의무를 지지 않던 재외동포들이 뒤늦게 복지 혜택만 누리려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던 법무부는 최근 업체 선정 후 본격적인 대국민 여론 조사가 착수됐다. 20세 이상 일반 국민 200명 이상을 대상으로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는 나이를 낮추는 것과 관련해 국민 정서를 조사하겠다는 취지다.

재외동포 사회에선 2010년 5월 개정된 국적법에 만 65세 이상에 대한 복수

국적 허용 규정이 신설된 이후 꾸준히 이 연령 기준을 낮춰 달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도 지난 5월 출범 1주년을 맞아 연 ‘재외동포와 대화’ 행사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재외동포청은 지난 5월 관련 연구용역 등을 발주하며 정책 실무 준비에도 나선 상황이다.

재외동포청 등에서는 만 65세는 경제 활동 은퇴 시가리 국적을 회복하는데도 모국 발전에 기여하기 어려운 연령이고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권익도 적다는 이유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엔 인구 소멸 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거론된다.

반면 국내에선 아직까지 “건강보험 등 해외보다 유리한 국내의 사회보장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꼼수”라는 인식이 강하다.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 위원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던 재외동포들이 재한 없이 국내 사회보장 시스템을 누릴 시 그 부담을 어떻게 질지 등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만 65세 이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해외 국적 포기 후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사람은 2020년 1764명에서 2021년 2742명, 2022년 3043명, 2023년 4136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병역의무 등 형평성 문제도 논란 소산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65세에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해도 병역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데,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면 병역을 마친 국민은 입장에서선 ‘의무는 안 지고 혜택만 보러 왔다’는 불만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진 기자



07 주요 언론보도

東亞日報

2024년 06월 25일 화요일
A14면 사회

외국인 유학생도 수도권 쏠림 1~5위 모두 서울 소재 대학

한국에 공부하러 온 외국인 유학생이 지난해 18만1842명으로 10년 새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은 대학은 한양대였으며 유학생 10명 중 6명은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이었다.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발행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3년 8만5923명에서 지난해 2.1배로 늘었다. 외국인 유학생은 2019년 16만165명까지 늘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기에 감소했는데, 올해까지도 아직 회복된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경희대(6396명), 성균관대(4480명) 순으로 45%는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었다. 전체에 집중된 셈이다. 8062명으로 전체의 45.0%를 차지한 서울 소재 대학은 7732명(20%), 문경외국인유학생(3.1%) 순으로 많았다.

The JoongAng

2024년 06월 20일 수요일 02면 종합

외국인 사망자 18명 전원 '불법 파견' 의혹

한달 전 설립된 경기도 안성시 리튬 1차원지 아리셀 공장 화재 당시 사망자 2명 중 1명이 외국인 이주노동자로 확인됐다. 이들 대부분은 회사 직공으로 동지거나 인력파견 업체가 파견한 노동자들이었다. 원가에서 비윤리적인 관행을 일삼고 있어 외국인 사망 피해가 커졌다.

안성시 리튬 1차원지 아리셀 공장 화재 당시 사망자 2명 중 1명이 외국인 이주노동자로 확인됐다. 이들 대부분은 회사 직공으로 동지거나 인력파견 업체가 파견한 노동자들이었다. 원가에서 비윤리적인 관행을 일삼고 있어 외국인 사망 피해가 커졌다. 안성시 리튬 1차원지 아리셀 공장 화재 당시 사망자 2명 중 1명이 외국인 이주노동자로 확인됐다. 이들 대부분은 회사 직공으로 동지거나 인력파견 업체가 파견한 노동자들이었다. 원가에서 비윤리적인 관행을 일삼고 있어 외국인 사망 피해가 커졌다.

비자 신분은 제2종외국인(2F) 비자가 1명, 방문취업 동포(4D) 비자가 4명, 결혼이민(1F) 비자 2명, 영주권(1D) 비자가 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한 12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들 고용허가 업체인 '불법 고용' 업체가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2종외국인·농축산물 등 일부 업종과 3000 이하 근로자 혹은 자본금 10억원 이하 규모의 사업장 등에 한해서만 비례고용 허가가 가능하다. 아리셀은 자본금은 200억원으로 기준을 초과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아리셀과 계약이 체결 모두 비례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12명 비자를 가진 이주 노동자들이 합법 채용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회사가 불법 고용 측은 파견을 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아리셀은 아리셀에 요호사인 에스코텍의 박승민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불법 고용으로 고인양 되신 분과 유족에게 깊은 애도와 사죄를 드린다"면서 "합법 파견은 없었고 인력교체도 충분했다"고 말했다.

발파탄인 원가파의 8명 규 변호사는 "파견노동자에게 따르면 파견할 수 있는 업무가 특정이 있는데 배터리를 포함한 수 있는 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직접 고용해야 할 인력을 파견 형식으로 고용하는 불법 관행"을 비판하며 "아리셀과 계약이 체결된 이후 아리셀에서 했고, 우리는 아리셀 공장 자체를 가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망한 외국인 18명 중 원가파 업체 소속이 18명이었다. 유족자들 아리셀 직원으로 한 때 대해서는 "다 그렇게 한다"며 "배터리 관련 근로자 파견 허가를 받으면 원가파는 깨닫고 배터리를 다루는 일을 맡는다"고 말했다. 아리셀은 "사실상 불법 파견업체를 사용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외국인 사망자의 국적은 중국 17명, 라오스 1명이다."



■미국과의 소방 중 유권기관 관계자들이 25일 화재 현장에서 활동 감독을 하고 있다.

CCTV로 본 리튬공장 참사-첫 폭발 42초 만에 암흑





07 주요 언론보도

한국일보

2024년 06월 28일 금요일 A01면 종합

“오목교역 말만 들어도 몸서리”… 콧대 높은 출입국외국인청

초당적 ‘30년 전략’ 짜자
3부 이민정책, 지금이 골든아워 <하>
장간 70주년 특별기획

하루종일 줄 서 기다렸는데 냉대호통 직원에 ‘체류 결정’ 등 과도한 재량권 한국말 서툰 외국인 눈치 보며 예테워 불법체류자 전략 안 되도록 도움 시급

국인 관련 일을 도맡는 기관이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마주하는 첫 국가기관이지만, 본보가 이번 취재를 통해 만난 활동가들과 외국인들은 이곳에서 적절히 안내는커녕 냉대만 당했다고 털어냈다. 어떤 직원을 만났느냐에 따라, 안내받은 절차가 뒤집히기도 하고 일선 절차가 불거졌을 때 몇 달을 다시 애타우는 앞도 밟생한다는 것이다.

“선생님, 왜? 가라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지난달 22일 서울 양천구 오목교역 인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민원실에 반말 조 고성이 울렸다. 창구 너머에서 온 호통을 들던 아랍인 알민(가명·30)은 울절하다가 이내 돌아섰다. 그가 기자에게 보여준 포스트잇엔 **빠들빠들**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난민(신청자) 비자를 6개월 연장하고 싶어요.’
★관련기사 6·8면
알민은 한국말을 하지 못했다. 지인이 대신

작은 메모 한 장을 믿고 이곳에 온 터였다. 그는 외국인청에서 무엇을, 왜 해줄 수 없다는 것 인지, 언제 다시 오면 되는지, 알고 싶었던 답을 전혀 듣지 못하고 밀려났다. “Maybe not today, I come back tomorrow(오늘은 안 된다는 것 같으니, 내일 다시 와보려고요)” 서툰 영어로 답한 알민은 건물을 빠져나갔다.

간절한 이들이 찾은 외국인청은 비자 관리부 터 불법체류자 단속, 난민, 다문화 정책까지의

한국에서 자녀를 낳은 필리핀인 아야(가명·47)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국에서 태어난 이주민 자녀는 출생등록을 할 수 없지만,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도 조건부 체류를 허용한다. 다만 불법체류자의 경우 이때 수백만 원 벌칙금을 내야 한다.

이유진 기자 <6면에 계속>

한국일보

2024년 06월 28일 금요일 A06면 기획

직원 손에 달린 ‘체류 자격’… 서러워도 불이익 무서워 “아무 말도 못 해요”

초당적 ‘30년 전략’ 짜자
3부 이민정책, 지금이 골든아워 <하>

“면”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이하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이 최근 발표한 ‘30년 전략’은 이민정책을 둘러싼 3부 이민정책, 지금이 골든아워 <하>

“면”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이하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이 최근 발표한 ‘30년 전략’은 이민정책을 둘러싼 3부 이민정책, 지금이 골든아워 <하>



“면”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이하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이 최근 발표한 ‘30년 전략’은 이민정책을 둘러싼 3부 이민정책, 지금이 골든아워 <하>

“면”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이하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이 최근 발표한 ‘30년 전략’은 이민정책을 둘러싼 3부 이민정책, 지금이 골든아워 <하>

“면”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이하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이 최근 발표한 ‘30년 전략’은 이민정책을 둘러싼 3부 이민정책, 지금이 골든아워 <하>

“면”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이하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이 최근 발표한 ‘30년 전략’은 이민정책을 둘러싼 3부 이민정책, 지금이 골든아워 <하>

“면”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이하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이 최근 발표한 ‘30년 전략’은 이민정책을 둘러싼 3부 이민정책, 지금이 골든아워 <하>

“면”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이하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이 최근 발표한 ‘30년 전략’은 이민정책을 둘러싼 3부 이민정책, 지금이 골든아워 <하>

“면”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이하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이 최근 발표한 ‘30년 전략’은 이민정책을 둘러싼 3부 이민정책, 지금이 골든아워 <하>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매일경제

2024년 06월 29일 토요일
A13면 사회韓대학 졸업한 유학생
요양보호사 취업 허용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대한민국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E-7은 법무부장관이 특별 지정한 88개 직종에 한해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다. 법무부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할 경우 E-7 자격 취득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 400명 범위에서 2년간 E-7 자격 취득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요양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 국내 요양보호사의 고령화 등으로 돌봄인력 공급이 부족해 전문적인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인 돌봄 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내국인 처우도 개선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함께 마련했다”고 말했다. 강영운 기자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서울경제

2024년 07월 10일 수요일 A02면 총량

돌봄인력 8년뒤 71만명 부족...베트남서 '전문 간병인' 키운다

선배대를 나선 시·어케어 기업

▶ 2030년엔 71만명 부족... 돌봄 인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선배 기업들이 해외에서 전문 인력을 도입하는 추세다. 특히 해외에서 전문 인력을 도입해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제도도 71만명 부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30년엔 71만명 부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30년엔 71만명 부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서 전문 인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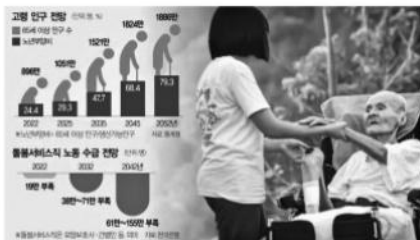
▶ 2030년엔 71만명 부족... 선배 기업들이 해외에서 전문 인력을 도입하는 추세다. 특히 해외에서 전문 인력을 도입해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제도도 71만명 부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30년엔 71만명 부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 40만 규모

▶ 2030년엔 71만명 부족... 선배 기업들이 해외에서 전문 인력을 도입하는 추세다. 특히 해외에서 전문 인력을 도입해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제도도 71만명 부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30년엔 71만명 부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엔 71만명 부족

▶ 2030년엔 71만명 부족... 선배 기업들이 해외에서 전문 인력을 도입하는 추세다. 특히 해외에서 전문 인력을 도입해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제도도 71만명 부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30년엔 71만명 부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30년엔 71만명 부족... 선배 기업들이 해외에서 전문 인력을 도입하는 추세다. 특히 해외에서 전문 인력을 도입해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제도도 71만명 부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30년엔 71만명 부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30년엔 71만명 부족... 선배 기업들이 해외에서 전문 인력을 도입하는 추세다. 특히 해외에서 전문 인력을 도입해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제도도 71만명 부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30년엔 71만명 부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일보

2024년 07월 12일 금요일 015면 경제

작년 한국에 일하러 온 외국인 17만명 '역대 2위'

고용이 가장 확대된 분야

▶ 2023년엔 17만명... 작년 한국에 일하러 온 외국인 17만명 '역대 2위'... 고용이 가장 확대된 분야... 작년 한국에 일하러 온 외국인 17만명 '역대 2위'... 고용이 가장 확대된 분야...

17만2천명으로 전년(13만8천명)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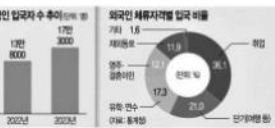
▶ 2023년엔 17만명... 작년 한국에 일하러 온 외국인 17만명 '역대 2위'... 고용이 가장 확대된 분야... 작년 한국에 일하러 온 외국인 17만명 '역대 2위'... 고용이 가장 확대된 분야...

주·결혼이민(12.1%), 재외동포(11.9%)

▶ 2023년엔 17만명... 작년 한국에 일하러 온 외국인 17만명 '역대 2위'... 고용이 가장 확대된 분야... 작년 한국에 일하러 온 외국인 17만명 '역대 2위'... 고용이 가장 확대된 분야...

국적별로는 중국(13만2천명) 베트남(1만3천명)

▶ 2023년엔 17만명... 작년 한국에 일하러 온 외국인 17만명 '역대 2위'... 고용이 가장 확대된 분야... 작년 한국에 일하러 온 외국인 17만명 '역대 2위'... 고용이 가장 확대된 분야...



69만3천명(80%) 해외로 나간 출국자

▶ 2023년엔 17만명... 작년 한국에 일하러 온 외국인 17만명 '역대 2위'... 고용이 가장 확대된 분야... 작년 한국에 일하러 온 외국인 17만명 '역대 2위'... 고용이 가장 확대된 분야...

지난해 입국자는 내국인이 21만

▶ 2023년엔 17만명... 작년 한국에 일하러 온 외국인 17만명 '역대 2위'... 고용이 가장 확대된 분야... 작년 한국에 일하러 온 외국인 17만명 '역대 2위'... 고용이 가장 확대된 분야...

서울신문

2024년 07월 12일 금요일 028면 전국

농촌 살리는 공공형 계절근로제... 농협, 장마철마다 '울상'

농협, 외국인 근로자와 활급 계약

▶ 11월 지역농협... 농촌 살리는 공공형 계절근로제... 농협, 장마철마다 '울상'... 11월 지역농협... 농촌 살리는 공공형 계절근로제... 농협, 장마철마다 '울상'...

11월 지역농협 등에 따르면 농가의 초음속

▶ 11월 지역농협... 농촌 살리는 공공형 계절근로제... 농협, 장마철마다 '울상'... 11월 지역농협... 농촌 살리는 공공형 계절근로제... 농협, 장마철마다 '울상'...

다. 장마 등 날씨 영향으로 일할 못 하거나

▶ 11월 지역농협... 농촌 살리는 공공형 계절근로제... 농협, 장마철마다 '울상'... 다. 장마 등 날씨 영향으로 일할 못 하거나...

장마철마다 '울상'

▶ 11월 지역농협... 농촌 살리는 공공형 계절근로제... 농협, 장마철마다 '울상'... 장마철마다 '울상'...



공공형 계절근로제에 참여한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일하는 농민들. 공공형 계절근로제에 참여한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일하는 농민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 2년째 시행

▶ 2년째 시행...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 2년째 시행... 2년째 시행...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 2년째 시행...

11월 지역농협 등에 따르면 농가의 초음속

▶ 11월 지역농협... 농촌 살리는 공공형 계절근로제... 농협, 장마철마다 '울상'... 11월 지역농협... 농촌 살리는 공공형 계절근로제... 농협, 장마철마다 '울상'...

다. 장마 등 날씨 영향으로 일할 못 하거나

▶ 11월 지역농협... 농촌 살리는 공공형 계절근로제... 농협, 장마철마다 '울상'... 다. 장마 등 날씨 영향으로 일할 못 하거나...

장마철마다 '울상'

▶ 11월 지역농협... 농촌 살리는 공공형 계절근로제... 농협, 장마철마다 '울상'... 장마철마다 '울상'...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 2년째 시행

▶ 2년째 시행...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 2년째 시행... 2년째 시행...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 2년째 시행...

11월 지역농협 등에 따르면 농가의 초음속

▶ 11월 지역농협... 농촌 살리는 공공형 계절근로제... 농협, 장마철마다 '울상'... 11월 지역농협... 농촌 살리는 공공형 계절근로제... 농협, 장마철마다 '울상'...



07 주요 언론보도

세계일보

2024년 07월 12일 금요일
Y08면 지방종합

제주도 “크루즈항 출입국 간소화” 이르면 내년 무인자동심사대 도입

제주도가 크루즈항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무인자동심사대 도입을 저울질하고 있다.

제주도는 강정민군복합관광미항 크루즈 전용 터미널에 무인자동심사대를 도입하기 위해 정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는 빠르면 내년부터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항과 강정민군복합항에는 24개의 출입국 검사대가 갖춰져 있지만, 전담인력 부족으로 입국절차를 밟는 데 3~4시간 소요된다. 선박기항 실제 체류시간이 8시간 중 4시간에 그치는 등 크루즈관광객들의 관광·쇼핑이

지역관광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나영 로열캐리비안인터내셔널 매니저는 이날 제주국제크루즈포럼에서 “해의 기항지는 승객이 하선해 기항지 관광을 시작하는 데 단 15분만 소요된다. 대면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승객 하선 시에는 여권 또는 여권사본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2024년 07월 15일 월요일
A25면 사회

“이중결혼 숨긴 파키스탄인, 귀화취소 정당”

중혼한 사실을 숨기고 귀화한 파키스탄 남성의 귀화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파키스탄인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1년 7월 파키스탄에서 한국 여성과 결혼하고 같은 달 파키스탄과 국내에 혼인신고를 마쳤다. 또 2003년 파키스탄에서 현지인과 결혼해 자녀 4명을 낳았다. 파키스탄에서는 중혼이 허용된다.

A씨는 2010년 중혼을 숨기고 한

국에 간이 귀화를 신청해 2012년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6년 한국 아내와 협의이혼하고, 이듬해 파키스탄 아내와 혼인신고를 했다.

법무부는 작년 6월 A씨의 귀화허가를 취소했다. 파키스탄 배우자와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위장 결혼’ 했다는 취지다. A씨는 “귀화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인과 혼인한 기간이 10년이 지난 상태였으므로 위장 결혼으로 보기 어렵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중혼을 법무부가 인지했다면 허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우 기자

국민일보

2024년 07월 16일 화요일 Z12면 사회

“외국인 ‘K드림’ 현실로”... 경북, 전국 첫 이민정책위원회 출범

경제 이민정책 기본계획 후속 지역소멸 극복 위한 두 트랙 한국 이민정책 기조 변화 기대

경북도는 15일 도청에서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경상북도 이민정책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경상북도 이민정책위원회’는 경북도가 추진하는 이민 정책에 대한 정책 자료와 정보 수집, 이민자 소동을 지원 하는 자문위원회다. 이철우 경북도 지

사, 이해경 제2대 교수 등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국내 외국인-이민 정책 최고 전문가 24명으로 구성했다.

출범식은 유력세, 외국인 경제관계기관, 시군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경상북도 이민정책 기본계획 보고, 이민정책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경상북도 이민정책위원회’의 출범은 지난 4월 경북도가 발표한 ‘경상북도 이민정책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경북도는 인구구조와 지역소멸 극복

을 위해 ‘저출생과의 전쟁’과 ‘경북형 이민정책’을 두 트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민 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이민정책에 대한 새로운 여담이 열릴 계획이다.

경북도는 다양한 이민 정책 추진을 위한 외국인 전담 부서인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하고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도 전국 최초 외국인 취업을 연계하는 희망 아용사업 등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지원으로 외국인 조기 정착을 도왔다.

또 외국인의 인구-정착-사회통합을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종합 플랫폼인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 신설, 경북 글로벌

별 특장 개소 등 외국인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는 외국인의 유입부터 정착까지 전주기별별 지원하는 이민정책 기본계획 수립으로 전국 광역자치체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외국인지원 정책이 이민 정책으로 변화하는 대안위원을 맺었다.

올해 하반기부터 외국인 자녀 보육교전제 지원, 취업 지원을 위한 유학생 교육 패키지 프로그램 시행, 외국인 구인·구직을 위한 K드림 워크넷 시스템 구축 등 경북형 이민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철우 경상북도 이민정책위원회 운영으로 지역이 성장하고 이웃과 거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민정책을 개발해 경상북도 이민정책이 대한민국의 이민정책 기조를 변화시키고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을 찾는 외국인도 K드림 실현은 외국인도 도민이 함께 가겠다고 꿈꾸는 새로운 시대가 될 것”이라며 “이민정책위원회와 함께 경북이 지향하는 글로벌 개방사회의 대 전환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영·김재신 기자 skimk@kimb.co.kr

내일신문

2024년 07월 15일 월요일 019면 기획

“전 남편 폭력”... 튀니지인 난민심사 승소

법원 “전 남편의 위협, 박해에 해당하는지 심사서 살펴봐야”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이혼한 전 남편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국내에서 난민심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인천지방법원 행정1단독 정현설 판사는 튀니지 국적 여성 A씨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 인정심사 불허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를 난민 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1심에서 승소한 A씨는 최종심에서도 법원 판단이 바뀌지 않으면

국내에서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튀르키예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입국 심사와정에서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재심사를 받게 되자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그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난민 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A씨가 박해를 당한 국적이 없이 난민 신청을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반면 A씨는 튀니지에서

폭행당했고, 7개월 만에 이혼했다며 “이후에도 전 남편은 계속 찾아와 폭행하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이 같은 위협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은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튀니지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가정 폭력에 시달렸고, 이혼 후 거주지인 튀르키예에서

세계일보

2024년 07월 24일 수요일 Y12면 지방종합

제주 크루즈 입국에만 3시간 “무사증 허용 국제도시 맞나요”

‘서귀포 강정항’ 현장 가보니

중 상하이 출발 국제크루즈 기항 입국장까지 1.2㎞ 도보로 이동 보안 검색, 선박·터미널 이중 진행

8시간 기항 중 실제 체류 단 4시간 관광객들 “밤도 제대로 못먹어” 뚜렛 등선 보안검색 생략 ‘대조’



중국에서 출발한 대형 크루즈를 타고 온 관광객들이 17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항에서 하선할 시나루터에 의해 크루즈터미널로 걸어가고 있다.

“무사증 입국 허용한 국제자유도시 맞나요?”

지난 1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강정민군복합항.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한 13만6000급 대형 크루즈가 중국인 관광객 3000여명을 태우고 입항했다. 이들은 기항지 관광을 위해 배에서 내려 입국장까지 1.2㎞ 거리를 20~30분가량 걸어서 이동하고 대면심사를 받았다. 도보 이동 돌봄에 무방비국가 설치돼 있지만 출구쪽 병목현상을 줄이기 위해 중간중간 작동을 멈추기 일쑤다. 이날 강정항에는 대형 크루즈 2대가 동시에 정박해 출입국장이 더욱 혼잡했다. 보안 검색은 선박과 터미널에서 이중으로 진행된다. 하선 순서에 따라 입국객을 빠져 나오기까지 1시간30분에 걸친 3시간까지 걸렸다. 제주도 국제크루즈 관광객의 입국 절차가 복잡해 그만큼 체류시간이 짧아 직접 열람이 없는 지자체 이 나온다. 실제 강정항에는 유인 심사대 24대가 있지만 출입국심사관 등 전담인력이 부족해 5~

은 1~2시간, 일본 후쿠오카 하카타항은 40분~1시간30분 정도 걸린다.

제주 강정항을 들른 국제크루즈는 일본 하카타항으로 향했다. 이곳 크루즈 터미널은 선석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 배에서 내린 관광객들은 관바로 터미널 안으로 들어가 입국 수속을 밟는다. 하선 후 이동시간을 최소화한 것이다. 하카타 모리즈미 후쿠오카시 크루즈담당계장은 “입국 심사대를 20개 갖춰 대규모 관광객을 빠른 시간 내에 소화할 수 있다”며 “크루즈 터미널을 배치나오면 면세품 등 편의시설이 인근에 있어 승객 뿐만 아니라 승무원들도 소품을 편하게 구입 수 있다”고 소개했다.

김·N형 로열캐리비안인터내셔널 배 나치는 “주요 크루즈 기항지에서는 대면 입국심사를 요구하지 않고 항구에 도착하면 영안 인력(트기 승객 영안)을 확인한 뒤 10~15분 만에 출국 절차가 마무리된다”며 출국 절차가 간소화, 입국과 단한 출입국 절차를 강조했다. 현재 상하이로, 말레이시아 페낭, 태국 푸켓은 기항 시 입·출국 보안검색이 생략된다. 일본은 보안검색(트기)이 크루즈선에 승선, 선내에서 보안검색 감독을 하고 있다. 김관근 제주관광박람회장은 “2~3시간 단 체류에도 1년으로 치면 수백여명의 수와를 창출할 기회를 낚아내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 역시 이 같은 한국 상황을 알리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강정항 크루즈 전용 터미널을 국내 처음으로 무인자동심사대 48대를 설치하기 위해 내년 국비 예산 72억원을 편성해 출결을 정부에 요청할 상태”라고 말했다. 제주·국·서귀포항공사 기자 luo200@sepa.com



07 주요 언론보도

서울신문

2024년 07월 25일 목요일 024면 기획특집

“외국인 근로자들 믿을 수 있고 손도 아무저요”

고창 농민, 계절근로자 정책 만족
놀리던 밭에 작물 심어 소득 증가
통역 지원해 의사소통 불편 해소

“외국인 계절근로자들 덕에 일손 문제를 덜었습니다. 고창군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줘 감사할 따름입니다.”

전북 고창군 무장면에서 멜론 농사를 짓는 오만중(63)씨는 수확철을 맞아 직원들과 함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농장에서 가시가 있는 멜론 줄기 사이를 거침없이 누비며 순자르기 작업을 돕는 이들은 결혼이주여성 등 가족 초청 프로그램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오씨는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들의 가족인 만큼 믿을 수 있고 손도 아무저다”며 “농촌 지역에 꼭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창군의 실질적 지원 정책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씨를 비롯한 고창군 농가 대부분은 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에 만족감을 드러낸다. 고창군은 최근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150곳과 일당농가 27곳 등 177 농가를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



전북 고창군에서 멜론 농장을 운영하는 김명수씨가 외국인 근로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책 만족도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농가 72%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외국인 일손 확보로 농가들의 인력 부족 고민을 해결한 것은 물론 풀밭으로 놀리던 밭에도 작물을 심을 수 있어 농업 생산성도 크게 향상됐기 때문이다. 고창군이 농촌 인력 문제의 창의적 해결을 위해 도입한 전국 최초 3대 사업 ▲ 농촌 인력 적정인건비 조례 제정·시행 ▲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센터 설립 ▲ 농업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등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농업 현장에선 인건비 안정 효과

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실제 고창군 농가 절반 이상이 조례에서 권고·제시한 범위(납자 11만~13만원, 여자 9만~11만 원) 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한편 농가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의 어려움으로 ‘의사소통’(65%)을 꼽았다. 이어 숙식 제공(13%), 인건비 의견 차이(8%), 근로자 근무 태도(8%) 순이었다. 이에 고창군은 캄보디아와 베트남 출신 전문관을 채용해 통역 지원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 기존 언어 소통 도우미 책자 확대 제작, 마을별 다문화 가족 연결, 언어 소통 동영상 제작·배포도 추진 중이다. 고창 설정육 기자

표고일표

2024년 07월 29일 금요일 B02면 경제 금융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2500만명… 등록인구의 5배 수준



정부, 89곳 인구통계적 특성 첫 분석
등록인구에 평균·관광 인력 더하니
강원도 생활인구는 등록인구의 5배
산수유 축제 전남 구례, 19.4배 달해

우리나라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가 실제 살고 있는 인구보다 약 5배 많은 25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가 국가 기준 인건비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89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수유 축제 등으로 관광이 활발한 전남 구례의 경우 생활인구 배수가 2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과 행정안전부가 29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생활인구 실태 결과’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는 2500만 명으로, 등록인구(490만 명)의 5배 수준에 달했다. 생활인구 중 취업인구는 평균 약 200만 명으로, 실업인구 5배 수준이었다. 올 들어 요양원 입국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에 취업인구는 실업률(17.8%) 하락과 1월 대비 2.7% (12.9%) 증가했다.

생활인구는 실제 그 지역에 등록된 인구의 평균, 관광, 임대 등의 목적으로 방문해 체류하는 취업인구(1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를 합한 개념이다. 정부는 국가 출생인구 감소 등에 효과

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기 인구 외에 지역에 체류하며 실질적인 활동을 보이는 사람까지 인구가로 정의해야 한다고 판단해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했다.

생활인구 내의 생활인구 비율은 강원(3.04%)에서 가장 높았다. 차이를 좁혀(3.54%), 충남(3.44%), 경남과 경북(3.34%) 순이었다. 시군구별로는 전남 구례(20.44%), 강원 양양(11.34%), 경남 하동(11.14%)이 생활인구 내의 생활인구 비율이 높았다. 구례의 경우 올 3월 산수유 축제(2023.7.10~14일) 생활인구 상당수는 산수유(15%)의 지역별 축제 방문객과 산수유(15%)의 지역별 축제 방문객을 추가로 포함해 보다 다양하고 다양한 취업 인구의 특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본 연방에 비해 높았다. 반면 60대의 생활인구 배수는 3.0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취업 인구는 3.44%로, 속도를 한 경우 평균 4.4%인 4.0%로 분석됐다.

이번 실태에 활용된 자료는 행정부의 주민등록과 법무부의 외국인등록 정보를 이용한 시군구별 생활인구 실태 분석을 통해 생활인구 감소지역의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통계적 특성 등을 분석했다. 통계청은 2023.7.10~14일 생활인구 상당수는 산수유(15%)의 지역별 축제 방문객과 산수유(15%)의 지역별 축제 방문객을 추가로 포함해 보다 다양하고 다양한 취업 인구의 특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서울·소셜 기자 sohyun@kbs.com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한국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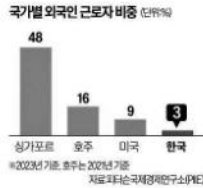
2024년 07월 29일 월요일 A08면 경제

“韓 저출산 대안은 외국인력 ... 40년간 15%까지 높여야”

**‘美 싱크탱크’ 피터슨 연구소
인구 감소 여파 역성장 불가피
1인당 GDP 매년 0.85%P 감소
외국인 노동자 비중 확 늘려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향후 50년간 한국의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이 연 0.85%포인트씩 감소한다는 보고서가 미국 싱크탱크에서 나왔다. 보고서는 인구 감소로 인한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외국인 근로자 비중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28일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 따르면 마이클 클레멘스 PIIE 선임연구원은 최근 ‘이주 아니



면 경제: 한국의 고령화와 경제 성장’ 보고서를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보고서는 PIIE가 기획 발간하는 ‘2024 한국 경제 보고서’ 시리즈 중 하나다. 클레멘스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폭발적 경제 성장을 경험한 한국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전혀 없는 경제 위기에 직면했다”며 “마이너스 경제 성장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클레멘스 선임연구원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고령화로 생산 활동 인구의 부담 부담이 급증할 경우 앞으로 반세기 동안 한국의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은 연 0.85%포인트씩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0~14세 유소년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인 총부양비는 2022년 40.6명에서 2072년에는 118.5명으로 치솟는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외국 인력 도입 확대를 제안했다. 현재 국내 근로자 중 외국인은 3% 수준이다. 이를 앞으로 40년간 15% 또는 말레이시아와 비슷한 수준인 15% 안팎까지 끌어올리면 향후 30년간 고령화에 따른 경제 성

장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 이후 20여 년간 외국인 비중을 18% 수준까지 천천히 높이면 고령화 충격 대부분을 흡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40%대인 싱가포르처럼 개방적인 외국 인력 도입 정책을 펼치면 고령화 충격을 앞당겨서 생산성을 오히려 끌어올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저성장 해법으로 △자본 투자 증가 △고용을 상향 △교육 투자 확대 등도 검토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산업 환경과 이미 높은 수준의 고용률 및 교육 투자 등을 고려하면 이런 요인은 눈에 띄게 개선될 여지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성의 경제 활동을 확대하는 방법도 있지만, 효과를 보려면 여성의 고용을 아주 빠른 속도로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성봉 기자

경향신문

2024년 07월 30일 화요일
001면 종합

외국인 덕에... 국내 인구 3년 만에 ‘깜짝 반등’

내국인 10만여명 감소... 엔데믹 후 늘어난 외국인 노동자가 메꾸

외국인 노동자가 늘면서 지난해 국내 인구가 3년 만에 반등했다. 1인 가구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락분석 방식)를 보면 국내 총인구는 5177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8만2000명(0.2%) 증가했다. 국내 인구는 2020년(5182만9000명) 정점을 찍고 2년 연속 감소했는데 지난해 반등한 것이다. 내국인(4983만9000명)은 전년 대비 10만1000명 줄었으나 외국인(193만5000명)이 18만3000명 증가해 총인구가 늘었다. 외국인 인구는 3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거나, 3개월 이상 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다.

인구 증가는 엔데믹 이후 취업 목적으로 온 외국인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김서영 통계청 인구조사과장은

“이번 조사에서 비전환 취업 자적인 E-9비자 발급인원이 크게 늘었다. 통상 고용허가를 받고 들어와 공단·농어촌 등에서 일하는 인력”이라며 “정부의 고용 허가제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60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46만2000명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시 인구(939만명)보다 많고, 총인구의 18.6%에 해당 하는 수치다. 반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3654만6000명)는 전년 대비 14만명 줄었다. 생산연령인구 비율(70.6%)은 전년비 0.4%포인트 감소했다.

내국인만 보면 생산연령인구 비율이 69.8%를 기록해 처음으로 70%선 아래로 내려왔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07 주요 언론보도

8월

서울경제

2024년 08월 01일 목요일 A20면 증권

사업성 있으면 누구나... 특별비자로 외국인 창업 늘린다

중기부 활성화 방안 발표

오영주 “외자-인재 유치할 기회”
 까다로운 비자제도 연내 개편
 학력 저제한 등 청량요인 없애
 업계 “VC 연계 체류기간 늘려야”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창업을 확대하기 위해 중장기비자를 만들고 특별비자를 도입한다.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세울 수 있도록 특례적인 창업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 창업가를 대하는 벤처캐피탈의 보수적인 인식, 선진국에 비해 짧은 비자 경신 주기가 등 추가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가 여전한 남아있다는 게 창업 관련 전문가들이 지적이다.

오영주 중기부차기장부 장관은 31일 서울 강남구 테크스타운에서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개소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소식에는 오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제도·이슈 해결·심기포부·스타트업 등 4개 부서 차장 등 12개 내외관, 외국인 창업가 40명까지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오 장관은 “한국이 창업자 친선 중, 체류수용 창업자 일본 메소드, 구글 공동창업자 세라지 등이 브

외국인 창업 지원방안 주요 내용

- 스타트업비자 도입**
 - 학력, 자재력 등 전통적 요건 없이 혁신성·사업성으로 평가 가능
 - 공공 아닌 민간투자자가 평가
 - 2024년 말 시행 예정
-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설립**
 - 간접 투자자에게 개소·창업 초기 필요한 사무공간 제공
 - 통·번역 서비스, 비자유류 및 법인설립 지원
- 혁신 스타트업 발굴지원 확대**
 - 네트워킹 및 육성 프로그램 운영
 - 벤처캐피탈의 보유 기업 투자자를 K-스타트업 로 지원
 - 가이드라인 및 우편 외국 대사관과 협력관계 구축



은 두드러진 출신”이라며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창업은 그 자체로 외자 유치이자 인재 유치인 만큼 한국 창업 생태계에 외국인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창업자료를 개발해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학력이나 자재력 등 전통적 요건 없이 혁신성과 사업성만 있으면 비자를 발급해주는 것이다. 공공이 아닌 민간투자자 위주로 지원되는 (R) 비자 등을 거쳐 혁신성과 사업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외국인 창업자의 비자유류와 법인설립 등 중개 과정은 아닌 개소식 당일 스타트업 센터를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 센터는 외국인 창업 초기에 △사무공간·회의실 △통·번역 서비스·비자유류·법인설립 △네트워킹·그랩 등을 지원하는 구상형 역할장소로 더 나아가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경로도 대폭 확대한다. 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업자료를 다룬 ‘유니콘(기업가치 10억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유망 스타트업’도 지원을 계획이다.

이 같은 종합 대책은 연평균 제도 변화 8-10개 요건이 개조되는 등 127명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데 국내 전담대 이상이나 해외 회사

서울신문 2024년 08월 02일 금요일 025면 사설/오피니언

이민자를 우리의 이웃으로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육여정이었고이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농어촌 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교육 대상에 포함시켜 농어업창업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예방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일처 했다. 또 지난해와 올해 화재참사를 계기로 산업안전 관련 내용을 교과목으로 편성하고 교육과제도 확대 개편해 외국인 관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지난 4월 통계청이 발표한 내·외국인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2년 516만명(중위 추계기준)에서 2042년 496만명으로 감소하는 반면 외국인 인구는 같은 기간 165만명에서 285만명으로 늘

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구성비도 3.2%에서 5.7%로 약 1.8배 증가할 전망이다이라고 한다.

출생률을 높이는 게 쉽지 않은 현실에서 우리사회에 필요한 인구를 확보할 대안 중 하나가 외국인 유입을 늘리는 이민정책이라는 점에는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이다. 그리

면서도 우리가 과연 늘어나는 외국인과 함께 살 수 있을까, 안전하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끈질기다.

필자는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을 총괄하는 공무원으로서 고려안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향하는 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법무부의 이민자 정착을 돕기 위한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대표적 정책으로 입국 초기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기 적응 프로그램과 장기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있다.

초기 적응 프로그램은 이제 막 입국한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기초생활필수사항 및 필수 생활정보를 교육해 배는 사회적응을 돕는다. 총 3시간의 교육과정이며 외국인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그들의 모국어(18개 언어)로 진행된다. 2009년 결혼이민자를 시작으로 유학생, 연애인, 중도입국자 등도 교육 대상에 점차 확대되고 매년 4만여명이 교

육이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을 가르치는 핵심적인 사회통합교육 과정(0~5단계, 515시간)으로 구성이다. 역시 초창기에는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시작했으나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 다양화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교육 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확대 개편해 산업계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선업계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감사가 산업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지난해 6만여명이 교육을 이수하는 등 열거가 뜨거웠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는 시민교육 과정도 있다. 2013년부터 생활영어 교육(법무부)을 시작으로 범죄예방 교육(경찰청) 등을 추가했다. 특히 지난해 외국인 마약사범 증가에 따라 마약류예방교육(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도 추가하는 등 관계부처 협업으로 외국인들의 사회 적응 지원에 내실을 기해왔다.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전 과정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참여자 지속 증가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 완화와 함께 교육 인프라 개선, 참여자의 학습 의욕 제고를 위해 교육비 일부를 유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될 경우 외국인도 교육에 대한 책임의식이 높아지고 교육효과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개발을 통해 국민과 이민자 여러 분야에 다가가고자 한다.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서울경제

2024년 08월 03일 토요일 A15면 사회

'다문화 학생 30%' 넘는 학교 전국 350곳...5년새 100곳 늘어

이주민 밀집지역 학교 보고서

비이주 역차별 우려-대책 시급

이주 배경 학생(다문화 학생)이 30% 이상인 초중고교가 전국 350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문화 학생 비율이 90%가 넘는 학교도 있었다. 다문화 학생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차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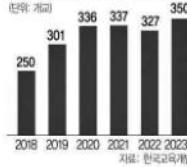
2일 한국교육개발원 윤현희 연구위원 등이 작성한 '이주민 밀집 지역 소재 학교 혁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학생이 전교생의 30% 이상인 초중고교는 350곳이다. 전체 초중고교(1만 1819개교)의 2.96%에 해당하는 수치다. 다문화 학생이 30% 이상인 학교는 2018년 250개교에서 5년 만에 40% 증가했다.

교육부는 전교생이 100명 이상이면서 다문화 학생이 30% 이상인 학교를 '다문화 학생 밀집학교'로 정의하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12개 지역, 87곳이 밀집학교에 해당했다. 이주민 밀집 지역(이주민 인구 비율이 5% 이상인 지역)에 소재하면서 다문화 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곳은 총 10개 지역, 100개교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다문화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경기 안산의 A초등학교로 다문화 학생 비율이 97.4%에 달했다.

A초등학교를 포함해 다문화 학생 비율이 80% 이상인 학교는 경기 안산 A중학교(87.7%), 안산 B초등학교

다문화 학생 30% 이상 초중고



(85.7%), 경기 안성 C초등학교(80.2%) 등 4개교로 집계됐다. 다문화 학생 비율이 70% 이상인 학교는 서울 영등포구 D초등학교(71.7%), 경기 안산 E초등학교(70.9%), 경기 시흥 F초등학교(78%)를 포함해 7개교로 나타났다.

다문화 학생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다문화 학생들만 별도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낙인 효과'가 발생해 다문화 학생들이 차별받을 수 있다. 다문화 학생에게 교육 지원이 집중된다 보면 비이주 배경 학생이 역차별받을 가능성도 있다.

연구팀은 "이주민 밀집 지역 소재 학교에서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문화 교육정책에 기반한 학교 비전과 목표 설정, 교육활동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사의 다문화 교육·다문화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 신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주민 밀집 지역 학교 정보와 관련해 교원 인사 정책도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백성규 기자

국민일보

2024년 08월 05일 월요일 Z14면 사회

경남도, 외국인 유학생 '1만명 유치' 추진... 정주까지 지원

산업연계 기술인재 유학생 확대 권역별 거점대학 지정 총괄 운영 유학생 맞춤형 학사운영·비자발급

경남도는 오는 2028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1만명 유치'를 목표로 지역 정주 중심의 유학생 업무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도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7명으로 전국 유학생 18만180명 가운데 1.6% 수준이다. 그동안 외국인

유학생은 개별 대학이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유치하고 관리해 왔으며 학업을 마친후 대부분 본국으로 귀국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 정주까지 이르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도는 대학과 연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교육발전특구를 활용해 지역 정주형 해외 인재 유치체계를 전환한 유학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산업연계 기술인재를 중심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고급인재 중심으로 취업에서 정주까지 원스톱 지

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주력 산업인 조선, 항공, 자동차 등의 제조업 기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학업을 통해 언어와 문화 등을 습득해 취업과 지역 정착에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내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 시행 시 4개 권역별 거점 대학을 지정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현지 예비 유학생 대상 교육 등을 총괄 운영한다. 또 특강활동 비자, 지역특화

형 비자와 연계해 전공과목을 중심으로 용진, 항공제조, 물방 등 대학교 학사과정을 외국인 유학생 맞춤형 특화과정으로 운영하고, 전문 자격증을 취득시켜 졸업 후 지역에 취업·정주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해 중앙방역협의회에서 국내 기업 해외 지회사 인력 적도입을 위한 경남형 맞춤형 인재 발굴을 위한 유학생들의 고용과정에 대한 단속도 무 비자 취득 도입 권의와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추진을 요청했다.

도는 외국인 유학생을 단순히 유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남 산업에 필요한 인재로 키우고 지역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사업을 확실히 추진해 갈 계획이다. 박 지사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비자제도 개선 등을 통해 경남에서 '꿈꾸고 취업하고 자리 잡기까지' 해외 인재들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김민희 기자 kmh0106@kmb.co.kr



07 주요 언론보도

매일경제

2024년 08월 08일 목요일 A25면 사회

정부, 외국인 공대생에 문 넓힌다

우수인력 유학·취업 쉽게 비자 사다리 구축하기로

정부가 인구 감소, 인재 유치 경쟁 심화에 대응해 다양한 외국 인재 정착 확대를 위한 '비자사다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입국할 때부터 외국인 국내 취업, 창업, 지역 정주까지 비자 연결을 지원한다는 의미다.

7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열고 법무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학·정주·혁신 외국인 정책 협의 예산 추진 방안'을 의결했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 정책이 단기·비숙련 인력의 양적 확대에 치중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이후부터는 우수인력 선별·유치와 정주로 이어지는 비자 연결고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유학·취업 단계에서는 산학협력 강화 차원에서 유학생 초청 시 지역 기업 수요에 기반한 산업인력을 우대 선발하고, 내년부터 교육부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해

한국경제

2024년 08월 08일 목요일 A31면 오피니언

소멸 위기 한국, 외국인 인재 유치는 불가피한 선택

정부가 외국인 인재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비자 사다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할 때부터 취업, 창업을 거쳐 지역 정주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비자 연결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은 기업 수요에 기반한 산업인력을 우선 초청하고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근로자도 국내 정착을 돕기로 했다. 정부가 외국인 인재에 이런 혜택을 넓히는 정책 전환에 나선 것은 뚜렷한 감이 있지만 불가피한 방향이다.

세계 최악의 저출생으로 '국가 소멸'까지 고민하는 한국이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목표인 1.0명으로 반등한다고 해도 2070년엔 생산가능인구

만 된다는 의미다. 선진국은 물론이고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역시 경제 발전과 함께 점점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 앞으로는 각국 간에 치열한 이민자 유치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 당장 한국과 일본은 외국인 근로자 확보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총인구가 3년 만에 반등한 것도 상주 외국인 증가 덕이다. 일본도 지난해 일본인 인구는 역대 최대인 88만 명 감소했지만 젊은 외국인인 이상 회복으로 생산가능인구는 크게 줄지 않았다.

지방의 제조업 현장은 이미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가동할 수 없다는 게 당연한 현실이다. 청년들이 취업을 외면하는 자리에서 일하던 외국인도 몇 년 후면 떠나 기술 전수와

셋은 오래전부터 나왔다. 정부 대응해 늦게 나온 만큼 제대로 속도를 높여 조차를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겠.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만큼 이민정책 필요가 있다.

매일경제

2024년 08월 13일 화요일 A12면 경제

“우수 외국인 영주권 패스트트랙을”

고용허가제 20년 콘퍼런스 숙련·정주형 이민 대책 시급

비전통 일자리에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고용허가제'가 시행 20주년을 맞았다. 정부는 그간 비숙련 중심의 외국인력 도입 정책에서 탈피해 외국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업종·직종을 다양화하고 우수 인력의 정주·영주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이경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 콘퍼런스'를 열고 "고용허가제는 지속가능한 외국인력 정책과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용허가제 원칙부터 재검토하고 다양한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적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정책을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부처·비자별 칸막이를 탈피

하고 취업 가능한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산업안전·근로기준 감독, 훈련·고용 서비스·체류를 지원한다. 또 외국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업종과 직종을 다양화하고 필요한 인력이 적시·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화한다. 고용부와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E-9 비자로 들어온 필리핀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시작하는 등 외국인력 업종은 최근 대폭 확대되는 추세다.

정부는 또 우수 인력의 정주·영주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외국인력 정책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비숙련 인력에 국한된 도입에서 벗어나 고급 인력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전통적인 고용허가제 외에 산업 현장의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인력 공급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며 우수 비전문취업(E-9)-숙련기능인력(E-7-4)-거주(F-2)-영주(F-5)로 단계

적으로 이어지는 지역 정착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외국인 정책을 기존 양적 확충 위주 투자에서 질적 성장을 촉진하는 구조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경남 사천에 소재한 항공기 기체 구조물 제조 업체 '미래항공'을 방문해 "외국인 정책은 다문화 국가로 성장한 우리 사회의 위상에 걸맞게 간의 분야별 단기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양적 확충 위주 투자에서 중장기 인구 구조 변화와 인력 수요가 고령화된 질적 성장 구조로 전환해 나가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외국인들이 궁극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비자 사다리 구축 등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외국인들 눈높이에서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식·한재범 기자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1. 2. 3. 4. 5. 6. 7. 8. 9. 10. 11. 12.

東亞日報

'인력난' 송전선로 건설에 외국인 근로자 투입

전력망 확충 시급한데 인력 고령화
올해 30명 추진... 내년 300명 확대

국내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외국 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내국인 신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난 인공지능(AI) 시대를 앞두고 전력망 확충이 시급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국내 송전선로 건설사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 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송전전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E-7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

한 89개 직종에 허용하는 취업 비자다. 정부는 올해 약 30명의 외국 인력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최대 300명으로 규모를 늘려 2년간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외국 인력은 동해안 울진의 원자력발전소와 강원 강릉·삼척의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는 500kV(킬로볼트) 규모의 '동해안~신가평 초고압 직류 송전(HVDC)' 건설 사업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 반대와 행정 절차 지연으로 2019년 목표였던 준공 시점이 2026년으로 미뤄졌지만 그마저도 건설 인력 부족 등으로 불투명한 사업이다.

2024년 08월 13일 화요일 A14면 사회

100m 이상의 높은 송전선로 위에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송전전기원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현재 투입 가능 인력은 전국적으로 약 470명인데, 이 중에서도 50대 이상 고령층이 절반을 넘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속한 준공을 위해서는 인허가가 완료된 구간부터 동시다발적으로 건설이 진행돼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전력 공급량의 대규모 확충이 시급하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특정 시간대의 최대 전력 사용량(태양광 발전 등 포함)을 나타내는 전력 총수요는 지난해 8월 역사상 처음으로 한 시간 평균 100GW(기가와트)를 넘어섰다. 이를 7일에도 한 때 전력 총수요는 100.209GW에 달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cor9@donga.com

한국경제

2024년 08월 14일 수요일 Y24면 사회

"유학생 모십니다" ... 경남, 지역산업 '맞춤 인재' 육성

조선·항공 제조 기술인력 부족
마산대와 취업·정착까지 협력

경상남도가 조선과 항공 등 제조업 분야 기술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유학생 유치에 적극 나선다. 교육부의 지역 맞춤형 대학지원사업인 '라이즈(RISE)'를 활용해 유학생의 취업 및 정주 여건 구축을 지원한다. 경상남도는 13일 마산대 취업 맞춤형 외국인 유학생의

주 체계 구축을 위한 지산학 공동 워크숍을 열었다. 올해 라이즈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기업, 도내 대학이 협력해 지역 수요에 맞는 유학생을 유치하고 취업까지 연계하는 것이 목표다. 라이즈 사업은 기존 교육부의 5개 대학 재정 지원사업을 통합해 예산과 권한을 지방에 위임·이양한 것

대학으로 선정된 마산대를 중심으로 도내 전문대와 협업체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계획을 수립했다. 외국인 유학생 학위 트랙을 개발해 유학생 510명 유치와 210명 취업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유학생 유치를 위해 경상남도는 지난 4월 몽골 울란바토르에 거점센터를 개소했다. 올해 12월에는

국민일보

2024년 08월 16일 금요일 Z14면 사회

경주시, 전국서 첫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캄보디아서 직접 면접·한국어 교육
경북 경주시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경주시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협의회 회원들과 캄보디아 프놈펜, 캄똥똥주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입국 예정인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게 선진농업 기술을 전수하고 현지 시범농장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2022년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방문단은 먼저 국제교육 NGO 나눔재단 월드채널이 운영하는 현지 학교에서 프놈펜 한국어 교육센터 개원식에 참석했다. 시는 이곳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전 한국어 교육을 위한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과정을 운영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한국어 교육 등 사전교육을 받은 후 국내 농업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어 방문단은 현지 직접 면담을 통해 각 농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계절근로자 선발을 진행했다. 또 캄보디아 프놈펜과 캄똥

주에 있는 농가를 방문해 양상주 등의 업체류, 토마토 등의 과채류 등의 선진 농업기술을 전수했다.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이래 무단 이탈률 0%, 농가 수요 인원 100% 입국, 성실 근로자 재입국률 60%의 성과를 거뒀다. 이경숙 경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근로자들의 한국어 능력이야말로 지역 농가 근로 능력 향상의 절대적 요소"라며 "캄보디아 현지에서 운영하는 법무 사회통합 프로그램 과정을 모든 계절 근로자들이 입국 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bi.co.kr



07 주요 언론보도

서울경제

2024년 08월 17일 토요일
A22면 피클

미국 경제

2024년 08월 17일 토요일 A17면 사회

무면허에 명의도용까지 ... 불법 판치는 외국인 라이더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배상업

법무부가 신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배상업(사진) 씨를 추천하고 외국인정책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배 상업 본부장은 2000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법무부 출입국 기획과장, 인천출입국-외국인정책관, 법무부 출입국정책담당장 등을 역임했다.

정유한 기자



경기 수원에서 요양해 오트바이를 배달 일을 하는 30대 김모씨는 지난 14일 영동동의 4차선 도로에서 곡예 운전술 하는 중앙아시아계 배달 라이더를目睹해 경악에 휩싸였다. 경찰이 현장에서 조사하니 그는 무면허에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 김씨는 "요양 하루 수십명씩 외국인 라이더를 마주한다"며 "경도 중앙선 침범을 일삼기에 참다못해 이들을 신고하는 지경인데 가압해 활동 중"이라고 말했다.

배달 업계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인 '외국인 라이더'가 크게 늘고 있다. 지역 소규모 배달대행 업체뿐 아니라 대형 플랫폼마저 외국인인 체류자,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무차별

배달' 불가능한 불법체류자들 기본 신분확인 절차도 없이 '할개 보수 높아 - 업계선 수천명 추정 플랫폼은 나몰라라 - 단속 시급'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 1-7월 때 배배달업종 불법 취업 외국인 학반 건 수는 17건으로 직년(17건) 전체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업계에선 직할 건수는 '병산의 일과'일 뿐 수천 수만 명의 외국인 라이더가 일할 것으로 추정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배

달대행 업체 배달 플랫폼에서 일하는 배달원 수는 22만 명가량이다. 전국 곳곳엔 오트바이를 두고 영업하는 7000여 개의 소규모 배달업체가 있다. 특히 외국인 비중이 높은 서울 강남-영등포구, 경기 용산-수원시 등에 있는 업체 중 라이더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인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외국인 라이더 중 상당수가 불법체류자거나 비자 조건이 안 된 건수가 현격한 지차이다. 출입국관리법상 영주비자(E-2)를 받고는 배달업 종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원이 배달업체 관계자는 "한국인 명의를 빌려 일하는 외국인도 부지기

수고, 예초에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체도 많다"고 전했다. 무면허 외국인인 배달원을 해도 일러내 방법이 없는 셈이다.

외국인도 제조업에 비해 한국이 요구 수준이 높고, 시간당 수입이 좋은 배달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단속도 어렵다. 모두 플랫폼을 쓰고 있어 식별이 쉽지 않다. 불법체류자 단속 권한이 예초에 법무부에 있어서다.

대형 배달 플랫폼들도 불법 행위를 방관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달의민족은 라이더의 이상승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가 지난 6월 폐지했다. 무면허 요기요 등은 이에 외국인 신분 확인 절차를 차조지 않는다.

한영 기자

국민일보

2024년 08월 19일 월요일 011면 기획

한국으려고 5년간 공부... 허리 다친 네팔인살 '막막'

건설자재 공장서 일하다 중상 무용, 특정사업장과 계약 뒤 입국

네팔인 A씨(30)는 올해 1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비전문취업(E-9) 근로자다. 그는 경기도 아현의 한 건설자재 공장에서 일하다 3개월 만에 허리를 다쳤다. 통증이 심해져 일하지 못하는 날이 늘자 A씨는 "추간판 장애" 진단서를 근거로 사업장 변경을 요청했다. 사업주는 이를 거절했고 "고환으로 돌아가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A씨는 말했다.

지난 7일 만난 A씨는 사흘 한국어로 "알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더 일하고 싶었다"는 말을 꺼냈다. 아현 3와 아현 2 두 딸을 부양하는 그는 5년간 한국어를 공부해 고용허가제 인력으로 선발됐다. A씨의 바람은 무거운 자재를 옮기는 일부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E-9 근로자는 사업주 동의 없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용센터가 직권으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해의 사유'는 임금체

불이나 폭행 등 심각한 인권침해로 규정돼 있다.

고용허가제 도입 20년이 지나지만 일부 사업장에선 사업장 변경을 둘러싼 혼란이 여전하다. A씨는 상당 과정 자체가 난관이었다. 외국인대상담당관은 전화 통역만 지원하는데, 네팔 통역사는 1명뿐이었다. 한국 고용센터에는 네팔어가 가능한 다국어상담원이 9명, 네팔어 통역사 12명이 근무하지만 A씨는 관련 정보를 알지 못했다.

고용허가제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일하려는 상황도 보편해야 할 대목으로 지적된다. 네팔에서 온 B씨는 "한국으로 오기 위한 경험들은 5대 1 정도로 지원했다. 일단 일국하는 것이 중요할 뿐"이라고 전했다.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이유는 제도의 취지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의 인력 도입이기 때문이다. E-9 근로자는 다른 취업비자와 다르게 특정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한국에 입국한다. 외국인력을 구하기 위해 여러 절차를 밟고 비용을 투자

한 사업주 입찰에선 근로자가 단기간에 이직하거나 업무 변경을 요구하는 상황이 난처할 수밖에 없다.

2021년에는 E-9 근로자 5명이 사업장 변경 제한을 위반하여 취업 소멸을 내기도 했으나 각 2회 합한 경력이 있다. 현재는 당시 불법체류를 먹고 아주 노동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사업장의 낮은 변경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장 변경 요건 중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라는 사업장 변경 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고"고 말했다.

이현·백승민 기자

東亞日報

2024년 08월 20일 화요일 P16면 지방

경남도 제안 '광역비자' 정부 정책으로 채택 (지역맞춤형)

광역지자체가 체류 자격 등 결정 법무부 훈령 제정-시범사업 추진

산업 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맞춤형 광역비자'(경남형 광역비자) 도입이 필요하다는 경남도의 제안이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경남도는 도가 건의한 외국인 지원제도가 정부 정책에 반영돼 추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13일 법무부 차관 주재 지역기반 이민정책 활성화 간담회에서 경남 건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역맞춤형 광역비자' 도입과 '외국 인력 국내 지도입 방안'

등을 정부에 제시했다. 현행 특례 비자인 '지역 특화형 비자'(P-2-거주비자)가 지역적 특성 및 수요 반영이 어려운 점을 개선해 달라라는 취지다. 박 지사는 "체류 자격과 쿼터 등을 광역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는 광역비자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역맞춤형 광역비자 설계와 훈령 제정에 즉각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또 광역비자의 유형으로 해외 자회사 내 우수 해외 인력을 국내 산업현장으로 지도입하는 해외 자회사 인력 도입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후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관계자는 "해외 자회사 인력 도입 시 경남 모회사와 유사한 근무환경과 기업문화로 외국 인력의 지역 정착이 쉽고 기업체에서도 숙련된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기대감이 높다"고 말했다.

도영진 기자 0jn2@donga.com



07 주요 언론보도

한국경제

단기 입국한 '계절근로자' ... "불법체류 양산 통로"

(내외 8개월 체류)

고용 계약 끝내도 임금도 낮아
"다른 고용에도 연계 운영 검토"

"그게도 맞으면서 계절근로자 제도로 일하던 외국인 한 명이 아반도주현 개발권에 동체가 난리났어요."

경원 영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도파도 농장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2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도로 폭을 바꾸는 CCTV에 이 근로자가 한 송출자가 올라가는 모습이 찍혔지만 아직도 행방은 모른다"며 이별 개발했다.

정부는 2017년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8 개월을 도입했다. 일손이 부족한 농민에게 외국 인력을 돕는 8개월에서 길게는 8개월까지 고용하는 제도다. 2022년 1만 2007명이던 계절근로자는 작년 1만 8050명, 올해 3만 9411명으로 늘었다.

문제는 계절근로자들이 사업장을 이탈해 불법체류자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2022년 무단이탈한 계절근로자는 1151명으로 전체의 9.6%에 달했다. 지난해에도 9057명이 이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약 기간이 너무 짧고 제조업 등 다른 업종보다 임금이 낮은 점이 무단이탈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어떻게 한국에 들어온 계절근로자로서 불법체류를 해서라도 돈을 더 벌겠다는 유혹을 뿌리치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선발 시범을 거치는 고용허가제(주-9)보다 문턱이 낮아 브로커가 개입할 여지도 크다. 채용부터 브로커와 싸우고 일단 계절근로자로 입국한 후 무단 이탈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는 이유다. 이렇듯 계절근로자 관리 시스템을 더 충실히 해야 하지만 실상은 관망한다.

2024년 08월 21일 수요일 A10면 종합

| 계절근로자(주-9) | 소관 부처 | | 주요 내용 | |
|-------------|-------|--------|-------|----|
| | 인무부 | 사우 안민 | 지자체 | 이유 |
| 비숙련근로자(주-9)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공단 | 이유 | 이유 |
| 신원(주-9) | 재정경제부 | 수입 | 이유 | 이유 |

다. 법무부 배정상사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단 계절근로자 수를 배정하면 지자체장이 직접 외국 지자체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계절근로자를 들여온다. 국가가 인력을 선발하고 입출국까지 관리하는 고용허가제보다 직접 인력을 감별하고 확보·관리를 능력이 될 여실 수밖에 없는 구조다.

5000여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계절근로자 유입도 갈수록 늘어나는 게 불가피하다. 운영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계절근로자 제도가 불법체류자 양산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이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다른 고용 제도도 연계해 보다 유연하게 운영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채용/영입/거주

서울신문

2024년 08월 21일 수요일 022면 전국

업체별 채용 인원 갑자기 제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차질

작적 갖춘 외국인에 5년 거주 비자
인구 확대 인력난 승용 기대했는데
법무부 "채용 50% 최대 20명 제한"
기업, 예정 인력 30% 모집 "구인난"
"제한 완화 요구에 정부 답할 없다"

법무부가 갑자기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업체별 채용 인원 제한을 하고 나서 시드외다 외국인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시행사업에 이어 올해 분사업이 시작된 외국인 인력 모집에 나선던 지자체들은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자 법무부에 제한 완화를 요구 하고있다.

30일 한국 지자체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으로 10개 시도 66개 시군에 3291명을 배정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지역의 산업·대학·연구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정착 유도를 생활안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연구 유입 등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비자 정책이다. 외국에서 전문 인력 이상을 고용하고 한국에 심어줄 일원 수준 이상이며 연 소득 207만 3000 원 이상인 외국인 영장자 연구소장이며 예외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준다.

올해 시도별 배정 인원은 전북이 703 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 700명, 충남 488 명, 전남 425명, 경남 208명, 강원 210명,

| 지역 | 모집 인원 | 제한 인원 | 실제 인력 |
|----|-------|-------|-------|
| 전북 | 703 | 100 | 76 |
| 경북 | 700 | 70 | 94 |
| 충청 | 2 | 100 | 14 |
| 강원 | 2 | 210 | 38 |
| 전남 | 6 | 205 | 180 |
| 충남 | 9 | 488 | 194 |
| 전서 | 10 | 703 | 207 |
| 경남 | 6 | 425 | 92 |
| 제주 | 15 | 700 | 180 |
| 합계 | 11 | 250 | 181 |

총계 205명, 부산 137명, 경기 137명, 대구 77명 순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3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외국인 근로자용 모집할 경우

업체별로 채용 인원이 50%, 최대 20명 을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외국인이 내 국인의 일자리를 위협 부문 이상 배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우수인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기도 있는데 제한까지 하 는 바람에 배정된 인원을 모두 소외하기 힘들다고 목소리낸다. 특히, 연구소별 지역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지자체에 참여하고 면접까지 마 칠는데 갑자기 인원이 줄어 나감에 따라는 반응이다. 거인 원은 외국인 근로자 의 존도가 높는데 법무부가 장려는 못 할까 정작에 생산 차질이 우려한다고 불만 이다.

실제로 올해 10개 시도의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모집 현황은 지난달 현재 110명으로 배정 인원의 33.6%에 그쳤 다. 경기도는 120명 배정에 12명(1.7%), 전남은 425명 배정에 52명(12.2%), 강원 은 210명 배정에 38명(18.1%) 모집했다. 10개 시도 가운데 대구(7.1%), 경남 (7.4%), 부산(3.6%), 충북(4.8%)만 전 국 평균을 넘었고 나머지 시도는 대부분 30% 이하이다. 전북은 "지역특화형 비자는 연구소별 지역 기업과 경제연구 정책 영향을 주는데 법무부의 제한 조 치로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어려운 점을 통해 제한 완화를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아랍다 할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관주용총화기자



東亞日報

2024년 09월 03일 화요일 J16면 지방

충북형 K유학생 제도 추진 '청신호'

법무부, 법·제도 개선 건의 수용

충북도가 올해부터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충북형 K유학생 제도' 추진에 파란불이 켜졌다. 법무부가 K유학생 관련 법·제도 개선 건의를 대부분 수용했기 때문이다.

2일 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역맞춤형 특화비자 신설을 위한 훈령을 만들고, 국내의 지방자치단체 장학금 지급 때 그만큼의 재정 능력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유학생 제조업 시간제 취업 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단, 학업을 저해하지 않고 안전사고 방지 대책 마련이 조건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15일 법무부 간담회에서 △지역에 맞게 비자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광역비자 신설 △시지체 보증 유학생 사증 심사 때 재정보 증 면제 △유학생 제조업 시간제 취업을 위한 언어능력 기준 완화(TOPIK 4급→3급) 등을 요청했

다. 도 관계자는 "유학생 유치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 지역 소멸 방지와 지역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형 K유학생 제도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과 지방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학업과 일을 함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도는 2025년까지 유학생 1만 명 유치를 목표로 유치전을 펴고 있다. 도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지역 전략산업 핵심 기술인력 분야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The JoongAng

2024년 09월 03일 화요일 08면 종합

올해 한국 온 유학생 20만명 첫 돌파... 한양대 8264명 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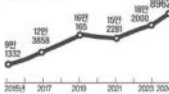
중국 7.2만명 등 아시아 91% 비중
경북 3년새 74% 늘어 승가율 1배

올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유학생이 20만 명을 돌파했다. 정부가 유학생 집계를 시작한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최고 인원이다. 유학생들 가장 유자한 대학은 8000명 이상의 외국인인 입학한 대학이었다. 교육부는 4월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스타디3포)에 3000K(1학기 점진 결과)를 발표했다. 스타디3포 라이3000K는 지난해 8월 교육부가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이름의 취임. 경우를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사업 계획이다.

올해 한국을 찾은 유학생은 20만5862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 8만6878명인 유학생은 2019년 16만160명을 기록하며 꾸준히 늘었다. 코로나19로 주춤하던 유학생은 2022년부터 반등해 3년 연속 증가했다.

올해는 학위 과정(4년제, 전문학사) 유학생이 단기 어학연수 등 비학위 과정 유학생이 동시에 늘었다. 스타디3포 라이3000K 시행 전인 2022년과 비교하면 학위 과정 유학생 중 전문대학 입학 비중이 8.7%에서 11.6%로 늘었다. 가장 유학생이 많은 학교는 8264명을 유치한 한양대였다. 뒤이어 경희대(6929명), 연세대(6621명), 고려대(5320명), 중앙대

늘어선 외국인 유학생 단위: 명 자료: 교육부(2024년 8월 말 기준)



주요 대학 유학생 수

| | |
|-----|------|
| 한양대 | 8264 |
| 경희대 | 6929 |
| 연세대 | 6621 |
| 고려대 | 5320 |
| 중앙대 | 5355 |

(5355명) 순이었다. 비수도권 유학생 비중은 2023년 6만9735명(41.7%)에서 올해 9만2019명(44%)으로 소폭 증가했다. 다양한 지역에서 유학생 유치가 높아진 때문이다.

경북은 지난 3년간 유학생이 4838명(74.1%) 증가해 올해는 1만1369명을 기록했다. 전년(73.6%), 전기(69.6%) 모두 증가율이 높았다. 넓은 기간 서울의 유학생은 3.5% 늘어난 7만4488명이었다. 교육부는 "스타디3포3000K 시행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후이 돼 지역의 인력 수요와 여건에 맞는 유학생 유치 전략을 수립할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최연희 기자**

유학생 총 18만9635명(90.8%)은 아시아 권이고 유럽 1만6812명(8.1%), 북아메리카 4217명(2.0%), 아프리카 3011명(1.4%), 남아메리카 1034명(0.5%) 순이다. 국적별로는 중국 7만2020명(34.5%), 베트남 5만6603명(26.8%), 몽골 1만2317명(5.9%), 우즈베키스탄 1만2025명(5.8%) 순이다.

교육부는 "교육 국제화 역량 인종"을 바탕으로 유학생 유치 질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한국유학생통합시스템"을 개편해 유학생이 유학 준비 단계부터 취업 정보까지 서비스를 한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07 주요 언론보도

내일신문

2024년 09월 05일 목요일
019면 기획

“결혼이민자, 국민 입국심사대 이용”

박석재 법무부 장관이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시행 중인 다양한 출입국심사 제도 홍보에 나섰다.

박 장관은 4인 일천공화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과 함께 다양한 출입국심사 제도를 홍보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결혼 이민자, 재외동포, 영주자격 소지자는 외국인 입국심사대 외에 국민 입국심사대도 이용할 수 있다. 또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신고할 한 17세 이상 외국인은 사전등록 없이 입출국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하고 입국할 때 지문과 얼굴 정보를 제공한 17세 이상 외국인 관광객도 출국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도 사전등록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해 편리하게 입출국할 수 있다. 구본홍 기자

매일경제

2024년 09월 09일 월요일 A25면 사회

“아이 키우는 불법체류자 강제출국은 가혹”

초동생 양육 카자흐 국적자 법원 “출국 명령 취소하라”

법원이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불법체류자를 강제 출국시키는 것은 가혹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 A씨가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출국 명령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출국 명령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5년여 전 A씨는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했

다. 그는 체류 기간 만료일인 2019년 1월 출국하지 않고 우리나라 음식점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일했다. A씨는 2023년 12월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발돼 강제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으나 출입국사무소는 A씨 자녀가 우리나라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고 A씨가 임신 중임을 고려해 출애 1월까지 출국을 보류했다.

A씨는 출입국사무소의 출국 명령이 부당하다며 법무부의 ‘국내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A씨가 출국하면 A씨 자녀들도 출국해야 하는데, 이는 대한민국에서 형성한 자녀들의 사회적·문화적 기반과 생활 기반을 모두 박탈하는 것으로서 원고에게 현재한 불이익을 초래한다”며 “출로 두 아이를 우리나라에서 양육·교육하는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면 출입국사무소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은 2022년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6세 미만 영유아가 자녀와 함께 입국했다면 6년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구제 대상이다. 판결 내용을 보면 A씨는 5년여간 체류한 것으로 1의 재판부가 해당 방안 구제 대상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사대현 기자

東亞日報

2024년 09월 07일 토요일 A04면 종합

韓日, 사전입국심사 등 출입국 절차 간소화 추진

尹-기시다 12번째 정상회담

尹 “함께 힘 모아 양국관계 도약을” 기시다 “DJ-오부치 역사인식 계승” 유사시 재외국민 안전 협력하기로

한국과 일본 정상이 양국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사전입국심사 등 출입국 간소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제3국에서 유사시 양국 재외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협력각서도 체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약 100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이날 말 퇴임을 앞둔 기시다 총리와의 개별 회담 성격으로,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후 기시다 총리와의 12번째 양자회담이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와 함께 일궈낸 성과들을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다며 “함께 힘을 모은다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한일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여전히 양국 간에 어려운 현안이 존재하나 양국 관계의 발전과 병행하여 전향적인 자세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은 “윤 대통령은 후임 총리도 한일 관계 발전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시다 총리가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고, 기시다 총리도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기시다 총리가 ‘경제정용 문제와 관련해 저 자신은 당시 가혹한 환경 아래 많은 분들이 대단히 고충스럽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5월 방한 당시 이같이 밝힌 바 있다. 김 차장은 또 “일본 정부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고 있다고 (기시다 총리가)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양 정상이 출입국 간소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한 만큼 향후 상대국에 심사권을 파견해 생체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절차를 양국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 법무성이 먼저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고 알려졌다”면서 “한국인이 일본 입국장에 들어가 긴 줄을 서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사

전입국 심사제도도 일본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간단한 신원 확인만으로 입국할 수 있게 되면 입국에 걸리는 시간이 대폭 줄어든다. 양국 간 왕래하는 관광객은 연간 1000만 명이 넘는다. 기시다 총리도 정상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일한(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서로의 입국 수속 원활화의 구체적 검토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체결한 재외국민 보호 협력각서는 제3국에서 위기 발생 시 양국이 자국민 철수를 위한 지원과 협력을 위해 협의하고, 평시에도 위기 관리 절차, 연수, 훈련에 관한 정보와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협력 사항을 담고 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이런 종류의 양자 간 각서 같은 협력문서에 서명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회담 뒤 윤 대통령과 부인 건전희 여사는 청와대 본관에서 2시간 동안 기시다 총리와 부인 유코 여사와 함께 개별 만찬을 가졌다. 기시다 총리는 “경요세(經世濟世)라는 말처럼 한일 양국이 서로를 비추도록 지여과 세계에서 함께 빛을 발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경요세는 1643년 조선통상사초 시조오카 현 세이켄지(清延寺)를 방문한 백인이 남긴 관액으로 두 개의 옥구슬이 서로 비추는다는 의미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l@donga.com /
도쿄=이성훈 특파원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부록 7
부록 6
부록 5
부록 4
부록 3
부록 2
부록 1

매일경제

2024년 09월 27일 금요일 A35면 오피니언

외국인 300만시대, 新이민정책 성패 고급인재 유치에 달려있다

정부가 인공지능(AI)·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 분야 고급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한다. 또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인턴 활동 등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취업이 가능한 범위를 비전문 분야까지 넓히기로 했다. 법무부가 이 같은 내용의 '신(新)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한 것은 국내 체류 외국인인 5년 내 300만명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특히 우수인재 유치에 이민정책의 초점을 맞춘 것은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급감하면서 농업, 제조업 현장뿐 아니라 신산업 분야에서도 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 소멸 위기로 심각한 이민 활성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는 주력 산업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전문·기능 인력을 5년 이내에 10만명 이상 추가 확보하겠다고 한다. 시범운영 중인 '비자 발급 규모 사전공표제'도 개선하기로 했는데, 업종·직종별로 인력을 정교하게 파악해

사회적 갈등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이민 확대에 대한 국민 거부감은 여전히 있다. 이민이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저출생·고령화 문제의 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는 데는 의견이 엇갈린다. 무차별적인 인력 도입은 내국인 일자리 침해와 사회적 갈등을 낳을 수 있다. 복지 재정도 부담 요인이다. 단순한 노동력 확대라는 접근에서 탈피해 인력을 선별적으로 유치하고 사회 통합에 저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이유다.

2014년부터 이민에 빚장을 활짝 연 일본은 비자 등 각종 제도를 손질해 고급 인재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2022년 일본의 외국인 취업자 중 전문인력 비중이 26.3%로 한국(6.0%)의 4배가 넘는 것도 고급 인재에게 문턱을 낮춘 결과다. 이민정책은 향후 국가 운명을 좌우한다. 그만큼 정교하게 설계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특히 이민정책의 성패는 일본처럼 고급 인재 유치 여부에 달려있다.

매일경제

2024년 09월 27일 금요일 C03면 기획

"외국인 인재 퍼뜩 오이소"... 경남형 광역비자 추진

2030년 10만명 유치 목표

경남도가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해 2030년까지 해외 우수 인력 10만명 유치를 나선다.

우선 '경남형 광역비자' 도입이다. 이는 지역에서 필요한 외국 인력 대상, 체류자격, 활동범위, 워터 등을 광역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비자다. 기업에서는 현재 취업비자가 업종 중심으로 채류 자격이 부여되지만, 현장에서는 직무 중

심으로 수요가 발생하므로 비자 사각 지대가 나타난다. 이를 해결하고 현장에 적합한 외국 인력을 도입하기 위해 경남형 비자 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드노 비자(비자)가 그 예

자 정착 지원 복합센터"를 건립한다. 이 센터는 초기 입국 외국 인력의 적응과 훈련, 교류를 지원하는 종합 거점 기관이다. 주거 공간과 함께 한국어 교육, 문화 활동, 고충 상담 등이 서비스

세계일보

2024년 09월 27일 금요일 027면 오피니언

저출생 노동력 부족 위기, 우수 인재·이민자 유치사할 걸어야

국내 체류 외국인이 향후 5년 안에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어제 '신(新)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내놓았다. 이민 방안은 인공지능(AI)로봇, 양자 기술, 우주항공 등 첨단기술 분야의 고급 인재들이 한국에서 마음껏 일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를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해 우수 인재는 물론 그동안 가족에게도 출입국 및 체류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첨단기술 분야의 우수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은 고무적이다. 저출생으로 점차 노동력이 부족해질 게 뻔한 상황에서 우수한 외국 인력의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6·25전쟁 당시 한국을 위해 전투 병력이나 의료진을 보낸 참전 22개국 청년들이 오늘날의 한국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청년드림' 비자를 새로 만들기로 한 것 또한 평가할 만하다. 그간 주로 가요,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들 통해서만 우리나라를 접한 외국인들에게 '경제·과학 강국'으로서 한국의 진면모를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상당수는 유학생이다. 앞서 본지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이른바 'K-엘리트', 곧 한국의 인재로 육성하자는 취지의 심층기획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그렇게 하려면 국내에서 공부할 마친 외국 학생들이 우리 기업에 입사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날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인턴활동 등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겠다"며 "취업이 가능한 범위를 비전문 분야까지 넓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드시 실행에 옮김으로써 한국이 K-엘리트가 되길 꿈꾸는 이들을 위한 '기회의 땅'이라는 인식을 전 세계에 심어줘야 할 것이다.

외국 인재 유치가 절실하지만 이민 정책은 우리 사회·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당부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민 정책은 해외 인재 확보 측면만이 아니라 전체 경제, 문화,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분야"라고 말했다. 과거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 또는 중동 출신 이민을 대규모로 받아들였다가 요즘 국민 통합이 흔들리고 사회 갈등이 심화하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우리는 유럽과 같은 과오를 되풀이해선 안 되겠다. 그러려면 이민 관련 사안을 전담할 '이민청'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 新출입국·이민 정책 방안 발표

외국 유학생들 'K-엘리트'로 육성해야

무분별한 이민 수용 부작용 속고하길

세계일보

외국 인재 유치가 절실하지만 이민 정책은 우리 사회·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당부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민 정책은 해외 인재 확보 측면만이 아니라 전체 경제, 문화,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분야"라고 말했다.

과거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 또는 중동 출신 이민을 대규모로 받아들였다가 요즘 국민 통합이 흔들리고 사회 갈등이 심화하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우리는 유럽과 같은 과오를 되풀이해선 안 되겠다. 그러려면 이민 관련 사안을 전담할 '이민청'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07 주요 언론보도

한국일보

2024년 09월 27일 금요일 A02면 종합

AI·로봇 등 고급 인재 모시기 '톱 티어' 비자 신설

법무부, 新출입국·이민정책 추진

6·25 참전국 등 '청년 드림' 비자 내년부터 우호국 출신 취업 기회 이민 2세대 대학 안 가도 취업비자 '5년내 이민 전문인력 10만명 확대'

6·25전쟁에 유엔군으로 참전한 우호국의 청년이나,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 분야의 지식기능을 갖춘 외국인 인재를 모셔오기 위한 전용 사증(비자)이 새로 생긴다. 단순 저숙련 직업을 위한 노동력과 별도로 지식산업에 걸맞은 외국인 인재를 5년 안에 10만 명 늘여오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법무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新)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1만 명(전체 인구의 약 5%)으로, 향후 5년 내 3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과학적 분석과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외국인을 선별 유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비자 신설을 통한 '인재 모셔오기'다. 먼저 한국전쟁에 유엔군으로 참전한 나라나 주요 경제협력국 등 우호국 출신 청년을 위한 '청년 드림'(가칭) 비자가 생긴다. 우호국의 잠재력 높은 청년 인재들에게 취업·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해 청년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한파와 친한파 양성도 노리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내년 상반기 중 이 비자를 도입해 첨단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농어업, 돌봄분야 등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첨단산업 분야 최상위권 인재를 겨냥

신출입국·이민정책

| | 톱티어 비자 | 청년 드림 비자 |
|-------|---------------------------------------------------------------------------|----------------------------------------------------------|
| 목적 | 인공지능·로봇·양자기술·우주항공 등 과학기술 첨단 분야 고급인재 유치 | 한국전 유엔 참전국, 주요 경제협력국(반도체, 자동차 등) 청년에 국내 취업·문화 체험 등 기회 부여 |
| 특징 | 우수 인재·동반 가족에게 출입국·체류 편의 제공 | 국내 어학연수와 이민·취업 병행 가능 등 |
| 예시 | 글로벌 최상위권 대학 이공계 학사 학위 이상 취득, 글로벌 최상위권 대학·기업·연구소 등 재직, 세계 수준의 원천기술 보유 등 인재 |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 설계 → 희망국 참여 방식 |
| 추진 일정 | 2025년 1분기 | 2025년 2분기 |



한 '톱 티어'(Top-Tier·최상위) 비자도 생긴다. 종전엔 AI·로봇·양자기술·우주항공 분야 지식을 갖춘 해외 인재들이 동반가족과 함께 장기간 국내에 머무를 유인책이 부족했다. 이에 정부는 해외 최상위권 대학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가 있거나 대학·기업·연구소 등에 재직하는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비자 제도를 설계했다. 내년 1분기 도입이 목표다. 다만 비자 발급 규모 등 상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를 거쳐 구체화한다.

우수 인재들의 장기 체류를 돕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외국인 유학생 중 한국어능력 3급 이상이고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경우, 졸업 후 진로 탐색을 위한 구직(D-10) 비자 체류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한 기업에서 인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전문인력 배우자가 한국어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가사·육아를 포함한 비전문 분야의 단순노무 취업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이미 국내에 들어온 이민자들의 사회 통합책도 고도화한다. 올해 4분기부터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고등

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또 중국 동포(조선족) 고려인도 추가 조건 없이 재외동포(F-4)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다른 국적 동포와 달리 직업·소득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만 F-4 비자 발급이 가능했다.

또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비자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심 의기구'를 꾸린다. 이번 정책을 통해 향후 5년 내 외국인 전문·기능인력 10만 명을 추가 확보하고, 지역상주인구를 확대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동시에 무분별한 외국인 유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비자 발급 규모 사전 공표제'를 엄격히 시행할 방침이다. 업종별 인력수급 불균형과 불법체류 상황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다음 연도에 필요한 비자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결정해 미리 알리는 제도다.

한편 법무부는 신규 인력을 데려오는 것과 별도로 불법체류자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도 이날 말 발표할 예정이다. 강수주 기자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朝鮮日報

2024년 09월 28일 토요일 A10면 사회

외국인 '그림자 아이' 없게... 與野 "출생등록제 도입해야"

외국인 아동 위한 심포지엄

한국서 태어나도 부모 외국인이면 출생신고 못해... 4000여명 미등록 복지 사각지대 놓이고 범죄에 노출 "모든 아동이 기본적 권리 누리야"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할 수 없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도 '출생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다. 출생등록제는 부모의 국적,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한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출생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단법인 미등록아동지원센터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 심포지엄'을 열었다. 건국대 이주·사회통합연구소와 주요영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흥근·이강일 의원이 공동 주관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외국인 아동도 출생등록제 대상이 되는 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현행법상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

난 아동은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대한민국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2022년 출생신고 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4025명으로 추산된다.

출생신고를 못하면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교육·보육·의료 등 필수 서비스를 받기 어렵고, 불법 입양이나 인신 매매 등 범죄에도 노출될 수 있다. 정부는 미등록 아동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관련 정보가 자동으로 지자체에 통보되는 '출생정보제'를 시행 중이지만, 외국인 아동은 이 대상에서도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지혜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교수는 "부모의 국적 등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출생 등록은 개인 권리의 출발점이자 인간에게 적용되는 최초의 권리이므로 국적이란 법적 지위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출생 등록 대상을 국민으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는 목적 규정 때문에 개정이 한계가 있다"며 "국적,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아이들의 출생 등록이 가능하도록 독립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여야 의원들도 의견을 모았다. 주 국

회부의장은 "출생등록제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그들의 기본적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고, 박 의원은 "여야의 문제가 아닌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한 공동의 문제"라고 했다.

백혜련 기자

매일경제

2024년 09월 28일 토요일 A01면 종합

해외인재에 'K-테크패스' 2030년까지 1000명 유치

정부가 첨단산업 분야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인재 유입 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웰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관련기사 A8면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기량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K-테크 패스'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K-테크 패스는 입국, 체류, 취업 제한이 대폭 완화된 특별비자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해외 인재 1000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홍혜진 기자

매일경제

2024년 09월 28일 토요일 A08면 경제

해외인재 자녀, 외국인학교 정원외입학 허용

정부, 해외 S급인재 유치대책 전체대출 한도 2억~5억 상당 소득세 10년간 절반 감면 추진 국내 아공계 석사여 380만명 박사여 110만명 연구장려금 4대 국가원 보타 재출 10배↑

| 구분 | 내용 |
|-------|---------------------------------------|
| 자격요건 | 해외고급인재조건 만족, 현지 분야 우수성 확보 |
| 비자 | 입국 후 1년 이내만 F-2비자로 전환 가능, 가족 동반 입국 확대 |
| 유치 지원 | 전세보증금 대출도 2억원 이하면, 연방 글로벌 청년창업사육학교 |
| 교육 지원 | 자녀 외국인학교 입학 지원 |
| 세제 혜택 |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 포함 추진 |

국내 이공계 인재 지원책도 내놔다. 우선 이공계 학부-대학원생이 경제활동이 어렵고 연구인입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내년부터 해당 이공계 석사·박사에게 각각 80만원·1100만원의 연구생활장려금(한국연구재단 스타아일랜드)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석사 1100만원 대상으로 연 500만원씩 지급하는 '핵심 인력 장학금'도 신설하기로 하고

정부가 해외의 고급 이공계 인재를 위해 마련하는 'K-테크 패스 프로그램'은 비자 혜택부터 입국부터 교육과 주거, 생활 등 전 단계에서도 탄탄적인 지원책을 도입한다.

그동안 해외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한 지원책은 주로 단기적인 편의를 개선한 것으로, 바속근 근로자 도입을 위한 고용 허가제와 함께 '무국적'으로 해외 인력 유치를 도모하려 했었다는 구성이다.

우선 해외인재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함께 영입을 허용한다. 또 현재 외국인에게 2억달러로 제한돼 있던 임대료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1억달러까지 확대한다. 임대 구분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어 구사 가능 하한 부동산 임대중개사도 연계를

추기요 했다. 근로소득세를 10년간 50% 감면해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 1월 세법 개정으로 해당 외국인 기술자에게 매년 근로소득세가 평균 10년간 50% 감면되는 데 이 혜택을 K-테크 대상인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 인재에게도 적용하도록 법안을 개정할 예정이다.

KOTRA가 주축이 된 비자 발급과 주거 청약, 자녀 교육 등 수요에 맞게 밀착 지원을 한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어 교육, 영어, 행정 처리 등 정형화된 지원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다

양화 예정"이라고 했다. 복지 향상이 흡수되지 않는 국내의 이공계 인재 정체를 일단 10여 개국에서 관철됨도 보인다. 전 세계 논객과 특허, 뉴스, 인재 정보 등을 통합 분석해

심사적으로 재공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플랫폼을 구상하고 있다. 국제 공동연구도 지원한다. 한국이 해외보다 뒤처지는 180개 지대의 전략기술을 유망다. 이를 위해 올해 1000여원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약 135000억까지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 우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온스온스, 조지아테크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2027년까지 12개는 늘릴 계획이다.

현재 2%로 제한된 일반외국인사대 7월 연방개발(KVC)의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1000만 2000명 유망인재 유입을 지원한다. 2024년 1000명으로 약 10배 늘린다. 대학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 상대적으로 아공계 출사 비율이 낮은 해외 인재도 늘려 나갈 계획이다. 공과연구개발 보조금 등 여담 비중을 현재 10% 수준에서 20%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예산 비중도 재조정될 예정이다.

출산과 유아도 인문 정책도 단계를 막고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2028년까지 모든 연구원이 혜택을 받는다.

포스트박사(비연구인구)를 늘리는 등 이공계 인재의 경력도 지원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의 포스트박사 채용 규모를 현재 150명 수준에서 2024년 1500명으로 약 10배 늘린다. 대학부



07 주요 언론보도

한국일보

2024년 09월 28일 토요일 A02면 종합

정부 “이공계 해외 인재 1000명 유치” 체류 지원·근소세 50% 감면

<2030년까지>

**입국 정착 돕는 ‘K-테크패스’ 도입
4대 과학기술인 정원 확대 검토
이공계 석박사 장학금도 늘리기로**

정부는 27일 서울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을 공개했다. 목표는 오는 2030년까지 해외 인재 1,000명 유치다.

전략에 따르면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 상위 100위권 공대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수석 엔지니어 이상 이상 인재 발굴부터 이들의 입국과 국내 정착을 돕는 ‘K-테크 패스’ 프로그램 등을 도입한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해외인재들에게는 입국, 체류, 취업 관련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입국 후 3년이 지나야 허용되는 장기 체류 및 이직 자유가 가능한 비자(F-2)를 입국 후 1년이지나면 발급할 계획이다. 비자 심사 기간은 현행 2개월에서 2주로 단축하고, 동반 입국 허용 범위는 배우자와 자녀에서 부모와 가사도우미까지 넓힌다.

해외 인재 정주 지원도 강화한다.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 외 입학에 허용하고,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외국어에 능통한 공인중개사를 연계한다. 전세자금대출 보증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5억 원까지 제공한다. 여기에 근로소득세도 대폭 깎아준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최장 10년간 50% 감면 혜택을 첨단산업 해외인

재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국제 공동연구 등 해외 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에도 공을 들인다. 정부는 올해 1,000억 원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약 1조9,000억 원을 투자해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에 대한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주회사의 해외 투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해외 기업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 펀드도 2030년까지 2조 원 규모로 조성한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제3차 인재양성 전략회의에서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이공계로 인재들 유인에 성장시키고 이에

결맞은 보상과 인정을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인재 유입의 길목인 영재학교·과학고 등을 확대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비롯한 4대 과학기술원 정원 확대도 검토한다. 대학에 진학해 연구의 길로 들어서면 생계비 격정을 덜어준다. 특히 대학원생들에게는 ‘한국형 스타이턴드’로 불리는 연구생활장려금(석사 월 80만 원, 박사 월 110만 원)을 제공하고, 이를 도입하지 않은 대학을 중심으로 ‘석사 특화 장학금’을 신설한다. 이는 석사 1,000명에게 연간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다수 석사와 정생이 매일 적어도 4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김지환오지혜 기자

東亞日報

2024년 09월 30일 월요일 A14면 사회

유승준, 비자발급 3번째 거부돼 입국 무산

유 씨측, 처분 취소·무효확인 소송

병역 기피로 국내 입국이 거부된 가수 유승준 씨(미국명 스트브 승준 유·48·사진)가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정부를 상대로 한 비자 발급 관련 소송에서 두 차례 승소했지만 입국이 또 다시 무산된 것이다.

28일 유 씨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대리인 류정선 변호사(법무법인 혁신) 명의로 낸 입장문에 따르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유 씨가 올 2월 신청한 재외동포 입국 비자

발급에 대해 거부 처분을 통보했다. LA 총영사관 측은 “법무부 등과 검토하여 유 씨에 대한 입국 금지령을 결정했고, 2020년 7월 2일(2차 거부처분일) 이후 유 씨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LA 총영사관이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세 번째다.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유 씨는 병역 기피로 입국을 거부당하자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 총영사



관 측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 씨는 행정소송을 냈고 2020년 3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LA 총영사관 측이 유 씨의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하자 유 씨는 2차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류 변호사는 “행정청이 사법부 확정 판결을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상황”이라며 “유 씨에 대한 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유 씨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차 내는 한편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김태연 기자 bebom@donga.com

서울신문

2024년 10월 03일 목요일 010면 사회

불법체류 양산과 인력난 해소 사이 'E-9' 외국인 근로자 5명 중 1명 이탈

비자 발급 늘려 단속 강화는 '한계' 노동자 선택권 제한해 이탈 부추겨 "허용 업종 확대 등 근본적 변화 필요"

해마다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 5명 중 1명꼴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구절벽 위기 속에 정부는 내국인이 꺼리는 저임금 일자리를 채우고자 올해 들어 E-9 비자 발급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 5000명으로 늘렸다. 하지만 당국은 이들을 관리·통제 대상으로만 여긴 채 단속만 되풀이하고 있어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다면 불법체류 노동자 규모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E-9 기준) 31만 825명 중 불법체류자는 5만 6328명이었다. 불법체류율은 18.1%에 이른다. E-9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체류율은 해마다 20% 수준 안팎이다. 2020년 19.9%, 2021년 23.4%, 2022년에 20.6%였다.

E-9 불법체류 신규 발생은 2021년 9295명, 2022년 9804명, 2023년 9340명에 달했다. 시범사업 2주 만에 '잠수물 탄 필리핀

비전문취업(E-9) 불법체류 현황 (단위: 명)



비전문취업(E-9) 불법체류 신규 발생 (단위: 명)



가사관리사도 행정절차를 거쳐 이탈 중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비자 기간이 짧아 불법체류자가 늘어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E-9 체류 기간을 3년에서 4년 10개월로 늘렸고 앞으로는 재입국 없이 10년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9000명이 넘는 불법체류자가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계

는 분명하다. 지난해 말 불법체류자 42만 3675명 중 단속된 인원은 3만 9038명으로, 단속률은 9.2%였다.

전문가들은 외국인력 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불법체류자를 찾으려고 모든 사업장을 돌아다보는 건 한계가 있다"면서 "인력을 급급히 데려올 게 아니라 한국어 능력이 뛰어나고 문화에 익숙한 외국인 유학생(D-2)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학생은 재학 중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 보조 등에서 아르바이트만 할 수 있다. 졸업 뒤 전문인력(D-7) 비자를 받아 사무·전문직에 취업할 수 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 돌봄업 등에서 일할 수 없다. 이 실장은 "허용 업종을 늘려야 한다. 유학생은 불법체류율이 6%"라고 했다.

사업주 허가 없이 사업장을 쉽게 변경할 수 없는 등 고용허가제가 가진 근본적 문제를 간과했기 때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최정규(민주사회를위한연호사) 임 아주노동팀장은 "임금 체불이 발생해도 바로 사업장을 바꿀 수 없을 만큼 선택권이 제한된다. 외국인 노동자의 이탈 사유에는 제도적 문제점이 분명 있다"고 말했다. 세종우송육기자

국민일보

2024년 10월 08일 화요일 012면 사회

구명난 '외국인 유령 아동 구제책' ... 임시 등록 30% 그쳐

주만등록 안돼 공교육 등 제외 일시등록 3년여간 962명만 혜택 요건 까다롭고 정보 부족함 탓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응한 이후 아동 임시 등록 제도가 나온 3월 말 종료로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인권 시각지에 놓인 아주 아이들이 여전히 적지 않은 만큼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종료 이후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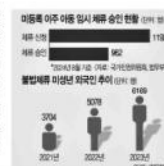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아주 아동 임시 등록 제도가 시행된 2021년 4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이 제도를 통해 등록을 마친 아주 아동은 962명이었다. 법무부는

3000여명의 아동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등록 아동은 법무부 기대치의 30% 수준에 그친 것이다. 임시 등록된 아동들은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상인이 될 때까지 인정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제도 도입이 전에는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인 주민으로 등록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공교육을 제외하면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런 현실이 인권침해라는 지적에 따라 법무부는 2021년부터 공교육을 받는 외국인 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2022년 1월부터는 만 6~7세 미등록 아동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미등록 아동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했

던 이 같은 제도적 지원에 힘입어 일부 아주 아동은 한국 생활에 수월하게 적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 출신 18세 청소년은 "태국도에 재능이 있어 학교에서 선수로 선발돼 훈련 받았지만 장학금이 없어 어떤 대회에도 참가하지 못했다"며 "체류 자격을 받고 전국 대회에 시범단으로 출전해 결승까지 올랐다. 그 덕분에 대학 대연도와 수시전형에 합격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여전히 까다로운 등록 요건과 정보 부족 등으로 해당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미등록 아동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인권위와 아주아동네트워크가 집중한 미등록 아주 아동 40명 중 13명은 임시 체류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로부터 구제책



인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본국에서 여러 발급이 안 되는 난민인데도 출입국장이 아이들의 신분 증명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나이 지라가 출신 한 부모는 한국에서 4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증명할 서류가 없어서 아무도 등록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불법체류 발급금을 납부해야만 미등록 아주 아동의 체류 등록을 허가하는 현실도 한계로 지적된다. 인권위 사례 조사에 따르면 만 6년간 한국에 불법체류한 외국인 부모가 자녀를 등록하려면 발급금 1800만원을 내야 했다. 발급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부모의 자라는 미등록 주만등록이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법무부의 아주 아동 등록 허가 제도는 아동 인권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운 영 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인권 시각지에 놓인 아주 아동을 하루빨리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환 기자 face@kmb.co.kr



07 주요 언론 보도

국민일보

2024년 10월 09일 수요일 008면 종합

영남 지자체들, 혁신으로 인구절벽·지방소멸 위기 극복한다

부산·경북 저출생 대응 방안 추진 출산·경남 외국인·청년 유입 집중

영남권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은 2024 대구 포럼(리빙포럼)에서 열린 2024 영남비례포럼에서 인구 감소 문제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5개 시·도는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와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부산시는 '인구 변화 대응 전략'을 통해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7월 인구 정책담당관을 신설해 결혼, 출산, 돌봄, 취업까지 전 생애 주기를 지원하는

20개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 유출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산후 조리비 지원, 외국인 영유아 보육비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 등을 통해 인구 감소 속도를 완화하고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으로 삶의 질 향상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는 저출생률 국가적 위기으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경북은 '저출생과 경쟁을 선도하며 영장부 자원의 대상을 축소'했고 영남부터 결혼, 출산, 돌봄, 양성평등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300대 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청년들이 결혼과 출

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돕고 있다. '2보듬600' 등 돌봄 서비스들을 확대해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울산시는 외국인 인력 도입을 통해 인구 감소와 경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울산은 노동력 감소에 대비해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해외 자매도시에 기술이공을 설립해 현지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 있다. 외국인 정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가 출생 부서 조직 분리와 외국인 정책에 자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외국인 정책위원회와 지자체장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 산업 특성에 맞는 우수 인력 도입을 위해 지역 맞춤형 특화(비자(중·예비)비) 신설을 건의한 상태다.

경남도는 청년들의 품주 여건 개선으로 집중하고 있다. 우주항공산업 등 미래산업을 육성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거 지원과 생활 여건 개선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자력을 떠나지 않도록 노력 중이다. 최근 청년 인구의 순유출이 급증한 경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구시는 TK신공항과 연계한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인구 유입을 구상 중이다. 대구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청년인력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남아 결혼과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주거 안정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인구 문제는 단순한 출산 장려 정책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교육, 일자리, 주거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하다. 영남권 지자체들은 지역의 노력과 더불어, 공동 대응을 통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할 계획이다.

대구=윤성진 조영민 기자 news8282@kmb.co.kr

'서울신문'

2024년 10월 08일 화요일 008면 기획특집

정부는, 이민 정책 확대한다면서... 외국인 단속·퇴거 강화 '엇박자'

불법체류 40만→20만명 축소 목표 "인재들은 합법 체류 전환 방안 필요"

정부가 이민정책 확대 기조를 이어오는 가운데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및 퇴거 등 관리를 강화하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인구 소멸 추세를 감안하면 불법체류 외국인을 무자정 단속하는 대신 임시에서 영지로 끌어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내놓은 제4차 외국인정책 5개년 기본계획에 담긴 5대 주요 과제 중 제1과제가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이다. 법무부는 기본계획에서 이민자 유입과 관리 시스템 선진화, 이민자 역량 검증 및 관리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하며 고급·숙련 이민자를 받아들여 국내 경제 발전을 촉진한다는 구상을 마련했다. 단순 노동에 장기간 종사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경력·한국어 능력 등을 평가해 장기 취업 비자(숙련기능인력·E-7-4)로 전환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런 기조의 일환으로 2021년 5만 6000명 수준에 불과했던 E-9(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자 한도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5000명으로 늘었다. 다만 정부는 기본계획에 체류기간을 초과한 외국인에 대한 강제 퇴거 조치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담았다. 연간 40만명대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절반 수준인 20만명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

체류외국인 현황 (단위: 명)



불법체류 단속률 (단위: %)



로 불법체류에 맞서겠다는 이렇다 보니 지난 6월의 한 대국민 입신부기 포로 아이를 유신했다는 법무부 통계연보와 겹쳐 보면 최근 5년간 불법은 2017년 25만명대를 초이후 35만명 선을 넘었고 40만명대로 늘었다. 5년 가졌다. 다만 불법체류는 2017년 12.4%에서 2023년 7.3%로 줄었다. 단속 일면도의 것 떨어지는 동시에 인구구조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중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다. 합법체류로 전환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2024년 10월 10일 목요일
Y12면 지방종합

전북,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탈 10배 급감

울 근로자수 6177명·작년 2배
이탈자는 321명→31명으로 '뚝'
우수인력 확보·정주여건 개선 효과

농촌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전북 지역 외국인 근로자 수가 올해 두 배 이상 늘었지만, 이탈률은 대거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전북 지역에 도입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총 6177명으로 지난해 2826명보다 2.2배 가량 늘었다. 반면 이들의 이탈률은 지난해 7%(321명)에서 올해 0.6%(31명)로 10배 가까이 줄었다.

전북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이탈률은 2022년 32%를 기록했으나 급감 추

세다. 근로와 정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도는 시·군별 대표인이 직접 현지를 방문해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는 제도를 올해 7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이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고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다. 근로자 관리를 위한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 비중도 50%(2022년에서 올해 80%를 목표로 늘리고 있다. 가족사 확보 등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거주 여건을 개선하고, 의료비 지원·다문화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한 복지 지원 강화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한국경제

2024년 10월 10일 목요일 A02면 종합

‘난민 자격’받고 살인·마약 범죄자 못 쫓아내는 낡은법

정부, 난민법 개정 착수

지난해 말 울산에서 몰래 대마를 재배해 상습적으로 흡연해온 20대 러시아인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해항 국제여객선터미널로 입국해 난민 자격으로 체류 중이었다. 오피스텔 베란다에서 은밀하게 대마를 키우면서 단속을 피하려고 주변에 탈취용 숲을 설치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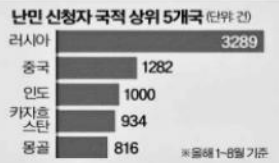
법무부는 A씨 같은 이들의 난민 자격을 철회·취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이 개정안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근거 조항에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쳤거나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한 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장관이던 2023년 12월 제출된 이 개정안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의 장기화로 수년 내 난민 신청자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커 난민법의 구멍을 매울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이 난민 인정 심사 업무를 시작한 1994년부터 난민법을 제정한 2012년 이전까지 난민 신청 건수는 총 5069건이었다. 그러다 2015년 5711건의 신청이 이뤄져 법 제정 이전 누적 건수를 처음으로 넘어섰고 2018년 1만 건(1만6173건)을 돌파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잠시 주춤하다 지난해엔 2만 건에 육박하는 1만8837건을 기록했다.

한국은 1992년 아시아 최초로 유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했고, 역시 아시아 최초로 2012년 난민법을 제정시 행했다. 국제사회 일원으로 난민 보호의 책임을 나눠 지겠다는 취지였다. 이를 기점으로 난민 신청 건수가 급증했고, A씨와 같이 난민 자격을 얻었거나 난민 신청을 한 상태에서 ‘중대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늘었다. 지난 6월 강원 춘천에선 필로폰 등 마약을 유통한 동남아시아 출신 난민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021년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카불공항에 도착한 한국 공군 수송기에 난민들이 탑승하고 있다. 한홍GB



지난해 난민심사 2만건 육박 무분별한 수용에 경계 목소리 “안보·공공질서 해칠 땐 자격박탈”

행정소송 42%가 난민 소송 판사들도 “재신청 제한해야” 10년 넘은 난민법 손질 목소리 커

법무부는 난민 자격을 요구하는 외국인 대부분이 보호 필요성이 높지 않은 국가에서 오고 있어 무분별한 수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전 세계 난민 발생 상위 5개국(2023년 기준)은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베네수엘라, 우크라이나, 남수단 순이다. 그러나 한국에 난민 자격을 신청한 외국인 국적 상위 5개국(1994~2024년 기준)은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중국, 파키스탄, 인도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1.7%(올해 7월 기준) 수준인 난민 인정률을 유럽 등과 단순 비교해선 안 된다고 했다. 미얀마(58.8%), 부룬디(53.6%), 에티오피아(30.2%), 콩고민주공화국(26.6%) 등 난민 보호 필요성

이 높다고 평가되는 나라에 대한 난민 인정률은 결코 낮지 않다는 점에서다.

난민 심사는 사법부 최대 골칫거리인 ‘재판 지연’의 한 요인이기도 하다.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소송 사건 중 상고심까지 간 3526건의 41.8%(1475건)가 난민 소송이었다. 우리 난민법은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이의 제기와 함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최대한도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국내 체류를 보장한다. 문제는 확정판결 이후 난민이 되지 못한 이들의 재신청조차 막을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인권 단체에선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해친 경우에 대한 판단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한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는 “객관적 판단을 담보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포괄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가안보·공공질서 위해는 난민 협약에도 명시된 보호 제외 사유로 유류연함(EU) 등 주요국에서도 관련 규정이 마련되는 추세인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장서우 기자



07 주요 언론보도

내일신문

2024년 10월 11일 금요일 019면 기획

“외국인 20명 이상 불법 고용하면 무조건 고발”

법무부,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불법고용한 외국인이 20명 이상이거나 고용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필수 고발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금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출입국사범이 자수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등에는 고발 대신 범칙금 부

과 등의 통고처분을 내릴 수 있었는데 고발 기준을 명확히 해 출입국사범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서는 불법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이 50명 이상인 경우, 허위 초청·신청 또는 알선한 외국인이 10명 이상인 경우, 통고 처분 미이행으로 고발된 적이 있는 경우도 필수 고발 대상으로 규정했다. 또 고발 대상자

를 통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는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해 통고처분을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엄정하고 공정하게 체류 외국인을 관리하고 출입국 사범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객관적 통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朝鮮日報

2024년 10월 12일 토요일 A27면 오피니언

병력 급감 속 병역 대상자 한 해 4000명 국적 포기, 문제 없다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한 18~40세의 병역 의무 대상자가 1만9607명에 이른다고 한다. 최근 5년간 2만명, 한 해 4000명쯤이다. 2014년 27만4292명이었던 현역병 입영자는 지난해 18만7188명으로 감소했다.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약 8만7000명이 줄어들었다. 이처럼 저출산으로 병역 자원이 급감하는 가운데, 매년 4000명이 국적 포기를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적 포기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도 41세부터는 F-4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할 길이 열려 있다. 부모와 함께 외국에 이주해 영주권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병역을 사실상 면제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1년에 6개월 이상의 장기 체류를 하지 않고 계속 외국에 머무르면 만 38세에 병역 의무가 사라진다.

싱가포르에서는 군 복무를 하지 않고 국적을 포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보다 훨씬 어렵다. 싱가포르 사회가 제공하는 어떤 혜택도 누린 적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돼야만 국적 포기가 허가된다. 어릴 때 부모를 따라 이민을 갔어도 싱가포르 여권을 사용해 여행을 다녔다가, 싱가포르에서 유치원을 다녔다면 국적 포기가 허

락되지 않는다. 이 상태에서 계속 외국에 머물며 군 복무를 하지 않으면 ‘탈영병’으로 간주된다. 부모를 따라 이민을 가서 제3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싱가포르를 방문한 청년이 공항에서 바로 체포돼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만 40세 이하라면 징역과 별도로 군 복무도 해야 한다. 만 40세가 넘으면 군 복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싱가פור는 자국민 외에 만 40세 이하의 영주권자 남성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다. 병역을 피하기 위해 국적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면 그 이후에는 싱가포르에서 학업이나 취업, 장기 체류를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싱가포르에서 사회 활동을 하려면 무조건 군 복무를 하라는 뜻이다.

싱가פור의 역사와 여건은 한국과 다르다. 우리 경우엔 병역 대상자 중 국적 포기자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기 앞서 군 복무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방안을 우선해야 한다. 그러나 군 입대를 피해 외국에 머물렀던 이들이 뒤늦게 한국에 와서 병역의무를 다한 사람들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 없이 활동하고 살 수 있는 제도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나라가 그럴 형편이 되지 않는다.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東亞日報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 A12면 사회

K-ETA 논란... 태국 작년 1만명 韓여행 취소

(전자여행허가제)

**고위직·유명인사 등 입국 불허
"반한 감정-불신감 자극" 지적**

전자여행허가제(K-ETA) 승인 거부 등으로 인해 한국 여행을 취소한 태국 관광객이 지난해에만 1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K-ETA는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 해외 국적 입국자들이 한국 입국에 앞서 사전에 등록하고 입국을 허가받는 제도로, 2021년 9월부터 시행됐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받은 'K-ETA 시행 이후 연간 단체 방문 관광 취소 현황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태국에서 9947명이 계획했던 한국 여행을 취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인 등 신원이 확실함에도 일부가 한국 입국을 허가받지 못하면서 단체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의 부인과 가족 등이 K-ETA를 불허받는 등, 고위직과 유

명 인사들의 연이은 K-ETA 불허 사례가 태국 내 '반한' 감정과 함께 한국 여행에 대한 불신감을 자극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유튜브 구독자 108만 명을 보유한 태국 유명 인플루언서가 인천공항에서 불법노동자로 오인당해 강제 송환된 뒤 "돈이 많아도 이제 한국 여행이 힘들어졌다"는 영상을 올린 뒤로 태국 소셜미디어에서 '밴 코리아(Ban Korea·한국 금지)'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기도 했다.

그 결과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상반기(1~6월) 29만3724명으로 한국을 찾은 전체 외국 관광객 중 1위 규모를 기록했던 태국인 관광객은 올해 상반기 16만8328명으로 줄어 들었다. 회복률이 57.3%에 그친 것. 태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대신 일본이나 대만 등 별도의 허가 없이 입국이 가능한 주변국으로 행선지를 바꾸는 경우도 증가했다. 2019년 일본을 찾은 태국인 방문객 수는 한국의 2.31배 규모였는데 올해는 격차가 3.48배로 늘었다.
윤영진 기자 mjlight@donga.com

경향신문

2024년 10월 22일 화요일 010면 사회

"갈혀 있으니 버려지고 죽은 것 같다" 외국인보호소의 비명

'구급 비국민' 수용 상태

장분 없고, 외부 운동 제한
두통 등 건강 악화 호소
"단체 놀이까지 몰려 고문
부장적인 생각 자꾸 머문다"

법무부 외국인보호소 4곳 방문 시인모임 '대중'의 이용형 활동가는 지난주 외국인보호소에 들어간 '구급 비국민' A씨로부터 "5만 원만 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2019년부터 구급비 국민 서비스는 다대 통금에 의한 4시간제 면회 보호(구급)가 일시 해제됐지만, 이후 지역-생활비로 돈을 다 쓰고 1주일 만에 1000원이 남았다고 했다. 이 활동가는 "그는 보호 일시 해제 후 나라를 살고 있다"며 "비밀 감

는 단해 등을 숨겨온다며 이태리도 금지했다"고 밝혔다. 반대의 태극 지명 구급 면회는 아직도 막힌 상태다. 외부와 통신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공용전화는 권로 주체가 민영업체로 바뀌어 "5분에 1만 원" 수준으로 가격이 올랐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건강 악화로 호소하는 이들도 해지된다. 나이지리아 내전을 피해 온 구급비국민은 열일 수지가 200원 남아 흡연·주행할 줄다 불우 고열할 등용이자로 2023년 임시 보호 해제를 받았다. 한 활동가는 "이제 갈겨지 오를 구급 해제를 기다리는 게 고문 같다"며 "4시간제 면회"가 자꾸 몰려 의 책을 엮을 때까지 1시간은 구급비국민의 발을 찼다. 그는 "구급 과정에서 우울증·불안증 등 정신질환을 호소하지 않는 이가 없다"고 밝혔다.

복합한 외국인 체류 제도가 변형될 무추진다는 비판도 나왔다. 유령 예외로, 부초, 세부 분류는 10여 종인 체류비자가 정한 활동 범위가 지나치게 엄격해 쉽게 불법체류자 신분인다는 것이다. 구급에서 풀리나도 다시 불법의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도 있다. 임시 보호 제도를 보완하려면 '역외권 사각'을 채워야 하는데, 현실성도 떨어진다. 지적도 있다. 체류기간에 생계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인데, 구급비국민이나 재구급할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주를 비판하는 것이다. "이들의 나이·능력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 전문복지시설에 위탁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외국인 보호국에도 현실에서 는 부흥지불이다. 한국외국인미팅은 자는 구급 6개월 간에 체류 10여

해지는 등 건강 악화로 구급이 해제되지만, 해외 직업을 얻기 위해 학교 교육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적 제재가 해제된다. 정 활동가는 "전날 해. 나는 양수원에 한 번 면담을 했다. 면담이 없는 형사적 제 나"라 "국민의 아니. 나는 아무런 보호소도 안 방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의 무책임을 지적했다. 동부기 이들을 기는 뒤 필요한 '보호'를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상이형 활동가는 "사우리가 고문 사상을 받은 줄만 '피해자는 구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하고도, 구급 트라우마 때문에 열상을 제대로 면회할 수 없었다"며 "그가 정전에 무너져가는 것만 봐도 알아야 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진 기자 janghyun@jjang.com



07 주요 언론보도

한국일보

2024년 10월 22일 화요일 A06면 종합

법원 “남성우월주의 우간다 가정폭력 피해 온 여성, 난민 인정해야”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한국으로 피신 온 우간다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모국의 뿌리 깊은 남성 중심 문화 탓에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보복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난민협약이 규정하는 ‘박해 피해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관사는 우간다 국적 여성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5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모국 정부로부터 보호 받을 수 없어 난민 요건을 갖췄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난민법상 ‘난민’의 정의는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남편이 NGO 출근 못하게 체격질 신고받은 사법기관은 “말 들어라” 살해 협박 등 ‘박해 피해자’로 인정 난민 불인정 출입국 당국은 항소

△모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또는 돌아갈 수 없거나 원치 않는 무국적자)을 말한다.

A씨에 따르면, 비정기구(NGO)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2년 결혼했다. 부부 사이가 나쁘지 않았지만, 첫아이를 출산하고 2014년 직장에 복귀하려 하자 이를 반대한 남편의 손찌꺼기 시작했다. 남편 물레 출근하러다 걸려 전 것줄로 채찍질을 당하고 목이 졸려 입원하기도 했다. A씨는 우간다에서 경찰 이전 단계의 사법적 역할을 맡는 지

방의회에 피해사실을 신고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고 한다. 지방의회는 “다시 아내를 폭행하면 수감될 것”이라고 남편에게 경고하면서도 “아내는 무조각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니 근로활동을 중단하라”고 결론 내렸다.

계속되는 폭력을 참다못해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온 A씨는 2018년 자신이 근무하던 NGO 대표로 한국에 입국했다. 그러자 남편은 “내 명령을 어긴 책임을 하라 갔다”며 “내 나의 소유물이고 내가 살아서 돌아온다면 너를 죽일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A씨는 어떤 메일을 증거로 들어, 2018년 12월 출입국 당국에 자신을 난민으로 받아들이 달라고 요청했다. 당국은 약 2년 뒤 ‘난민자위원’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란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 불인

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우간다 여성들이 처한 법외문화적 현실에 주목해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간다에선 여성이 남편 뜻에 따르지 않을 경우 대가를 치르게 하는 규범이 현실에 있다”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구조적 사법적 보호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폭력 주체가 ‘사인’이라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A씨의 가정폭력 피해는 국가의 방치 속에서 연속돼 온 구조적 문제”라면서 “이는 A씨의 행복추구권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등 핵심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관결 이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측이 항소해, 사건은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최다 기자

東亞日報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 J16면 지방

강원도, 관광·휴양 시설 ‘투자이민제’ 추진

10억 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 거주·영주 자격 부여하는 제도

강원도는 동해시 경제자유구역 망상 1·2·3지구와 평창군 용평관광단지외의 관광·휴양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이민제 지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 시설 등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F-2)을 부여하고, 5년

동안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 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다.

강원도는 투자이민제 지정 추진에 앞서 강원경제자유구역청, 동해시, 평창군과 협력해 각 지역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했고, 관광·휴양 시설 투자이민제를 통한 실질적인 기대 효과를 검토했다. 또 주민설명회와 사업계획 공고, 시군의 회 승인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강원도는 투자이민제가 시행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수요가 증가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번 투자이민제 지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의 예비심사 및 실태조사 등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현재 강원도에는 평창 알펜시아와 강릉 정동진지구 등 2곳이 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6천 33억 원의 투자이민이 이뤄졌다.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투자이민제가 지정돼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관광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며 “올해 안으로 신청 지역 모두 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민도 기자 imlee@donga.com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국민일보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002면 종합

국내 거주 외국인 246만명, 대구 인구보다 많다

(238만명 지자체 중 7만)

지난해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 수가 역대 최대인 246만명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4.8%다.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이 급증하면서 전체 외국인 주민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

행정안전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을 24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3개월을 초과하며 국내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 주민은 246만9642명으로 조사됐다. 통계 발표를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큰 규모로 2022년(225만3848명)보다 20만1294명(8.9%) 증가했다. 전체 인구(5177만4021명)의 4.8%에 달한다. 17개 시·도 가운데 7개의 대구(약 238만명)보다 약간 많고, 6개의 경북(약 260만명)보다 약간 적은 수치다.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유학생·결혼이민자 등이 18만2804명(10.4%) 늘어난 193만159명을 기록했다.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증가가 전체적인 외국인 주민 수를 끌어올렸다. 외국인 근로자는 47만239명, 유학생은 20만6329명으로 전년보다 6만711명(16.6%), 1만6832명(8.9%) 증가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들은 2023년 대비 1만681명(4.8%) 증가한 23만4066명이다. 출신 국가별로는 중국(한



인구 중 4.8% 통계 이후 '역대 최대' 1년새 근로자 16.6%·유학생 8.9%↑ 한국계 중국인·베트남·미·필리핀 순 경기 최대 거주·서울 인천 뒤 이어

미국 10만1990명(43.5%), 베트남 5만4904명(23.3%), 중국 4만2519명(18.1%), 필리핀 1만5469명(4.5%), 캄보디아 5252명(2.3%) 등이다.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주민의 차수는 789명 늘어 28만988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주민 수는 서울을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7% 이상 증가했다. 증가율로 살펴보면 전남(18.5%), 경남(17.0%), 울산(15.6%) 등 비수도권

이었다.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시·도는 경기(80만9801명), 서울(44만9014명), 인천(16만3899명)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외국인 주민의 57.8%인 141만9674명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시·군·구는 연산(10만9833명), 화성(7만7611명), 시흥(7만4653명), 수원(7만1392명), 부천(5만8832명) 순으로 모두 경기 지역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주민이 1만명 이상,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인 '외국인 주민 집중 거주지역'은 지난해 97곳에서 30곳 늘어난 127곳이며, 30곳 중 28곳이 비수도권이다.

김민재 행정부 차관보는 "외국인 주민은 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이 됐다"며 "이들이 어려움을 없이 각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행정안전부

한국경제

2024년 10월 29일 화요일 A03면 종합

韓 체류 '최고급 외국인 인재' 고작 188명

매년 수천 명의 석사급 이상 국내 인재가 미국 취업 이민을 떠나고 있지만 정작 한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해외 우수 인재는 연간 수십 명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유인이 부족한 현재 비자 정책으로는 날로 심각해지는 인재 유출입 불균형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F-5(영주권) 비자 중 11만 항목(특정 능력)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188명에 불과하다. F5-11은 과학, 경영, 교육, 문화예술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에게 발급된다. 글로벌 석학이나 다국적 기업 고위 관리직을 대상으로 영주권을 발급하는 미국의 EB-1 비자와 가장 비슷하다.

석사급 인력이 대상인 미국 EB-2 비자와 유사한 국내 영주권인 F5-9-10의 연간 신규 발급은 수십 명에 그치고 있다. 현재 F5-9(첨단박사)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302명, F5-10(첨단학사)는 1666

명이다. 두 영주권은 해외에서 첨단산업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 기업에 고용된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F5-5-10-11 영주권 체류자는 2019년 884명에서 올해 2156명으로 늘었지만 국내 장기 체류자 등 매년 걸치는 수를 제외하면 순수하게 신규 발급된 취업

법무부, 영주권 비자 발급 현황 첨단분야 박사 인력도 302명뿐 "韓, 저숙련 노동자 유치만 주력"

이민 영주권은 연 수십 명 수준에 그친다. 매년 최소 1400명의 석사급 이상 인재가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과 대비된다. 구체적인 신규 발급 규모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신규 영주권 취득자를 시점별로 집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조업 현장의 요구에 따라 블루칼라로 대표되는 저숙련 외국인 노

동자(E-9 비자) 유치 정책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E-9 비자 유치 상한은 2020년 5만6000명에서 올해 16만6000명으로 세 배로 늘었다. 숙련 외국인 근로자(E-7-4) 상한도 2018년 600명에서 올해 3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최고급 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기업 차원에서 고급 인재를 고용한 사례는 적지 않았지만,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영주권자를 끌어들이는 정책적인 노력은 사실상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박사급 인재가 한국을 취업 1순위 국가로 여기지 않고, 입국 뒤에도 오래 거주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급 인력을 유치하려는 비자 제도를 갖추지 못한 건 아니지만 이들을 끌어들이는 유인 정책이 부족하다"며 "해외 우수 인력을 위한 자녀 교육과 배우자 취업 등 가족 복지 개선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신 기자



07 주요 언론보도

한국일보

2024년 10월 29일 화요일 X12면 지방

“계절근로자 적시 파견”… 흥천군, 필리핀 현지 네트워크 구축

신영재 군수 필리핀 DMW 방문
계절근로 안정적 파견시스템 마련
인상 등 특산물 시장개척 활동도
“홍천에 대한 신뢰 쌓여 교류 확대”

강원 흥천군이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리핀 현지당국과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흥천군은 신영재 군수가 25일부터 필리핀 필리핀 이주노동부(DMW)를

방문해 베르나르도 올랄라 차관을 만났다고 28일 밝혔다. 필리핀 당국의 송출 유예로 지역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흥천군은 필리핀 산후안시와 로사리오시, 산호세시에서 매년 1,000여명의 계절근로자를 파견받고 있다. 그런데 올해 1월 현지 당국이 근로자 송출유예를 발표하면서 임금이 지연되기도 했다. 당시 출국전 교육이 교육(PDOS)이 늦어진 게 계절근로자가 제때 파견되지

않은 원인이었다. 신 군수와 연담한 필리핀 당국도 “부차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군수는 “필리핀 현지 출장을 통해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 시스템을 마련해 지역 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 군수와 서정권 강원인상농협 조합장 등으로 구성된 마닐라 무역사절단은 지난 26일 마닐라에서 필리핀 한인경제인총연합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내 우수제품 판로확보와 시장정보를 공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한국과 필리핀 수교 75주년 기념 무역행사에 참석한 사절단은 인상과 한과, 참옥수수 등 흥천 대표특산품을 현지에 알렸다. 신 군수는 “필리핀 계절근로자가 가장 많이 오면서도 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한 인원이 없어 흥천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지역 기업 수출, 관광 분야로 경제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은성 기자

내일신문

2024년 10월 30일 수요일 017면 정책

계절노동자 인신매매에 현상금 걸고 추적

‘공공형’ 농협 추노행위 목인 … 이주인권단체 “법무부 지침 운영 제도 법제화해야”

농어촌 일손을 돕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인신매매·강제노동·임금착취가 여전한 가운데 이에 대한 불만으로 이같은 경우 현상금까지 걸고 추적한 사실에 대해 이주인권단체들이 규탄했다.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등 이주인권단체들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공공형’ 농협 인신매매 임금착취 만연한 계절노동자제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외노협에 따르면 4월 계절근로 비자(E-8)로 한국에 입국한 필리핀 A씨는 기초지방자치단체 B군에서 계절노동자로 일했다. 첫 급여에 고을 주는 B군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중개수수료’라며 브로커 계좌로 입금하라는 안내를 받고 급여 중 100만원을 브로커에게 계좌이체했다. A씨는 항의했지만 B군 계절근로자 담당 공무원은 “약정된 금액인데 왜 내리고 하지 않느냐”며 계좌이체에 동의하지 않는 A씨들에게 ‘행위’ 임금 지급 중지와 조기 귀국을 시켜 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지난해 시행된 인신매매방지법은 사람을 사고파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을 목적으로 한 폭행, 협박 등 착취 행위’도 인신매매로 본다. A씨는 이주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10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를



“계절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와 이주노동자인권단체들이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임금 착취, 강제 노동에 대한 관련 기관의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발급받았다. 지자체 업무협약에 비해 좀 더 부당하다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도 별만 다르지 않았다. D농협에 고용된 필리핀 F씨는 5월 임금지자마자 D농협은 계절노동자들의 통장을 개설하며 브로커 G씨 계좌로 임금정액의 3개월간 자동이체되도록 설정했다. G씨는 올해 1월 전남 해남군에서 여권 발급, 임금환급 착취 등 공무원과 브로커의 불법행위로 불의를 일으킨 인물이다. G씨가 D농협은 이러한 임금착취에 불만

을 가진 계절노동자들이 이말할 경우 현상금을 걸고 이말자를 추적하여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목인했다. 9월 이달자 3명이 발생하자 D농협 측은 소셜미디어에 이말자들의 소재를 알려 줄 경우 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현상금을 걸었다. 이후 현상금은 600만원으로 올랐다. 게다가 경찰에 이말자들을 밀도 마야 등의 혐의로 허위 고소까지 했다. 이런 행태는 처음이 아니다. 고기복 외노협 운영위원장은 지난해에 입국했다가 이말

한 계절노동자에 대해서도 똑같은 수법으로 위협을 가했다며 “현지 지역사회에도 소문을 내고 타 지역 계절노동자를 입국할 바 있던 아가 재입국 후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국을 위협하며 이말자를 압박하는 등의 초법적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인권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초지자체는 계절노동자 모집 및 선발, 입국 후 고용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해태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로 인해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서 중대 위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안이나 단체 위법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실태가 만연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형인 D농협 사건은 1월 해남서 발생했던 브로커 G씨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라며 “교묘하게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고 지역에서의 부패 고리를 견고하게 인신매매와 같은 피해자를 양산할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주인권단체들은 “계절노동자제도가 농업 생산기반 유지와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권익에 절대적인 생명유지 장치인 점을 고려해 현재 법무부 운영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성진 기자 nhsn@naeil.com

11월

한국경제

2024년 11월 05일 화요일 A01면 종합

‘인력난’ 건설 현장 외국인 숙련공 온다

**정부, 기능인력 비자 확대
형틀·철근·콘크리트 업종 등
국내 기능공 고령화 대응**

내년부터 국내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자재 나르기 등 단순 업무를 넘어 형틀 제작과 콘크리트 타설 등 기능공으로 일할 수 있다. 정부가 업무 강도가 높아 내국인이 기피하는 공종(공사 종류)의 기능인력 비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동남아시아 등에서 외국인 숙련공을 데려와 국내 기능인력의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인건비 절감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 관련기사 A3면

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형틀공과 철근공, 콘크리트공 등 일부 공종에 E7-3(일반기능인력) 비자를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내년 추진한다. 현재 E7-3는 동물사육사와 조선휘집공, 항공기정비원 등 10개 업종에 허용한다. 업계에서는 내년 건설 콘크리트공과 철근공 등 공종별로 300명가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외국인 건설 근로자는 주로 E9(비숙련 인력) 비자로 들어와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만 맡았다. 국내 건설 기능인력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원년층이 ‘생산량’을 외면하면서 건설인력의 고령화가 심해졌다. 한국건설인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국내 건설 기능인력의 평균 연령은 51.4세다. 60대 이상 비중도 24.6%에 달한다.

형틀 목공과 철근, 콘크리트처럼 힘이 많이 드는 공종일수록 기능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고 인건비가 치솟았다. 그 결과 젊은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고용해 해당 업무를 맡기는 현상이 크게 늘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불법 외국인인 숙련도를 담보할 수 없어 공사 품질과 생산성이 떨어지고 안전사고도 잦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건설업체나 에이전트 등에서 직접 기술 테스트를 통해 인력을 선발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E9 비자로 들어온 비숙련 외국인력 활용 범위도 숙련 기능인 보조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민혁/유오삼/한영철 기자

국민일보

2024년 11월 05일 화요일 011면 사회

부모 추방돼 노숙자 되는 일도 “미등록 이주 아동 구제 강화될”

**조전부 구제책 내년 3월 종료 앞둔
인권위 토론회, 제도 정착화 등 주장**

나이제리라인 A씨(19)는 올해 대학에 입학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렸다. 미등록 이주 아동 신분이란 A씨가 성인이 되자마자 법무부가 내린 조전에 따라 부모님이 나이제리인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외국인 등록이 되지 않은 A씨는 2021년 4월 법무부가 마련한 ‘국내 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전부 구제대책’의 수혜자로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이 제도 도입 이전에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인은 주민으로 등록할 방법이 없었는데, 임시 등록제도를 통해 공교육을 비롯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 아동의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점까지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했다. 결국 성인이 된 A씨는 동생과 단 둘이 한국에 남았다. 그는 유학비(D-2)를 받았지만, 유학하던 비자가 상실에 위임도 할 수 없었다. 생활비가 부족했던 A씨는 다양한 일을 구하지 못하고 빈 김의실을 찾아 잠을 자는 등 노숙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마련한 미등록 이주 아동 임시등록 제도도 내년 3월 종료될 앞두고 있다. 국회에서 4일 열린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 체류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선 이주 아동의 정착을 돕기 위해 제도를 더 유지하면서 현실과 괴리된 일부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미등록 이주 아동이 구제대책 대상이 되려면 중·고교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해 성인이 된 이후에는 국내 대학에 입학해야만 한국에 머물 수 있다. 부모의 경우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법무부는 당시 대책을 발표하면서 “가족 단위의 불법 이민이 증가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제한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사감 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아직도 구제 대책을 받지 못한 아동들이 많다. (임시) 대책이 제도화할 수 있도록 수혜 기

간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초·중·고교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 아동은 총 3199명으로, 이 중 체류지격을 받은 아동은 92명에 그친다. 김 연구위원은 구제 대책 적용 요건 완화도 강조했다. 그는 “자녀가 성인이 되자마자 강제적으로 독립하기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부모의 출국 시기를

자녀가 24세가 되는 때까지로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박재경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조사관은 “대학에 입학해야만 성인이 이후에도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건 미등록 이주 아동들 유학생으로 보는 조처”라고 지적했다.

윤예슬 기자 pinetree23@kmb.co.kr



07 주요 언론보도

서울신문

2024년 11월 05일 화요일 035면 사설/오피니언

中 '무비자 입국' 다음은 '한한령' 내려놓기다

중국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조치를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1992년 수교 이후 처음 시행되는 중국의 비자 면제 시기와 비용 면에서 한국인 관광객 등의 편의가 증진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외교적 사전 협의가 없는 일방적 발표는 이웃 국가에 대한 예의와 존중과는 거리가 있다. 더구나 비자 면제로 관광객이 늘어나면 경제적 이익은 당연히 중국의 몫이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면서 중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모습이다. 설상가상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를 도와 북한이 특수부대를 파병하자 중국의 소외감은 더욱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갑작스러운 비자 면제는 북한에 던지는 무언의 메시지로도 읽힌다. 중국은 이번 조치를 비정상적 규제를 건어내고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는 발판으로 삼아 주길 바란다.

비정상적 규제를 대표하는 것이 한한령(韓韓令)이다. 한국이 2016년 7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를 확정하자 중국은 영화와 가요 등을 전면 금지하는 보복 조치가 나왔다. 당시 한류 열풍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우리 대중문화와 여행업 등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중국은 지금도 한한령의 존재를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 교류의 통로를 철저히 막아 버린 단적으로 한국이 타격을 입기는커녕 중국 대중문화의 발전 속도만 더뎠다.

지금 북한 정권은 남한을 겨냥해 다양한 핵·미사일 위협을 가하고 있다. 라우크라 전쟁과 중동 분쟁에서도 사드와 같은 미사일 방어 무기의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졌다. 중국이 스스로 강대국이라 자부한다면 사드를 핑계로 유례없는 문화쇄국에 매달리는 모습을 냉철히 되돌아 봐야 한다. 비자 면제 조치를 통해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이 크게 늘어나기를 희망한다. 더불어 중국은 한국에 대한 문화규제의 빚장을 과감히 풀어 두 나라 대중문화가 함께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겨레

2024년 11월 09일 수요일 013면 사회

인권위 "계절근로자 인신매매 피해" 제도개선 권고

총리·법무부에 인권보호 대책 촉구
"중개업자 엄금 착취 등 일삼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서 나타나는 '인신매매' 피해를 막을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농·어업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

이주 노동자를 활용하는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해 인권위가 권고해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5일 필리핀 타클라코주와 전남 해남군 사이 업무협약(MOU)을 통해 계절노동자로 입국한 피해자들이 중개업자에 의해 여러 일류, 임금 착취 등 인신매매 피해를 봤다고 판단하고 국무총리실과 법

무부,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개선 및 개별 법지를 권고했다. '유연 인신매매방지 의정서'에서 '인신매매'는 사형을 시코하는 형 죄뿐 아니라 작위를 목적으로 불법적 수단을 통해 사람을 모집, 이동시키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인권위 조사 내 송출 중개업자들

계절근로자 송출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주요 업무 또한 특정 중개업자를 통해 진행했다. 피해자들은 본국에서 거액인 계절근로자 홍보 행사에서 이 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영세 식당을 듣고, 대출 연대 보증 서명, 계약서에 서명했다. 중개업자는 한국에 들어온 필리핀 노동자들로부터 발달 자질이며 형식으로 75만

세만 임금 책혀 49만, 통장 압수 7만, 근무처를 변경하고 주요 업무 또한 특정 중개업자만 맡게 하는 등 인권 침해 사례가 잇따랐다. 인권위는 관여수 출마에게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협약 체결 주체를 국가 또는 공적자격을 단위로 삼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는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를

한국경제

2024년 11월 07일 목요일 A27면 사회

해외 스타트업 인재, 한국 온다

법무부-중기부, 특별비자 도입
외국 창업기업인 입국 쉬워질 듯

이르면 이달 말부터 해외에서 유망 스타트업을 차린 외국인이 특별비자를 받아 연중 간소화된 절차로 입국해 국내에서 사업을 이어갈 길이 열린다.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부터 20일까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발급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한 모집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발급 요건을 기존 기술창업D-8-4 비자 대비 대폭 단순화한 비자다. 기존에 D-8-4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국내 전문학사 또는 국외 학사 학위를 갖춘 상태에서 예비 창업자 대상 교육 과정인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에 참여해 80점 이상을 받고 필수 항목을 1개 이상 충족하거나 △S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등 20개 선정되거나 △중점 창업지원사업 대상자로 선발돼야 했다.

특별비자는 이 같은 장벽적 요건 대신 투자자, 외국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평가위원회에서 해당 스타트업의 사업성과 혁신성, 한국 진출 가능성, 국내 기여도 등을 평가하는 절차를 거친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중기부에서 추천서를 내주면 국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본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 이를 제출해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첫 발급 대상자는 이달 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특별비자 도입은 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에 대비해 지난 9월 마련한 신(新)출입국·이민정책의 일환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혁신성과 적극성을 가진 외국 인재가 한국에서 창업하고,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키워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행사 기차

세계일보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 Y10면 지방종합

“韓, 中 무비자 대응 ‘무사증 확대’ 어려워”

(서울·인천 등)

제주 관광업계 ‘지나친 비약’ 평가
상호 무비자 댄 불법 체류 우려 커
해외 다른 국가에서도 사례 없어

양국 모두 관광 수요는 증가 전망
무비자 지역 제주 가장 수혜 볼 듯

중국인 한국을 무비자(무사증) 대상국에 포함하면서 양국 간 교류 활성화로 관광 수요가 고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무비자 지역인 제주도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이달 8일부터 내년 말까지 한국을 비롯해 9개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실시한다. 중국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면제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의 일반여권 소지자는 비스니

스, 관광, 친구·친지 방문, 환승 등을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국내 여행업계는 이번 무비자 정책으로 양국간 관광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에서 중국을 방문하는 여행객 외에도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도 함께 늘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면세점, 카지노, 호텔업계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양국 간 교류가 활성화하면서 인바운드 수요 증가도 기대해볼 만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과거 해외여행을 주저하던 중국의 VIP들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며 “개별 관광객이 늘어날 뿐 아니라 단체 관광객도 좀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지역 최대 중국인 인바운드(외국인의 한국 관광) 여행사인 뉴화칭 측은 “한중 관계가 좋아지면 지금보다 훨씬

활발하게 인적 교류가 활성화할 것”이라면서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무비자가 매력인 제주를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도 중국인 무비자 지역을 확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제주 관광업계는 국가 간 외교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정부도 중국인 대상 무비자 지역을 제주에서 서울과 인천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지나친 비약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말레이시아 국적자를 대상으로 15일 일방적 단기 무비자를 시행하고 있지만 상호 비자면제 협정을 요구

하는 나라는 없다.

이번에 한국과 함께 무비자 혜택을 받은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9개국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 국가 대부분 중국보다 1인당 국민소득(GND)이 높은 상황에서 상호 무비자 단행할 경우 불법 체류 문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볼 보듯 변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국내 무비자 관광지인 제주가 수혜를 받게 될 것”이라며 “다만 일각에서는 무비자 적용 지역이 인천, 서울까지 확대될지 여부에 관심을 갖기도 하지만 이는 정치·사회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작다”고 내다봤다.

한국은 현재 제주도에 입국하는 중국인에 한해 30일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불법체류 중국인도 누적 1만명여 넘는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한겨레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002면 종합

미등록 이주아동 2만여명 중 962명만 체류자격 얻어

강태완씨 추모 이주청소년 ‘꿈꿀 권리’

▶1면에서 이어짐

“구제대책을 알고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이 말이 영상 후반 삽입된 스틸 사진 위에서 자막으로 펼쳐졌다. 사망 뒤 사진에서 따온 얼굴은 그의 영정이 됐다. 지난 14일 이 영정을 가슴에 안은 엄마가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울부짖었다.

태완씨도 법무부 구제대책을 적용받았지만 과정은 고되기가 했다. 법무부는 2021년 4월 ‘국내에서 출생해 15년 이상 살아온 경우’에 한해 고등학교 졸업 뒤 G-1 비자를 부여한

다고 발표했다. 몽골에서 태어나 만 5살에 입국한 태완씨에겐 ‘구제될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다. 대책의 ‘높은 장벽’에 대한 지적들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2022년 1월 ‘외국에서 출생했다더라도 6살 미만엔 들어와 6년 이상 살아온 아동에게도 체류를 허용했다. 태완씨가 몽골로 떠나고 반년이나 지난 뒤였다. 법무부가 하라(‘자진출국해야 한국으로 돌아올 기회를 준다’)는 대로 했던 태완씨는 결과적으로 겪지 않아도 될 고생을 치러야 했다.

지난 4년간 한겨레 연재(‘호준과 호이준 사이에서’)를 통해 전해진 그의 좌절과 도전은 같은 처지에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 후배들에게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됐다. 그 후배들

이 기자회견에서 “한계가 분명한 구제대책조차 2025년 3월31일 종료된다”며 대책 보완과 상시화를 요구했다.

한국에서 태어나 15년을 살아온 나이저라아 국적의 주시(중학교 2학년)양이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그는 “이제 와서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가면 적응 못 한다”며 “한국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구제대책으로 체류자격을 받은 주시양과 달리 4살인 동생은 ‘6년 이상 거주를 못 채워 미등록 상태’로 있다. 대책이 종료되면 동생과 동생을 혼자 보낼 수 없는 가족은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다.

국내에 살고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 2만여명(추산) 중 2021년 4월부터 지난 8월까지 법무부 대책으로 체류자격을 받은 아동은 962명에 불과했다.



07 주요 언론보도

한국경제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A25면 기업

외국인 늘자 ... '출입국·국적' 업무 뛰어든 빅로펌

이민 사회 대비하는 법조계

대형 로펌이 개인 변호사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출입국·국적 관련 법률시장에 속속 진출하고 있다. 전문 조직을 신설하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신 전문가를 앞다퉈 영입 중이다. 저출생 기조가 장기화하며 '이민 사회'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법률 수요도 커질 전망이다.

◆'장기 체류 외국인' 소송 늘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최근 '출입국·국적' 센터를 출범시켰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출신 김우현 변호사를 센터장으로 데리고,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지낸 이상달 고문 등 전문가 5명으로 조직을 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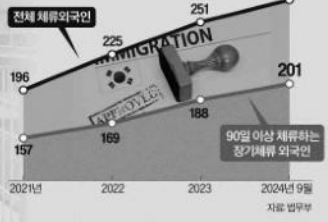
출입국사법 심사 및 정송, 입출국 금지 관련 정송, 체류 자격 변경 및 연장 불허 처분 취소, 영주권 취득 심사, 국적 취득·이탈 심사 및 정송 등 기업과 개인을 아우르는 포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출입국·국적 관련 업무는 개인 사건이 대부분이어서 소형 로펌의 영역으로 여겨졌다. 대형 로펌에선 통상 기업 고객이나 형사 사건과 관련해 부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법무법인 율촌은 국제정서팀에서 출입국·국적 업무를 하고, 법무법인 세종은 형사그룹과 광범분쟁그룹에서 맡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2016년 국적·출입국관리법을 설치했지만 기업 고객



늘어나는 체류외국인

(단위: 만명)



외국인정책 관련 전문가 등 영입 수요 증가 발맞춰 서비스 확장

대륙아주, 출입국·국적센터 출범 영주권 취득·노사분쟁 등 다뤄

행정소송 20%가 난민 관련 광장, 비영리단체 손잡고 지원

을 위주로 주재원 및 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자 등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자 대형 로펌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체류 외국인은 지난 9월 269만 명을 기록했다. 법무부는 5년 내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정주의사가 있는 장기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법률을 위반한 외국인이 출국 명령이나 강제 출국 대상자가 돼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회사와 외국인 근로자 간 노사 갈등이 증가하면서 법률 서비스 수요도 커지고 있다. 김우현 대륙아주 변호사는 "정주를 원하는 장기 체류 외국인은 권익 침해에 대한 이해관계가 커졌다"며 "장기 체류를 통해 경제적 여유까지 생겨 적극적으로 소송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행정 사건 40%는 '난민 소송' 저출생고령화로 이민 사회 전환이 예상되자 법조계에도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법무법인 광장은 비영리 단체인 난민인권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고 매년 3천 이상의 난민 소송

을 하는 등 공익 활동으로 법률 지원에 나서고 있다. 광장은 지난해 출입국 과정에서 난민신청심사에 회부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들에서 난민신청심사회부 제도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해 행정소송 3건을 연달아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난민 재판의 현황과 개선 방향' 세미나를 열고 효율적인 재판 방안을 모색한다. 체류 기간 연장 목적이 대부분인 난민 소송에 대응해 효율적인 재판 방안을 마련하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이 난민재판을 주제로 공식 논의를 진행하는 건 2013년 개원 15주년 기념행사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행정사건 3만2663건 가운데 난민 사건은 6296건으로 19.3%를 차지했다. 대법원에 오른 행정 사건 중 난민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41.8%에 달했다. 민경진 기자

한국일보

2024년 11월 19일 화요일 Y12면 지방

지난해 경북 외국인 주민 증가율 13.11%↑... 전년 2배

근로자·유학생 증가세 두드러져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율 4.6%나

경북지역 외국인 주민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지난해 11월 1일 기준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통계 분석 결과 경북도내 외국인 주민은 11만 8,274명으로 전년 대비 1만 3,710명(13.11%)이나 증가했다. 이에 따른 도내 외국인 주민 비율도 4.6%에 달한다.

이는 2022년 6,367명 증가의 2배 이상이며, 2016-2022년 8년간 연평균 증

가인원 3,600여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폭발적이다.

늘어난 외국인 주민 중 외국인 근로자가 4,141명으로 18.03%, 유학생도 1,882명으로 16.69%나 증가했다.

지역별 외국인 주민 수는 경산(2만 1,832명), 경주(2만 1,050명), 포항(1만 2,895명), 구미(1만 866명), 칠곡(7,056명) 순이었다.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 비율은 고령(9.5%), 경주(8.1%), 성주(7.7%), 경산(7.4%) 순이었다.

경북도는 2023년 외국인 주민이 크게 늘어난 것은 E-9(비전문취업) 비자 취득 확대, K-point E-7-4(숙련기능인력비

자, 지역특화형 비자 시행, 계절노동자 체류 기간 확대 등 저출생인구 소멸 대응 및 이민정책에 대한 정부 정책 기조 변화와 함께 경북도의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 추진이 동반된 결과로 보고 있다.

구자의 경북도 외국인공동체과장은 "외국인 주민이 경북 인구의 4.6%를 차지하고 우리 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이 된 만큼 유입부터 정착까지 책임지는 개방사회를 조성하고 변화하는 이민정책에 경북이 선제 대응해 '아시아의 아주 허브'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명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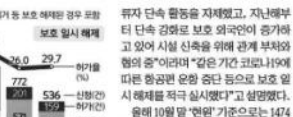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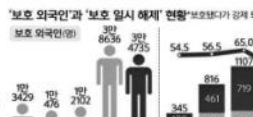
07 주요 언론 보도

세계일보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010면 사회

보호 외국인 과밀에... '일시 해제' 활용 목소리

정부, 적법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
사실 입소 4만 육박·1년 새 3배
인도적 사유 땀 6개월간 보호 혜택
이기를 전년 65%서 28%로 급감
"사실 과밀화 막고 단속 강화해야"



불법 체류자 A씨는 정부 단속에 직면해 한 보호시설에 들어갔다. 그는 올해 9월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보호 일시 해제'를 청구했다. 계약 만료일이 수개월 남은 전세보증금 2000만원을 찾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출입국 당국은 "국내에 있는 다른 자민이나 대리인을 통해 전세보증금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정부의 불법 체류자 검속 정책과 맞물려 강제 퇴거명령을 받고 본국으로의 송환을 위해 보호시설에 보호되는 외국인, 이른바 '보호 외국인'은 급증한 반면, 보증금을 받는 대신 보호를 일정한 기간 해제하고 돌아가는 '보호 일시

해제'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법조계에선 보호시설의 과밀화를 예방하고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려면 보호 일시 해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보호 일시 해제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지권 또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 행정-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회피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 등 '인도적 사유'가 있으면 보호를 6개월간 해제하는 제도다. 300만~2000만엔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고, 주거 제한 등 조건도 붙인다. 발령의 보석과 유사하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보호 일시 해제는 보호시설의 과밀화를 예방하고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려면 보호 일시 해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 같은 보호 일시 해제는 26.0% 증가해 26.0%로 늘었다. 이는 지난해 1도막의 26.0%에 비해 0.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보호 일시 해제는 보호시설의 과밀화를 예방하고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려면 보호 일시 해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민일보

2024년 11월 26일 화요일 029면 오피니언

기고

국민 위한 '新출입국·이민정책'



백상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국회에산정정책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4년 2.2%에서 2028년 2.0%까지 하락한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동력 유지를 위해 해외 인재 유치 및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외국인이 꾸준히 늘면서 2014년 180만명 수준이던 체류 외국인 인원은 현재 270만명, 총인구의 5%를 차지한다. 아테나로라만 향후 5년 내 체류 외국인 수는 300만명을 넘을 것이다. 법무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은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이민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 해외 주요국의 성공과 실패 경험을 함께 고려해 국민이 공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네 가지 핵심 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를 소개한다.

첫 번째는 인재 유치 문호 확대다. 법무부는 인공지능(AI), 로봇, 우주 항공 등 첨단분야 인재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는 톱티어 비자(Top-Tier Visa)를 신설해 인재 유치경쟁력을 높이려 한다. 또한 청년 드림 비자(Youth's Dream in Korea Visa)를 통해 6·25전쟁 당시 유엔 참전국 등 우호국 청년이 '지한(知韓) 그룹'으로 거듭나도록 돕는다. 이공계 인재의 영주권·국적 취득을 촉진하는 패스트트랙 수혜 대상을 넓혀 우수 인력이 비자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두 번째는 경제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요 반영이다. 법무부는 '비자 제안제'를 통해 현장 수요자의 목소리를 듣고 민관합동 심의기구를 설치해 민간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또 지자체 대표가 범정부 이민 정책 심의기구인 외국인 정책위원회에 참여하도록 법제화하고 '광역형 비자' 제도를 도입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비자 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그다음은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다. 국내 출생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취업비자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학업과 취업을 지원한다.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입국 전 사회통합교육 수강 기회를 제공하고, 입국 후 비자별 교육을 제공해 조기 적응도 도울 계획이다. 특히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비 일부를 외국인이 부담하게 함으로써 수이자 부담 완화를 확보하고, 외국인이 '시혜적 지원 대상'이라는 부정적 인식도 개선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과학적·체계적 외국인력 도입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 '비자 발급 규모 사전공표제'를 통해 국민 알지리 침해, 불법 체류 등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해 적정 도입 규모를 산정에 공표한다. 문제시 도입 규모를 축소하거나 비자 요건 강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무분별 유입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자 한다.

법무부는 민관합업 및 관계부처와 소통을 강화해 신출입국·이민정책이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의 촉매제가 되고,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이민정책(利民政策)'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매일경제

2024년 11월 27일 수요일 A24면 사회

지자체가 비자 발급... 외국인 모셔온다

내년부터 '광역비자' 제도 도입 지자체 외국인 직접 유치 가능
조선소 인력 확보 시급한 울산 우즈베크와 기술교육 협약체결
경남은 돌봄·요양 비자 등 설계
충북은 유학생 1만명 유치활동



최근 부산 남구 한 대학교에서 열린 외국인 유학생 교류 한마당에서 유학생들이 놀리기에 관여하고 있다.

외국인 유치를 통해 지방대의 학생 부족 문제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광역비자 도입에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광역비자란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력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선정해 비자를 설계하고 발급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광역비자 제도 도입을 위해 비자 발급 권한 일부를 시·도로 넘겨 광역단체에 외국인 유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력, 유학생, 가족 등을 적극 유치해 인구문제에 대응하고 지역대학, 산업·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부산형 광역비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5일 부산시 티오텔에서 지자체 관계자와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해 가운데 열린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도 부산형 광역비자는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를 위해 부산연구

원은 외국인력 고용 실태조사, 특화 분야 발굴 등을 연구 중이다. 이를 토대로 부산시는 법무부 지침에 맞춰 비자 설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울산시 역시 '울산형 광역비자'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지역 주력산업 중 하나인 조선업 인력난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외국 정부와도 협력에 나섰다. 특히 우즈베크스탄이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8월 우즈베크스탄 빈곤퇴치교육부는 울산시와 인적자원개발 공동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울산시가 지원하는 우즈베크스탄 기술교육센터에서 특정 교육을 받은 숙련 인력을 울산지역 기업이 채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비자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울산시

는 법무부 광역비자 제도 추진 일정에 맞춰 내년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노경 울산시 기획조정실장은 "울산형 광역비자 설계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맞춤형으로 유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며 "지역경제와 인구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경남형 광역비자'를 도입해 2030년까지 해외 우수 인력 1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경남도는 경남 기업의 해외 자회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 경남 본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비자, 인구감소지역 외 인구밀집지역에서 외국인이 머물 수 있는 비자, 도지사 추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단순노무에 종사할 수 있는 비자, 돌봄·요양보호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자 등을 경남형 광역비자로 도입해 지원하고 있다.

경북도도 내년부터 경북형 광역비자를 도입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북도는 광역단위 비자 요건 설계와 광역단위 채용, 해외 인재 유치, 이민자 정착을 위한 가족 유치(배우자·자녀·부모 초청) 등 4가지 요소를 기본으로 지역 수요와 다양한 이민자 수요를 반영해 지역과 이민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비자제도를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경북형 광역비자 설계·운영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도내 기업 대표와 인사 담당자, 외국인력 수요 등을 조사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행 비자 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광역비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비자 발급 기준을 정하는 제도로 만든 광역비자를 받은 외국인인 해당 지자체 내 어디서나 거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충북도의 경우 광역비자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충북도는 지역인구 소멸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K유학생 제도를 마련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유학생들이 몸만 들어와 학업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리외 교육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충북도는 내년까지 유학생 1만명 유치를 목표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민서·서대환·우성덕 기자

한국일보

2024년 11월 27일 수요일 A10면 사회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 범위 확대하고 체류자격 8개월로 연장

정부가 농·어업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체류 기간을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파종·수확기 등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종사자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형 계절근로자에게 허용된 근로 범위는 농작물 재배·수확 등 농작물 생산과 직결적으로 연관된 분야에만 한정됐다. 그러나 보니 폭염장

선별 포장 등 1차 가공업 근로 가능 '주 35시간 이상' 최소 임금 보장도

마 때는 시급 수 있는 일이 없어 농협이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이에 정부는 농림 사업장이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공공형 운영 사업장에서 농산물을 선별하거나, 선풍포장하는 작업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1차 가공이나 육포 관리 등 업무를 할 수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농협이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역 센터를 통해 농가에 일단위로 인력을 보내주는 방식이다.

또한 정부는 계절근로자의 유엔 근무가 가능하도록, 최소임금을 보장하는 기준을 '일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바꿨다. 그동안 농가 등은 근로자의 체류기간 중 75% 이상에 대해 최소임금을 보장해야 했지만, 이제는 '한 주에 35시간 이상' 최소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농번기에는 주 48

시간 범위 내에서 일하고 폭염장마기에 주 35시간 일하는 유엔 근무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정부는 계절근로 비자의 체류자격 상한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하기로 하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브로커(중개인)가 계절근로자 등에 고객에 수요를 받아 챙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 신고 시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최동순 기자



07 주요 언론보도

매일경제

2024년 11월 28일 목요일 A25면 사회

숙련외국인 유치 쉽게…비자문턱 낮춘다

장기체류 위한 한국어요건 완화

숙련도를 인정받은 국내 체류 외국인인 앞으로 2년간 특례를 적용받아 한국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건설업계가 숙련기능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인원도 늘어난다. 법무부는 지난 9월 26일 발표한 신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제도 특례를 2026년 말까지 한시 운영하고 건설업계의 허

용 인원 산정 요건은 재설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출입국·이민정책은 우수한 외국인 인력 등을 선별적으로 유치해 소멸 위기를 맞은 지방자치단체와 구인난을 겪는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고 사회 통합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발표된 후속 조치도 만성적 구인난을 겪는 기업을 돕기 위한 것이다.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전문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5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은 한국어 요건(사회 통합 프로그램) 등을 충족해야 장기 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시간이 부족해 한국어 요건을 취득하지 못하는 외국인 숙련 인력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으로 우선 전환한 후 2년 이내에 한국어 요건을 충족하면 되도록 2026년 말까지 특례를 운영하기로 했다. 권선우 기자



매일경제

2024년 12월 02일 월요일 A25면 사회

외국인 비자요건, 지자체가 정한다

법무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법무부가 내년부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체류 비자를 통해 외국인 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2025~2026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비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돼왔다. 반면 광역형 비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직접 비자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

법무부는 "광역형 비자는 지역의 경제·사회 요구를 충족하면서 국가 이민 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우선 유학 비자(D-2)와 특정활동 비자(E-7)를 대상으로 광역형 비자가 운영된다. 유학 비자의 경우 광역형 비자를 받으려면 정규 학위 취득 과정(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에 해당해야 한다. 특정활동 비자는 현재 운영 중인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2), 기능인력(E-7-3)에 해당하는 직종이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이달 광역지자체 공모를 시작으로 내년 3월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해 2년간 운영된다. 사업 대상 지자체는 별도로 구성될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심의위는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으로, 관련 부처 실무자와 민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권선우 기자

한국경제

2024년 12월 03일 화요일 A03면 종합

'명동식당 알바' 외국 유학생도 장기 취업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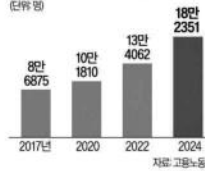
E-9 비자 전환 문턱 낮춰

한국어 등 요건 갖췄다면 허용
외식·숙박 등 서비스에 '단비'

정부가 학업을 마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식당과 호텔 등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 문화와 언어에 적응한 우수 인력을 일손 부족으로 고만하는 취업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는 구직(D-10) 비자를 탄 유학생이 한국 학교를 졸업하고 고용허가제에 따라 E-9 비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외국인고용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어 구사 능력 등 자격 요건을 갖춘 유학생을 해당 국가의 고용허가제 구직자 명부에 올려 취업을 허용하는 방식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유학생은 출신

외국인 유학생(D-2) 체류인원



국가의 고용허가제 쿼터에 포함되기 때문에 제도가 허용되더라도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제도 등에 따르면 유학생은 졸업 이후 한국 취업을 원할 경우 원칙적으로 유학생(D-2) 비자를 외국인 전문인력(E-7) 비자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E-7 비자는 허가 직종이 제한돼 있고 임금 요건 등도 까다로워 승인받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유학생 19만2000여 명 중 E-7 비자 전환

에 성공한 사람은 2408명(1.2%)에 그쳤다. 이에 따라 유학생 비자가 허용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다 학업을 마친 후 취업하지 못해 귀국하거나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일하는 유학생도 많다.

정부는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는 서비스업 등이 이런 유학생을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외식·숙박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올해부터 호텔·콘도, 한식당에도 고용허가제를 신규 허용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서비스업 기업은 "고용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며 외국인 고용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한 인력파견업체 관계자는 "한국 생활에 적응한 외국인 유학생은 식당이나 숙박업소에 투입할 수 있어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용희 기자



07 주요 언론보도

한국경제

2024년 12월 03일 화요일 A03면 종합

“숙련인력 붙잡자” 장기체류 허용하는 日·대만

日, 5년 허용 업종 2개에서 11개로
대만, 의무출국 후 곧바로 재입국
가사·간병인은 최대 14년간 근무

국제무대에서 한국과 경쟁하는 주요 아
시아 국가들은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를
자국 노동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
을 앞다퉀 펴고 있다.

2일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일본은 올해부터 2호인 외
국인 노동자에게 주는 무기한 일본 체
류 자격인 '특정기능 2호'의 적용 대상을
건설, 조선업 등 2개 분야에서 11개 분
야로 확대했다. 특정기능이란 일손 부
족이 심각한 업종에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제도로 업종과 능력에 따
라 1호, 2호 등으로 구분한다. 1호는 '상
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외국인에게
적용하며 체류 기간은 최대 5년이다. '현
장 총괄도 가능한 정도로 숙련된 기능'
을 보유한 외국인은 2호를 적용받는데,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다. 영주권을 취
득할 수 있고 가족에게도 거주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민으로 여겨
진다. 일본은 올해부터 1호에서 2호로
자격을 전환하는 문턱도 크게 낮춘 것
으로 알려졌다.

대만은 해안, 제조, 건축, 가사 등 일부
업종에서 한국처럼 '외국인 고용허가제'
를 운용하고 있는데, 한국과 비교해 규
제가 덜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용허가

제에 따라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첫
3년간 체류한 뒤 의무적으로 해당 국가
로 출국해야 하는데, 별도의 입국 제한
이 없어 바로 재입국할 수 있다. 한국은
원칙적으로 4년10개월 동안 국내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향후 6개월간 입
국할 수 없도록 한다. 이외에도 대만의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12년간 취업 활
동이 허용된다. 가사도우미나 간병인은
최대 14년까지 일할 수 있다. 한국에선
최대 9년8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국적과 기능별로 체류 허
용 기간을 달리 규정한다. 건설·해양·가
공 분야에서 한국, 대만, 홍콩 등 우수
국가 출신 인재는 체류 기간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다. 곽용희 기자

인거러

2024년 12월 04일 수요일 014면 전국

'미등록 이주' 엄마 잡아가며 3살 아이 방치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필리핀 여성 구금된
아이 있다는 사실 알고도 조치 안해
3일째 보호단체 항의받고 엄마 석방

작년엔 미등록자 아들 구금 사례도
"구금 혹은 방치" 이반법 행정이 문제
법무부 비인도 행태 멈춰야" 목소리



필리핀 이주여성 7세가 지난달 15일 경기도 양주시 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서 아들 2군을 다시 만
난 뒤 안아주고 있다. 보훈이주노동자센터 제공

법무부 출입국관리소가 미등록 이주여성
단속에 구금하는 과정에서 3살 아동을 보
호자 없이 그대로 방치하는 일이 발생했다

보훈이주노동자센터와 법무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법무부 양주출입국 외국인사무
소는 지난달 13일 경기도 포천시 한 글꼴에서
서 일하던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 70살씨를
단속해 구금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여
성이 혼자 키우는 아들 2군을 방치했다.
출입국관리소는 단속 다음날인 14일 7세
에게 어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2군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법무부 '외
국인보호구직'을 보면, 단 14살 미만 아동을
구금된 외국인의 신병을 받아 사실 내에서
어아와 함께 생활하도록 할 수 있지만, 7세
는 이런 내용을 안내받지 못했다.

2군은 엄마와 떨어진 뒤 이틀 동안 아침
7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어린이집에서
지내고 저녁 이후에는 7세 저인의 집에서
돌봄을 받았다. 하루이튿날 유일한 보호자
와 분리돼 보살 환경에 놓인 2군은 심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군이 다니
는 어린이집 관계자는 "아이와 엄마와 갑
작스럽게 떨어져도 보니 계속 울고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며 "엄마 저인의 집에서
방치 울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구금된 지 3일째인 15일에는 다
는 저녁 시간에 2군을 돌봐줄 지인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보훈이주노동자센터와 어
인집은 이날 오후 2군을 데리고 출입국관
리소를 방문해 아들 방치에 대해 항의했다.
그제야 출입국관리소는 보충금 300만원과 신
원보증을 받고 조진부 석방 방식으로 7세
를 풀어줬다. 7세는 2군의 출생 신고와 어
권 발급 절차가 끝나면 강제 출국당한다. 정
부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미등록 외국인이
계속 늘어나면서 단속 과정에서 이들의 자

녀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법무부가 미등록 체류자인
통골인 남성을 단속하면서 몸이 아픈 3살
아들을 19일 동안 구금해 논란이 됐다. 또 이
혼으로 미등록이 된 모교코 출신 여성을 구
금하면서 합법체류 자격이 있는 6살 아동을
23일 동안 함께 가두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번 논란에 대해 "피보호 여성
이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하루가 지나서야
알게 됐다"며 "출입국관리법의 보호 일시제
재 절차 등을 안내했다"고 했다. 보호 일시
제책은 보충금 등을 받고 조진부로 피보호
인을 풀어주는 제도를 말한다. 법무부는 또
"14살 미만 아들에 대해서는" 보호조치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
동을 함께 시설에 가둘 경우 인권침해 논란
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아동의 보호(또는생
활 회복)를 가장하고, 그 보호자에 대해서는
출국명령 또는 보호 일시제책을 적극 활용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구금 혹은 방치"라는
이반법적인 행정이 아동을 대한 피해를 양
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보훈이주노동자센
터 대표 김달성 복사는 "단속 필요성은 인
정하더라도 법무부가 이 과정에서 방치되
는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대신 원치
않은 입장만 반복하며 사실상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노력을 아예 하지 않고 있다"며
"비인간적인 구금 시설을 개선하는 최소한
의 노력에 대해 나아가 지금과 같은 어만적
단속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이원희 기자 gyunhappy@han.com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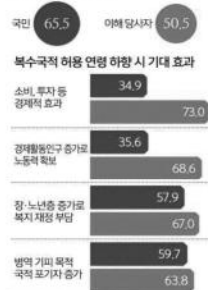
세계일보

국민 65%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반대”

2024년 12월 04일 수요일 010면 사회

복수국적 관련 여론조사 결과 (단위: %)
*국민 3000명, 복수국적자·재외국민·동포 등
이해당사자 555명

국적 회복자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만 65세 이상) 유지



법무부, 내국인·재외동포 여론조사
 21년 시행된 개정 국적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인 외국 국적 동포는 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과거에 상실한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지난해 국적을
 회복한 사람은 4203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이 중 미국인이 63.9%
 (2684명)였다.

재외동포 사회에서 연령 만 65세 이상인
 ‘국적 회복자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꼴로 이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복수국적자 증가에
 따른 노동력 확보를 비롯한 긍정적
 효과보다, 기초연금 같은 복지 부담 등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법무부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 연구
 용역을 통해 올해 8월 국민 3000명, 국
 내외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와 재외동포,
 해외에 장기 거주하는 재외국민 등
 이해 당사자 555명을 상대로 ‘복수국
 적 및 국적 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
 한 결과, 국민 응답자 65.5%는 ‘지금처럼
 만 65세 이상 국적 회복자에 계한 복수국
 적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

했다. 이해 당사자 50.5%도 마찬가지였다.
 2011년 시행된 개정 국적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인 외국 국적 동포는 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과거에 상실한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지난해 국적을
 회복한 사람은 4203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이 중 미국인이 63.9%
 (2684명)였다.

마주 동포 사회를 중심으로 복수국
 적 연령 하향에 대한 목소리가 컸다. 이
 에 법무부는 “국적에 관한 사항은 주권
 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국민 공감
 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적 제
 도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인하고자 여
 론조사를 했다.

여론조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국
 민은 물론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복수국적 연령 하향에 따른 우려가 작
 지 않다는 점이다. 국민 57.9%, 이해
 당사자 67.0%는 ‘장·노년층 국민이 늘
 어나 사회복지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
 라고 입을 모았다.

또 국민 59.7%, 이해 당사자 63.8%
 가 ‘방역을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국적

을 포기하는 사람이 증가할 것’으로 내
 다봤다.

국민 응답자들 사이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해 노동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 ‘투자 유치, 소비 진작 등 경제
 적 효과가 있을 것’이란 답변은 각 35.
 6%, 34.9%에 그쳤다. 이 두 항목의 이
 해 당사자들 응답은 각 68.6%, 73.0%
 로 높아 대조를 이뤘다.

또 국민 76.5%는 ‘국적 회복 허가를
 위해 회복 신청 전 일정 기간 한국 거
 주, 회복 후 한국에 주로 거주할 의사,
 충분한 자산과 소득 등 추가 조건이 필
 요하다’고 했다. 현재는 범죄 경력이나
 방역 기피 등 결격사유가 없으면 국적
 회복이 가능하다.

강성시 법무법인 케이앤씨 변호사는
 “복수국적 연령이 만 40세가 된다면 인
 력 수급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한 번에 그렇게 낮추기는 쉽지 않고,
 늦춘다면 60세나 55세 정도가 될 텐데
 그 정도로는 복지 부담만 커질 가능
 성이 높다”고 말했다.

연구원이 전문가 20명을 조사한 결
 과도 국민의견과 다르지 않았다. 전문

가들은 국적 회복이 사회보장 혜택과
 관련 있어, 국적 포기 당시 방역의무나
 회복 신청 단계에서 한국 거주지로서
 의 납세의무 이행 등 검토가 필요하
 다고 제안했다. 법무부는 “조사 결과는
 정책 추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박진영·유정민 기자 jyp@segye.com

세계일보

중소 10곳 중 3곳 외국인 고용난 호소

2024년 12월 04일 수요일 016면 경제

“규제 탓 충분한 수준 고용 못해”
 고용 이유 48% 낮은 임금 꼽아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외국인 근로
 자 고용난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기자총협회가 300인 미만 주
 요 업종별 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조
 사해 3일 발표한 결과 응답 기업의 27.
 8%가 ‘현재 충분한 수준의 외국인 근

로자를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
 다. 주된 이유론 40.1%가 사업장별로
 고용 허용 인원을 제한하는 규제 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봤다.

경총은 이와 관련해 “전체 외국인 근
 로자 도입 규모가 대폭 확대됐지만, 개
 별 기업의 인력난은 해소되지 못한 것”
 이라며 “전체 쿼터 수준 외에도 사업장
 별 허용 인원 제한이나 직종 제한 등의
 규제가 기업의 원활한 외국인력 수급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
 단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는
 가장 많은 48.2%가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를 꼽았다. 이어 △내국인 구인
 어려움(34.5%) △2년 초과 고용 가능
 (6.8%) △낮은 이직률(6.5%) △낮은 노
 사분규 가능성(4.0%)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같은 주제로 진행된 조사에
 서 응답 기업 92.7%가 ‘내국인 구인난’
 을 택한 것과 상당히 대비되는 결과라
 고 경총은 전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07 주요 언론보도

東亞日報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A12면 사회

외국인 취업자 100만명 돌파... 절반이 월급 200만원대

체류자 9% 늘어 156만명 '역대 최대'
"비자쿼터 확대, 단순 노무종사 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역대 최대 규모인 156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 수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비자 쿼터가 확대되며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난 영향이다. 이들 중 절반가량은 월급이 200만 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56만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9.1%(13만 명)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이 중 취업자는 101만 명으로 전년대비 8만 7000명 늘었다. 어선 것은 이민

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대 규모를 갈아치웠다. 취업자가 급증한 건 을 들어 외국인 비전문취업(E-9) 비자 신규 인력 쿼터를 16만5000명으로 대폭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전문취업자는 1년 전보다 3만4000명(12.6%) 증가했다. E-9은 제조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 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이들이 받는 월평균 임금 수준은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인 48만9000명(5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만 원 이상(37.1%),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8.4%) 순이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시, 일용직이 32만9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95만6000명)의 34.4%를 차지했다.

산업 분야별로 보면 광·제조업이 46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19만 1000명), 시위, 개인·공공서비스업(14만6000명)

朝鮮日報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A14면 사회

가장 큰 스트레스는 한국어... 75% "따로 배운 적 있다"

차별 경험자 31% "언어 때문에"
외로움·경제적 어려움도 고충

한국에 사는 외국인 156만1000명의 가장 큰 고충은 언어 문제다.

17일 통계청의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조사 결과, 외국인 10명 중 3명꼴인 29.8%가 한국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언어 문제'를 꼽았다. 이어 '외로움' (13%), '경제적 어려움' (9.3%), '생활 방식, 음식 등 문화 차이' (3.6%), '은행, 시군구청 등 이용' (3.2%), '외국인에 대한 오해 또는 무시' (2.9%) 등의 순이었다.

한 외국인 비율은 직전 조사 시점인 2022년(24.7%)에 비해 5.1%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외국인에 대한 오해나 무시, 은행·관공서 이용 문제로 힘들다는 외국인 비율은 2년 새 각각 0.7%포인트, 1%포인트 하락했다.

언어 문제는 외국인들이 차별받는다 고 느끼는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국내 상주 외국인의 17.4%가 지난 1년간 차별 대우를 받은 경험이었다고 했는데, 이 가운데 54.5%는 차별 대우의 원인으로 출신 국가를 지목했다. 한국어 능력 때문에 차별받았다는 응답이 31.2%로 뒤를 이었다. 이어 외모 (9.1%), 경제력(1.6%) 등의 순이었다. 출신 국가 때문에 차별받았다는 응답은 2년 전에 비해 3.5%포인트 줄어든

반면, 한국어 문제로 차별받았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3.3%포인트 증가했다. 언어 문제 극복을 위해 대학 어학당 등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 친대말과 복잡한 맞춤법 탓에 외국어 중에서도 까다롭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어를 제대로 익혀야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다는 인식이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

대학이나 법무부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국어를 배운 경험이 있다는 외국인은 4명 중 3명꼴인 74.7%로 작년(73.2%)에 비해 1.5%포인트 늘었다. 한국 입국 전에 모국 등에서 배우고 왔다는 응답이 36.9%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학 어학당 등(20.7%), 법무부의 별도 프로그램 등(8%)의 순이었다. 청서우 기자

한가리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009면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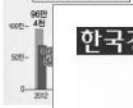
외국인취업자 100만 시대...세금 1.7조 내지만 '여전한 차별'

통계청 '미진저 체류실태 고공조사'

상주인구도 처음 150만명 넘어서 70만 비숙련노동자 큰 부분 차지 될 200만원대 보수가 절반 남이 근로·종합소득세 납부자 47만명 국내주역 소유자 10만명에 육박 84%는 "한국생활에 만족"했지만 5명중 1명 "출신국 등 탓에 차별"



국내 외국인 인구 및 취업자 추이



한국을 생활 터전으로 삼은 외국인이 처음으로 150만명을 넘어서었다. 취업자도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고, 유학생은 20만명에 이르렀다. 외국인들이 내세우는 또 다른 강점은 '다문화'이다. 특히 이주민이 늘어나면서 한국 사회는 여전히 '다문화'라는 키워드가 뜨겁다. 외국인 5명 중 1명은 차별을 경험했다고 말한다.

■ 10년 만에 상주인구 150만명 넘어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이민국 조사'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 인구는 156만1천명이다. 전년 대비 13.2% 증가했다. 외국인 상주 인구가 150만명을 넘어서는 것은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2018년 130만명, 2020년 140만명, 2022년 143만명, 2023년 147만명, 2024년 156만1천명이다.

이 통계는 국내에서 학업과 생업을 이어가는 '상주' 외국인을 가늠한 '조사' 통계다. 행정안전부의 '통계 기준' 외국인 인구는 150만명 미만 포함하는 '다문화' 기준 약 160만명이다.

외국인 상주인구가 늘어난 데는 취업 목적 체류 증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에게 발급하는 '비전문 취업' 10-9 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전년 대비 3만4천명 늘어난 30만5천명이다. 전체 상주 외국인 중 19.5%이다. 제외소득은 4,400만원 미만. 다음으로 비중이 크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제조업·조선업·농축산업 등 인력난 해소 위해 비전문 취업 비자 범위를 확대하면서 증가 폭이 컸다. 전문직이나 기술직 등에 종사하는 전문인력(1-7, 02만6천명)도 1만9천명 늘었다.

■ 외국인 취업자, 10명 중 1명은 월 200만 원도 못 벌어
아닌 영향으로 외국인 취업자는 전년 대비 10만7천명 증가한 101만명이다.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건 올해가 처음이다. 외국인 취업자는 2023년 89만4천명에서 2024년 80만9천명으로 증가한 뒤 이후 정부 외 외국인 인력 수급 정책에 따라 80만명대에서 중점을 거듭하다 지난해 90만명을 넘어서었다.

외국인 취업자 가운데 임금근로자는 95만5천명,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6만4천명이다. 외국인 취업자는 대체로 월 200만원 이상 보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200만~300만원이 53.2%, 300만원 이상이 37.9%다. 200만원을 채 받지 못하는 외국인 취업자는 10%가 조금 넘는다고 외국인 유학

한국경제

2024/12/18 수요일 A29면 사회

중, 한국 등 54개국 대상 '무비자 환승' 최장 10일로

중국이 환승을 위해 자국을 경유하는 외국인의 무비자 체류 기간을 최장 10일로 늘렸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항공편을 갈아타기 위해 비자를 면제받고 일시 입국한 외국인의 중국 내 체류 기간을 기존 72시간과 144시간에서 240시간으로 확대했다고 17일 발표했다. 한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영국, 미국, 캐나다 등 54개국 시민이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여권을 소지하고, 중국을 경유하는 제3국 행 교통편 환승을 확정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은 이번 조치와 함께 무비자 출입 절차 처리가 가능한 공항을 21곳 더 늘려 60곳으로 확대했다. 체류 가능 지역도 기존 19곳에서 산시성 안후이성 장시성 하이난성 구이저우성 등 5개 성을 추가했다.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 주요 공항을 통해 무비자 혜택을 받은 외국인은 중국 내 24개 지역에서 최대 열흘까지 머무를 수 있다.

중국 이민국은 "무비자 정책 완화는 대외 개방을 촉진하고 국경 간 인력 이동을 가속화해 사회에 새로운 추진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국에서 거주하며 공부하거나 일하는 외국인의 편의와 생활 여건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비자 면제 확대 정책의 일환이다. 앞서 중국 정부는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게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30일로 늘렸고,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 이현일 기자



07 주요 언론보도

경향신문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012면 사회

국내 상주 외국인 156만명 ‘역대 최대’… 취업자 100만명 첫 돌파

작년보다 9% 늘어… “한국 생활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84%
임금노동자 34%가 임시·일용직… 전체 평균보다 8%p 높아

국내에 상주하는 외국인 인구가 역대 최대 규모인 156만명을 기록했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 수도 처음 100만명을 넘었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이민자 취업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외국인 상주인구는 156만1007명으로 1년 전보다 9.1%(13만명) 늘어났다. 외국인 상주인구는 2012년 관련 통계 작성이

후 역대 가장 많다. 2018년 130만 1000명을 기록한 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130만명대에 머무르다가 지난해 143만명으로 늘어났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인이 1년 전보다 3만3000명, 한국계 중국인이 2만1000명 늘었고, 한국계 중국인을 제외한 중국인은 1000명 줄었다. 연령별로는 15~29세에서 4만7000명 등 모든 연령대에서 외국인 상주

인구가 늘었다. 외국인 취업자 수도 101만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외국인 경제활동 참가율은 1년 전보다 0.4%포인트(8만6000명) 늘어난 68.6%다. 외국인 고용률은 0.2%포인트 늘어난 64.7%다. 외국인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3%포인트 오른 5.7%다. 외국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광업·제조업에서 4만9000명, 농림·어업에서 2만3000명 늘었고, 건설업에서는 4000명 줄었다. 취업자격별 취업자 수는 비전문취업(30만

2000명), 재외동포(25만8000명), 영주(10만5000명) 순으로 많았다. 임금수준별로 보면 월평균 200만 원 이상·300만원 미만을 받는 외국인이 48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만원 이상(35만4000명),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8만1000명), 100만원 미만(3만2000명) 순이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노동자가 95만6000명으로 94.6%를 차지했다. 이 중 임시·일용직은 32만9000명으로 34.4%를 차지했다. 지난 5월 기준 전체 취업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26%)

보다 높다. 지난 5월 기준 최근 5년 이내 귀화한 귀화자가자의 상주인구는 5만 1000명으로 1년 전과 같았다. 귀화자가자의 고용률은 1년 전보다 1.5%포인트 줄었고, 실업률은 0.1%포인트 늘었다. 한국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외국인은 84.3%. 귀화하고자하는 비율은 8.2%였다. 지난 1년 동안 차별 대우 받은 경험에 있는 외국인은 17.4%. 귀화하고자하는 17.7%였다.
김윤4명 기자
nyoung@kyunghyang.com

서울경제

2024년 12월 19일 목요일 A13면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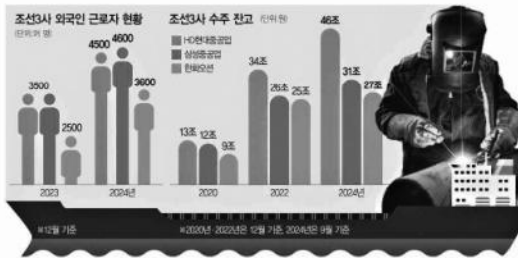
주문 쌓인 조선 빅3, 외국인 근로자 1000명씩 늘렸다

역대급 수주 잔고에 총원 속도

올해 국내 주요 조선소가 외국인 근로자를 1000명 이상씩 총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조선사들의 공격적 수주에 건조 물량이 쌓이면서 부족한 국내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채우고 있다는 의미다. 조선사들의 적극적 채용에 지방자치단체도 협력하며 조선소의 외국인 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HD현대중공업·인화오션 등 대거 채용 삼성중공업, 우즈베키스탄 수력발전 추가 예정 해외인력 투입물류 운송부족 여건 내년에도 외국인 비율 늘어날 듯

18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대형 조선소들은 각각 1000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했다. HD현대중공업 조선소들은 지난해 말 약 3500명이었던 외국인 근로자가 올해(12월 기준)는 4600명으로 늘었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도 해외 인력이 3500명에서 4600명으로 증가했고 한양오션 개척사조선에서도 1000명이 넘는 외국인이 취업했다. 최근 조선업 호황을 고려했을 때 내년에 조선소 내



외국인 근로자 총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양오션이 출신에 집중된 채용도 중앙아시아로 확대되는 등 공격적 다양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이란 초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를 내년부터 대규모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채용 인원은 자국을 갖춘 전문가에게 맡겨지는 복수 입국 등 7비자를 기반으로 3년간 한국으로 파견된다. HD현대중공업도 우즈베키스탄 출신 전문 인력 35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조선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선소는

분봉 자재에서도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국내 조선업 종사자 중 약 20%가 외국인인 반면 새로 채용되는 인력은 80%가 육박하고 있는 만큼 건조 현장에서 외국인 비율은 급격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선소들이 적극적으로 해외 인력을 유인하고 있는 것은 초효율기를 맞은 국내 조선업계에는 여전히 ‘인력난’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조선

사들의 수주 잔고에 비해 2020년 수주 잔량이 2022년 34조 원까지 늘어난 뒤 올해 46조 원으로 증대했다. 삼성중공업도 현재 약 31조 원 규모의 수주를 쌓아 놓았는데 4년 전(12조 원) 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두 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주에 소극적이었던 한양오션도 2020년 말 9조 원이었던 수주 잔액이 27조 원으로 3배 늘었다. 조선사들은 대규모로 계약한 상선의 납기를 맞추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외국인 채용이라고 판단했다. 2027년까지 국내 조선업에는 약 13만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현재는 약 10만 명 수준으로 여전히 3만 명 가량이 부족하다. 업계에 따르면 관계자는 “2020년부터 4년간 조선사들의 수주는 크게 늘어났는데 현장에서 일한 내국인들은 자동차·반도체 공장 등으로 이탈하는 상황이 이어졌다”며 “처음에는 국내 조선소들도 ‘달란 밥’을 쓰기 위해 해외 인력 채용에 나섰지만 최근에는 국내 인력 대비 상대적으로 비용 절감도 가능한 선로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어나며 조선소가 맞춤형 교육·복지를 제공해야 각자의 장점에 맞춰 건조 현장에서 가장 미흡 등의 문제가 대부분 제기되는 모양새다. 7월 HD현대중공업에서 첫 외국인 현장방문이 탄생하기도 했다. 한편 연구·설계 등을 중심으로 한 국내 인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선사 본사 직원도 늘어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현재 본사 직원 수가 1만 8900명으로 5년 만에 1만 명을 넘겼다. 코도나 19 사태 이후로 8775명까지 줄었던 인원이 다 채워진 것이다. HD현대중공업도 본사 직원이 최근 1만 4309명까지 증가했는데 이는 2~3년 전 직 1만 2000명까지 줄었던 인원이 회복된 모습이다.
김정복 기자

국민일보

2024년 12월 27일 금요일 031면 종합

“한국 안전” 홍보... 中단체관광 무비자 검토

국가관광전략회의 ‘안정화 대책’ 전자여행허가제 한시 면제와 6개국 비자수수료 면제 연장



외국 관광객의 방한 편의를 위해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시행이 검토되고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와 6개국 단체관광객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가 연장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 (사진)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방한 관광시장의 조속한 안정과 재도약을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국여행이 안전하고 원활하다는 점을 알리며, 공세적인 방한 관광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에

편의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법무부와 협의해 현재 한시 면제 적용 국가·지역에 대한 K-ETA의 한시 면제 기간을 내년 12월까지로 연장하고, 한·중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객한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무비자제도 시범시행을 검토한다. 특히,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인도 등 6개국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기간도 2025년 12월까지 연장한다.

또 국제회의의 주요 참가자 대상으로 진행되던 입국 우대심사대 시범사업 기

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내년에는 크루즈 관광상륙허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크루즈 선사가 모객한 중국인 단체관광객(3인 이상)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다.

한 권한대행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국제 사회에 한국 관광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며 “관광 분야 내년도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관광업계의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용자, 부담 완화 등 긴급지원대책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남효철 여행선임기자 hcnam@kmb.co.kr